

[유니텔연수원]

국경없는 교실을 위한 다문화 교육

<알림>

본 자료는 유니텔연수원에 저작권이 있는 강의 자료로써 학습 보조자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차시]

1. 갈등의 이해**1) 갈등의 정의**

갈등은 권력과 자원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 한다. 즉 갈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리라고 지각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리터러 (J. Litterer, 1970)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나 활동으로 상대적 손실을 지각한 결과, 대립, 다툼, 적대감이 발생하는 행동의 한 형태.
토마스 (K. Tomas, 1976)	조직의 한 단위가 다른 단위로 인해 자기의 관심사가 좌절되었거나 좌절될 것을 지각할 때 생기는 과정.
로빈스 (S. Robins, 1974)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데 있어서 A가 의도적으로 B에게 좌절을 초래하기 위한 방해 행동을 하는 과정.
마일즈 (R. Miles, 1980)	조직의 한 단위나 전체 구성원들의 목표 지향적 행동이 다른 조직단위 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인 행동과 기대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 표현되는 조건.
그린버그 & 배런 (Greenberg & Baron, 1998)	상대방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리라고 개인이나 집단이 지각할 때 발생하는 조직행동의 과정.

2) 갈등의 분류**(1) 욕구갈등****① 이해관계 갈등**

욕구충족을 위한 분배, 절차 등에 대한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나 가치관 등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예로서, 내용에 대한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차이, 편견, 이주민 일자리 차별, 임금차별, 배제, 혐오감, 이주민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자라는 부정적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② 사실관계 갈등

객관적 사실이나 평가 등에 있어서 사실관계나 절차 등의 확인이 필요한 갈등으로 객관적인 정보나 학습의 부족으로 인한 이해부족 내지는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한국말이 어눌하다, 한국말 못하는 결혼 이민자의 의사 왜곡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 사건 사고의 외국인에게 일방적 불리 처리, 등을 들 수 있다.

③ 구조적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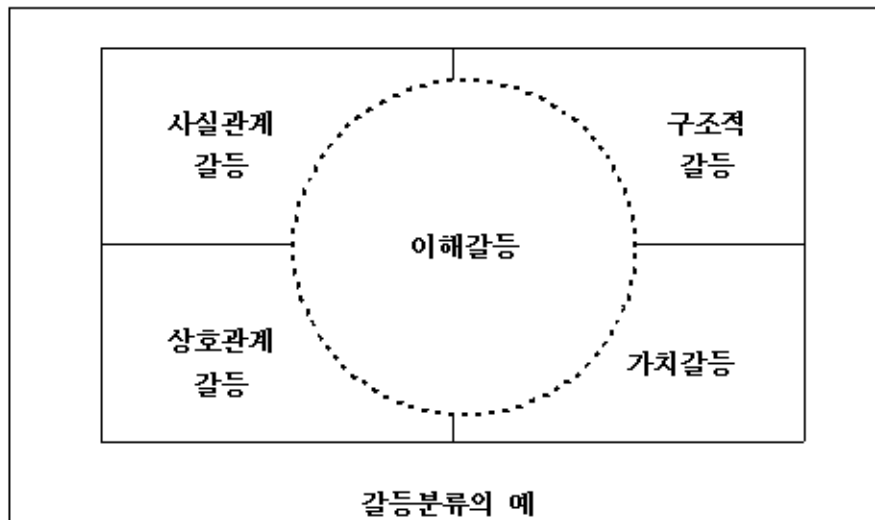
사회제도나 관행, 차별, 모순 등으로부터 비롯된 갈등이다. 기존의 제도나 사회적 관습에 대한 세대간, 계층 간, 집단 간 이해와 인식, 수용과 인내 그리고 문화적 차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욕구와 가치 모두가 깊이 개입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과거 국제결혼 자녀의 군 입대와 공무원 불허용, 국적 취득 결혼 이민자의 외국인 취급, 이주민에게 한국 문화 일방적 강요,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이주가정은 제외, 이주민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 다문화 사회 이해부족으로 공익성 침해, 혐오감 등을 들 수 있다.

④ 상호관계 갈등

상호간의 관계가 부정적이거나 일방적, 또는 단절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국제결혼 가정 내의 상습적인 폭행, 동남아 출신에 대한 비하, 권위중의적인 가부장 문화, 외모로 인한 차별, 국제결혼 배우자에 대한 불신과 멸시, 욕설과 인격 모독적 언행, 취업 제한 및 외출 금지 등이다.

(2) 가치갈등

가치관, 이념, 성장배경, 교육정도와 배경, 출신국, 종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이다. 예로서, 닫힌 정신세계, 닫힌 마음, 편향된 시각, 왜곡된 신념, 상대에 대한 이해부족, 적대적 감정의 표출, 정의나 공익에 대한 해석과 기준의 차이와 자신과 다른 기준과 해석에 대한 불인정, 그로 인한 극단적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욕구의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치체계의 상이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갈등이다.



4) 갈등원인과 기능

(1) 갈등의 원인

차이	차이가 있음을 감지했을 때, 차이가 양립할 수 없고, 차이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차이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도출됨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경쟁적이고, 상대방을 통제 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됨
욕구	욕구는 욕망과 다르다. 욕구는 자신의 가치, 동기부여, 업무 효율성 등에 기여함으로 필수적이고 본질적이다. 대개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무시당하거나 방해를 받거나 욕망과 착각을 하거나,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에 갈등을 느낀다.
인식	사람 각자는 세계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 자기만의 인식을 갖는다. 과거의 경험, 교육 등 모든 것이 각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은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파워	파워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파워가 남용되고 오용되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가치	가치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에 의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시될 때 갈등이 발생한다.
----	--

(2) 갈등의 기능

① 전통적 접근법 : 갈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

E. Mayo의 인간 관계론에서는 갈등은 악,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징후로써 갈등 등이 없는 상태가 이상적이며, 갈등의 제거가 관리의 목적이고 갈등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직위 간 관계의 구체적 규정 및 직위에 맞는 사람의 선발 및 훈련이 있어야 한다.

② 행태적 접근

갈등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③ 상호 작용론적 관점

갈등은 비난의 대상만은 아니며 신중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한 변수로 용납되는 경우도 있으며 유용한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갈등은 조직의 생존과 쇄신에 변동을 야기하는 원동력이며 조직원의 사고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2. 갈등이론

갈등이론에 대한 시각이 새로운 사회학으로 인식된 것은 기능주의 사회학이 전성기를 구가 하던 60년대 초의 일이다. 갈등이론은 마르크스(Marx)와 짐멜(Simmel)의 사상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짐멜은 변증법적 개념을 도입하였고, 마르크스는 모든 사회관계에 내재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말로 사용하며 주어진 일련의 사회관계는 그 대립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갈등 이론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를 개인 간 및 집단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의 연속으로 본다. 갈등은 세력 다툼, 이해의 상충, 지배자의 압제와 피지배자의 저항, 그리고 사회의 끊임없는 불안정과 변동이 갈등 이론이 보는 사회적 속성이다. 따라서 갈등 이론은 인간이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물은 제한되어 있고, 인간의 소유욕은 무한한데 이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 인간 간의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제한다. 그러나 갈등 이론의 결론은 갈등자체의 현상을 분석해서 모형을 만들어 갈등 해결을 어떤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과정으로 본다.

1) 갈등이론의 출현

막스(Marx)와 짐멜(Simmel) 이 사람은 갈등을 사회체계에 널리 퍼져있는 불가피한 특성으로 보았다. 그러나 사회의 본질에 대한 가정과 지적목표에서 차이가 있다.

	Marx - 갈등의 분열성	Simmel - 갈등의 통합적 결과 강조
조건	폭력적 갈등이 가속화되는 조건	갈등의 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조건
원인	갈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심 (자원의 분배와 불공정한 분배에 내재하는 이익의 갈등)	갈등은 사회전체에서 강렬성을 가짐, 갈등의 발생 후, 갈등의 형태와 결과에 관심,
지적목표	사회의 공동가치란 사회구성원의 모두가 아닌 소수의 특권계층이 지지하는 가치로서 사회변동을 강구한다.	다양한 상호작용에서 공통된 특징을 탐구, 집단은 갈등의 큰 희생을 피하기 위해 타협, 협상 등 다른 대안을 강구한다.

2) 변증법적 갈등이론(Ralf Dahrendorf)

다렌도르프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천은 계급적 대립이 아닌, 권위 또는 지위를 차지하려는 상반된 이해관심으로 보았다. 권위관계는 명령하는 사람과 이행하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지배집단이 되고 후자는 종속집단이 된다. 권위관계가 조성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권위가 배분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즉 권위 배분의 차이가 상반되는 이해득실을 발생시켜 이익집단을 등장시켜 갈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 ① 사회체계는 계속되는 갈등상태에 있다.
- ② 이 갈등은 사회구조에 불가피하게 내재하는 대립된 이익에 의해 발생한다.
- ③ 대립된 이해득실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사이의 권력 분배의 차이를 반영한다.
- ④ 이해득실은 두 개의 갈등집단을 양극화시키는 경향을 지닌다.
- ⑤ 갈등은 변증법적이다. 즉 갈등의 해소는 새로운 대립된 이해득실을 창출하고 이것이 다시 갈등을 발생시킨다.
- ⑥ 사회변동은 사회체계에 편재한다.

갈등은 변동에의 기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고찰된다. 변동을 유발하는 갈등이 이상하게도 '그 사회체계의 정당화된 관계에서 발생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비판을 받는다.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하여 터너는 '다렌도르프의 이론은 파슨즈의 유토피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평했다.

3) 갈등 기능주의: 루이스 코저(Lewis A. Coser)

코저는 '다렌도르프가 갈등의 기능을 과소평가했다'라고 비판하며 갈등의 기능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갈등론자들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명제들을 취급하려고 노력했다. 사회갈등에 대하여 짐멜의 유기체론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는 갈등의 원인, 갈등의 강렬성, 갈등의 폭력성, 갈등의 지속기간, 그리고 갈등의 기능들에 관한 폭넓은 진술을 다루었다. 그러나 코저는 기능적 가정 때문에 갈등이 단지 통합을 촉진하는 하나의 세계를 묘사하는 분석적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① 사회는 다양하게 상호 관련된 부분들의 한 체계로 볼 수 있다.
- ② 모든 사회체계는 다양하게 상호 관련 된 부분들 사이에 이익의 불균형, 긴장 그리고 갈등을 드러낸다.
- ③ 부분들 사이에 또는 부분들 내에서 체계의 통합과 적응성을 유지하고 변동시키며, 증가

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작용들이 일어난다.

④ 폭력, 부동의, 이탈, 갈등과 같이 파괴적일 수 있는 과정이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체계의 환경에 대한 적응성뿐만 아니라 통합의 기초를 강화할 수도 있다.

갈등이론은 다문화 사회에서 상이한 유형의 사회적 단위들 사이의 상이한 형태의 갈등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갈등 이론은 갈등이 일어나는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조건에 통찰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론으로서 갈등이론은 어떻게 사회조직의 유형이 생성하고 유지되며 변동하는가를 이해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4) 셀린(Sellin)의 다원주의 갈등이론

다원주의 갈등이론은 상이한 문화적 집단 간의 갈등에 기초하고 있다. 즉, 행동규범은 상이한 집단에 의해서 상이하게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상이한 집단의 행동규범 간에 갈등과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문화갈등이라 했다. 셀린은 문화 갈등을 기초로 하여 범죄 문제를 다루었다. 이 문화갈등은 일차적 갈등, 이차적 갈등으로 구별 하였다.

'일차적 문화갈등'은 상이한 두 문화상에 경계지역에서 일어난다. 식민화의 경우처럼 특정 문화의 법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때, 또는 이민의 경우처럼 특정 문화집단의 구성원들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 할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 '이차적 문화갈등'은 한 문화 내에서의 갈등으로 하나의 문화가 각자 자신의 고유한 행동규범을 가지는 여러 가지 상이한 부문화로 진화될 때 일어난다고 본다.

사회구조란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목표와 수단이 있으나 집단에 따라서 이들 목표의 성취에 차이가 있다고 본다. 소수자들은 그들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존의 법과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기도 한다. 소수자들이 법과 제도를 넘어 목표 달성에 이르는 것은 사회의 지배 구조가 소수자를 대변하기보다 지배문화의 행동규범만을 반영하는 것을 원인으로 본다.

3. 인종차별과 배제로서 갈등

1) 인종차별과 배제로서 갈등

타인종·타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는 인종주의(racism),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타인종·타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는 인종주의(racism),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 분석하는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 유럽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모니터링 센터)의 보고서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2005)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연구다.

2) 이론과 개념 : 현실경쟁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

인종차별주의, 인종주의, 인종적 배제주의 등을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종차별주의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

종차별주의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함께 혼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

(1) 인종차별주의의 유형을 분류

인종주의의 유형 변화를 다루는 논의로 대표적인 것은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 또는 신인종주의(new racism)에 대한 주장이다. 상징적 인종차별주의는 미국인(백인)들이 평등,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 인종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반대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즉, 상징적 인종주의 개념이 노골적 인종주의와 숨겨진 인종주의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웜머(Wimmer)는 인종차별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비판하는 논리를 포괄하여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이주민 집단과 원주민 집단 간의 경쟁과 현실적 이익의 충돌 때문에 인종차별주의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인종차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다.

노동시장분리로 인해 실제 원주민과 이주민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외국인 혐오는 직접적인 취업경쟁이나 이익갈등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하락이나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더 많이 확산된다는 견해가 많다.

② 이주자나 소수자는 본질적으로 원주민과는 다른 이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기능주의) 이주자의 '이질성'은 이들을 배제하기 위한 구실로 과장되기 쉬우며, 이주자들이 변해야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도 한다.

③ 이주에 대한 정책은 이주문제를 보는 지배집단의 담론(discourse)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배담론이 다수 시민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인종차별주의를 형성한다.(담론 이론)

④ 인종차별주의의 근거를 이주자나 소수인종의 특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다수자 집단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웜머(Wimmer)의 네 가지 유형론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대립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종차별주의는 실제 이익의 충돌이나 갈등으로 인해 강화되는지, 아니면 다수자들이 이미 습득하고 있는 차별적인 태도와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견해가 있다.

(2) 인종차별주의 갈등 요인

EUMC 보고서를 집필한 코엔더스(Coenders)는 인종적 배제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을 현실갈등이론(Real Conflict Theory)과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으로 구분하였다. 현실갈등이론에 따르면, 사회에서는 언제나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며 인종적 배제주의 역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종·타민족을 경쟁에서 밀어내려 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다. 사회정체성 이론은 내집단(ingroup)을 옹호하고 반대로 외집단(outgroup)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로부터 출발한다. 이 이론은 자기가 속한 민족·인종집단을 도덕적·문화적으로 열등하게 인식하는 태도로 인해 인종적 배제주의가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3) 인종적 배제주의의 요인 구성

EUMC는 인종적 배제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두 가지 조사 자료, 즉 Eurobarometer와 European Social Survey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두 조사에 포함된 설문 문항을 토대로 하여 인종적 배제주의는 모두 10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다.

EUMC 인종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소

유럽의 척도 Euro Barometer	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Resistance to multicultural society) ② 다문화 사회의 한계(Limits to multicultural society) ③ 합법적 이주자의 시민권에 대한 반대(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④ 합법적 이주자의 송환정책에 대한 선호(Favour repatriation policies for legal migrants)
유럽사회 조사 European Social Survey	⑤ 다양성에 대한 저항 ⑥ 이주자에 대한 저항 ⑦ 난민에 대한 저항 ⑧ 민족적 거리에 대한 선호 ⑨ 집합적인 민족적 위협에 대한 인지 ⑩ 범죄를 저지른 이주자의 송환정책 선호

한국사회의 종족적 배제주의의 하위요인

하위 요인	조사 문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저항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더 좋다 국가의 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외국인 이주민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다문화 사회의 한계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자의 시민권 반대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가족들을 데려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합법적 외국인근로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주자 송환정책 선호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법 근로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저항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집합적 위협 인지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우리나라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

4. 갈등관리 방안

갈등은 어느 조직이나 존재하며 부정적인 역할 과 동시에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한다. 갈등이 별로 없는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무관심, 창의력의 결핍, 문제에 대한 불감 증 등이 있을 수 있다. 건설적인 갈등은 상호간의 장기적인 평화와 협력을 가져온다. 집단의 갈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적절한 갈등이 오히려 집단 내부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집단 전체의 붕괴를 막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개인과 집단은 갈등상황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공동의 적을 인식하게 되면서 집단 내부의 응집력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소속감의 확인은 내부의 결속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외부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국, 갈등은 숨겨진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문제에 대해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한다. 즉 갈등이 없으면 문제에 대한 해결 기회를 얻기 힘들다. 그러므로 갈등은 버게스(Guy Burgess)가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인 학습을 위한 엔진' 역할을 하게 된다.

갈등의 조정자의 역할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갈등의 종류를 줄이거나 혹은 바꾸거나 배제하는 등 갈등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갈등에 따른 대안 마련은 갈등의 선택을 의미하고 갈등의 선택이 갈등 해결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1) 개인 간 갈등관리유형

갈등관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조직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갈등 관리의 사람의 성격대로 갈등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략적으로 갈등관리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갈등관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레이힘(M.A. Rahim)은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즉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과의 관계설정, 상대와의 관계와 나의 이익 사이의 우선순위설정 등에 따라 유형은 구분될 수 있다.

(1) 회피형(avoiding)

회피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이익도 고려하고, 나의 이익도 고려하는 것이다. 나와 상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피해 가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문제의 핵심에 대한 파악도 어려우며 주의만 맴돌고 있을 때로서 갈등당사자 서로가 갈등 자체를 모른 척하고 있을 때, 주로 사용되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갈등관리전략이다.

(2) 수용형(accommodation)

수용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이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수용형의 경우에는 내가 이익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상대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이다. 수용형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의 논리에 100% 동의할 때, 싸우는 것이 귀찮아서 100% 양보하는 경우, 상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때로서 상대가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어 양보하지 않으면 나의 신상에 불이익이 훨씬 많은 경우 사용하는 갈등관리전략이다.

(3) 통제형(controlling; competing)

상대와의 관계가 어찌됐든, 상대가 나보다 힘이 좋은 아니든, 나의 이익을 찾겠다는 경우이다. 통제형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나의 힘이 상대보다 우위임을 확신할 때, 나의 논리가 상대보다 우위임을 확신할 때,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상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거나, 최소한 해치지는 않는다고 생각될 때로서 신념이 확고할 때 사용하는 갈등관리전략이다.

(4) 타협형(compromising)

나도 조금 양보하고, 상대도 조금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타협 형은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협상법이다. 타협형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나의 이익의 일부의 손해도 감수할 때, 상대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지는 것도 감수할 때, 지금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나 관계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갈등전략이다.

(5) 이상형(협동적 문제해결형: collaborating problem-solving)

회피형, 타협형, 수용형, 통제형이 모두 나와 상대가 원하는 것을 100% 얻지 못할 것을 상정할 때 사용한다. 즉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100%를 모두 얻지 못할 때이다. 그러나 이상형의 경우는 갈등상대와의 상호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인관관계마저도 100% 이상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상생 또는 호혜적 갈등관리유형이라고 한다. 이상형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문제해결의 능력과 추진력이 있다고 믿을 때, 모두가 100%의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확신할 때,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 나와 상대와의 관계가 모두 중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갈등관리전략이다.

2) 문화충격과 갈등

갈등은 문화충격에서도 온다. 색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를 접했을 때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문화충격이라 한다.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혹은 신체상의 이상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상대국의 이질문화로부터 적대적 공격과 같은 행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질문화의 적응이 곤란한 부정적 타입으로 6가지의 성격을 들고 있다. 내향적인 사람, 자폐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 의존적인 사람, 고착성이 강한 사람, 독선적인 사람을 든다.

브린스런은 이질문화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음 6가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이질문화 적응에 쉽게 성공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① 자기와 다른 다양한 사고방식이 발생되어 애매한 상황이 되어도 안정하는 허용성.

- ② 자기에게 긍정적 견해나 자신을 갖고 인격적으로 강하다는 인식,
- ③ 대인관계에 공감성, 연대감, 역할 교대의 능력,
- ④ 전통적인 지능이 아닌 다원적이고 사회적 판단을 포함한 지적 능력,
- ⑤ 목표달성으로의 면밀성, 난관에 대한 인내력, 과제 수행의 신뢰감,
- ⑥ 변화에 대한 개방성, 이질문화를 배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3) 집단 간 갈등 관리 유형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일어나는 마찰과 대립을 '집단갈등'이라고 한다. 오늘날, 사회가 복잡화, 전문화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집단갈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이 있다. 집단갈등은 사회를 분열시키기도 하지만, 오히려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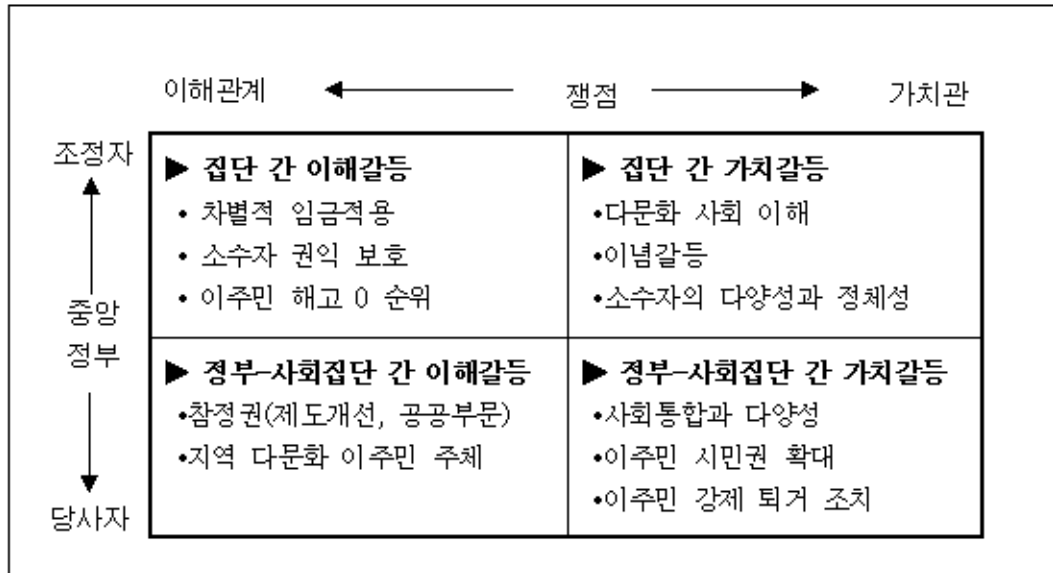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집단 이해의 차이는 자원이 제한적일수록 집단 간의 의존성은 높아지고 경쟁이 심화된다. 자금, 공간, 노동력 그리고 자재 등이 무제한으로 공급 될 수 있다면 조직 내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 측의 이해를 먼저 실현시키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집단 구성원의 인식의 차이도 집단 간 갈등의 원인이 된다.

조직 내 집단들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는 요인이 많다. 주요 요인들로는 목표의 차이, 시간 인식의 차이, 지위의 차이, 그리고 부정확한 지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 지역사회에서 내국인과 이주민간의 차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으로 말미암아, 집단 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과장되어 이주민들을 열등하게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을 갖게 한다. 이러한 차별적 시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별 문화로 정착되어 학습되어 전수 된다. 이는 집단사고로 나타난다.

갈등 유형

유형	원인	갈등 사례	해결방안
정치적 갈등	권위주의 정부와 시민, 정치 세력 이해 차이	4.19혁명, 5.18광주 항쟁, 보수진보대결,	민주주의 정착, 시민사회의 형성, 행정과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경제적 갈등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 투기, 법법, 부당 임금지급, 과소비 등이 원인	빈부갈등, 노사갈등, 의약분업갈등	정의로운 자원의 배분(적절한 보상, 공정 분배, 최저생활 보장) 사회 상류층의 사회적 공헌 활동 및 책임의식
사회적 갈등	빠른 사회변동, 평등주의 이념 확산, 가치관의 차이	세대갈등,남녀갈등, 핵찬반, 낙태여부, 환경보전	인식의 차이 극복, 자원의 적절한 배분, 정보 공개를 통한 정보의 공유,
문화적 갈등	인종, 종교 등 차별, 자문화 중심 사고, 가치관의 차이	교소보난민사태, 북아일랜드 종교분쟁	고정관념과 편견의 극복, 인식의 차이 극복, 다문화적 패러다임 도입,

다문화 사회갈등의 유형 분류



4) 갈등의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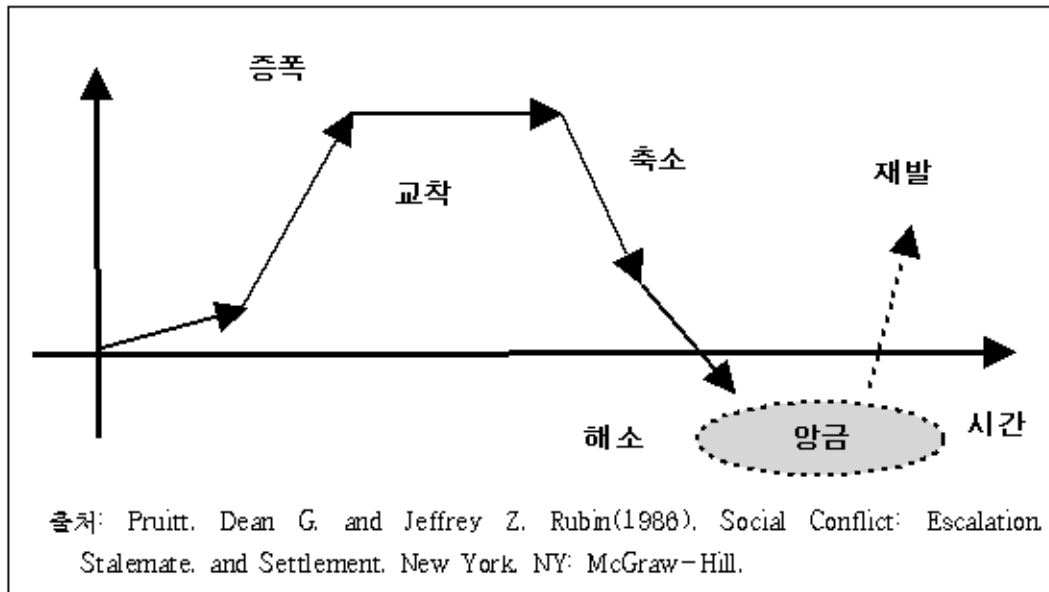
(1) 갈등의 증폭 원인은 흑백의 논리가 뚜렷해지고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보다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정보가 왜곡되어 유리한 것만 들어올 때,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할 때, 너무 몰입하여 자기 논리에 갇혔을 때이다.

(2) 갈등의 교착 원인은 더 이상 사용할 협상 기술이나 카드가 없을 때, 사회나 주위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더 이상 자신의 논리를 증명할 수 없을 때, 더 싸울 의사를 잃었을 때이다.

(3) 갈등의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은 상대가 계속 무반응을 보일 때, 상대가 무조건 양보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거나 상대가 너무 완강할 때, 본인이 스스로 무관심하여지거나 회피할 경우, 조정 또는 중재과정에 접어들 때이다.

(4) 한번 발생한 갈등은 다시 재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증폭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갈등의 진행 과정



5. 다문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제언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적, 집단적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은 다문화 사회의 예상 되는 갈등의 문제까지 사전에 방지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

1) 다문화 사회의 갈등 해결 과정 모델 개발의 필요

(1) 인식(Awareness)

갈등해소과정의 첫 단계는 인식(awareness) 단계이다. 갈등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그 차이가 나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갈등이 일어난다. 인식단계에서는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인식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서로를 파악하기 시작하며 갈등의 원인과 대안의 모색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2) 준비(Preparation)

준비단계에서는 갈등해결을 하는 시점과 협상을 하는 시점을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음. 갈등해결을 하는 시점은 상대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협상을 하는 시점에서의 협상방법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전문가로서 상대방을 이끌어간다. 특히, 제안서를 서로 주고받을 경우, 그 제안서는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는 겉으로 주장하는 것들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그 속에서 핵심적인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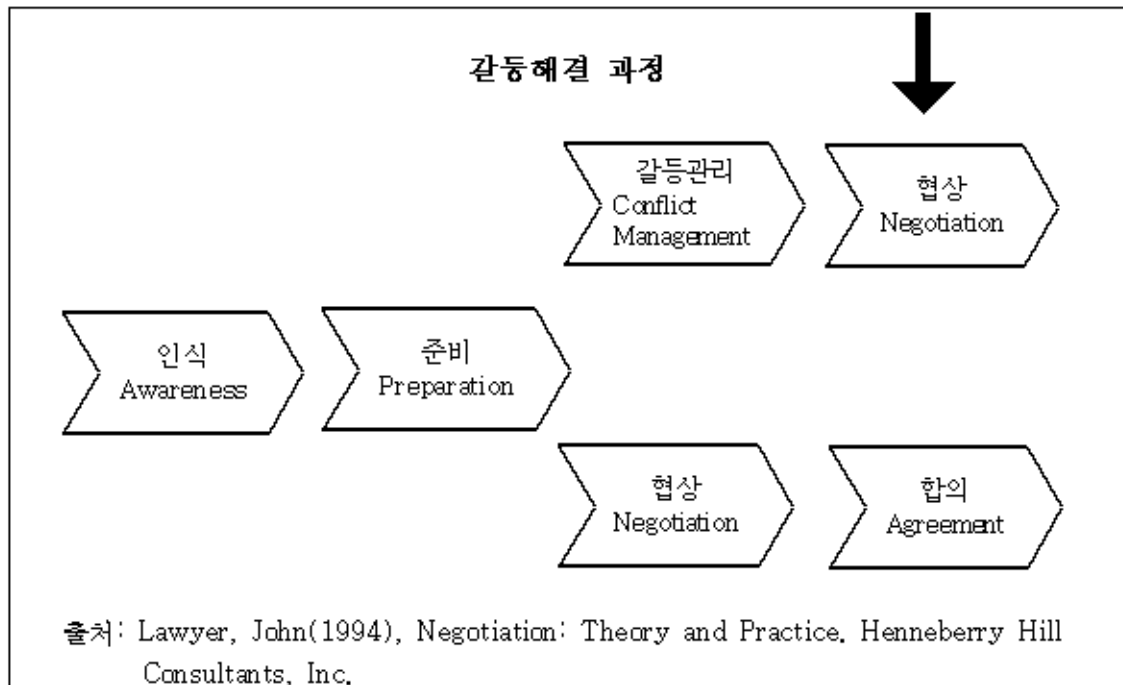
(3)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갈등관리의 시점에서는 감정관리가 주요한 초점이 되어야 함. 사람의 감정이 악화되어 있을 때에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상대의 의견에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상호이해와 발

전적 감정 상태를 조성하여 한다. 차이점을 인정하고 원인 파악을 위한 대화를 시도함. 의사교환이 없으면 차이점을 찾아낼 수가 없으므로 그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갈등관리 후, 감정이 누그러뜨려지고, 원인이 파악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협상의 단계로 진입되어야 한다.

(4) 협상(Negotiation)

협상의 제안 내용을 검토해야 하면서 상대가 실제로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 여기서 적대적인 협상(win-and-lose negotiation)은 나의 이익과 상호관계의 손실을 다소 감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호혜적 협상(win-and-win negotiation)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서 이익과 상호관계의 보전 및 증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이 끝나면 협상 결과에 따른 합의서 작성(Agreement)을 작성한다.



2) 긍정적인 인간관계 회복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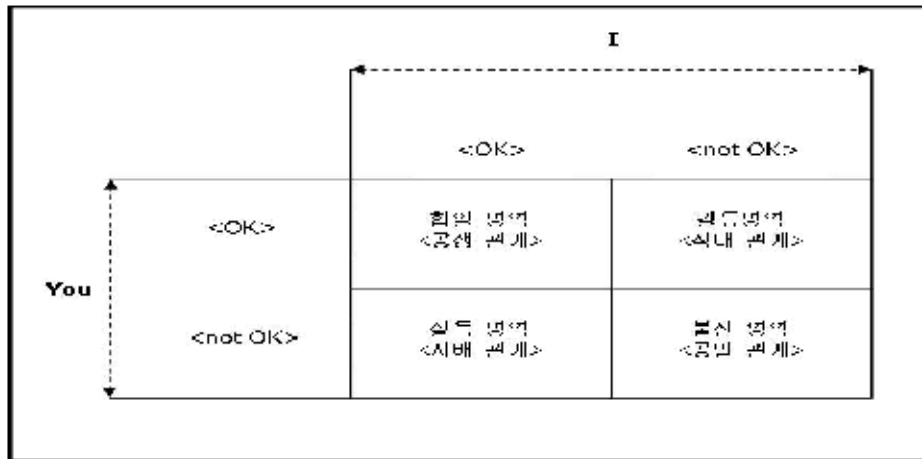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회복을 통한 갈등 해결 방법에 대하여는 '마음의 창문(Joharri's window)'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하리의 창은 '나와 너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A'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영역, 즉 개방 영역이다. 'B'는 나는 상대방을 모르고 상대방은 나를 알고 있는 영역, 즉 장님 영역(Blind Area)이다. 'C'는 나는 상대를 알고 있으나 상대는 자신을 비밀로 하고 있는 영역, 즉 은폐 영역(Hidden Area)이다. 'D'는 자기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상호 무지의 영역(Unknown Area), 비밀 영역(Secret Area)이다.

네 개의 창문이 인간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학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첫째, 나도 긍정, 상대방도 긍정적인 찬성과 합일의 'I am OK, You are OK,' 관계이다.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합일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이 도모되어 생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때에는 한쪽의 문제를 서로의 문제로 동일시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학습도 매우 민활해지고 적극적이다.

요하리의 마음의 창 역학관계



둘째, 나는 부정이나 상대는 긍정인 'I am not OK, You are OK,' 관계이다. 상대 쪽에서는 주장이 제기되고 자기 쪽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전개되어 정신적인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두 사람이 의견의 합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토론이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하면 상대 쪽에서는 설득을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자기 쪽에서는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수용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한다.

셋째, 나는 긍정이나 상대는 부정인 'I am OK, You are not OK,' 관계이다. 자기 쪽에서는 주장이 제기되고 상대 쪽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전개되어 갈등 관계를 조성하게 된다. 두 사람이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면 인간관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자기 쪽에서는 상대의 의사에서 접근점이나 유사점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양해되도록 설득을 하여야 한다.

넷째, 나도 부정이고 상대도 부정인 불신, 배반의 'I am not OK, You are not OK,' 관계이다.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의 상태이다. 두 사람이 팽팽한 손익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하기 어려워진다.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두 사람의 인간관계는 서로 손상을 입고 불행한 결과로 끝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적절한 중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 도형을 이해(利害)의 관계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3) 행동변화를 통한 집단갈등 해결

집단갈등의 해결 방안에는 여덟 가지 방법이 있다. 집단 갈등은 원인과 관리 방법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① 직접대면의 방법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집단을 직접적으로 대면시킴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여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로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 차이의 폭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② 공동목표 설정의 방법이다.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 간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다. 단독적인 집단 목표보다는 집단 간에 주어진 공동의 목표가 보다 중

요한 경우, 집단 간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의논하고 교류하게 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수가 있다.

③ 자원 확충의 방법이다. 조직 내에서 한 집단에 대한 자원 분배는 다른 집단의 손실의 대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다. 이러한 경우 자원자체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다.

④ 갈등회피이다. 때로는 단기적인 갈등 해소의 전략으로서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⑤ 공동관심사의 강조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집단 간의 차이점은 무시하고, 공동관심사를 강조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함께 달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⑥ 협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로 협상 할 것인지를 쌍방 간에 명백히 해야 한다.

⑦ 권력을 이용한 갈등해결이다. 권한을 사용하여 집단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 오래되고 흔히 쓰는 방법이다. 그러나 힘에 의한 갈등해소 방법은 갈등원인 보다는 갈등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집단 간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게 되며, 갈등의 재발 가능성 또한 높다.

⑧ 행동변화 유도이다. 집단구성원들의 행위나 태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집단구성원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갈등의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집단 구성원들의 태도를 직시하여야 한다.

기타, 집단 간 조직 갈등 조 정자를 두는 방법, 외부 압력에 의한 연합 방어, 외부 인력의 영입, 경쟁 심리의 자극 등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행동변화의 유도방법은 다른 갈등권리의 방법들보다 전개되는 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가장 착실한 갈등 해결 방안이다.

4) 다문화적 정책적 배려와 갈등 불만 해소

① 다문화를 표방하는 동화주의 정책은 반발만 가져온다. 자국문화중심의 사회통합정책은 갈등의 불씨가 된다. 중장기적인 다문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시적, 시혜적인 방법만으로는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없다.

② 사회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지원하며 문화, 종교적 정체성과 다문화적 시민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종교문제는 다문화 사회의 다수자 집단의 관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③ 다문화 교육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다수자들을 위한 문화 간 소통, 문화간 충분한 이해, 공존의 모색 등의 방안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④ 다문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각종 법 제정과 제도화를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성과 평등성의 확보는 다문화 사회의 기초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갈등]

다음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를 예로 한 국제결혼 가정의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각 원인별 갈등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입력해 보도록 한다.

갈등원인	남편	아내
의사소통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이 굼뜨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시간이 가도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 답답하고, 적당히 포기 한다, 대충 알아들은 것으로 하고 그런가 보다 한다.	일을 빨리빨리 못한다고 구박 무시한다, 무슨 말을 하려면 시끄러워, 조용히 해 한다, 어차피 통하지 않을 것, 아이나 잘 키우고 살림이나 잘하라 한다, 사투리는 안 배웠다.
문화차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아내를 서양식으로 이해, 한국음식 못 만든다,	남편이 집에서 왕처럼 군림, 부인 나라에 대해 전혀 모른다, 로마에서는 로마식으로 하라 한다.
인권	도망갈까 염려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답답하다.	돈 주고 사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비자 연장 문제로 위협한다, 자주 때린다.
남편의 생활	술을 마시지 말라하면 모든 친구 관계가 끊어진다.	술을 먹으면 평소보다 폭력적이 된다, 가출하여 오래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
시부모간섭 /시부모 의존	아내가 부모에 대한 효가 부족하다, 한국식을 잘 배우려 하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남편말만 듣는다, 시부모의 간섭이 너무 많다, 어느 때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 마마보이 남편
시집식구	형제가 와도 자기 생활만 한다, 형제와 함께 하지 않는다.	개인 사생활이 없다, 친척이 집에 와서 자기 집처럼 한다, 말이 안 통한다.
아이양육	아이들에게 아내가 너무 집착한다, 자녀에게 아내의 모국어 가르치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자녀는 한국식으로 키워야 한다.	아이를 애정으로 키우고, 울리거나 야단치면 안 된다, 자녀성장이나 언어발달이 늦을까 스트레스다, 자녀가 한국어가 완벽해 지면 모국어를 가르칠 것이다.
경제적 통제	살림을 맡기지 않고 비정지적으로 용돈을 준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두 손을 내밀고 돈을 구걸하다시피 한다, 일을 못하게 한다, 집안경제가 너무 어렵다, 남편이 일을 안 한다.
나이차이	젊은 아내의 욕구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	남편의 성적과 취향이 차이가 크다.

[22차시]

1. 사회 통합의 이론과 이민 행정

1) 사회적 통합의 이해

(1) 사회적 통합의 개념

통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 된다. 조직이나 기구의 통합으로서 사회의 여러 조직이나 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것,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들이 정치나 법적인 수준에서 단일한 체제에 속해서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직이나 체제의 공동의 운명체 구성원으로서 유기적인 문화적 연계를 가지면서 공통의 가치 체계,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의 법과 제도 형성, 안정된 생활의 보전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합은 사회적 단위들의 관계개념으로서 개별 행위자, 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의 유기적 관계로도 본다.

(2) 사회적 통합 이론

① 국제관계론적 사회적 통합

국제관계론적 사회 통합 연구는 두 개 이상의 국가들 간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제관계론적 사회 통합 연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국가 간의 통합이라는 국제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개발되었다. 전쟁이다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럽 공동체와 같은 국가들 간의 협력체가 형성되어 가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통합 이론이 발달하였다. 국제 정치학에서 통합은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구성하게 하는 것 또는 상호 의존(interdependence)을 산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나. 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

도이치(Deutsch)는 통합의 문제에 대해 안전 공동체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안전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요소로 모두 14가지 항목을 열거하였다. 이 중에서 핵심적 가치의 일치(공통의 언어, 관습, 문화)와 집단들 간의 상호 교류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지역 간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핵심 지역이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이 강한 통합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제이콥과 터니(Jacob and Teune)는 10가지의 통합 요건을 제시하였다.

- | |
|--|
| ① 지리적 근접성, ② 재산, 지위, 지역, 인종, 언어, 가치 등의 동질성, ③ 사회가 지닌 태도, 가치, 개인 간의 상호 교류, ④ 상호 간의 인지(인식상의 인접성), ⑤ 공유된 기능적 이해관계, ⑥ 사회가 지닌 태도·가치관·행위 유형 등의 사회적 제 특성, ⑦ 단위 공동체의 의사 결정 구조와 권력 구조와 같은 구조적 형태, ⑧ 공동체의 주권-종속 지위, ⑨ 정부의 효율성, ⑩ 이전의 통합 경험 |
|--|

다. 통합의 접근 방법

첫째, 사회 문화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집단들을 하나의 영토적 단위로 결합시키고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과정

둘째, 특정 사회 집단이나 역사적 정치 단위들에 대한 불일치를 느끼는 하위 단위 혹은 지역들에 대하여 국가의 중앙 과정

셋째, 정부와 피지배자, 엘리트와 대중 간의 간격과 갈등 가능성을 줄이고 연계를 이룩하는 과정

넷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나 목표를 둘러싼 최소한의 합의를 얻는 것

다섯째, 공통 목표를 위해 조직화하려는 사회의 인민 능력과 관련하여 통합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② 사회학적 사회적 통합 연구

사회학적 사회 통합 연구는 한 국가 또는 사회 내에서의 내적 통합 즉 사회 질서와 사회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

구조기능론	통합의 정의	파슨스(Parsons)은 사회를 상호 의존적인 여러 부분들이 전체로 통합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의 통합되어 신체를 구성하듯이 사회에도 기업, 정당, 가족, 학교, 종교, 등 여러 조직들과 제도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라는 하나의 통합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의 각 부분은 궁극적으로 전체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존재의 의의가 있다.
	통합의 접근방법	파슨스는 사회 통합이 강제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사회구성원들이 내면화하고 적극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만약 사회 성원들이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사회 각 부분들 간의 부조화와 갈등이 발생한다. 이때 경찰과 법원은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 비판이나 교육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갈등론	통합의 정의	갈등론은 사회의 각 부분들이 상호 균형을 이룬다기보다는 끊임없는 긴장, 갈등, 투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갈등론은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의 강압에 순응함으로써 사회 통합이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의 작동요인	칼 마르크스는 경제 결정론적 관점에서 갈등이 희소 자원, 특히 권력의 분배 때문에 발생하며, 이익의 양극적 대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사회 체계에서 변동의 주요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갈등은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성원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막스 베버는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안정과 통합 지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갈등적 관계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베버는 갈등은 필연적으로 계급투쟁과 같은 격렬한 갈등으로 발전하지만은 않고 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권력이 정당화되어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원들 간에 원칙적인 이해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은 영구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
	통합의 접근방법	통합에 있어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이념의 내면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배 집단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도전받거나 의도된 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지배 집단은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회 통제를 하게 된다.

③ 인종·민족 관계론적 사회 통합 연구

동화론	통합의 정의	통합은 동화(assimilation)는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단위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동화는 장기적으로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 흡수되어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상실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통합의 접근방법	동화적 통합은 단일한 형태가 아니다. 동화의 형태는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 합쳐져서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시하는 것일 수 있고,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이 마치 용광로에서 서로 녹아 새로운 혼성물(hybrid)을 만드는 것일 수 있고, 소수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편견과 차별 없이 주류 사회의 기회 구조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다.
다문화론	통합의 정의	다원론의 통합은 민족적 차이와 이질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조건에서 집단 간 다양성과 집단 경계의 유지를 권장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통합의 접근방법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정의 하였다. 이때 인정의 정치는 단지 소수 집단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의 문화가 존속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이주행정 관리로서 사회적 통합

국가에 의한 이주관리로서 통합은 이주민의 사회적 동화 내지 수동적 적응의 의미로 주로 사용 된다. 자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언어와 문화 이해 정도를 입국, 체류갱신, 국적 취득의 조건으로 채택한다. 이주관리는 동화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소수집단이 주류문화의 관습과 태도에 점진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나아가 자국의 국가가 표방하는 가치를 암묵적으로 강요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이주기구(IMO)에 의하면, 통합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제한 없이 평등하게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으로 본다.

⑤ 사회통합의 모델

프랑스 이민자의 통합모델을 보면 4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적응(adaption)은 산업사회의 노동, 기계, 시간, 리듬에 대한 적응의 함축적 의미이다. 둘째, 동화(assimilation)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려는 의미이다. 셋째, 편입(insertion)은 소수민족의 문제를 보편적인 틀에서 고려하는 함축적 개념이다. 넷째, 통합(integration)은 사회에 온전히 편입되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동화와 차이가 있다.

⑥ 통합과 동화, 다문화주의

통합과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의 조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문화주의가 통합이나 동화와 다른 것은 이주자가 여타의 문화적 연고를 버리지 않아도 이주자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2) 이주행정과 사회적 통합

(1) 사회적 통합의 목표

이주민정책으로서 사회통합은 사회통합정책은 ‘특정국가에 사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책임과 권리를 규정하고, 시민과 비시민간의 범주 구분을 만들거나 변화 시키고자 하는 구체적인 규범이나 법, 담론들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정책은 시민이 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주민들을 훈육하는 이중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국제이주기구의 통합정책은 포괄적 이주관리제도로서 다음의 목표를 지향 한다.

- ① 이주자가 자신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을 실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이주자의 인권이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 ③ 소외와 주변화의 정도를 감소시킴으로써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
- ④ 사회적 응집력과 조화를 달성하고 보존한다.

(2) 통합관련 국가 정책의 경향성

캐슬러와 밀러(Castler and Miller, 1998)에 따르면, 이주민의 수용방법, 국적 부여 원칙,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제도와 연결하여 이주민정책 모델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 한다.

국가제도모델	사회통합 국제가도 모델 내용
제국주의 모델 (Imperial Model)	같은 지배체제 아래 있는 국가들에게 제국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형태이다. 이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국민들에 대한 그들의 실질적인 지배를 감추기 위해 식민지 국민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1981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영국 연방이 대표적인 이 모델에 속한다.
민족주의 모델 (Ethnic Model)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형성하며, 이주민은 시민권의 획득이나 국가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혈통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모델은 독일의 경우이다.
공화주의 모델 (Republication Model)	이주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주류 사회에 통합하되 이주민이 지니는 특수성이 완전히 국가의 사회문화 속으로 일체화 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모델이다. 프랑스에 이주하려는 이주민과 이미 정착한 이주민을 구별한다. 신규 이주자는 엄격히 구분하고, 이미 정착한 이주민에게는 내국인인과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이주민에게는 기본권이나 소송과 같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시민권을 보장하지만, 정치적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 한국의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가 이 같은 경우이다.
다문화주의 모델 (Multicultural Model)	이주민들 각 개인이 지니는 문화적 특수성을 훼손 하지 않은 채, 국가가 이질성을 포용하는 모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스웨덴과 오스트레일리아이다. 미국과 영국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출처: 이기영 외.(2008), 「이주민정책과 서비스」, 나눔의 집, 의 내용을 재구성.

(3) 국민정체성 통합과정의 정책 기준

① 국민정체성 형성 모델

가. 다문화 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

이 정책 모형은 이주민 집단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 지원한다. 이 정책은 동화나 배제가 아닌 공존을 정책의 목표로 한다.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유입국 내에 공존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거나 사회통합을 유지해 나가려는 정책을 위한다. 이 유형은 동화주의의 용광로(melting pot)와 대비하여 샐러드볼(salad bowl) 혹은 모자이크(ethnic mosaic)에 비유한다.

다문화주의 모형도 주류문화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이주민의 다양성이 주류사회의 주류문화를 전제로 하는 경우로서 '통합적 다문화주의'와 주류문화와 소수자 문화를 동등하게 중요시 하는 경우로서 '다양성의 다문화주의'가 구분할 수 있다. 통합적 다문화주의는 주로 미국의 경우이고, 다양성의 다문화주의는 주로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이다. 통합적 다문화주의는 소수자문화를 방치하지만, 다양성의 다문화주의는 소수자들이 그들의 고유문화를 유지발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나.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

이주민 입장에서 이 정책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이주한 지역의 주류문화와 합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유입국의 입장에서 이주민을 일방적으로 주류사회에 통합시키는 방식이다. 주류사회는 동화를 기반으로 국적취득을 허용하거나 국민의 자격을 얻게 하는 정책모형이다. 동화주의 모형은 과거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주민을 대상으로 착취적으로 억압적인 정책의 일환이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까지 표방하였던 용광로 모형, 프랑스가 최근까지 유지해 온 '공화주의 정책 모형'등이 여기에 속한다. 독일의 이주민 정책의 이데올로기는 형통에 기반을 둔 민족, 국적모형의 동화주의를 지향한다. 한국에서 결혼 이민자의 경우 미국의 용광로 모형과 독일의 모형을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다. 차별 배제형 모델(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일반적 형태의 이주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일부 영역에 한정해 개방하는 정책이다. 임시 체류 외국인들에게는 국적 취득, 참정권 불허, 복지혜택 배제 등, 사회 정치 영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의 유형이다. 이들 국가에서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주로 순환교체방식(rotation policy)을 취한다. 한국, 일본, 대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다문화주의 모델을 취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단순 노동자의 경우 차별배제형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② 사회통합 개념 이해로서 접근 과정

사회통합과정은 접근방법에 따라 내용도 달라지지만 대개는 이주민 집단은 자조화,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 등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화 과정으로서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의 내용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본다.

자조화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직업을 위시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추구 과정에서 자율
------------	--

	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질화	사회구성원들의 심리적 문화적 특성이 몇 몇 집단들로 나뉘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분리	사회구성원들을 특정한 기준에 의거해 인위적으로 떼어 놓고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차별	사회성원들을 인위적 기준에 따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불평등	사회성원들의 다양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자원을 향유함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장경섭, (1995), 통일한민족 국가의 사회통합, 박기덕 이종식 편, 「남북한 체제 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세종연구소,를 재구성.

(4) 사회 통합 평가 지수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는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등에 따라 평가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은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합의 정도를 분석 할 때는 시간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의 대부분은 이주민들이 주류 사회에 녹아들어간 정도를 총합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와 분리된 모습을 보일 경우 주류사회에서는 이주민에 대하여 사회 부적응으로 판단 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국제이주기구 지표		언어, 교육, 사회, 정치, 경제
아이러랜드 (Ireland)	구조적 차원	노동시장, 교육 및 훈련, 주택, 사회적 서비스 제공 여부
	정치 문화적 차원	공식 비공식 형태의 참여, 수용, 문화적 교환
유럽지수	사회경제적 지표	노동시장, 수입, 실업, 교육, 주택상황, 이주민 거주 집중도와 공간적 분산성,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교류정도, 여가나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정치적 참여 지표	각종 조직 제도의 참여, 지방 및 중앙 정책의 참여와 의지

2. 정부의 사회적 통합 정책

1) 국내 사회통합 논의

(1) 사회적 통합논의 과정

선진국들의 경우 1980년대는 주로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로 구조조정의 시기였다. 그러나 차츰 경제가 회복되는 1990년 이후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요건으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이 강조되었다. 즉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시정하는 차원에서의 사회적 통합이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외환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 되면서 사회일각에서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의 과제가 제기 되었다. 특히 2005년 정부는 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통합의 문제가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회통합의 정책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양극화를 고착화 시킨다며 비판하였다. 그

러다가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한파가 닥치면서 정부는 다시 2009년부터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민관차원에서 사회, 복지, 고용분야 등에서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사회통합위원회'를 출범 시켰다. 사회통합위원회는 경쟁적인 시장주의과정에서 적응이 안 되거나 낙오한 소외계층 대책, 양극화 대책, 이념 갈등 극복방안, 지역 및 성차별관련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사회통합을 중시하며, 사회통합의 과제는 빈곤 축소와 결부되어 있다.

(2) 국내 일반의 사회적 통합 지수

사회적 통합은 일종의 국민적 결집력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비전을 공유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한 사회의 통합 및 갈등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 사회통합지수이다. 가족관계, 주거, 소득, 교육, 건강, 고용, 가계금융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7개 주요 지표를 표준화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의 통합과 갈등 정도를 분석한다. 0을 기준으로 0 이상이면 통합이 잘되는 상태를, 0 이하면 갈등상태를 의미한다.

1989~2007년 한국인의 주거 소득 교육 건강 고용 가계금융 가족관계 등 7개 사회지표를 분석해 통합과 갈등의 정도를 '사회통합지수'로 정리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빈부 격차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19위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적 결집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다. 사회통합지수란 가족관계 주거 소득 교육 건강 고용 가계금융 등 지표를 통해 사회 통합과 갈등의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대명 박사팀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및 추진전략' 보고서(2009)에 나와 있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사회통합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가운데 19위에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적 결집력이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지수는 가족관계 주거 소득 교육 건강 고용 가계금융 등 지표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갈등의 정도를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2) 정부의 다문화 이민 행정으로서 사회적 통합

2009년 1월부터 귀화신청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이수제가 실시된다. 귀화신청자에게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로 적용되고 국민에게는 글로벌 다양성 이해 교육으로 적용되며 향후 영주자격자 등에게도 사회통합이수제가 확대 적용 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통합방법은 국적부여 원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통합모형은 차별 배제형 모형과 혈통주의, 동화 모형과 거주지주의, 다문화 모형과 출생지주의가 가장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혈통주의는 부모가 그 나라 국민인 사람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고, 출생지주의는 태어난 곳을 국적부여 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거주지주의는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지역을 국적부여의 기준으로 삼는다.

(1) 정부의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

정부 내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합의 된 개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통합은 다양성에 기초하여 새롭게 그 개념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부처	정부의 사회적 통합 개념 유추
보건복지 가족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 및 우리 사회의 후세대를 건전하게 양육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다문화가족 지원법, 2008.3.21)
교육과학 기술부	언어 및 문화장벽 해소를 통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해 다문화 감수성의 증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 보고서, 2008.7)
노동부	외국인근로자는 그동안 사회통합 대상이 아님.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통합 개념의 논의가 필요함.
문화체육 관광부	국적, 민족, 인종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다문화사회로서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8. 7입법 예고)
법무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이 동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소수집단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공동규범과 가치를 내면화하고 생활양식을 습득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차이를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규정. (외국인정책본부 정책 자료, 2008.5)

출처: 차용호.(2008).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한국사회의 통합정책」, 서울: 한국이민학회를 재구성.

(2) 사회통합제의 취지와 내용

- ① 한국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를 검증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② 이주민의 사회 부적응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 교육과 취업기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 ③ 국제결혼 가정의 쌍방향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둔다.
- ④ 대상은 국제결혼이주민, 해외동포, 유학생, 이주노동자, 난민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는 5단계로 구성한다.
- ⑤ 사회통합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국적취득의 필기시험을 면제 받도록 한다.
- ⑥ 한국어를 의무화함으로써 가족이 반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사회통합의 대상

정부의 사회적 통합의 개념 정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대상, 사회통합의 정도, 내역 및 범위, 기준이 없는 것은 당연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계자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하며 사회통합의 대상 우선순위 모델을 제시한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일보한 일이다.

사회통합의 대상 우선순위 모델

순 위	대 상
1순위	영주, 국적 취득을 신청한 결혼 이민자, 영주자격, 국적 취득자, 귀화자, 국

	적수반 취득 미성년자, 숙련 생산기능외국인력 및 그 가족,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 및 그 자녀 등
2순위	동포 중 귀소련 동포 또는 무연고 중국 동포, 귀화 결혼 이민자의 가족과의 결합 등
3순위	단기 순환 외국인 근로자, 유학 생 등

출처: 차용호.(2008). '이민자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한국사회의 통합 정책」, 서울: 한국이민학회.

(4) 사회통합의 범주, 내용 및 지수개발

알렉산더(T. Alexander)는 사회통합을 언어적 통합, 교육적 통합, 경제적 통합, 주거적 통합, 가족적 통합, 정치적 통합 기타(사회 안정적 통합, 문화적 통합, 건강 등)로 범주를 구분하여 10점 만점의 지수로 도출하기도 하였다. 법무부의 차용호는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통합의 내용을 예시 하였다.

① 통합의 교육적 차원의 내용

구 분	내 용
기본 소양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등
지식 교육	컴퓨터, 요리 등
정보제공	사회서비스 이용방법, 취업 알선, 다국어 민원 안내 등
상담	가족 상담, 법률구조 지원, 고충상담, 가정 폭력 보호 등
보육 등 사회서비스	출산 및 양육 지원, 산후 관리, 아동교육, 기초생활 지원 등
다문화 이해증진	다문화 교육,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등 불합리한 제도 시정 등

출처: 차용호.(2008). '이민자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한국사회의 통합 정책」, 서울: 한국이민학회.

(5)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는 2007년 10월 도입 방안을 밝힌 이후 2009년 1월부터 전국 20여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1년 뒤 전국적으로 확대 된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는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정책과 연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이수제가 국적 신청 예비자로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는 점차 국적 신청자만 아니라 영주자격자, 거주자격자 등을 대상으로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적필기 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필기시험 대상자	응시자 수	합격자 수
2007	7,208	5,540	3,136
2008.6	3,430	2,656	1,346

현재 국적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가 의무참여는 아니다. 다만 사회통합 이수제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 귀화필기시험 면제, 국적취득 대기시간 대폭 단축, 면접시험 가점 요인 반영을 하고 있다. 그밖에 지자체의 의료비, 양육비, 결혼 비용, 부모 초청비 등 각종 혜택의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문화사회 이해 과정은 다문화사회 이해 활동과 다문화사회 이해 일반교육 등 2단계로 진행한다. 다문화사회 이해 활동은 직업교육 등 이민자의 독립적인 경제활동 지원,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 및 다양한 인종, 민족과 공존, 이민자의 의식주 해결 공공시설 이용방법 등 이해, 이민자의 한국사회 이해, 이민자가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 이민자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목하여 글로벌 다양성 문화로 승화 등이다. 다문화사회 이해 일반교육은 동포,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국민 등의 한국사회 및 이문화 등 다문화사회이해 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표준화 예시

언어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수시간	이민자	초급1 100시간	초급2 100시간	중급1 100시간	중급2 100시간	고급 면제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		다문화 사회 이해 활동				일반교육
이수시간	이민자	20시간				30시간
단계 배정	사전	결혼이민자	39점 이하	40-49점		
	평가	일반이민자	39점 이하	40-49점	50-69점	70-89점
					90-100점	

출처: 차용호.(2008), '이민자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이민학회, 「한국사회의 통합 정책」, 서울: 한국이민학회.

한편 법무부는 다문화사회이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1급 자격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양성고정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발생 원인과 이민에 관한 지식, 이론 등 다문화 사회를 이해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문화 사회통합 지역거점 ABT(Active Brain Tower) 대학에서 개발 예정인 글로벌 다양성 전문가 양성과정 이수자에게 주어진다. 그동안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양성한 다문화강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거쳐 자격을 인정하게 된다.

3) 정부의 다문화 지역사회 통합 정책

(1) 외국인 지역사회 참여 확대

- ① 정부는 이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행안부)하였다. 일정자격을 갖춘 이주민에게 조례개폐 및 주민감사청구권 부여한다.
- ② 이주민 지원 봉사단체·개인 DB 구축(행안부)한다. 이주민의 원어민교사·통역·번역 기회 확대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참여를 확대한다.
- ③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행안부, 법무부)이다. 이주민 기초생활 실태 조사 시 '생활실태' 항목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지역·국적·성별 등으로만 구분하여 실시하였지만 향후 이주민의 취업률, 지역사회참여율, 교육률, 범죄율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사회통합지수 개발할 예정이다.
- ④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행안부)이다. 민간지원단체 설립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예산지원 법제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 활성화

- 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다문화관련 축제·행사를 세계인의 날 주간에 집중 실시(법무부, 행안부, 문체부)한다. 중앙정부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축제를 관계부처와 공동 개최

② 지자체별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행사 개최 지원(문체부)한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지역특화 문화축제 지원 등이다.

(3) 집단거주지역내 생활환경 개선

① 외국인집거지 개발 등 사회 안정화 지원 (행안부)이다. 이주민 집거지내 자조조직 육성 과 자원봉사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이주민집단거주지 내 에 내외국인간 화합행사 개최 시 행정지원 확대한다. 지자체에서 이주민 집단거주지 개발을 지역현안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방안 검토 중이다.

② 외국인선원 집거지 내 합숙소 건립 확대 추진(국토해양부)이다. 외국인선원의 안전·위생 요건 향상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현대식 시설의 합숙소 건립 추진한다. 현재 선원합 숙소가 있는 지역(속초, 후포, 죽변지역 등)은 집단거주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되고 있다.

(4) 집단 거주 지역 내 외국인관리체계 강화

① 외국인집거지 관리체계 강화 (법무, 행안부 등)이다. 관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 활성화 한다.

② 이주민 자율조직의 건전한 육성 및 네트워크 지원(행안부)이다. 지역 이주민 대표로 구 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행정 및 지역사회에 의사를 반영한다.

③ 정기적인 합동 실태조사 실시(행안부[지자체],식약청 등)이다. 집단 거주지 중 6곳을 특 별 관리 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4) 정부의 사회통합 이수제의 비판

① 2년간 한국어를 배우게 함으로써 언어를 동질성으로 한 국민 만들기라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어를 잘 못하면 국적을 가질 수 없다는 장벽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② 사회통합 이수제는 이주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평균적 국민 만들기가 되기 쉽다.

③ 사회적 통합 이수제는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하여 이주민이 자기 문화를 빨리 포 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④ 사회적 통합 이수제는 혈통-모국어-국적의 연관을 갖는 국가 모델로서 국내에선 혈통주 의 문화와 가부장 문화를 국제결혼 가정에게 고착화 시킬 수 있다.

⑤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인에게조차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며 한국어가 국민의 필수 요소로 강제 되고 있다.

⑥ 사회통합이수를 중간에 그만 두는 이주민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무능력, 무책임의 낙인이 예상 되어 또 다른 편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⑦ 사회통합 이수제는 결혼이민 여성을 저 출산의 위기나 돌봄, 노동력 부족을 메우는 대체 인력으로 상정시키는 또 다른 고정관념 형성의 위험성이 있다.

3. 문화적 다양성의 정책과 권리

1) 문화적 다양성 정책

(1)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

문화적 차원에서 중심이 되는 선은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부정적으로는 획일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양성은 다문화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다수자 집단들과 소수자 집단의 공존의 초석이 된다. 심지어 다양성은 소수자 집단 간에도 인종, 문화, 민족, 언어, 종교의 광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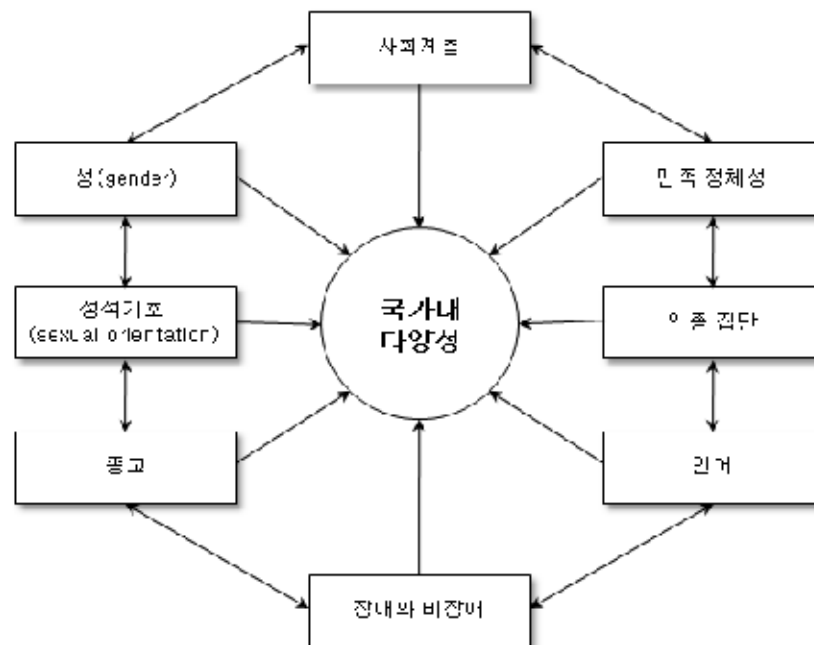
한 편차가 있다. 다수자의 문화는 종종 소수자에게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민족 등을 강제한다. 따라서 다수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으로서 다양성은 소수자의 권리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고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적극적 개입 등을 통하여 '다양성'을 지켜야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 ① 다양성의 문화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그 자존을 지키고,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② 다양성은 다수자 문화의 성숙도를 볼 수 있는 중요 척도가 된다. 다수자 문화의 사회에서 소수자의 문화들을 억압하는 사회적 환경이 다문화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③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은 곧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이다. 인간 삶의 정신적 측면과 물질적 발전이 또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 ④ 다양성은 인간 삶의 힘과 에너지를 발견해내려는 활발하고 생명력 넘치는 문화, 인간의 창조적 열의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표출하는 문화를 지향하게 한다.

(2) 다양성의 변수와 민족의 정체성

① 다양성의 변수

다양성이란 다문화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집단들의 내부 및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종, 문화, 민족, 언어, 종교의 광범위한 편차를 나타낸다. 다양성의 변수들-인종, 성, 사회계층, 종교 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출처: J.A. Banks(2001),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s, Curriculum, and Teaching*(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p.76.

② 민족정체감의 영역

민족 정체감은 자기가 속한 민족 집단의 구성원이나 지식과 관련하여 생기는 자기 개념의

일부로서 민족 구성원으로 느끼는 가치와 정서적 의미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민족 정체감은 첫째, 소속감과 태도로서 민족적 배경에 대한 긍지, 좋은 감정, 만족도 등이 포함된 확인과 소속감(affirmation and belonging) 둘째, 자기민족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는 민족 정체감 성취(ethnic identity achievement) 셋째, 고유한 민족적 행동과 관습에 관심을 두는 민족 관습(ethnic behaviors) 등으로 구분된다.

특정분야 다른 신념과 습관	사회구성원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생활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신념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특정분야 다른 신념과 습관의 형태란 보편적인 문화를 수용하면서 특정한 부문에 대해서만 자신들의 독특한 신념·생활방식을 취하는 경우이다: 레즈비언, 게이, 신세대 문화 등
주 문화에 대해 비판과 재구조화	자기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지도 않고 독창적인 문화공동체에 속해있지도 않다. 단지 기존의 주 문화를 어떻게 재구조화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 : 페미니스트와 환경운동가 등
다른 신념과 습관으로 조직화된 공동체	다문화사회는 두 개 이상의 문화공동체가 있는 사회를 의미하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은 세 번째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주민공동체나 유태인 공동체 등이 그 예다.

출처: Parekh, Bhikhu, (1999), *Political Theory and the Multicultural Society*.

(3) 다문화주의 정책으로서 다양성

트로퍼(Harold Troper)는 다문화주의이기 위해서는 ①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이 있어야 하고, ②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이 존재해야 하며, ③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공평하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정책

다문화화 정책	문화(언어, 규범, 가치관, 종교, 이념, 생활양식, 법 등)에 대한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언어교육정책과 다언어매체정책
다 제도화 정책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 간에 공통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범/제도/법 등을 만드는 정책
다사회화 정책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
다 평등화 정책	차별해소정책과 역차별 해소 정책을 모두 포함

(4) 정책으로서 다양성 분석의 틀

① 차별적 포섭, 배제로서 다양성 정책

국가 이민 행정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으로서 차별적 포섭, 배제 접근은, 이민자들이 노동시장과 같은 어떤 사회영역에는 허용되고 복지체계나 시민권 같은 것에는 접근이 거부된다. 특히 사회통합에 있어서 차별적 포섭, 배제의 기제는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소수집

단은 그 존재를 인정하고 또 어떤 집단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이주민 집단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인정하고 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각종 권한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접근을 취하기도 한다. 잉그램(Ingram)은 포섭과 배제의 기준은 세 가지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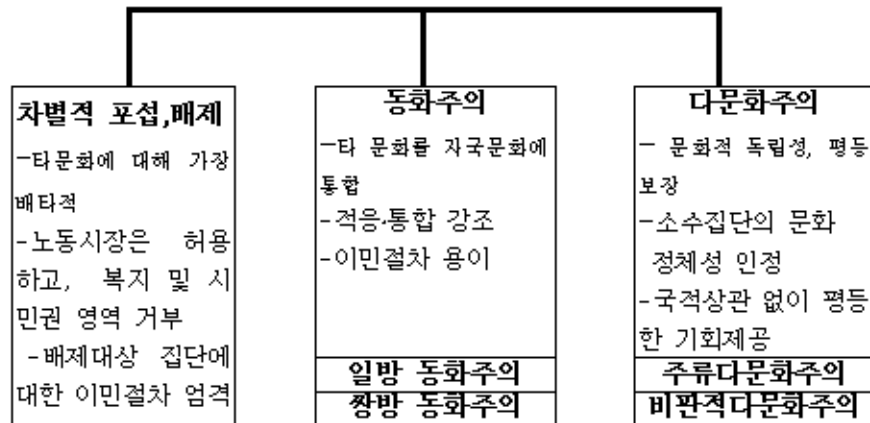
- 그럴만한 가치(worthy or deserving)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데, 이것은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미지나 사회적 평판과 연계된다. 사회적 평판은 이 집단이 기존의 사회질서와 기득권에 얼마나 위협적인가에 의해 판단되고, 특정집단이 기존 사회 질서와 기득권에 위협으로 인식되면 배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기준은 정책대상 집단이 사회전체 복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도구적 효용성이다.
- 기준은 특정 집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권력이다. 특정집단이 많은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정책과정에 포섭되는 데에 유리하다.

② 동화주의적 차원에서 다양성 정책

동화주의적 정책은 이민자들이 주류집단과 동일하게 변해갈 것을 기대하는 일방적 통합이다. 따라서 사회내의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이 국민이라는 다수집단 속에 융해되며,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과정의 결과 결국은 다수집단과 분리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다. 도로 단일문화주의로의 회귀이다. 새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공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개인은 민족적, 인종적 차이에 관계없이, 신앙이나 문화적 관습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민자와 소수집단은 그 특징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은밀히 보존되는 데 그친다. 이주민은 다수에 의해 정의된, 다수에 적합한 문화적 행태들을 받아들인다.

③ 다문화주의적 차원에서의 다양성 정책

다원주의 모델에서는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민족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 다양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이름그대로 다문화주의를 취하는 경우다. 국민은 자신의 문화전통을 유지하고 공유할 자유가 있다. 고유문화와 언어는 보호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모든 이주민은 제도안에서의 고용 및 발전에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 등은 또한 주류의 다수자 성원들에게도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향상시켜 나간다.



(5) 다문화 주의적 통합과 다양성의 유의점

① 주류 다문화주의의 성찰

- 주류 다문화 주의의 맹점은 자 문화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심이 되는 문화와 질서에 대한 반성과 재고의 과정이 없다. 소수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온전한 가치의 인정이 아니라 주류에 대한 비주류의 다양성으로서의 인정에 그친다.

- 주류 다문화 주의는 진정한 다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류 문화에서 통합을 전제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다문화의 존재를 수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질적인 것으로서 다문화는 그 역사적 깊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주류사회에서 제한된 몫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주류 다문화교육은 현존하는 체제와 질서를 최선의 가치로 전제하는 가운데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에 접근한다. 문화적 다양성이 현존 체제와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며, 다양성 그 자체를 인정하지만, 다양한 문화가 가지는 헤게모니의 차이나 권력관계의 위계는 당연히 고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② 비판적 다문화 주의로서 재정립

- 다양성을 단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자체에도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런 관점은 '비판적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제기된 다양성과 차이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배 문화 중심의 포섭적 다문화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다.

- 비판적 다문화주의의 다양성은 언어, 문화, 권력, 이데올로기, 사회와 제도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른바 문화의 정치학을 실천하도록 한다.

- 다문화 주의가 타문화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모든 문화에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문화의 가치와 전통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판적 다문화주의는 단순한 '동일성의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차이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2) 주류 다문화주의와 새로운 통치 모델로서 다양성

포스트모던 사회 논의들은 비선형 유체 동력계, 복잡계(complex systems) 현상, 즉 네트워크, 발현과정, 복잡성, 탈 중심화, 혼돈, 상호연결성, 유동성과 학교교육, 사회, 행정, 경제 정책, 주가변동, 조직 관리기법, 문화정책 및 제도화, 대안 문화나 공동체 탐색, 생태에 관한 논의 등에 연결시키려는 다양한 관심들을 '다양성'의 이름으로 다채롭게 도입한다. 다양한 영역에 걸친 학술적, 대중적, 정책적 담론들이 '다양성'을 관리와 시장의 경쟁력 확보, 통치 및 인권의 다양한 영역의 개념으로 도입한다.

(1) 관리의 기제로서 다양성

다양성 관리(managing diversity)는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인종, 종족, 민족성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시장경계가 무리 없이 기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며, 세계화 시기의 이러한 주류 다문화주의는 종종 기업-다문화주의(corporate multiculturalism)로 나간다.

다양성 관리담론은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이데올로기와 연결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개인주의 논리는 다문화주의에의 주요 접근들을 구조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신자유주의의 개인주의 논리는 차이에 대한 관용의 요구를 개인적 특성과 태도란 측면에서 틀 지운다. 따라서 집단적 차이들은 관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범주적으로만 취급된다. 즉, 차이는 상호 연결된 구조 혹은 체계로 보기 보다는 뚜렷이 구분되는 집단으로서 범주적 실체로 간주된다.

특히 조직적 차원에서 다양성은 기존의 낡은 권위주의적 위계(authoritarian hierarchy)보다는 비권위주의적인 '분산 시스템(distributed systems)'을 도입 하면서도 사용된다. 분산시스템은 통제가 시스템 전체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으로서, 권력이나 지식, 통제권을 독점하는 중앙이라는 것이 없는 시스템을 말한다. "통제력을 벗어난 듯한" 다양성(diversity), 가변성(variability), 다채로움(variety)을 기반으로 한다.

① 조직 관리로서 다양성 개념의 변화

1900년대 중반부터 조직행동에서 다양성을 다루기 시작했다. 다양성 관리 혹은 다문화주의는 다국적 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이 것으로 된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에 따라 다양성 개념 역시 그 의미 변화를 보인다.

무어헤드와 그리핀 (Moorhead와 Griffin)	조직 인력의 다양성은 연령, 성별, 종교, 교육적 배경, 종족적 유산, 육체적 능력/ 장애, 인종,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직구성원들을 구성하는 인구학적 차이들(demographic differences)"로 정의
노츠크라프트와 니일 (Northcraft와 Neale)	다양성을 종업원들 사이의 인종, 종족, 젠더에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
베트맨과 자이탐 (Bateman과	오늘날 다양성은 피부색과 젠더 이상의 것을 지칭하며, 온갖 종류의 차이들을 망라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넓은 용어"라고 보고, 그 차

Zeithaml)	이들에는 “성별, 인종, 종족성(ethnicity), 민족성(nationality) 외에도 종교, 연령, 장애여부, 군복무경험, 성적 지향성, 경제적 계급, 교육수준, 라이프스타일”로 본다.
로빈슨(Robbins)	조직 인력의 다양성은 “상이한 집단들의 유입으로 인한 조직 이질성의 증가”로서 “조직이 성별, 인종, 종족적 측면에서 보다 이질적으로 됨을 의미하지만, 이 용어는 ‘평균(norm)’으로부터 이탈된 누구든지 포괄한다.” 그래서 “여성, 아프리카 출신-아메리칸, 히스패닉-아메리칸, 아시아-아메리칸 등의 집단들 외에도 신체적인 장애인, 게이나 레즈비언, 고령자”도 포함시킨다.

- Moorhead와 Griffin(1995, 520), Northcraft와 Neale(1994, 637), Bateman과 Zeithaml(1993, 377), Robbins(1996, 15),

② 토마스의 관리로서 다양성

토마스(Thomas)는 다양성을 “인종이나 젠더 이외에 무한히 많은 수의 차원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다 폭넓게 정의하였다. 다양성의 가능한 차원이 무한히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다양성을 일종의 다차원적인 혼합(multidimensional mixture)으로 재 정의한다. 여기서 혼합은 차원(인종이나 젠더 등)이라는 나무를 가진 숲(전체)으로 은유된다. 여기서 관리로서 다문화주의는 “한 혼합 속의 상이한 요소들을 각각 반영하는 몇 개의 소 문화(minicultures)가 아닌, 어떤 조직 내 다양성의 혼합을 반영하는 단일한 문화(one culture)”로 간주된다.

경영담론에서 다양성 정의는 전통적인 고용평등 조치의 법적 제제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것으로서, 기존의 젠더, 인종, 종족, 민족적 다양성 구별을 무한한 차원들로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다양성은 경영담론에서 “서비스 경제와 글로벌 경쟁에 대처하고 유연화 된 노동시장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며 다국적 환경 하에서 소비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차이를 요소로 갖는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윤 목적의 관리도구로 적극적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2) 시장 경쟁력 확보로서 다양성

시장 경쟁력 확보로서 시장의 다양성은 차이를 야기하는 과정인 동시에 동질화를 야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장에서의 다양성은 차별화이다. 물론 시장에서의 차별은 가격의 차이로 포장되지만, 그 차이는 곧 문화적 수준과 가치의 차이로 탈바꿈한다. 문화의 다양성이 시장에서는 문화의 주요 항목들이 상품이 되고, 경제적, 심리적으로 시장의 논리의 작동 기제가 된다. 다양성은 소비자 문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소비자로서 사회로 통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의 세계화’는 개인적 자유와 소비가 결합된 소비자의 사회통합이다. 특히 시장에서의 다양성의 문화는 차별을 가로지르는 ‘차이’로부터 시작하며, 이들 사이의 억압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소비를 도모한다. 이것이 시장의 블루오션(새로운 시장 영역)이다. 따라서 시장은 자신의 경쟁력을 위하여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을 지지하기도 한다.

(3) 새로운 통치 모델로서 다양성

① 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전통 통치모델의 한계

시장이 세계화되면서 한 나라에 유입되는 인구가 다양화 되고 있다. 국가내의 다양한 인적 구성은 기존의 전통적 문화를 매개로하는 통치에 한계를 가져다 분다. 다양해진 사회 구성원들에 의하여 기존의 사회는 다 젠더, 다 인종, 다 민족, 다 언어, 다 종교 등 문화적 차이를 가진 다양한 사회로 재편된다. 당장에 노동력 구성원의 다양성은 인종, 성, 출신 지역, 언어, 문화에서의 다양성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다양성을 국가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은 통치의 원리로 작동된다.

② 다양한 통치모델

가. 갈등 관리적 모델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통치적 혜택에 초점을 둔다. 관리적 접근은 통치 목표달성에 도구적인 것으로서 특수한 개인적 역량(competences)과 다양성을 연결시킨다. 여기서의 다양성은 지배적인 집단들의 저항과 갈등의 관리 등을 고려해서 전통적인 다양성의 분류 축인 인종, 젠더, 장애자에 연령, 교육, 인성, 직무경험 등을 포함하여 매우 넓게 정의된다.

나. 통합, 통제적 모델

문화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능력, 지적 능력 등이 있어 주류사회에 편재 될 수 있는 이주민은 통제의 대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주민의 경우 차이를 차별화하여 기존의 지배적인 집단들과 다양성 집단들 간의 권력 관계를 은폐한다. 즉 이주민에 대하여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 부 적응자, 한국어를 잘 못하는 자, 가난한 나라의 능력 부족자, 범죄자, 문제 집단 등 이주민을 열등적 존재로 고정화, 차별화시킴으로써 통제 관리하도록 한다. 사업장 이동의 제한, 취업 범주의 제한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할 권리의 제한을 통한 통제도 가능하다.

다. 기능 활용적 모델

한 국가 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중에서 경쟁력이 있거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을 국가이익에 적극 활용한다. 이들 이주민들에 대하여는 다른 이주민과 비교하여 임금, 승진, 사회적 역할 등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나 다양한 집단적 차이에 따른 차이와 각 집단이나 개인들이 상황의 차이가 경쟁력 없는 다양성일 경우 쉽게 배제 또는 폐기된다.

3) 문화적 다양성의 권리

(1) 문화 다양성 협약

시장의 세계화로부터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려는 것이 ‘문화다양성 협약’이다.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다양성 접근은 기존의 평등을 강조하는 접근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성격을 띤다. ‘문화다양성 협약’이란 2005년 1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 사정되어 공식 채택된 문화상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특례 인정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유네스코의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에 기초한다. 이 선언은 무엇보다 미국 주도의 세계화로 인해 각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선언은 문화가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문화 다양성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이야말로 현재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의 뜻을 이어받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안이 2007년 10월부터 국제사회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안은 문화에 대한 세계화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면서, 나아가 문화적 '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문화적 평화공존을 담보하며, 그 최저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 협약은 세계화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시장에 의하여 크게 침해 받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협약안에는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더라도 자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과 보조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협약 제6조), 이를 감시할 기구의 설치(제15조) 등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해결책으로 당사국 간의 협상(제24조)을 제시하고 회원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제27조)을 제시하였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의 외적 다양성 즉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의 자리를 찾고, 또 다른 나라의 문화가 각각 제자리를 찾아, 세계적 수준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 보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 인권으로서 다양성의 권리

UN은 1992년 세계 인권선언 27조에 따라 '민족적 혹은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에게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의 제1조에는 국가들은 각 영토 내에서 소수자의 존재와 민족적 혹은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며, 그 정체성의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화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며, 문화적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삶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 한다. 인권의 원칙은 다수결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소수자들은 다수결에 의하여 한상 부당한 상황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수자의 문화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도넬리(Donnelly)는 문화적 소수자 권리 보호의 최선은 인권의 존중이라 했다. 도넬리는 소수자에게 집단 권은 있지만 집단적 인권은 없다고 주장한다. 집단권은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필요하지만, 집단 권과 인권이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인권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임스 툴리(James Tully)는 문화적 다양성은 인간의 조건을 이루는 기본적인 특징이며, 문화는 인간 상호작용의 본래적인 특징 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문화를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단일한 정치제도나 사법제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복종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 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문화적 소수자들은 지배 집단의 담론 내에서만 발언 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 확보의 과제

1)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의 균형

다양성과 통합성 간에 정교한 균형이 필요하다. 다양성이 결여된 통합성은 문화적 억압과 헤게모니로 귀결된다. 통합성이 결여된 다양성은 분파주의와 균열을 야기한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다문화적 국민 국가 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상호 공존해야 한다.

사회적 통합이 과거에는 부정적 인식으로만 이해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빈익 빈 부익부 현상,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우 국론 분열, 중산층의 붕괴, 문화적 양극화로 인한 차별과 배제로 인한 소외 등의 문제는 사회적 통합이라는 새로운 의제 형성을 통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오히려 긍정의 기제로 사용된다. 문제는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의 문제가 관리, 통제, 배제, 상품화, 경쟁력의 논리로 지나치게 사용할 때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사회 통합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강압적인 방식의 사회 통합은 피지배 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 완전하고 안정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다문화 사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뱅크(Banks)는 다문화 사회들은 시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이 헌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이상, 목표를 보유하는 국민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오직 정의 및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가 통합될 때에만 다양한 문화·인종·언어·종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은 문화적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민주 사회에서는 민족 집단들과 이민자 집단들이 국가의 시민 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코 마르티니엘로(Marco Martiniello)는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의 다양성을 재발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완벽하게 단일 문화적인 사회,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사회는 오직 강자들이 강요하는 틀에 맞추어 모든 인간을 획일적으로 키워 낼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2) 사회통합 이수제와 다양성의 권리 확보

정부는 정착 또는 정착 가능한 결혼 이민자 등 이주민들이 국적을 획득하는 과정과 조건을 관리하는 정책으로서 사회적 통합을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국민국가 영역 안에 들어 온 이주민들을 관리하는 것을 사회적 통합으로 협소화 시킨다. 정부와 주류사회는 이주민을 주류사회로의 편재를 의도하지만 이주민은 자신의 존재성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로의 참여를 원한다. 현재의 정책을 참여의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다문화 사회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사회통합의 이수제 문제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통합 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이주민 자신들의 문화가 배제 또는 희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문화에서 분열, 고착화 되고 한국사회에서 다양성 자체가 획일화 되고 있다고 본다. 문화적 쌍방향성이 결여된 채 단일 언어, 단일인종, 단일국가, 단일인종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불평등이 강제되고 있다고 본다. 사회통합은 다양성이 보장되는 상호 신뢰문화 구축을 통하여 이해 관계자의 참여적 사회통합 모델로 전환되어야 한다.

킴리카(Kymlica)는 사회통합은 단번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으로서 세대에 걸쳐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들에게 특수한 편의(모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류의 규칙과 상징들이 이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회통합 이수제에서 최소한의 요구만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어는 국적을 받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권리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언어를 습득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다문화 사회 통합으로서 문화적 권리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살아감에 있어서 물적, 정서적 자원을 공급하며,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이 존중 되어야 한다.
- ③ 통합은 동화지표가 아니라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간의 관계지표, 다양성의 지표, 사회 경제적 지표, 정치적 참여의 지표 등이 다양하게 개발 되어야 한다.
- ④ 이주민은 자신이 원치 않는 강압적 문화 통합에 대항하여 주류문화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⑤ 통합은 주류사회로의 일방적 편입이 아니라 이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인센티브는 오히려 이주민의 독립성 보다는 시혜적, 의존성을 높여 나가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 ⑥ 이주민 자신이 자기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자존감과 한국 사회 소속에 대한 자긍심을 고양시켜 나가는 것을 기초로 보다 나은 삶의 선택권이 다양하게 주어져야 한다.
- ⑦ 다양성의 권리는 기존의 한국인에게 포함된다. 다수자를 위한 다양성의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⑧ 문화적 차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

3) 다양한 사회적 통합 방안 형성

다양한 사회적 통합방안의 기초는 이주민 스스로의 다양성과 참여가 기초가 되는 통합 방식이다.

- ① 개인의 인식의 전환과 능력개발의 방법이다. 주류사회의 사회적 환경 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인간으로서 존엄성, 생명성, 생존권 등을 이해하고 자신을 변화 시켜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다.
- ② 사회 환경의 개선의 방법이다.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이 다수자가 지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수자의 평등성이 보장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행태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다.
- ③ 개인과 사회 변화의 유기적 연계의 방법이다. 소수자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하며, 다수자 사회는 주류의 차별과 배제의 문화가 중단되고 소수자들의 다양성을 보장해 나가는 법과 제도적 장치 및 사회인식의 개선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이다.

4) 국가적 차원에서 다문화 사회비전과 철학의 형성

호주는 사회 통합의 정신으로서 다문화주의의 4대 원칙과 3대 전략을 가지고 있다.

4대원칙	시민적 책무성	모든 호주인은 자유와 평등을 구현하고 다양성이 꽃 필 수 있는 호주사회의 기본 구조와 원칙을 지지할 책임이 있다.
	문화적 존중	모든 호주인은 자신의 문화와 믿음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할 호혜적 의무가 있다.

	사회적 형평성	모든 국민은 인종, 문화, 종교, 언어, 거주 지역, 성, 출생지 등에 기초한 차별 없이 평등한 처우와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혜택의 공유	모든 호주인은 인구의 다양성에 유래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 즉 생산적 다양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대 핵심전략	공동체의 화합	호주인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 민족성과 종교의 차이 속에서 공동체적 화합과 사회적 결속을 증진하는 것이다.
	접근과 형평성	취약한 집단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출신 민족 집단에 관계없이 정부 정책을 포함한 사회 각 영역에 공평한 접근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생산적 다양성	호주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능력의 자산을 호주 경제의 경쟁력에 접목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성을 기초로 한 혁신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 다양함 참여의 기회로서 미디어

다원주의는 미디어 소유의 다양성(diversity of ownership)과 생산물의 다양성(diversity of output)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주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주브리츠키 교수가 문화적 복수주의를 소개한 "The Question Years"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기존 방소의 냉담한 태도 가운데서도 1978년 이민자들만 대상을 하는 '다언어'방송인 SBS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커뮤니티 방송은 2005년 8월 현재, 359개의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사와 6개의 커뮤니티 TV방송사가 운영되고 있다. SBS는 각 소수민족의 언어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라디오에서 68개 언어, TV에서 60개의 언어로 방송을 한다. 해당 언어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각 이민자 사회의 규모에 따라 할당된다. 이러한 커뮤니티 방송의 주된 목적은 주류방송에 의해 불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SBS의 주 기능은 다언어, 다문화적인 방송을 통한 호주인에게 필요한 정보는 물론 교육적 오락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991년 제정된 SBS법에는 SBS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기능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① 첫째, 소수 민족과 호주 원주민, 토레스스트레이트 섬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에게 다문화사회가 필요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야 한다.
- ② 둘째, 문화의 다양성이 호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함양시켜야 한다.
- ③ 셋째, 호주의 구성 집단이 지닌 각기 다른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
- ④ 넷째, 개인이 지닌, 언어적, 문화적 재능을 장려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한다.
- ⑤ 다섯째, 가급적이면 호주인들이 원하는 언어로 방송해야 한다.
- ⑥ 여섯째,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국내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⑦ 일곱째, ABC 및 커뮤니티 방송의 역할을 고려해 이들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피하고, 전반적인 방송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⑧ 여덟째, 다양한 의견과 표현을 창출함으로써 변화하는 호주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야 한다.

영국의 문화 다양성과 방송 다양성

범위와 균형성	질	다양성	사회적 가치
■ 다양한 장르의 풍부한 양의 프로그램 ■ 각 장르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 ■ 수용자가 시청하고자 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하기	■ 수용가능한 수준의 취향과 품위 유지 ■ 높은 질의 유지 ■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프로그램의 제작	■ 다양한 공동체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 ■ 다양한 수용자 유형의 타겟팅 ■ 다양한 관점의 재현 ■ 다양한 제작자/작가에 의해 공급되는 프로그램 ■ 다양한 공동체를 드러내기	■ 문화적 정체성 ■ 교양있는 민주주의 ■ 교육받은 시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새로 개정된 독일 이민법은 2007년 8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이주민의 독일사회에서의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한 조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정부는 어학교스 제공 등을 통해 외국인의 동화를 적극적으로 돕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독일사회 동화를 권장하며 이를 법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독일어의 습득은 취업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연방정부는 이민자들의 독일어 습득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동화교육을 이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2005년 1월 1일 개정된 법에 따르면 독일 내 이민자들에게 630시간의 동화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공적인 외국인 통합을 위해서 언어교육 외에도 외국인의 직업교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청소년과 외국인 여성들의 직업교육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외국인의 직업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통계에 독일거주 외국인중 79.5%가 외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나 독일사회동화교육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한다. 즉 독일거주 전체 670 만 명의 외국인 가운데 20.5% 인 138만 명이 독일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외국인 제 2세나 제 3세대 인 것이다. 또한 18세 이하 전체 외국인 중의 70% 가 독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집계 되었다. 독일 내 전체 터어키인의 34.2 %가 독일에서 태어났고, 65.8%는 이민자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독일 내 전체 이태인들의 29.9가 독일에 태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일내 외국인의 국적별 출생지 (단위: 명, %, 2005)

국적	전체	독일에서 태어남	외국에서 태어남
터어키	1,764,041	603,906	34.2%
이태리	540,810	161,500	29.9%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493,915	123,446	25.0%
폴란드	326,838	14,263	4.3%
그리스	309,794	85,474	27.6%
기타국가들	3,320,413	396,711	11.9%
전체	6,755,811	1,385,300	20.5%

자료: Bundesamt fuer Migration und Fluechtlinge(ed.) (2005), Migration, Asyl und Integration in Zahlen,.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제도화된 기관으로서 연방차원의 연방민주시민교육원(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과 주 차원의 주민주시민교육원(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이 설치되어 있다. 민주시민교육청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는 신문과 잡지, 서적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1970년 이후 민주시민교육원은 학교외 시민교육을 위해 다양한 서적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독일 시민에게 무료나 또는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평생교육 및 변동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지각, 건전한 시민성교양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각종 학술대회, 심포지움, 국제회의, 현지답사, 전시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단체 및 프로젝트를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해결을 위한 세미나개최, 서적발간, 프로젝트 지원 등은 민주시민교육청 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독일민주시민교육청은 독일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노동형태나 임금, 지위 등에서 여전히 독일인들에 비해서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수가 줄어들며 따라 사회보험 의무가입 외국인 노동자수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외국인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5년 실업률은 독일 전체 실업률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독일 내 외국인 근로자는 2001년 독일 내 전체 근로자의 약 8.3%에 달했으나 사회보험 의무가입 근로자 수는 2001년 약 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회보험 의무가입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1996년 7.6%에서 2005년 6.7%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보험 의무가입 이주 노동자 (단위 : 명, %, 2005년)

연도	총	독일인 근로자	이주 노동자	이주노동자 비율
1997	27,280	25,235	2,044	7.5 %
1998	27,208	25,178	2,030	7.5 %
1999	27,483	25,558	1,925	7.0 %
2000	27,826	25,862	1,964	7.1 %

2001	27,817	25,809	2,008	7.2 %
2002	27,571	25,611	1,960	7.1 %
2003	26,955	25,081	1,874	7.0 %
2004	26,524	24,719	1,805	6.8 %
2005	26,178	24,423	1,755	6.7%

자료: Bundesamt fuer Migration und Fluechtlinge(ed.)

주: 사회보험 의무가입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와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야 한다. 전체근로자 범주에는 사회보험의무가입 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공무원, 파트타임근로자, 무임가족 근로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독일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독일인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일인 노동자의 56%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터키출신 외국인의 39%만이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1997년 약 54 만명의 외국인이 실업자로 집계되어 외국인 실업율이 20.9%로 독일 전체 실업율 12.7% 보다 훨씬 웃도는 비율은 나타내고 있다. 1998년과 2001년 사이의 경기 회복기에 외국인 실업자 수는 잠시 줄어 들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실업율이 2005년에는 독일 전체 실업율의 약 2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	전체 실업자수	실업율	외국인 실업자 수	외국인 실업자 비율
1997	4,384,456	12.7 %	547,816	20.9 %
1998	4,280,630	12.3 %	534,698	20.3 %
1999	4,100,499	11.7 %	510,168	19.2 %
2000	3,889,695	10.7 %	470,994	17.3 %
2001	3,852,564	10.3 %	464,739	17.4 %
2002	4,061,345	10.8 %	499,433	18.8 %
2003	4,376,795	11.6 %	542,966	20.2 %
2004	4,381,281	11.7 %	545,080	20.3 %
2005	4,860,685	13.0 %	672,903	25.2 %

독일에 정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독일인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지지만 상당수가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일인 노동자의 56%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터키출신 외국인의 39%만이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독일내 외국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및 임금은 독일인에 비해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 비율이 독일인에게는 14%로 집계된 것에 비하여 터키 이민자의 46%, 중서부유럽출신 외국인 31%, 옛 유고지역 외국인의 42%, 독일계귀환자의 36%가 노동자인 것으로 집계되어 독일내 외국인들의 임금 및 지위는 출신국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독일인의 평균임금이 1,560유로인데 비해 터키 출신 외국인의 평균임금은 1,350유로, 옛 유고 출신외국인의 평균임금은 1,230유로, 독일계귀환자의 평균임금은 1,200 유로로 독일내 외국인들은 독일인에 비해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사회는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시장

에서의 외국인과 독일인 직종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인은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업자의 비율이 외국인의 경우 독일인의 2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체순환과 사회통합정책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3차시]

1. 다문화 사회의 윤리 이해

1) 윤리의 이해

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싫음 등의 문제를 다룬다. 도덕은 자연적으로도 정하여져 있고 사람의 마음에도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규범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옳음과 좋음으로서 윤리의 기준은 첫째, 보편적 인간의 안녕과 복리에 관련 된다. 둘째, 자기 이익의 추구에 있다. 셋째, 행정적 명령이 아니라 이성의 적합성에 근거한다. 윤리를 학문적으로 구분 하였을 때는 서술윤리학, 규범 윤리학, 특수윤리학, 메타 윤리학으로 나뉜다.

① 서술윤리학(descriptive ethics)

서술윤리학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문화의 관습과 도덕을 서술하는 것이다. 문화의 관습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한다'는 문제를 서술형식으로 다룬다. 서술윤리학은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 문화와 그로부터 발생한 윤리만이 윤리로 보려는 경향을 알게 되었다. 윤리적 다원주의, 상대주의가 나타나면서 윤리 중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윤리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② 규범 윤리학(normative ethics)

규범 윤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는 규범, 지침 또는 표준을 다루는 윤리분야이다. 자신과 관련 없는 도덕에 대하여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 당위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윤리에 대하여 '특별한 규범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는 문제를 다룬다.

③ 특수윤리학(special ethnics)

특수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이 특수화된 경우로서 응용윤리(applied ethics)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정치윤리, 경제윤리, 사회윤리 등의 범주로서의 윤리는 물론이고 의사윤리, 언론윤리, 법관윤리 등 직업들과 관련된 윤리문제 등을 다룬다.

④ 메타 윤리학(meta ethnics)

메타 윤리학은 철학윤리, 비판윤리, 형식윤리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윤리의 근원문제로서 선, 악, 의무, 규범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도덕적 문제란 본질적으로 상대적이어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 규범윤리가 중립적이지 않듯이 메타윤리도 중립적이지 않다. 규범윤리의 배경에는 메타윤리가 자리 잡고 있다.

2) 윤리학 이론

① 이기주의

첫째는 심리학적 이기주의이다. 심리학적 이기주의에서는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행위 한다고 보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사실 분석을 한다. 심리학적 이기주의는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에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위하고,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하며, 자기의 행복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인간 행동의 동기가 자선의 이익과 쾌락을 이한 것으로 본다.

홉즈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는 자기 보존의 이기적 본성이 인간의 도덕적 삶의 시작이라고 본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인 법률은 인간 자신의 파멸을 모면하기 위해 상호간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관념으로 본다.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자연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사회계약'을 만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적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매우 긍정적 욕망이며, 개인은 자기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정열과 욕망에 의해 활동 하고 행동 한다고 본다. 한편 심리학적 이타주의도 있다. 슐리크는 '친절'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타주의적 욕망들이 결국은 행복을 낳으므로 이타주의적으로 활동한다고 본다. 슐리크는 참된 쾌락 혹은 행복은 언제나 도덕적 관심사가 되는 것이고, 도덕은 쾌락을 낳는다고 본다. 행복과 도덕으로 이끄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이타주의적 욕망이라고 본다.

둘째는 윤리학적 이기주의 이다. 윤리학적 이기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증대 심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를 분석 대상한다. 즉, 인간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윤리적인 규칙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윤리적 규칙을 지킨다고 본다. 그러나 선은 이익, 쾌락, 행복 등 다양하며 미래의 이익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특히 다양한 이익은 상호 상충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의 윤리는 개인이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고, 이 공존을 위해서는 규범이 필요하다.

개인적 윤리적 이기주의	나는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 일 할 뿐 타인의 행위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중심적 윤리적 이기주의	타인의 행위도 나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주로 타인을 자기 욕구의 충족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보편적 윤리학적 이기주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나는 내 자신의 행복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윤리적 이기주의이다. 타인을 돕는 것이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면 행동을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② 윤리적 의무주의

의무주의 이론은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행위 자체가 갖는 가치로서 지켜야 하는 행위 규범이 존재 한다고 본다.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절대성을 지닌 본질적 가치를 인식 했을 때 도덕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나타나는데 이를 칸트는 선의지(good will)하 했다. 선의지는 강제된 행위가 아니라 자율적인 의지의 행위로 본다. 도덕적 의무로서의 도덕적 행위만을 선이라고 본다. 특히 칸트는 선으로서 모든 사람은 지켜야할 보편적인 도덕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규범준수(categorical imperative)라 하였다. 규범준수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가정적 조건으로서 도덕이 아니라 도덕적 명령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칸트는 자신을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선택이지만 타인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악으로 보았다. 인간의 의무는 '최대의 도덕적 자기완성'과 '타인의 행복을 증진 시키는 것'이며 이 둘의 결합을 최고선이라 하였다.

③ 윤리적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행복의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통하여 각 개인들이 좋은 결과를 극대화 하고 나쁜 결과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공리(utility)는 유용성(usefulness)과 같은 의미이다. 벤담(J. bentham)은 유용한 것은 성한 것이요, 선한 것은 행동의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가장 좋은 결과란 행복이고 행복은 쾌락을 극대화 하고 고통을 극소화 하는 것으로 보았다. 벤담은 행복을 증진 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 즉 공리를 주장하였다. 공리주의는 의무주의에서처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 미리 주어지고 그 주어진 규칙에 따라 행위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행위의 기준은 행위의 결과인 이익, 효용, 행복, 쾌락 등의 무 도덕적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정해진 것으로 보았다.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가 있다.

윤리학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 두 이론은 옳은 행위란 선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이기주의에서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행위자 자신의 선 이지만, 공리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의 선인 '일반 적인 선(general good)'에 관심을 갖는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공리주의에서 최대 다수에서의 다수가 누구이며, 행복을 어떻게 계산 할 것이며, 의무를 초과한 자기희생을 설명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상황윤리

현대사회에서의 다양성 복잡성은 윤리의 흑백 논리 보다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본다. 상황윤리(situation ethics)는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 속에 놓여있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별성, 특수성, 상황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갖는다. 플레처는 보편적인 행위 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고, 상대적인 규범으로서 사랑을 제시하였다. 플레처는 사랑만이 항상 선한 것이며,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였다. 사랑은 자유의지 행위이며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지 정해진 규칙을 철두철미하게 준수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였다. 플레처는 사랑은 곧 정의로서 정의란 타인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몫으로 보았으며, 정의는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주로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며, 인종차별, 성차별 등 대우의 동등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의 원칙을 주장하였다. 상황윤리에서 선악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수단은 그 자체로서 정당화 되지 못하며, 목적에 따라 수단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상황윤리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호교환적인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뻗어가는 사랑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엇갈릴 때의 문제가 간과 되었다. 다수에게 유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이익은 무시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랑의 개념이 추상성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누구나 자신의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의 행위를 사랑으로 포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문화 사회의 윤리적 관점

다문화 사회 윤리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에서 오는 가치 갈등과 차이의 가치로 인한 선과 악의 행동 판단의 문제를 다룬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치 갈등의 문제, 가치의 차이로 인한 차이가 있는 행동에 대한 판단의 문제와 연결 된다.

① 다문화적 규범과 가치관

개인과 사회에 대하여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는 판단은 ‘규범과 가치관’의 기준에 의해서이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가치와 규범에 혼란 현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의 윤리적 관점에서의 윤리는 가치와 규범의 흔들림 현상을 가져다주는 요인에 대하여 수용과 배타적 판단을 할 수 있다.

다문화 사회의 윤리는 보편규범을 다루느냐, 변화하는 현실에서의 가치관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법치론적 도덕체계와 목적론적 법치 체계로 나눌 수 있다. 법치론적 도덕체계로서 보편적 규범에 근거한 이론들과 목적론적 법치 체계에 따른 결과를 중시하는 이론들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강조되기도 한다.

첫째는 보편적 규범에 의한 다문화 윤리이다. 보편적 규범에 근거한 이론들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유롭고자 하는 존재의 관점을 가진다. 자연의 질서로서 자연법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이며,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것으로 본다. 자연법이란 인간의 본성과 더불어 개성의 존중이다. 개성과 개성의 집합은 곧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본성, 개성과 다양성의 자연법은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향상 시킨다. 본성, 개성, 다양성을 따르는 자연법은 상상력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근원으로서 강력한 힘이 된다.

둘째는, 변화하는 현실적 가치관에 의한 다문화 윤리이다. 목적론적 입장에서는 결과를 중시하는데 이 이론들의 특징은 ‘욕망의 긍정’이다.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며, ‘욕망은 함부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삶은 영양을 외부로부터 공급받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고, 인간은 그러한 노력의 단위이고, 욕망을 살려는 의지로 본다. 이것을 무시하면 허상만 남는다고 본다. 일반 사회는 욕망 충족의 변화 체계이며, 사회적 삶은 곧 욕망들의 충돌이며, 이는 타인의 부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단일 문화 중심의 일반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에 따른 다양성으로의 가치관의 변화와 다문화 사회를 향한 정책적 선택 등은 자신들의 욕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확장 시키려는 의지이다.

② 다문화 사회의 윤리적 관점

다문화 사회의 윤리는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욕망들의 충돌과 타인을 부정하던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긍정적 가치관을 전환 시켜 단일문화 중심의 규범의 재구조화이다. 다문화 사회의 공동체적 질서란 모든 사람의 욕망이 다르다는 냉정한 현실의 인정이다.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욕망들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 그 자체와 이들의 공동체성과 차이들의 공존성을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수자 주류 사회에 의하여 다문화 사회의 윤리로 규정된 것이 아무리 좋은 도덕 법칙이라도 소수자들의 동의가 어렵다면 다문화 사회의 윤리적 가치로 인정 될 수 없다. 다문화 사회의 윤리적, 사회적 계약 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다양성의 인정, 소수자 인권보호,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적 정의로서 공권력의 적절한 통제, 소수자 참여의 절차적 정의로서 정의로운 절차, 소수자들의 자율과 간섭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의 윤리에서 소수자가 중요한 것은 다문화 사회가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소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윤리는 소수자들로 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다문화 사회의 윤리, 도덕적 가치의 결과가 다수자들의 지배적 윤리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의 윤리는 기존의 가치와 규범에 대하여 흔들림의 현상을 가져다주는 '다양성과 그에 따른 새로운 차이'에 주목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와 관련 된다. 사회가 다문화적으로 변함에 따라 사회적 규범도 변한다.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이해하면 다문화 사회의 윤리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문화 사회 윤리 형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양성, 차이, 갈등을 중심으로 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가치와 규범에 도전을 주는 새로운 '차이의 주체'
- 나. 가치와 규범에 도전을 주는 새로운 '차이의 이해당사자'
- 다. 가치와 규범에 도전을 주는 새로운 '차이의 내용'
- 라. 가치와 규범에 도전을 주는 새로운 '차이의 갈등 원인'
- 마. 가치와 규범에 도전을 주는 새로운 '차이의 갈등 성격'
- 바. 가치와 규범에 도전을 주는 새로운 '차이로 위협당하는 가치들'
- 사. 도전을 주는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새롭게 형성 되는 가치'
- 아. 도전을 주는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새롭게 형성 되는 사회적 규범들'

2. 다문화 사회 윤리적 가치 판단 이론

다문화 사회의 윤리는 가치의 충돌을 해결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 것이다. 윤리적 가치는 인간 행동에 관한 평가이다. 인간의 행위적 판단은 주로 선과 악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진다. 인간 자체에 대한 평가는 물리적, 심리적,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관찰 되고 서술되며 평가 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치 갈등의 문제, 가치의 차이로 인한 차이가 있는 행동에 대한 판단은 쉽지가 않다. 윤리는 인간 심연의 가치갈등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가치가 충돌하지 않으면 윤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윤리문제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가치의 문제이다. 따라서 윤리는 가장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치의 세계를 탐구대상으로 삼고 옳고 그름을 탐구하고 그 실천을 모색하는 일이다. 윤리적 문제는 인간 내면의 세계와 인간 행위의 선택의 가치 판단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류 사회에 의한 하나의 윤리적 기준만으로 이주민을 판단해 나간다면 다문화 사회는 가치 충돌로 인한 갈등과 혼란은 더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윤리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 한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의 객관적 기준을 찾는 일이 쉽지가 않다. 윤리적 가치로서 인간의 행동이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른 사회의 사람들이 살면서 '차이와 다양성의 가치에 따른 선의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선과 악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경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1) 윤리 실재주의

- ① 윤리 실재주의의 이해

윤리적 가치가 비록 비물질적인 존재이지만 객관성을 지닌 존재로서 실재한다고 보는 입장이 윤리 실재론(ethical realism)의 주장이다. 윤리실재론자들은 관념의 존재를 인정하고 윤리적 가치 존재의 기본적인 특징은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자의 의식에 따라 변형되거나 좌우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어떤 종류의 삶은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옳은 삶이거나 옳지 않은 삶’이 있다고 본다.

인간은 사물의 인식 능력에는 오감, 기억력, 추리력, 연상력, 직관 등이 있다. 사물의 존재 인식은 오감을 통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비물질적인 존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비물질적인 존재의 현상, 원리 등의 총체적,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직관이라 한다. 윤리적 가치의 인식이라는 것도 비물질적인 대상이다. 경험이나 실증을 통해 밝혀 낼 수 없는 형이상학에 속하는 영역이다.

윤리적 가치가 비록 비물질적인 존재이지만 객관성을 지닌 존재로서 실재한다고 할 때, 객관성이란 주체자의 인식과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실체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 사고는 존재의 성질에 따라 유물론(materialism)과 관념론(idealism)으로 나뉜다. 유물론은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이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물질’ 이라고 본다. 관념론은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관념이라고 본다. 즉 비현세적, 비지각적 존재가 있으며 그러한 존재만이 영원불변한 존재라고 본다.

일원적 유물론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 뿐이다. 예) 데모크리토스 원자론, 마르크스 유물론
일원적 관념론	존재하는 것은 오직 정신뿐이다. 예) 헤겔의 절대 정신, 노장 사상의 자연
이원론	물질이든 관념이든 단 한가지로만 환원 될 수 없고 물질과 관념의 두 가지 성질이 각기 다른 존재로 환원 될 수 있다고 본다.

② 윤리실재론의 비판

실재하는 영원 불변적 윤리 가치는 인식 능력의 한계로 인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의 감각 작용도 부정확하고, 인식도 불확실 하다. 그렇다면 영원불변한 존재인식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첫째는 상응론(correspondence theory)적 입장이다. 진리란 어떤 인식 대상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이 일치는 직관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도 믿음에 불과하며, 절대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직관이 없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 둘째는 일관론(coherence theory)이다. 진리란 한 사회 공동체가 이미 진리라고 믿는 사실에 대한 일관성 있는 믿음을 뜻한다. 믿음의 객관성과는 상관없이 권위 있게 받아들여진 믿음과 개인의 믿음의 관계로만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기존의 믿음이 진리라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셋째는 실용론(pragmatic theory)이다. 진리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믿음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진리를 효용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효용성은 인간의 욕망이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모순을 갖는다.

2) 윤리 상대주의

다원적이고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나의 가치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도 인정하는 관용이 필요하다. 윤리상대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에서 출발한다. 윤리는 ‘상대적 이다’는 관점은 이모티비즘, 규범주의, 문화적 상대주의가 있다.

(1) 이모티비즘

① 이모티비즘의 이해

이모티비즘(emotivism)은 '가치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느낌, 욕망, 기호, 태도 등에 따라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모티비즘은 사물이나 형상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주체자가 가치를 사물에 부여함으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여기서 가치평가는 그 주체자가 사물 현상에 붙여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모티비즘에서는 행위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판단보다는 '좋아한다, 시인한다'는 표현을 갖는다. 즉, 여기에서의 가치판단은 객관적인 서술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주체자의 욕망, 필요, 느낌, 태도, 기호, 선호 등을 나타내는 기능이다. 따라서 이모티비즘에서는 가치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며,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평가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나는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자의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고 본다. 가치충돌의 해결은 감정이며 의욕이지 이성은 아니라고 본다. 이모티비즘은 가치의 다원성을 내세운다. 다원성의 주장에도 실존주의적인 입장과 언어 분석적 입장이 있다.

이모티비즘 분류	내 용
실존주의적 측면	가치판단이란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으로 본다. 이 삶의 세계에서 나는 자유이며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본다. 내 삶의 실존의 자유 속에서 다른 모든 사실로부터 의미를 창조한다고 본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기호기이며, 가치는 선택에 의해 창조 된다."(사르트르)
언어 분석적 측면	가치판단이란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 태도의 투영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가치판단의 진술이라는 것은 진위여부라기 보다는 느낌으로서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 일수도 없는 명제들이라고 본다. '뱀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판단 주체자의 뱀에 대한 혐오이지 뱀 자체의 가치판단으로서 진위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② 이모티비즘의 비판

첫째, 가치의 상대성을 내세우다 보면 도덕적 무정부 상태가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가치판단이 선호나 욕망의 표현이라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도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비판 한다.

둘째, 도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에서 본래적 가치는 감정의 처분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될 수 없다.

(2) 규범주의

① 규범주의 이해

규범주의(prescriptivism)는 '옳다, 그르다'를 나의 혐오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의 가치 규범을 제시하여 규범에 따라 약속 이행의 행위 결과를 중요시한다. 사랑과 약속 이행이 증오나 거짓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고, 더 많은 만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과 약속 이행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행위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본다. 하나의 규범에 대한 평가는 '결과'가 좋은가 나쁜가라는 기준에 기초한다. 즉 가치의 선악 판단은 인간에게 '만족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경험적 증거에 의하여 정당화 된다. 여기에서의 만족은 한 순간이나 기분적으로 한 순간 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의미한다.

규범주의가 윤리적 상대주의의 범주에 속하는 이유는 모든 가치는 인간의 만족도에 의존한다는 것을 전제 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규범성은 높은 효용성의 만족도의 여부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적 원리로 내세우는 공리주의의 효용성을 도덕적 가치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실용주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결과에 따른 효용성은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만족도는 상황에 따라 이성적 판단이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

② 규범주의 비판

규범주의의 문제점은 다수의 행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나 정책이 비록 공리주의적 기준으로 볼 때 선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소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다수의 행복까지도 선이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이성에서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아닌 한 윤리적 가치판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범주의는 자칫 강자의 윤리, 다수자의 윤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문화적 상대주의

① 문화적 상대주의 이해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윤리는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가치관 및 사회적 규범은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한 사회에서 옳은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그른 것이 될 수도 있다. 즉, 각 사회의 문화는 다양성을 지니며, 한 문화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수용되는 사회적 믿음, 가치, 원칙 등이 있어서 이것이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인이 된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 상대주의 윤리적 가치는 문화권에 따라 다르며 상대적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원칙이 곧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도 문화권에 따라 도덕적 선택의 기준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화적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한 사람의 행동의 도덕적 선택도 어떤 사회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도덕적 가치규범이 될 수 있다. 주류사회의 규범적 가치도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규범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 질 수 있다. 한국인이 한국인의 잣대를 가지고 이주민들에게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는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강요된 윤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상대주의 윤리에서는 자기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의 제도나 심념들을 다수자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관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의 윤리적 가치 팔난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가치판단도 존중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판단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 하고, 타인의 가치판단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인 윤리의식은 세뇌(brain-washing)이며, 다문화사회에 걸맞지 않는 태도이다. 관용이 부족한 배제는 문화간의 가치충돌로 나타나고, 이러한 문화 간 가치충돌이 클 경우 이를 구별하여 문화충격(cultural shock)라고 부른다.

② 문화적 상대주의 비판

문화적 상대주의에서 강조하는 문화적 관용은 하위문화이다. 그러나 범문화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 간의 가치 충돌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상대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범문화적 가치라는 것도 어느 사회이든지 편협 적이고 배타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치의 보편성을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3) 완화된 윤리 상대주의(modified moral relativism)

완화된 상대주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대안이다. 퍼트남(H. Putnam)으로 대표되는 내재적 실재론과 존 듀이의 체험주의가 이러한 시도들이다. 상대주의는 오랫동안 서양의 지적 역사에서 지배적 주류를 이루어 왔던 객관주의(objectivism)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완화된 상대주의는 극단적인 상대주의와 회의주의의 중간 지대를 찾는 '메타 철학적 관점'을 가진다. 두 극단의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완화된 상대주의는 객관주의 이론과 극단적 상대주의를 넘어 선다. 철학적 사상의 흐름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형이상학적 실재론, 유물론, 기능주의, 인과주의 등 과학주의적 또는 환원주의적 이론들이다. 또 하나는 극단적인 해체론, 상대주의, 회의주의 등이다. 1960년대 전후로 논리실증주의의 붕괴는 상대주의 확산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객관주의의 붕괴가 극단적인 상대주의로 이어질 경우 허무주의를 초래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난타 난 것이 완화된 상대주의이다. 반대로 20세기의 급속한 과학적 성과에 힘입어 과학주의의 믿음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생각은 세계에 관한 다양한 설명들이 단일하고 체계적인 과학적 법칙으로 수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주의적인 이론들은 과학주의적 환원주의며 유물론적 상향을 갖는다고 비판을 받는다. 철학적 사조인 완화된 상대주의는 '다문화 사회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논쟁이라고 여겨진다.

(1) 내재적 실재론

① 퍼트남의 미지의 세계

내재적 실재론(internal realism)은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넘어서려는 시도이다. 퍼트남(H. Putnam)의 제3의 관점에서의 내재적 실재론은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를 정교하게 탐색하고 조정하는 중간 지대를 모색한다. 내재적 실재론은 단일한 진리 추구를 거부하고 '우리가 만드는 다수의 세계'라는 생각을 통해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제시한다. 퍼트남은 객관주의가 객관성의 근거를 '개념 이전의 세계'에서 찾는 반면, 상대주의가 상대성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고 있다고 가정한다. 퍼트남의 내재적 실재론은 이 둘 사이의 사이 길을 찾는 것이다.

객관주의적 진리의 거부자인 로티(R. Rorty)는 인식론의 해체로부터 시작한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인식론은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관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전통적 인식론은 '마음'을 거울처럼 이 세계를 반영하는 도구로 간주하며, 마음을 통한 세계의 반영이 인식론의 핵심주제이다. 이러한 표상의 거부는 진리 대응설에 의한 단일한 진리 개념의 거부를 의미한다. 로티는 진리를 전적으로 '사회구성원의 합의'의 문제로 본다. 그러나 로티의 이러한 진리관은 전혀 규범성을 갖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사회구성원의 합의도 사회의 단위가 작아져서 한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그 사람만이 진리를 갖는다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

다. 이러한 로티의 극단적인 철학적 해체와 허무주의는 ‘대안 없는 해체’라는 비판을 받는다.

퍼트남은 이러한 허무주의의 극복을 ‘제약(constrai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한다. 내재적 실재론에서 제시하는 ‘제약’은 ‘세계로 부터의 입력’이다. 우리의 인식과 진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개념 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퍼트남은 마음과 세계가 공동으로 마음과 세계를 구성한다고 본다. 퍼트남은 ‘세계로 부터의 입력’과 마음과 세계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내재적 실재론에 따르면, 우리에게 입력으로 주어지는 세계는 반드시 존재 하면서도 결코 지칭되는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 ‘미지의 세계’라고 본다.

② 굿맨의 세계 만들기

굿맨(N. Goodman)이 제시하는 세계 만들기 방식들(Ways of Worldmaking)에서 비실재론(irrealism)을 제기하였다. 굿맨은 우리는 하나의 세계 대신에 다수의 세계를 가지며, 이 세계들은 가능 세계가 아니라 ‘실재 세계’라고 보았다. 굿맨은 이 세계를 버전(version)이라 불렀고, 이러한 버전들은 세계 만들기(worldmaking) 방식에 따라 주어진 세계들로서 강력한 상대주의를 수반한다. 퍼트남의 미지의 세계는 구체성이 결여 되었다고 본다.

굿맨은 근원적으로 기술 되어야하고 기술을 기다리는 ‘완성 된 세계(ready-made world)’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전통적인 ‘진리 대응설’은 그동안 우리의 모든 기록되고 말하여진 것들은 우리와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세계이며 기록되고 말하여진 세계의 대응 관계가 진리성의 척도로 보았다. 그러나 굿맨의 단일 세계의 거부는 전통적으로 유지 되어 온 ‘진리 대응설’의 폐기를 요구한다.

(2) 제약 된 상대주의

허무주의적 상대주의는 다양성이 극도로 확장 되면 나를 넘어선 ‘지식’의 가능성 자체를 거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허무주의적 분위기를 막아주는 제약(constraint)이 필요하다. 상대주의가 극복 할 점은 진리에 대한 다원적 입장을 취할 경우 다수의 진리들에 대한 부가적인 해명이다. 다수의 옳음을 인정하게 될 때의 옳음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그러다고 하는 것도 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단일한 진리 개념을 포기하게 되면 상대주의적 진리관의 기준성이 요청된다.

굿맨은 다수의 버전들이 상호 불일치하더라도 버전들이 ‘동시적으로 참일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양립 불가능한 ‘참’에 대한 가설이 가능하다면, 그 선택을 결정해주는 진리 이상의 무엇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특정한 가설을 투사하고 고착시켜 주는 주된 요인을 굿맨은 ‘습관(habit)’으로 보았다. 굿맨은 진리 보다 더 넓은 개념이 필요한데 그 대안으로서 ‘옳음(rightness)’을 제시하였고, 그 옳음에 대한 평가의 내용으로 ‘맞음(fit)’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맞음은 곧 ‘제약’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굿맨은 하나의 중립적인 세계가 존재 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며 중립적 세계와 맞음에 근거한 단일한 진리도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 굿맨의 주장의 맹점은 상대주의가 ‘무엇이든지 된다.’는 주장은 거부하기는 하지만 극단적 상대주의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무방비한 상대주의는 허무주의만 불러일으킨

다. 상대주의가 강력한 제약을 수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제약의 소제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지 못하다.

제약된 상대주의의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가? 굿맨은 “우리가 세계에 대하여 말하여 진 것은 이미 기존에 우리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세계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버전일 뿐이다.”라고 한다. 굿맨은 진리를 결정해 주는 기준은 버전과 세계 사이의 ‘대응’ 대신에 버전들 사이의 ‘정합성(coherence)’에서 찾는다. 그러나 정합성 자체도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 정합성 자체도 다양하게 해석 할 수 있다고 본다. 굿맨은 세계에는 ‘다수의 버전’이 존재 한다고 본다. 다수의 버전들이 상호 불일치하더라도 버전들이 ‘동시적으로 참일 수 있다.’고 보았다. 굿맨이 이론에 따르면, 다문화 사회에서는 다수의 윤리적 척도가 존재하며, 한 사회 내에서 윤리적 척도들이 상호 충돌한다고 하여도 충돌하는 윤리적 규범들이 ‘그른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3) 체험주의적 접근

체험주의(experientialism)는 듀이(J. Dewey)의 ‘신체화 된 마음(embodied mind)’에서 출발한다. 여기에서의 체험주의는 감각적 인상으로 환원 될 수 있는 경험주의 적인 경험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체험주의에 대한 설명은 범주화(categorization)와 상상력을 통하여 설명된다. 체험주의자들의 궁극적인 주장은 인종적,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인간은 생리학적 관점에서 공유된 인지적 구조를 갖지만 구조적 실제 작용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차원들에 대해 상대적인 변이를 보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이는 적어도 해석이나 기술 가능한 범위에서 외적 조건에 반응 한다고 보았다.

① 범주

체험주의가 갖는 범주는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은 사물에 대한 범주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본다. 사람들은 ‘종류(나무, 조식, 운동, 느낌 등)’의 사물을 이야기 할 때 항상 범주를 사용한다. 사람들의 사고의 대부분은 ‘어떤 종류의 사물에 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범주의 개념을 바꾸면 우리의 마음의 개념도 바꾸는 것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전환 시키는 것으로 본다. 객관주의는 범주자인 인간이 갖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을 전적으로 무시한다고 본다.

체험주의에서 이야기 하는 범주화는 인간의 신체와 관계 한다. 인간은 ‘신체화 된 사회적 존재’이며, 인간의 모든 경험이 기본적으로 ‘신체화 된 상상구조’에 근거하며 동시에 그것에 의하여 제약 된다고 본다. 체험주의가 말하는 제약이란 모든 인간에게 단일한 개념 체계를 보장하는 제약이 아니라, 상이한 다수의 개념체계들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변이가 해석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주의 범주화 이론에 상응하는 체험주의의 범주화의 개념은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이다. 원형이론은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원형이론은 객관주의적 범주 이론은 범주의 구성원들은 그 범주 안에서 무차별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갖는 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형이론의 범주는 범주 구성원들 간의 중요한 차이를 전제로 한다. 동일 범주 안의 구성원들 간에도 상호 차별성을 보인다고 본다.

② 상상력 이론

체험주의적 새로운 범주로서 존슨(M. Johnson)은 상상력 이론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체험주의는 언어철학적 접근이라고 비판 하면서 존슨은 인간의 몸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 한다. ‘몸을 마음 안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인간의 이성과 이해에 관한 포괄적인 해명을 시도하려 하였다. 몸은 우리의 인식 작용에 주된 역할을 하면서도 그 자체는 항상 인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존슨은 상상력이 인간의 사고와 이해의 근원적 바탕까지 확장 시켰다. 존슨은 영상도식과 은유적 투사를 통하여 상상력 이론을 발전 시켰다.

영상도식(image schema)은 어떤 진리에 대하여 선 개념적이고 비명제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그릇’도식은 사람들에게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경계를 갖게 된다고 본다. 이것의 확장이 안-밖의 지향성의 체험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본다. 이것은 나아가 시 공간의 구조로 발전 하게 된다고 본다. 영상도식은 무수한 체험들은 반복 작용됨으로써 우리의 이해를 제약 한다고 보았다. 은유적 투사(metaphorical projection)는 영상 도식적 차원의 경험을 추상적 차원의 경험으로 확장 시키는 중심 기제로 본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마음, 꿈, 이야기 등을 마치 안, 밖, 경계를 갖는 물리적 대상인 것처럼 이해한다. 상상력은 은유적으로 확장된 의미구조이며 산술적인 조작을 통해 어떤 고정된 개념이나 명제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았다. 상상력 이론은 이러한 의미에서 객관주의와 극단적 상대주의의 극복을 시도하였다.

3. 다문화 사회 윤리 형성을 위한 현장 이해

1) 이주노동자

(1) 강제 송환되는 이주 노동자

고용분야의 보호주의 확산은 극심한 불황으로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타적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2009년 3월 초 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국민 가운데 80%가량이 “직장을 잃은 외국인은 돌려보내야 한다.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호주는 이달 초 숙련노동자 수용 목표를 현행 13만3500명보다 14% 줄인 11만5000명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호주의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은 5.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크리스 에번스 이민 장관은 “자국민에게 우선적으로 고용기회를 주는 것은 현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와 네팔 등에서 온 200만여 명이 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발급을 올 들어 70% 줄였다. [출처: 경향신문.(2009.3.22). 본국에 돌아가도 일자리 없어 노동난민 전락.]

(2) 일자리 없자 자살

외국인노동자가 경기침체로 해고된 뒤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다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09년 3월 21일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30분께 평택시 포승면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출신 노동자 A(32) 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입국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에 들어온 지 50여 일만이였다. 합법체류자이다.

2006년 한국에 온 A 씨는 평택 포승면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생산 공장에서 일하다 3년의 취업기간이 지나 본국에 돌아갔다가 지난 1월 재입국했다. A 씨는 예전에 일했던 이 공장에 재취업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공장에 일감이 줄자 두 달여 만에 해고됐다. 이후 동료 노동자가 다니는 공장 기숙사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고 고용지원센터를 전전하며 새 직장을 찾아 나섰지만 해고된 뒤 두 달이 지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A 씨는 결국 11일 밤 동료가 일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유서를 남긴 채 벽 옷걸이에 목을 맨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A 씨의 옷 주머니에서는 '멀리 있어 더 생각나는 할아버지와 부모님, 인생에는 시련이 많이 있다는데 저는 극복할 수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유서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20여개 업체의 구인소개장이 함께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의 동료들은 "고향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부담해 온 A가 직장에서 해고된 뒤 고민이 많았다"고 전했다. 자살하기 몇 시간 전에는 외국인등록증과 동료에게서 빌린 생활비가 든 지갑까지 소매치기 당한 것으로 전해진 A 씨는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지난 17일 오후 베트남 고향으로 실려 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월 안에 재취업을 못하면 미등록 체류자로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며 "유서 내용과 동료들 진술로 미뤄 취업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9.3.1.), 재취업 고민 외국인노동자 목매 숨져.]

2) 결혼 이주 여성

(1) 상업적 국제결혼 중개업체

'아직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여성' '○○보다 싼 가격으로 결혼 하세요'...,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은 하나같이 달콤한 문구를 내세워 자사 서비스를 강조한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업체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초기 화면은 젊은 여성의 프로필로 나열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신붓감의 후보국은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순으로 많다. 한 업체 관계자는 "30대 초혼 남성은 20대 초반 여성을 선호하고 40~50대 재혼 남성도 20대 중반의 여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젊은 여성 위주로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혼을 결심한 남성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마음에 드는 결혼 알선업체를 고른 후 돈을 건네는 것.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통역비, 맞선 진행비, 결혼 예식비 등 20여 가지 명목으로 이들이 업체 측에 지불하는 돈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맞선 남자는 현지에 도착, 여러 명을 만나본 후 즉석에서 신붓감을 선택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결혼 성사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있는 것이다. 첫 만남부터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불과 7일. 2~3개월 후 혼인증명서가 나오면 입국사증을 발급 받아 신부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사례>

저는 저의 남편을 2005년 5월 24일에 만났고, 5월 27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005년 8

월 29일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분들은 저에게 매우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는 우리의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중증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남편의 남자 형제 중 한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똑같이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남자형제 두 명과 여형제 한 명 또한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이었으며 지금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읽을 줄도, 쓸 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없는데 어떻게 한평생 살 수 있습니까. 현재 저는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돌볼 줄도 모르며 아이를 어떻게 안아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남자아이를 낳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수백 번은 생각해도 남편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2008년 7월 20일에 저는 제 딸과 필리핀에 갔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딸을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여 지금까지 제 손으로 돈을 벌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출처: 안산이주민센터 상담실.(2009). 안산이주민센터 비간행 상담자료.]

(2) 국제결혼 악용, 성적 욕망의 탈출구

안나(가명)는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안나 엄마는 안나를 국제결혼 모집업체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는 친구의 소개로 안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간 것이다. 이때 지원한 사람들은 모집 회사로 불러 나가 줄을 서게 한 다음 번호표를 주었다. 번호표를 부르면 나가서 한국 남자들에게 선을 보였다. 여자들은 모두 그렇게 했다. 만약 한국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면 매니저와 이야기 하여 면담을 한 다음 짝짓기를 하게 된다. 한국 남자는 필리핀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매달 300달러를 줄 것이니 가족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짝짓기가 끝나면, 다음날에 있을 결혼식에 입을 옷을 사러 나간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사람은 정식으로 2004년 결혼을 했다.

한국에 도착하자 모집업체와 남편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남편은 부자도 아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월급을 받으면 술을 마시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 식량을 살 돈도 주지 않았다. 안나는 끼니 때 마다 김치 하나에 밥을 먹는 것으로 족해야 했다.

남편하고 지낸 두 달은 지옥보다 못했다. 남편은 안나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를 거절하면 저항하지 못하도록 심하게 때리기도 하였다. 심지어 의식이 없을 때에도 남편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남편은 안나가 견디기 어려운 정도의 각종 변태적인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상한 도구들도 사용하였다. 생리 중에도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고, 거절할 수가 없었다.

안나가 도망치려하면,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속옷들도 다 찢었다. 도망 갈 수도 없었다. 남편은 모집업체에 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일 관계를 청산하고 싶으면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 남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안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결국 안나는 2개월 만에서 집에서 도망 나와야 했다. [두레방, (2005). 필리핀-한국 인턴쉽 프로그램 자료집, 두레방 비간행 자료집.]

(3) 일만 시키는 빈곤 가정

알바(가명)의 고향은 필리핀이다. 알바의 2002년 결혼 초기는 행복 했다. 남편이 한글도 가르쳐주고 구타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시집에서 시집 식구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바꾸기 시작했다. 알바는 전 가족의 노예가 되었다.

농번기 때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밭에 가서 일했다. 밭에 나가기 전에는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야 했다. 겨울에 물이 너무 차가와도 세탁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다. 알바는 늘 차가운 물에 손을 호호불어 가며 빨래를 해야 했다.

참기 힘든 가사 일을 이웃에게 이야기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 뒤로 알바를 계속 구타하기 시작했다. 시장이나 버스 안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알바를 때렸다. 알바는 대항 할 수도 없었고 참피하기도 하였다. 임신 중일 때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남편은 임신 상태인데도 발로 차고 때렸다.

임신 중에 필리핀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다. 남편과 함께 필리핀으로 갔다. 한국에서 고된 생활로 너무 힘들었지만 필리핀 고향으로 돌아오니 정말 살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 와야만 했다. 그러나 필리핀 가족들은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 하였다.

출산을 하였다. 모든 돈은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다.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도 사주지 않았다. 하루 5천원으로 살수가 없다. 언젠가 아기를 키우면서 너무 빵이 먹고 싶어 5천원으로 빵을 사먹었다. 빵을 먹어 본지가 너무 오래 되어 너무 맛있었다. 알바는 남편으로부터 빵을 사먹었다고 또 맞았다. 집에 쌀 산 돈도 없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돈을 주지 않았다. 알바는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 남편이 버는 돈을 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고 내게는 주지 않는가를 따졌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또 알바를 때렸다. 누워있는 알바를 발로 밟고 발로 차고, 뽀도 여러 차례 때렸다. [두레방, (2005), 필리핀-한국 인턴십 프로그램 자료집, 두레방 비간행 자료집.]

(4) 일상적 결혼 이민자 폭력

본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2001년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후 남편은 장남이 아님에도 가정사가 복잡하여 시어머니가 두 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으나,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 위가 아픈 나머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우면 속옷만 입고 생활하는 등 문화적 충격이 컸으나 남편은 이러한 저를 이해하거나 적응을 도와주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남편은 돈을 주지 않으면서 “네가 벌어서 병원가라”고 합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드는 아르바이트를 오줌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일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지 말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남편은 화를 내며 “집에 있어라”고 할 뿐이었고, 돈이 없어 병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카자흐스탄에 가겠다고 하였더니 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자신이 원

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중 술을 마시면 피고의 팔을 꺾고, 피고를 팔꿈치로 찌고, 목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도 이에 가세하여 목 디스크로 팔에 힘이 없어 저항하지 못하는 저의 양팔을 잡아 구석으로 밀치고 남편이 발로 저의 배를 차기도 하였습니다. 2002.5.경에는 원고가 주먹으로 피고의 머리를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고 몸이 아팠으나 한국말을 하지 못해 병원에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의 폭행이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폭행으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남편은 “네가 한국에 남아 있거나 법원에 가서 이혼하는데 확인하러 오면 죽여 버리겠다, 이혼하고 싶으면 카자흐스탄으로 가라.”고 하며 무조건 쫓아냈습니다. 저는 아무 짐도 없이 쫓겨났고, 남편이 무서워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알면 찾아와 죽일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까요? [출처: 안산이주민센터 상담실, (2009), 안산이주민센터 비간행 상담자료.]

(5) 체류 신분의 위협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농사일을 하였으며, 여름이면 식당일, 민박을 하며 1년 내 내 힘들게 상일꾼처럼 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일꾼처럼 부림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프다는 핑계로 “귀찮다” “짜증난다. “몸이 아프다”며 낮에는 자고, 밤에는 늦게까지 TV만 보며 일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2007년 9월경 남편은 저의 신분증인 중국여권, 중국 호구부, 외국인등록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쌍욕을 하며 찢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은 저를 부당하게 대하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죽을 만큼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출처: 안산이주민센터 상담실, (2009), 안산이주민센터 비간행 상담자료.]

필리핀 출신 아자스의 남편의 나이가 61세이며 본인과의 나이는 20살 차이가 난다. 30살 난 남편의 딸과 같이 산다. 남편은 아자스와 결혼하기 전 3명의 자녀가 있었다. 남편은 부인이 두 번 사별되었고 한번은 이혼하였다. 남편은 이혼 중인 여자와도 계속 연락을 한다.

남편은 지하철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이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 남편은 아자스에게 일을 알아보라고 괴롭혔다. 결혼을 위해 필리핀 방문 했을 때의 돈과 수수료도 돌려 달라고 하였다. 남편은 혁대로 때렸다.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며 목도 졸랐다. 남편의 딸도 나를 때리는 것을 도왔다. 남편과 딸은 아자스를 밖으로 끌어냈으나 아자스는 계단에 매달리기도 하였다. 남편과 딸은 집 대문 열쇠를 다섯 번이나 바꾸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비자 기간이 만료 되어 비자 연장을 하러 갔으나 거부당하였다. 남편이 함께 출입국관리소로 가야 했으나 남편은 바쁘다며 거절 하였다. 아자스의 비자가 만료되어 아자스는 추방 될

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두레방, (2005), 필리핀-한국 인턴쉽 프로그램 자료집, 두레방 비간행 자료집.]

(6) 수다방 출산문화 이야기

나현: 한국에는 태몽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베트남엔 그게 없어요. 신기한 것이 나도 아이를 가질 때 꿈을 꾸었어요. 남편이 나한테 복숭아를 따 주는 거예요.

선미: 입덧을 할 때는 오리 알이 정말 먹고 싶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계란 말고요, 이건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싫어 할 거예요. 부회되기 직전의 오리 알 말이에요. 막 병아리가 깨어나려고 하는 건데 고단백이고 영양이 풍부해요. 정말 맛있어요.

딘디아: 한국 음식 중에는 먹기 힘든 것이 많은데 이해를 못해 줘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남편이 시어머니께 부탁했죠. 맛있는 것 해 주라고. 그러면 시어머니 대답은 무조건 김치가 최고래요. 입덧이고 뭐고 신 김치 먹으면 싹 가라앉을 거라고.

뚜엣: 김치……, 지금은 잘 먹지만 사실 김치는 너무 시뻘겅고 너무 짜고, 냄새도 아주 독특하잖아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아요.

랭: 아이 낳고도 마찬가지예요. 미역국이 좋다고 하루 세끼 미역국만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미끌미끌하고 바닷가 냄새도 나고, 아기를 위해서 몇 번은 참고 먹지만 계속 먹는 건 정말 참기 힘들어요.

딘디아: 베트남 사람들은 임신했을 때 안 먹는 것이 있어요. 알 모양으로 생긴 가지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노랑고 예쁘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기를 낳거나 병을 앓는 사람은 안 먹어요.

나현: 아이를 낳아도 걱정이 많아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내가 베트남 사람이다'는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늘 걱정이지요. [출처: 이주여성인권연대, (2006), '알, 생명의 씨앗,' 천천히 말해요, 이주여성인권연대 비간행 자료.]

3) 다문화 가정 자녀

(1) 이주아동의 노동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2003년 엄마와 단둘이 한국에 왔고 그 때 저의 나이는 15살 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말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가정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와 엄마가 한국에 와서 처음 일한 곳은 핸드폰 공장입니다. 월급은 적고 일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한주는 낮에 일하고 한 주는 밤에 일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공장이 바빠 우리 외국인들은 12시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잔업도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잔업을 거절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한국인은 일찍 퇴근해도 좋지만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시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몸이 피곤하여 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공장안이 몹시 추워서 저는 자주 아팠습니다.

제가 핸드폰 공장에서 일한지 6개월이 지나서 모든 외국인들이 해고 되었습니다. 일거리가 없고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소개로 핸드폰 배터리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일을 한지 얼마 안 되어 손을 다쳐서 두주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한지 2년째 되는 해, 제 나이 17살에 그 공장도 그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항상 한국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할 줄도 몰랐고,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조금 배웠습니다. [출처: 코시안의 집.(2007),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경기도 교육청, 코시안의집 자료집.]

(2) 졸업장 없는 학교생활

저는 중3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 몽골 출신 어르길 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접수하고 시험과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가지만, 저는 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정해진 고등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 때 엄마는 급한 일이 생겨 몽골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십니다. 제가 요리 할 수 있는 것은 라면 밖에 없는데 식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리 들어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등록금, 급식비, 학비, 교과서비, 교복 값 등입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취업을 보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정원 외 학생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중학교 졸업장도 못 받았고, 지금의 고등학교도 사실 정원 외 학생으로 다닌 것입니다. 수료증만 나옵니다. 수료증만으로는 대학도 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민등록증도 없고 외국인등록증도 없기 때문에 자격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뒤로 학교에 가기가 더욱 싫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학생들 앞에 불러 세우고는 “너는 몽골에서 왔으면 학교를 똑바로 다녀야지 너 하나 때문에 몽골 사람들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야단을 쳤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퇴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정원 외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안가도 결석처리를 안하니까 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때 한교 선생님은 저를 불렀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며 자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장 자퇴하고 싶었습니다. [출처: 코시안의 집.(2007), 이주아동 교육지원 욕구조사, 경기도 교육청, 코시안의 집 자료집.]

4. 다문화 사회 윤리의 재구성 방안

1) 국가적 다문화주의 윤리

최근 한국 교육계에서는 기존의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의 수정을 몇 가지 이유로 변화를 주문하였다. 첫째, 인간 존중과 생명 중시의 정신을 강조하는 인본교육, 둘째, 우리의 전통 윤리와 시민윤리와 그에 따르는 생활예절을 가르치는 도덕, 윤리, 예절교육, 셋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옹호와 국가와 민족 발전을 위한 민족 공동체적 자세를 중시하는 시민 공동체 교육, 넷째,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통일촉진 통일교육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상황에서 수정 될 필요가 있었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제8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교육에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배우고, 국가, 민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로서 도덕과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민족정체성'의 이념이 다문화 교육의 방해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국가 출신에게는 단일민족주의를 극복하지만 재외동포나 탈북 이주민에게는 민족 정체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문화주의와 세계주의와 동일시보다는 국가 경계 내에서의 '국가적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다문화 시대의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은 국민들로 하여금 높은 정신문화 체계와 도덕성을 가지게 하고, 세계적 보편윤리와 한국적 민족정신의 조화를 통한 한국적인 윤리관의 확립을 주장한다. 국가적 다문화주의 입장에서의 도덕교육의 학습 내용의 재구성에 대하여 '이상희(2008)'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우리 문화의 우수성 알기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심 기르기
- ② 각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특징 알기
- ③ 문화 간 긍정적 태도 발달시키기
- ④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및 협동능력 증진하기
- ⑤ 선입견이나 편견 및 고정관념에 비판적 사고 형성하기
- ⑥ 문제 상황에 대처능력 기르기
- ⑦ 긍정적 개념 기르기
- ⑧ 정체감 및 집단 정체감 형성하기
- ⑨ 국가와 민족, 성, 능력, 계층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지기
- ⑩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 형성하기
- ⑪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 인정하기
- ⑫ 다양성 존중하는 마음 갖기 등을 제시하였다.

2) 다문화 사회 윤리로서 관계문화 모델

(1) 레비나스와 관계성 윤리 연계

오늘날 타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윤리학을 재정립하려는 선구적인 타자윤리학자는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이다. 자아중심의 사유방식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박하게나마 이의를 제기하면서 타자의 존재중심으로 사유의 전환을 촉구한 사람은 포이에르 바흐(F Feuerbah)였고, 자아의 자아성의 형성에 있어서 나와 너의 근원적 관계를 정초한 사람은 『나와 너』의 대화철학자인 부버(Martin Buber)였다. 이후 타자의 윤리적 의미를 근원적으로 밝히고 정교

화한 사람은 『전체성과 무한』, 『존재와 다른 것, 존재사건 저편』의 저자인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이다.

서구의 철학적 전통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레비나스는 윤리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도모한다. 그는 모든 진리나 가치들이 자율적 주체의 선험적 활동으로 환원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윤리에 있어서 자아중심의 일원론적 관점으로부터 다원론으로의 전환을 가져온다. 타자윤리학은 동일자 안으로 타자를 포함하는 대신, 이들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동시에 연결시킨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타인으로서의 타자(autrui)라는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다. 타인으로서의 타자는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로 통합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다름(absolument autre), 절대적인 타자성을 지닌다.

요컨대 자아와 타인 사이에 형성되는 윤리적 관계는 타자를 자아의 이기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타자성을 보존하면서 타자로 향해가는 움직임, 열망, 초월성이다. 타자제로의 초월성이야말로 사회적 관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내재적 초월로부터 외재성제로의 초월이다. 그러므로 윤리적 행위의 근원은 자율성에 앞서 타율성이자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 행위의 원리는 주체의 자기입법에 근원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의 '호소'로부터 온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자로부터 주체로 온다.

여기서 관련되는 중요한 도덕성의 요소는 외부로부터 어떤 강제나 부담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주체의 자기결정 즉 주체의 자유가 아니라, 과연 주체가 타자의 호소에 응답하느냐 아니면 응답하기를 거부하느냐의 문제이다. 오랫동안 '자율적 주체'의 전통에 머물고 있는 서구 철학의 테두리 안에서 사유한다면, 주체의 자유는 신성한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러나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상황으로부터 윤리현상을 재조명한다면, 도덕성에서 보다 근원적인 것은 나의 자유가 아니라, 타자의 곤경에 대한 나의 양심의 가책, 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중심의 윤리적 추론에서는 자유, 자율성이 우선하겠지만, 나와 너, 나와 타인의 관계로부터 윤리적 관계를 설정한다면 보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타인의 곤경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 사회 윤리 형성 요인 분석

다문화 사회의 윤리의 내용은 어떻게 형성해 낼 것인가에 대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따른 갈등과 도전을 중심으로 윤리형성 요인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가치와 규범에 도전을 주는 다양성과 새로운 차이의 주체, 차이의 이해당사자, 차이의 내용, 차이의 갈등 원인, 차이의 갈등 성격, 차이로 위협당하는 가치들, 차이와 다양성으로 새롭게 형성 되는 가치, 새롭게 형성 되는 사회적 규범들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 윤리 내용을 형성하는 요인들 가운데 다양성과 차이를 가져다 주체들을 보면 대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난민, 탈북 이주민, 국내체류 해와 동포, 유학생, 국제결혼 자녀, 이주가정 자녀, 난민의 자녀, 탈북이주민의 자녀, 국내 입양자, 영주권자, 국내 외국인 주재원 등 이다. 이러한 주체자들과 이해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은 새로운 가치관과 규범을 요구한다. 한국 사회에 다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도전을 주는 주체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

상으로 놓고 다문화 사회 윤리 형성 요인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① 이주노동자

주체	윤리도전요인	내용
이주 노동자	차이이해당사자	국내노동자, 기업인, 지역주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차이내용	노동권 제한, 취업 제한, 인권차별, 임금차별, 불평등 고용관계, 체류제한, 혐오감, 지역사회 참여 등
	갈등원인	노동권과 인권 인식의 차이, 정책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 태도, 일자리 보존, 문화적 차이 등
	갈등성격	욕구갈등(이해관계, 사실관계, 구조적 갈등, 상호관계 갈등 등), 가치갈등(가치관, 문화적 습관, 출신국, 종교 등)
	위협되는 가치	국내 고용시장의 안정성, 인권과 민주주의 인식, 전통적인 기업문화, 지역 향토문화, 힘의 관계 등
	새로운 가치	차별 없는 노동권, 차별 없는 인권, 문화적 다양성, 주민의 새로운 주체, 이주민 인권 등
	새로운 규범	문화적 상대성, 차이의 다양성, 이주민 시민권 등

② 결혼 이민자

주체	윤리도전요인	내용
결혼 이민자	차이이해당사자	국제결혼 국내 배우자, 양가 친인척, 국제결혼 중개 업체, 양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차이내용	가치관, 결혼관, 부부관, 가족관, 자녀 양육관, 생활문화 습관, 경제관, 언어, 음식 취향, 명절, 나이 등
	갈등원인	가부장 문화, 성적 취향, 성적 태도, 경제적 통제, 가정 내 폭력, 자녀양육방법, 의사소통, 시부모 간섭, 문화적 차이 등
	갈등성격	욕구갈등(이해관계, 사실관계, 구조적 갈등, 상호관계 갈등 등), 가치갈등(가치관, 문화적 습관, 출신국, 종교 등)
	위협되는 가치	순수혈통주의, 유교적 가족문화, 국적과 시민권, 국민의 정체성, 단일민족 문화로서 전통,
	새로운 가치	가족의 다양성, 국민의 다양성, 새로운 국민의 정체성, 지역주민의 다양성, 이중 언어적 권리,
	새로운 규범	문화적 상대성, 차이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출신국이 다른 국민적 권리의 다양성,

③ 다문화 가정 자녀

주체	윤리도전요인	내용
다문화 가정 자녀	차이이해 당사자	출신 국적이 다른 부모, 출신국적이 다른 친척, 출신국적이 다른 친구, 출신 국적이 다른 지역 주민, 양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차이내용	가족관, 생활문화 습관, 이중 언어, 이중문화 습관, 국적이 다른 문화권의 친족, 국적에 따른 정체성, 국민과 비국민 부모의 자녀의 체류자격 등

	갈등원인	출신국이 다른 부모, 자녀의 문화적 정체성, 내국인과 다른 외모, 이중언어, 인식의 차이, 출생국과 자라나는 환경과 문화적 차이, 체류문제 등
	갈등성격	욕구갈등(이해관계, 사실관계, 구조적 갈등, 상호관계 갈등 등), 가치갈등(가치관, 문화적 습관, 출신국, 종교 등)
	위협되는 가치	단일문화 전통, 순수혈통주의, 국민의 정체성, 국민의 범주 등
	새로운 가치	가족의 다양성, 이웃과 친구의 다양성, 국민으로서 정체성, 이중언어적 권리, 체류자격의 다양화 등
	새로운 규범	문화적 상대성, 차이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제3의 정체성, 등

(3) 다문화 사회 윤리 형성 모델: 관계문화 모델

다문화 사회 윤리의 기초는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의 회복과 다양성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에 있다.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의 문화를 전제로 형성되는 다문화 윤리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는 현대의 문화(Culture of Hospitality)이다. 현대의 문화란 다수자가 소수자인 이주민을 향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인내심 있는 갈등을 허용하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고립과 단절의 문화(Culture of Isolate)는 다수자가 소수자를 향하여 인종, 출신국, 민족 등을 중심으로 관계의 구별과 단절을 전제하고, 문화적 우월감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다수체제로의 적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이주민 스스로의 존재와 정체성을 부정하게 만든다.

윤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든 생태 환경이든 관계에서 발생 한다. 다문화 사회 윤리라는 것은 결국 다양성과 차이의 문화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가치관과 관계의 규범 문제이다. 다문화 사회 윤리 형성에서 최근 심리학의 새로운 흐름인 관계문화 모델(Relational Cultural Model)은 다문화 윤리형성에 있어서 고립과 단절의 문화 극복을 위한 통찰력을 준다. 관계문화 모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계문화 모델은 사람이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관계문화 모델은 인간의 고통의 주된 요소를 장기간 지속된 단절이라고 본다. 출신국의 차이,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 외모의 차이, 성적인 차이 등은 다수자들이 소수자들에 대하여 배제 또는 통제의 기제를 통하여 관계를 단절을 강제 한다.

② 관계문화 모델에서 관계는 갈등(conflicts)을 포함한다. 개인의 삶에서 인간관계 간에, 사회적 관계 간에 갈등이 없는 것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갈등의 인식과 원인, 갈등의 해결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갈등에 대하여 관계문화 모델은 이론과 실천에 있어 특권(privilege)과 권력(power)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신분의 차이 등 문화적 상황을 위치 지우고, 심리학적 기능의 중심적 이슈에서 권력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갈등 요인에 대하여 가치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즉, 갈등의 상황은 객관적 분석과 관찰이 불가능 하다고 본다.

③ 관계문화 모델은 가부장적 주류 문화만 아니라 주변화 된 여성성 및 소수자의 문화적 경험에 대하여 주목한다.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대한 경청이다. 주류적 차원에서 문화를 다루

는 것에서 벗어나 소수자들로부터 다양한 경험에 주목한다.

④ 관계문화 모델의 목표는 개인이 자기 지지를 할 수 있도록 관계성을 가지고 관계적 기능을 내면화 하도록 주체성을 강화 하는 것이다. 주체성의 내면화는 개인이 자기를 통제 및 자율성을 증진시킨다. 이는 단지 심리적 건강성만이 아니라 복잡성, 유동성, 선택, 인간 관계성 등의 수준을 증진 시키는 성숙이다. 관계문화 모델은 개인적, 심리적 차원만이 아니라 한 사회에서 공존하여 살아가는 사회성원간의 개별적 차이성, 특성, 복잡성 등을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해하는 정도를 통하여 그 사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삼는다.

[엄마 고향에 대한 자부심]

저는 지난겨울에 엄마랑 동생이랑 베트남 외가에 다녀왔어요. 아빠는 회사에 가야 하니까 못 갔어요. 거긴 한국말이 안 통하니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베트남이 정말 좋습니다. 외할머니랑 삼촌들, 이모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요.

먹을 것도 정말 많아요. 외할머니는 매일 아침 빵을 주시고요, 엄마는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쌀국수를 사와서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엄마가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신기한 과일이 아주 많아요. 가끔씩 엄마랑 시장에 가면 신기한 것들뿐이에요. 노랑고 달콤한 망고가 제일 맛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는 먹고 싶어도 참아요. 한국은 망고가 너무 비싸요. 한 개라도 너무 비싸요.

베트남이 너무 그리워요. 외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이제 어쩌면 다시 못 볼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울었어요.

얼마 전에 가족 소개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나는 우리 할머니 이름을 쓰는 칸에 ‘바어이’라고 썼어요. 사실 할머니 이름이 아니라 할머니를 베트남 말로 부르는 거예요. 외삼촌은 호우화, 이모는 박빙……. 이모도 삼촌도 보고 싶어요. 이모는 나보고 말했어요. “헤지 얼라이,” 여기서 우리랑 살자는 말이에요. 이모는 장난으로 한 말이지만 난 막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베트남 말도 아주 잘 하구요, 한국말도 잘 합니다. 가끔 가족들이 모여요. 아빠들은 한국말로 말하고 엄마들은 베트남 말로 하지요. 저처럼 어린이들도 한국말만 하요. 참 헤진이는 베트남 말도 조금해요. 그래서 엄마와 이모들이 부러워해요. 엄마와 이모들은 우리가 베트남 외가에 가서 외할머니와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게 마음 아프다고 해요.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섭섭해 해요. 나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거 친구들이 알아도 괜찮아요. 베트남은 멋진 곳이니깐요.

[출처 : 김혜지(연동초등학교 1학년), (2006), ‘엄마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천천히 말해요, 이주여성인권연대 비간행 자료.]

[24차시]

1. 소수자 인권

1) 소수자(minority)

(1) 소수자가 누구인가?

소수자는 양적인 소수자, 질적인 소수자가 있다. 양적인 소수자는 양적으로 수가 적은 자들을 말하기도 한다. 질적으로는 숫자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질적인 소수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차별, 배제된 자들을 의미한다. 소수자로 분류되는 네 가지 기준이 있다.

- ① 식별가능성으로서 소수자이다.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뚜렷이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렇다고 여겨지는 경우이다.
- ② 권력의 열세로서 소수자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면에서 권력의 열세이고 여러 가지 자원동원 능력에서 뒤쳐진 경우이다.
- ③ 차별적 대우의 소수자이다. 특정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차별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 ④ 집단의식으로서 소수자이다. 소수자라 할지라도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다.’는 의식이 없으면 개인일 뿐이다.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 다는 것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된다.

(2) 역사성에 따른 소수자와 주변부성 소수자

① 역사성에 따른 소수자는 소수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전 세대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그 딸을 거쳐 생활 세계와 정치 및 경제 영역 곳곳에서 편견과 차별을 당하게 된다. 남성의 수가 적어도 남성을 소수자라 부르지 않는다.

② 주변부성에 따른 소수자는 소수자란 이유로 사회의 주류인 다수에 포함되지 못하고 수용과 비수용의 경계선에 위치하며, 경우에 따라서 수용되기도 하고 배제되기도 하는 특수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4이 흑인이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차별 받는 위치에 있어 소수자라 부른다. 이주민들은 육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국가나 사회로부터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 한다.

2) 윤리로서 인권

권리(right)는 ‘옳다’는 개념과 밀접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모든 사회에 있지만,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으로 권리가 보장 되어 있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인권은 주로 법률가에 의하여 다루어져왔다. 인권개념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하여 발전 되어 왔기 때문이다.

윤리의 개념은 있었어도 인권의 개념은 결여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

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공존을 위해서 인간 집단의 질서나 규범을 정하고 그 것을 엄격히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은 사회윤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윤리의 핵심이다.

실례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6조에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이주민과 관련된 인권은 잘 지켜지지 않고 종종 국가의 이익과 내국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인권과 윤리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한다.

3) 인권의 개념의 역사

인권의 권리를 실천하는 것은 주로 인종주의, 식민주의, 정치적 압제 등 명백한 악행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1) 17세기 고전적 자연권

존로크는 ‘관용론’에서 인간은 이성적이며 행동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종교적 신앙을 행동에 옮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의 자유가 필요하다. ‘자연권 이론’은 모든 인간은 정부나 법률이 아닌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정부는 이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정통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2) 18세기 탈종교 자연권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윤리와 정치의 원칙체계는 타인을 이성적이고 자주적인 도덕 행위자로 인정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에 바탕을 둔다고 보았다. 인간의 권리는 신의 의지에 의하여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나 자연에 의한 것이다.

(3) 프랑스 시민의 권리선언(1789)

모든 정치 결사체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 하는데 있다. 자연권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라 하였다. 법 앞에서의 평등, 자의적으로 체포되지 않을 권리, 표현과 종교의 자유,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 할 권리 등이다.

(4) 18세기말 자연권의 해체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는 자연권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생명, 자유, 양심, 노동생산물, 재산, 그리고 법 앞에서의 평등에 관한 자연권을 인정하였다. 자연권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권리이다.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자연권 개념을 부정하고 합리성에 기반 한 법률 제정을 주장하였다. 윤리학과 정치학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혹은 공동선이며 법적 권리는 공동선에 기여할 때만 유효하다. 벤담에게서의 인권은 법적 권리이다. 자연권 이론의 바탕

인 개인주의에 반발한 이성주의는 과학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철학으로 삼았다.

(5) 19세기 공리주의

심리적 공리주의: 인간의 권리 개념보다는 행복증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심리학이 어떻게 사회를 재구성 하는 기초가 되는지 노력하였다.

산업주의로서 공리주의: 생 시몽(Saint-Simon)은 정치보다는 사회와 경제, 개인 보다는 집단, 철학 보다는 과학을 중시하고 과학에 기초하여 산업사회를 조직하려 하였다. 산업주의 조건하에 공리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려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연권의 실패한 것을 경제학이 이룰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는 인간의 권리는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이기적인 인간의 권리로 보았다. 인간의 권리가 보편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계급에 따른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 해방은 결국 사회경제적인 문제로 보았다.

(6) 유엔인권선언

UN의 주요 목표는 기본적인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1948년 12월 10일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자연권을 인권이란 용어로 대체하여 나타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의무보다는 권리를, 집단의 권리 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다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더 강조하였다.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며, 서로 형제애 정신으로 행동하여야함을 강조한다. (자유권)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평등권)

2. 소수자 편견과 차별

1) 편견(prejudice)

편견은 소수자와 다수자의 불편등한 관계를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별, 종교와 함께 인종에 의한 차별 자체가 허용이 되지는 않지만 성별, 종교, 인종의 차이 만에 의하여 차별대우하는 것을 '편견'이라한다. 편견은 판단 대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전에 그 대상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하여 사회적 다수자들이 미리 이미지화 시켜 통제, 배제, 소외 시키는 일이 종종 발견 된다. 예를 들어 백인 주류사회에서는 흑인들의 저학력과 가난은 차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못나서 그렇다는 것을 정당화 시킨다.

2) 차별(discrimination)

사물들의 내용을 분별하여 사물들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 사이의 특징 차이를 기반으로 종교, 성별, 인종적 차별은 허용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매력(서비스와 보상 관계)의 차이에 의하여 달리 대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를 합리적 차별(differentiating)이라한다. 차별논쟁은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가치의 차이는 없다.'는 점'에서 사람들 사이의 '가치의 모순 해결'과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소수자 차별은 개인의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권위주의의 정도가 높은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사람의 평가할 때 '대표적 지위'인 경제적 위상에 의하여 그 지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① 의도된 차별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그 구별에 의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인정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 차별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간접 차별의 방법을 이용한다.

② 간접차별

차별하려고 의도된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두었지만, 의도된 차별의 기준에 의한 차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차별을 말한다. 간접차별은 허용된 기준에 의한 차별을 하였지만, 허용되지 않은 기준에 의한 차별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야 부당한 간접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차별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차별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부당한 간접 차별이라는 결론을 얻기는 쉽지 않다. 즉, 숨겨진 의도를 증명하기란 쉽지 않기에 간접차별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고용이나 승진에서 인종차별을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흑인이 백인 보다 학력이 낮다는 통계에 착안하여 학력에 의한 간접 차별을 함으로써 결국 인종 차별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3) 사회화

사회화란 새로 성원이 된 사람이 그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하여 차별이 구조화 되면 새로 태어나는 성원은 그것을 그대로 학습하면서 사회화 된다. 즉 편견과 차별이 세대 간 전승 된다. 사회화는 편견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편견과 차별적 상황의 전승 과정을 보여 준다. 사회화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대중 매체 등을 통하여 전파되고 학습되기도 한다.

4) 이데올로기화

다수자가 소수자를 지배 할 때 등장하는 것이 소수자는 열등하다는 논리이다. 소수자 차별은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는 자민족 중심에서 작동한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이주민을 의심하고, 문화를 자신의 문화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주민은 야만인 혹은 도덕적으로나 정

신적으로 열등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자민족중심주의는 집단 폐쇄 즉 다른 집단과의 분리를 통해서 경계를 유지한다. 서구인들은 식민지화가 자기들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서구의 인종주의는 세상의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3. 인종과 인종 차별주의

허시(Hirsch)는 20세기를 인종주의학살의 시대로 보았다. 비이성적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2차 대전 동안 독일 나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 하였다. 크로아티아에서도 100만 명의 세르비아인, 유대인, 집시가 학살당했다. 1937년 중국 난징에서 일본인은 20~35만 명의 중국인을 학살 하였다. 1915~1923년 터키에서는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학살당하였다. 1972년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는 후투족 15만 명이 투치족에 의하여 학살당하였다. 1975~1999년 동티모르에서는 인구 25%인 15만 명이 학살당하였다. 브렌진스키(Zbigniew Brenzinski)는 20세기에 정치적 동기로 학살 된 사람이 1억 6,700만 명에서 1억 7,500만명으로 추정하였다.

1) 인종주의

인종을 나누는 어떠한 지역적 민족적 구분도 불가는 하다. 한 집단의 문화적 특성과 체질적 특성 간에는 인과 관계가 없으며, 인종주의적 정치선전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인종의 생물학적 측면에 관한 선언서)

인종이란 말은 18세기 미국에서 유럽인들, 토착인디언들, 노예로 끌려온 인디언들 사이에서 위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인종주의는 하나의 이념이 되어 2차 세계대전 동안 히틀러의 나치가 인종말살을 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인종주의는 ‘인종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가 인간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인종간의 불평등은 어쩔 수 없으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인종주의 는 다음의 다섯 가지 가정이 있다고 하였다.

- ① 인간은 공통의 신체적 특질을 가진 서로 다른 인간집단인 인종으로 나뉘며, 그들의 차이는 동물의 다른 종들 사이의 차이와 같다.
- ② 신체적, 정신적 특질들은 상호 의존하며 그 특징들은 지속된다. 신체적 특질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자질은 유전으로 전달되며, 교육으로 바꿀 수 없다.
- ③ 집단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행위는 대체로 그가 속한 인종적, 문화적 집단에 의존한다.
- ④ 인종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서로 간에 우열이 있다. 이는 신체적 아름다움이나 지적, 도덕적 특질의 우열로 나타난다.
- ⑤ 이상의 지식에 근거해 도덕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열등한 인종에 대한 예속화와 절멸이 정당화 된다.

2) 인종의 분류

인종은 인류를 지역과 생물학적, 신체적 특성에 따른 분류이다. 인종은 체질이나 유전적인 신체의 특징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그 분류방법은 형태적 계측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분류기준	내용
형태적 기준	피부의 빛깔 (백색, 황색, 흑색 등), 머리털의 형태와 빛깔, 눈빛 (청, 흑, 회색 등) 과 생김새 등
계측적 기준	키 · 머리모양 · 코 · 혈액형 · 지문 등
인면계수기준	인면계수란 (Facial Index) 이마넓이 미간거리 인종거리등 얼굴 형태
편두지수기준	편두란 (Cranial Index) 두개골형태에 의한 분류 실제로 인종조사를 해 보면 각 인종 간에 혼혈이 많아 엄밀히 분류하기에 곤란한 점이 많다.

① 몽골리언(Mongolian: 황인종)

아시아 인종(몽골인종 · 황색인종)은 동아시아, 몽골, 동시베리아, 인도차이나, 남서아시아,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헝가리, 핀란드 등에 분포한다. 피부는 주로 황색이나, 일부는 담갈색이며, 넓은 이마, 낮은 코, 작은 머리, 흑색 직상모(直上毛), 적은 체모(體毛) 등의 특징을 갖고, 신장은 중신 또는 단신이다. 인구분포는 약 15억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33 %를 차지한다.

② 니그로 (Negro: 흑인종)

니그로는 아프리카 인종(니그로 · 흑색인종)으로서 아프리카 중부 이남, 미국 등에 분포한다. 피부는 구리 빛이나 흑갈색으로, 입술이 두껍고, 낮은 코, 장두, 고수머리, 검은 눈, 적은 체모를 갖고 있으며, 신장은 장신 또는 중신이다. 인구분포는 약 2억 7,000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7% 이다.

③ 코카시안(Caucasian: 백인):

코카사스지방(남부러시아) 지역에서 백인종이 유래되어 유럽 인종(인도유럽 인종 백색인종)을 형성하였다고 하여 코카시안으로 부른다. 유럽 전역 · 북아프리카 · 아라비아반도 · 아프가니스탄 · 북부 인도 · 남북아메리카 등에 분포한다. 피부는 흰색이나, 일부는 갈색이며, 넓은 이마, 높은 코, 큰 머리, 파상모(波狀毛), 청갈색이나 검은 눈, 많은 체모 등의 특징을 갖고, 신장은 장신 또는 중신이다. 인구분포는 약 20억 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7 %이다.

④ 브라운 (Brown: 북남미혼혈인종)

브라운은 아메리카 인종(아메리카 인디언)으로서 북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 북극해 연안에 분포한다. 피부는 구리 빛이나 갈색, 머리털과 눈은 아시아 인종과 비슷하다. 인구분포는 1,500만 명 정도로서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

⑤ 말레이 (Malay: 말레이종족)

말레이는 서남 아시아의 말레이레이 인종(해안도서 인종)으로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기니, 멜라네시아 등에 분포한다. 피부는 갈색이며 그 밖에는 아시아 인종과 흡사하다. 인구분포는 약 1억 4,000만으로서 전체 인구의 3 %이다.

⑥ 폴리네시아(Polynesian)

폴리네시아는 하와이 뉴기니 서사모아 괌도 등 태평양 도서 에 거주하는 인종들로서 피부는

다갈색으로 두개골이 크며 신체적 형태는 큰 편이다. 인구분포는 현재 1,500만 명 정도 분포되어있다.

한편, 세계의 민족은 인류를 언어·종교·풍속·습관 등의 문화적·사회적인 특징이나 공통성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한다. 세계의 5대 인종은 다음과 같은 여러 민족으로 나뉜다. 첫째, 아시아 인종으로서 북몽골·중몽골·남몽골·터키 등, 둘째, 유럽 인종으로서 튜턴·라틴·슬라브·함·셈·힌두 등, 셋째, 아프리카 인종으로서 수단니그로·반투니그로·피그미·부시먼·호텐토트 등, 넷째, 아메리카 인종으로서 인디언·에스키모, 다섯째, 말레이 인종으로서 말레이 니그리토 등이다.

3) 인종차별주의

인종을 나누는 어떠한 지역적, 민족적 구분도 불가능하다.

인종 사이에 유전적 우열이 있다고 하여 인종적 멸시, 박해, 차별 따위를 정당화하는 주의, 순혈주의와 인종 차별을 낳으며, 나치스의 반유대주의, 백인의 흑인 차별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다. 특히 인종적 편견 때문에 특정한 인종에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불평등을 강요하는 일도 자주 발생 한다.

(1) 정치적 인종차별주의

① 5분의 3조항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잡혀온 미국 흑인노예의 숫자는 1641년 2백50명, 1680년 7천명, 1710년 12만 명, 1776년 50만 명, 1820년 1백50만 명에 달했다. 한편, 1785년 미국 헌법은 의원수를 정하기 위해 노예 1명을 0.6(3/5)명으로 계산했는데, 이것이 바로 5분의 3조항이다.

② 아파르트헤이트정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아프리카נס어로 '분리'라는 뜻이다. 백인과 유색인종을 분리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사회 체제는 '아파르트헤이트'에 기초하고 있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0개의 흑인 국가(반투 홀랜드)를 설정해 각각 특정 종족을 귀속시켰다. 1970년 모든 흑인은 자신이 그 지역에서 산 적이 있든 없든 지정된 국가가 지정한 지역 내의 '시민'이 되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소수 백인정권은 모든 흑인의 시민권과 참정권을 박탈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소수 백인집단의 정치·경제적 지배를 유지하고 백인과 컬러드, 아시아인(주로 인도인), 아프리카 흑인을 법률적으로 엄격히 분리하는 인종차별 정책, 혹은 민족 격리 정책'의 상징이다. 인종에 따라 거주 지역을 강제로 지정한 집단 거주법(Group Area Act, 1950)과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통행법(the Pass law, 1958)은 흑인의 권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정신적 고통을 강제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산업조정법, 여권법, 이인종 혼인 금지법 등 법률에 의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백인의 특권을 유지·강화시켜 나갔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남아프리카에서의 흑인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백인은 크게 강대해졌다. 그동안 흑인이 살아왔던 드넓은 영토를 백인들이 소유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혹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내경제단지가 되었다. 아파트헤이트 정책은 빈부격차를 극대화시켰고 불안정한 사회에서 땅 없고 일자리 없는 흑인들이 속출시켰다. 국내경제단지에 흑인들을 이주시켜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다.

아파트헤이트에 저항하여 흑인의식운동(Black Consciousness Movement)이 일어나면서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범 아프리카회의는 게릴라전과 태업, 파업과 같은 물리적 수단을 채택했다. 1976년 흑인과 혼혈유색인(Coloured)지역에서 대중봉기가 일어나 다시 수백 명이 사살되기도 하는 심각한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1991년부터 정부는 ANC 및 다른 정치 집단들과 함께 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또한 주요 인종차별 법률들을 폐지함으로써 아파트헤이트가 제도적으로 무너졌다.

(2) 경제적 인종차별주의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인종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 같은 한민족이라도 중국 동포, 사할린교포, 러시아의 까레이스키 출신에 대한 차별 정책이 존재 한다. 같은 백인이라도 유럽인에 비하여 러시아인과 인도인에 대하여 차별적이며, 같은 아시아인이라 해도 동북 아시아인들은 남부아시아인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동북아시아라 해도, 일본에서는 한국인이 차별 대우를 받으며,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이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는 피부색이 아닌 경제적 수준에 의한 차별 대우이다.

인종적 소득 수준도 다르다. 미국에서 백인의 소득 중앙값 (median)은 4만 5천불인데 비해 흑인은 약 3만 불에 불과하며 (2001년 기준) 빈곤 가구의 비율은 백인 가구가 10% 내외인 반면, 흑인 가구는 22%에 이른다(2000년). 인구 구성비로 보자면 흑인이 전체 미국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사 혹은 판사/변호사 등의 직업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5%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흑인의 실업률은 백인의 두 배를 웃돈다. 의료보험 전체 백인 중 11.1%가 의료보험이 없는 데 비해 흑인은 19.4%가 보험이 없다. 의료 이용의 인종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을 종합한 보고서 (Kaiser Family Foundation 2002)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흑인이 백인에 비해 진단 검사나 심혈관 성형술 같은 고가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

소득이나 직업, 교육 수준들을 보정해도 흑/백의 건강 격차는 여전히 남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소득 혹은 교육 수준의 흑/백 산모를 비교해도 영아 사망률의 차이는 여전히 지속된다. 인종 간의 차이는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똑같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흑/백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차이가 난다.

(3) 사회적 인종 차별주의

차이와 폭력의 사이에는 특별한 과정의 개입이 있다. 인종적 문화적 공동체 사이에서 차이의 증오를 생산하고, 그 증오는 다른 공동체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이행하는 메커니즘을 갖는다. 차이와 폭력의 특별한 정치적 과정의 개입이 곧 '기억의 정치'이다. 기억의 정치는 기억의 조작과 정치적 신화창조로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집단적 기억의 망각과 왜곡, 부인, 조작의 정치를 양산한다.

① 인종주의로서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

인종주의로서 외국인 혐오증은 이방인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어로 외국인을 뜻하는 제노스(xenos)와 공포(phobos)의 합성어이다. 인종주의는 근대의 산물이다. 특히 피부색과 관련된 백인의 인종주의는 중세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의 접촉만 있었을 뿐이다. 특히 검은 색이 흑인에 대한 편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 실제 중세 시대에는 수도사들이 검정색 옷을 입었다. 검정색은 처음부터 열등하거나 악의 상징의 색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기독교인들은 탐험을 통한 식민지와 현지인의 노예화에 대한 정당성을 성경에서 찾았다. 첫째, 식민지화는 신이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 한 약속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 하라, 땅을 정복하라.'(창1:28)의 성경 구절을 지침으로 삼았다. 둘째 흑인 노예화에 대하여는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사건 이후 노아의 아들 함이 신의 저주를 받는 내용을 근거로 삼는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창9:25) 그러나 땅을 정복한다는 히브리 어원은 땅의 특징을 잘 살피어 땅의 풀과 열매를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말의 오역이다. 오히려 땅을 잘 가꾸고 돌본다는 청지기의 의미이다. 정복이란 해석은 잘못 된 것이다. 노아가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 창세기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원했고, 가나안족을 흡수하기 위한 의도로 본다. 이것이 흑인의 인종차별의 기초로 삼는 것은 잘못 된 일이다.

② 제노사이드(Genocide)와 홀로코스트(Holocaust)

제노사이드(Genocide)는 폴란드계 미국 대학교수이자 법률학자인 라파엘 Lemkin이 1943년 처음 만들어낸 용어이며, 국가나 민족이 다른 인종에게 자행한 학살행위를 뜻한다. 계획적인 인종 대량학살을 말하며 어떤 특정 종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서 살해 방식보다 수적개념에 더 비중이 있다.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이나 민족의 학살까지도 포함하는 단어이다. 인종 차별이 심각한 지역으로 발칸 반도의 국가들을 들 수 있다. '인종 청소'로 인해 생긴 난민 숫자가 보스니아에서는 인구 450만 명 가운데 250만 명, 코소보에서는 인구 200만 가운데 105만 명이나 된다.

홀로코스트(Holocaust)는 짐승을 통째로 구워 신에게 제사지내는 의식으로서 유대인이 자신들이 가스(gas)실에서 태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해서 사용한 말이다. 홀로코스트는 나치스 독일의 유대인 학살만을 이르는 단어이다. 홀로코스트는 원래 가장 많이 쓰이던 용어였지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유대인학살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사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한편 쇼아(히브리어 Shoa, שואה)는 구약성서의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를 가리키는데 프랑스에서 주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 재앙 중 가장 큰 재앙'을 뜻한다. 유대인 학살이 갖는 독특한 성격, 다시 말해 '재현 불가능성'을 이 단어가 가장 잘 특징짓고 있다는 점에서 홀로코스트 보다 더 빈번히 통용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유인은 600만 명을 학살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운영한다.

③ 게토(ghetto)

모든 유대인에게 노란 색의 다윗별을 달게 하고 일정한 게토 지역만 거주하도록 하였다. 게토는 이탈리아어로서 그 어원은 절연장(絶緣狀: 인연을 끊는 내용을 적은 편지)을 뜻하는 히브리어 'get'에서 유래하였다. 1179년 제3회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그리스도 교도와 유대 교도와의 교류를 금지한 것이 그 시초이다. 사전적 의미는 '유대인 강제 거주 구역' 또는 '미국의 흑인 거주 빈민굴' 등을 의미한다.

12세기 후반 기독교지역인 독일에서 유대교 강제 격리가 확산 되었다. 특히 14세기 유럽에서 페스트가 확산 되자 유대교 거주지역이 기독교 거주지역과 더욱 분리되게 되었다. 1516년 3월29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의회에서는 논란 끝에 특이한 법률 하나가 통과됐다. 명칭은 '유대인 거주 제한에 관한 법' 세계 최초의 게토(Ghetto)가 생긴 것이다. 유대인을 분리 수용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압박과 보호라는 상반된 목적에서 이다. 인구가 급증하는 유대인을 감시하는 한편 기독교인에게는 금지된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리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유대인들은 이 정책에 불만이었지만 추방보다는 격리를 택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의 유대인 공동체의 자치를 허용하였지만 시민권은 허락하지 않았다.

장소는 이탈리아어로 '게토(ghetto)'라고 불리던 주물공장 및 쓰레기 처리장 터로서 운하로 둘러싸여 외부 접촉이 차단된 장소였다. 아침에 열리고 자정에 닫히는 두 곳의 도개교를 급전이 필요한 기독교도가 넘나들었다. 대금업으로 번성한 게토는 베네치아가 허용한 최대 인원 3,000명 선을 바로 넘어섰다. 유대인들의 출산율이 높은데다 1492년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게토는 곧 유럽 각지로 퍼졌다.

유대인들이 게토에서 벗어난 것은 19세기. 프랑스혁명의 영향으로 박애주의가 퍼지고 유대인의 경제력이 높아진 덕분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유대인을 기다린 히틀러의 인종 청소에 수백 만 명이 희생됐다.

미국에서는 뉴욕 등 대도시 중앙부 흑인 밀집 거주 지역을 지칭하며, 빈곤·실업, 열악한 주택 등 불균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슬럼가(街)와 유사하게 사용한다. 유대인 게토와는 달리 법률에 의해 강제로 격리된 것은 아니며, 남부 농촌에서 이주해서 도시화한 흑인노동자 계급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살고 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 강 서안에 대규모 장벽을 설치하였다.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의 이스라엘 거주를 금지하는 극단적인 법안도 통과 시켰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 검문검색이 매우 엄격하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난 2천년 동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서 거주하며 살고 있었다.

(4) 과학적 인종차별주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종의 서열화를 정당화 하였다. 다윈의 진화화론이 인종의 분류와 서열화를 부추겼다. 인종적 다윈주의는 경쟁력 없는 인종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으며, 도태되게 된다는 논리를 제공하였으며 인종차별을 정당화 하였다. 다윈은 흑인을 백인과 고릴라의 중간쯤으로 보았고, 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바람직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며 반

대했다.

① 두개골 용적률

18~19세기 인종차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모턴(Samuel George Morton)과 브로카(Paul Broca)는 각 인종의 두개골을 측정하여 잉L 종간의 서열화를 입증하려 하였다. 코골과 입술 사이의 간격, 이마의 각도, 두개골 길이와 폭의 비율 등으로 특징을 구별 하였다. 일부 학자는 두개골의 용적률을 조사하면서 해골의 내부에 납 탄환을 채워 그 부피를 측정하기도 하였다. 실험 결과 코카시안(Caucasian) 용적이 크게 나오자 백인이 니그로(Negro) 흑인보다 더 똑똑하고 우월하다고 증명 하였다. 같은 실험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하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특징에 의한 인종차별의 과학적 증명의 시도는 몽골리언(Mongolian)인의 용적률을 측면하면서부터 사라졌다. 몽골리언 황인종의 두개골 용적률이 코카시안 백인보다 더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② 의학적 다른 치료제

흑인을 위한 맞춤 약제가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참가한 흑인들이 생물학적으로 단일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동안의 다른 임상시험 결과들을 살펴보면 약물 반응에서 흑인과 백인이 보이는 차이만큼이나 흑인과 흑인 사이의 개인 차이가 크다는 점이 밝혀져 있다. 더구나 이 약제가 흑인에게만 있는 어떤 특이한 수용체와 결합하거나 생화학적 작용을 갖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흑인을 위한 "맞춤" 약제라는 표현은 사실 어불성설인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32년대 매독에 걸린 흑인들을 대상으로 잔인하고 인종차별적인 생체 실험을 실시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65년만인 지난해 살아남은 피해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대통령이 직접 사죄하였다. 이처럼 미국 흑인들이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은 그들이 흑인이라는 이유 외에는 없었다.

③ 사회적 문제 집단

인문 사회적 통계 자료를 통하여 유색인종을 열등한 존재로 몰아간다. 미국의 현재 18-24세 흑인 남성의 25%는 대학생이고 10.5%는 감옥에 있다. 흑인이 미국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주 교도소 수감자의 46%가 흑인이다. 흑인 남성의 17%는 평생 한 번 이상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 흑인이 그만큼 범죄를 많이 저질렀으니까? 하지만, 1999년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체 마약 사용자의 13%가 흑인인데 비해 마약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의 37%,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의 55%가 흑인이고, 실제 징역을 선고 받는 경우의 74%가 흑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의 불공정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범법자들에 대해 투표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결과 현재 흑인 남성의 13%가 투표권이 없으며 플로리다 같은 주에서는 세 명당 한 명꼴로 투표권이 없다. 1990년도 일반사회조사에 따르면, 백인 응답자의 56%가 "흑인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 한다"는 문장에 그렇다고 답했고, 44%가 "흑인들은 게으르다"에 동의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흑인들이 본래부터 이러한 존재가 아니다.

4. 국가 통치와 소수자 권리

1) 국가의 통치

(1) 주권(sovereignty)

주권은 주권의 대상인 타인 및 자기에 대한 완전한 권리, 절대적 권리, 배타적 권리, 시원적 영원한 권리이다. 완전한 권리는 모든 가능한 행위 가운데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심지어 모든 가능한 생각 가운데 특정 생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요구에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절대적 권리이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요구를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배타적 권리이다. 주권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소멸하지 않는 한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주권은 주인이 있는 노예 혹은 물건의 운명처럼 용도가 다하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2) 권력이란?

권력을 가리켜 타인의 행위를 포함하여 자기 아닌 것을 통제하는 능력이라 한다. 권력의 기본 속성상 자기 즉 이주민에 대한 대부분이 '통제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통제의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비자발적으로 수용에 의한 통제 방식이다. 타인에게 폭력행사 혹은 그 행사 가능성을 고지하여 상대로 하여금 공포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발적 동의에 의한 통제 방식이다. 권력자 스스로의 카리스마에 의하여 통제가 이루어지거나 타인에 대한 설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영향력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한다.

국내 소수자의 통제 방식도 두 가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첫째, 비자발적 통제 수용방식

둘째, 자발적 통제 수용 방식

(3)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절차적 정의란 법관이 공정, 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이나 법적절차에 두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적법절차원칙이란 국가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4.5.14. 선고 2004헌나1)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것은 경찰이나 출입국 공무원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는 것 등 기본적인 미란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자주 사례가 발생한다.

2) 소수자 권리

(1) 권리

권리는 사람사이에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수 있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격(entitlement)을 의미한다. 이주민의 권리는 권력의 통제와 맞물려 매우 제한적이 되기 쉽다. 때로는 권리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이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똑 같은 것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는 정치적 신조이다. 여기서 '똑 같다'라는 것은 생김새, 성격, 지적 능력이 똑 같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worth)'에서 똑 같다는 의미이다. 각각의 사람들이 가치가 같다는 것으로서 서로 대우해야 하며 이를 '평등주의(equalitarianism)'라고 한다. 또 같은 '가치'의 것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약자 및 소수자에게 이익을 주어 강하게 하거나 강자 및 다수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약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주는 이익과 불이익의 정도,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시기는 '평등'의 관점에서 논의된다.

(2) UN이 정한 소수자 권리

국제법상으로 소수자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세계인권선언 제27조이다. 이 조항에서는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은 1992년 세계인권선언 27조에 따라 '민족적 혹은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에게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의 제1조에는 국가들은 각 영토 내에서 소수자의 존재와 민족적 혹은 종족적, 종교적, 언어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하며, 그 정체성의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화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며, 문화적 소수자 집단으로서의 삶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 한다. 그러나 문화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를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유의점

① 인권은 다른 권리들과 구분되는 특별 권리이다. 인권은 법적 권리나 시민권을 넘어서나, 인권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만이 아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인간에게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정치권력의 남용을 저항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이자 윤리이다.

②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다른 권리들이 침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권은 다른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침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서는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인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

③ 인권이 중요한 개념이긴 하지만 다른 인권이나, 다른 사람의 같은 인권, 혹은 다른 가치와 충돌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가치관들이 혼재하고 있어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충돌하기도 한다. 인권의 개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세계인권선언은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각국의 인권문제는 항상 국제적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⑤ 인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당대우나 차별 그 이상의 것이다. 인권에는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4) 소수자 권리와 다문화 주의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종식된 지금의 상황에서 소수자 문제와 대규모 인권침해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치와 문화,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다문화 주의'가 자유민주

주의의 이론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월 킴리카(Will Kymlicka)는 자유주의 문화 이론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다문화사회에서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특정 문화를 증진 시키고 다른 문화에 불이익을 준다고 본다. 예를 들면 다언어 사회에서 모든 언어가 공식 언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자에게는 형평성의 문제와 개인의 선택권의 제한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았다. 킴리카는 집단권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문화를 보호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선택에 바탕이 되는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권의 원칙은 다수결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소수자들은 다수결에 의하여 한상 부당한 상황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킴리카의 주장에 대하여 '자유주의적 소수자만을 옹호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는 인권기준의 초소한의 기준 설정이다.

제임스 툴리(James Tully)는 문화적 다양성은 인간의 조건을 이루는 기본적인 특징이며, 문화는 인간 상호작용의 본래적인 특징 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문화를 인정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단일한 정치제도나 사법제도에 똑같은 방식으로 복종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 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문화적 소수자들은 지배 집단의 담론 내에서만 발언 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문화 차이를 억압하고 지배문화를 주입 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브라이언 바리(Braian Barry)는 문화적 차이를 제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제도화로 인해 오히려 사회의 소수자들이 지배집단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본다. 제도화가 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제도화가 됨으로서 특정 문화에 의해 부당한 지배를 정당화하고, 지배적 상황을 은폐한다고 보았다. 바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대신 문화에 상관없이 시민으로서 인정해야할 의무를 주장하였다.

도넬리(Donnelly)는 문화적 소수자 권리 보호의 최선은 인권의 존중이라 했다. 도넬리는 소수자에게 집단권은 있지만 집단적 인권은 없다고 주장한다. 집단권은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데 필요하지만, 집단권과 인권이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인권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루나 문화적 집단을 보존하는 일은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5. 편견과 차별 극복 방안

“우리의 시대는 BB(Before Obama: 오바마 이전)와 AB(After Obama: 오바마 이후) 시대로 구분될 것이다.” 미국의 흑인 영화감독 스파이크 리가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흑인으로선 사상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밝힌 소감이다. 흑인 대통령의 탄생은 뿌리 깊은 인종갈등으로 점철된 미국 역사를 볼 때 가장 획기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독일 의회의 경우 전체 612석 가운데 소수인종은 10명뿐이다. 독일 국민 5명 중 1명은 소수인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비율이다. 영국의 경우 소수인종은 전체 인구의 8%에 달하지만, 의회 646석 가운데 15석(2.3%)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자유·평등·박애를 자랑하는 프랑스에서도 흑인 대통령의 출현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지난 2002년 대선에 출마한 흑인 여성후보 크리스티안 토비라가 얻은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토비라는 “오버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세계적 경사지만, 프랑스가 소수인종을 대통령으로 뽑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지도 보여줬다”고 소수인종의 정치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프랑스 하원의원 577명 중 흑인은 단 1명이다.

오는 2010년 차기 하원선거에서 소수인종 출신 의원 수는 현재 15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소수인종 후보자 비율도 노동당의 경우 현재 10%에서 15%로, 보수당은 4%에서 9%로 각각 상승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프랑스에서도 소수인종의 사회적 진출을 지원하는 운동이 본격 시작됐다. 이른바 ‘위, 누 푸몽(Oui, nous pouvons)’운동이다. 이 말은 오바마의 선거 슬로건이었던 ‘그래, 우린 할 수 있어(Yes, we can)’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다. 유럽 각국에 살고 있는 소수인종들도 제2의 오바마가 되기 위해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수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차별 받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특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다수자의 사회는 소수자에게 ‘특정한 자원으로의 접근’을 차단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가 된다. 다문화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 극복 방안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1) 다문화적 인권 의식개혁

다문화 교육을 위한 각계의 연구와 노력이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다. 다문화 의식개혁을 위한 교수, 학습의 목표로서 다섯 가지 범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체성’으로서 문화적 맥락에서 활동하는 문화적 존재로서 자신과 타인 이해하기
- ② ‘다양성’으로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 사회 이해, 다문화적 사회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제공, 국가와 세계의 다양성 인식,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상대성과 다양성
- ③ ‘평등과 정의’로서 인권, 평화, 화합, 평등, 정의의 필요성 인식, 다양한 맥락 속에서 불평등을 인식하는 방법, 차별, 왜곡, 편견, 고정관념 이해하기
- ④ ‘시민성’으로서 민주주의 원리 터득, 집단 의식이 가치, 태도, 행동 결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 이해하기
- ⑤ ‘문화 창조성’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 할 수 있는 창의력, 미래사회를 위한 새 문화 창조, 희망적인 미래 창조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내용 중에서 소수자의 다문화적 주체형성, 다문화 권리로서 다양성, 글로벌 시민권 등의 내용을 기존 제시한 범주에 포괄 할 수 있겠으나 일단 범주 설정은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 국민들을 향한 다수자를 향한 다문화적 인권의 의식 개혁이 일어나야 건강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형성 될 수 있어야 한다.

2)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력 향상

(1) 모욕(insult)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격을 깎는 표현(말, 행위)을 하면 그 표현을 ‘모욕’이라한다. 사람이 개보다 격이 높은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개 같은 놈,” “개만도 못한 놈” 등은 모욕죄에 해당 된다.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하거나, 해야 되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낀다.

(2) 명예훼손(defamation)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을 말하거나, 문자, 영상 등으로 표현하여 표현의 대상이 가진 평판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격을 깎는 표현으로서 모욕과는 달리 명예훼손은 ‘사실(fact)’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은 대상에 대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모두 해당된다. 사실이 없는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이 된다. 의견은 진위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다. 의견이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 판명 되더라도 의견으로 판명 난 것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특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폭행(violence)

폭행은 형법상의 죄명(형법 제260조)입니다. 폭력과 폭행은 차이는 없고 문맥에 따라 단어의 사용이 다를 뿐입니다. 폭행은 신체적인 공격행위 등, 불법한 방법으로 행사되는 물리적 강제력이다. 특히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성폭력과 성폭행도 같은 맥락이다. 형법상으로는 강간죄와 강제 추행 죄라한다. 강간죄는 부녀(여자)를 남자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를 의미하고, 강제 추행 죄는 남자여자를 불문하고(동성 간 혹은 이성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자를 남자가 추행한 경우에 통상 '성 추행죄'라고 하나 정확한 명칭은 '강제 추행죄'이다. 처벌의 경중의 경중에 있어서는, 성희롱, 강제추행(성추행), 강간(성폭행)이 있다. 성폭력은 성기 삽입까지를 의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성폭력'에는 '스토킹'까지도 포함된다.

3)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한 주체형성

파울로 프레이리는 문제의 당사자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 저항(resist)의 일반적 의미는 유형물들 사이에 일방적인 힘의 작용에 대하여 그 힘의 영향을 받는 상대방의 반작용을 말하고 그 반작용의 내용은 주로 힘이다. 여기의 저항은 폭력에 반발하는 반대 폭력이다. 저항권은 행복추구(pursuit of happiness)의 권리 차원에서 작동 된다. 편견과 차별을 경험 한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4) 시민사회 단체의 현장 사례 발굴을 통한 사회 의제와 법, 제도 형성

사례 1) 국내 미국인과의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차별과 불평등의 환경에서 자라야만 했다. 국제가족 총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며, 18세 이상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 낮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60% 이상이 실업의 상태이거나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 형태도 차별대우를 받아왔는데, 주로 연예인, 클럽 웨이터 등과 같은 유흥 서비스업 등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임에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이들의 법인 모임의 결성도 정부가 허락하지 않았다.

사례 2) 국내에서 이주민에 대한 간접차별이 될 만한 논쟁으로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의 내국인 우선의 원칙, 보완의 원칙(제한된 사업장), 순환 근무제, 사업장 이동 회수의 제한이 있다.

사례 3) 국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 하지만 가해자인 한국인은 훈방 조치하고 피해자인 미등록 이주민은 추방해 버린다. 폭행 사건과 미등록 체류와 상관없음에도 이것을 연계시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도록 사건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사례 4)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결국 임금체불은 해결되기는

하지만, 결국 단속되어 추방되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 기업주는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5) 결혼이민자들이 체류연장을 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동의서가 필요하다. 부부관계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하여 상대의 체류에 위협을 가하거나 추방시켜 버린다.

사례6) 결혼 이민자가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이수제가 적용된다. 통상적으로 국제결혼은 양국에 혼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 배우자는 상대국의 문화나 언어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사례7) 외국인 범죄를 부각시킴으로 이미지 실추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구구성상 내국인 보다 범죄율이 낮다. 특히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을 슬럼가, 범죄의 온상으로 등의 이미지로 몰아가기도 한다.

5) 정부와 학계의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 대안 연구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은 교육, 고용의 영역에서 남자와 백인 등 전통적 지배 집단인 다수자의 희생 하에 있었던 비 지배집단이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인간의 가치 평등을 실현하려는 목표에서 이 정책이 출발 하였다. 물론 이 정책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대정책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이해된다. 한국적 상황에서 소수자 우대정책은 편견과 차별 문화 극복을 위한 다문화 사회 형성에 중요한 정책 의제가 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소수자 우대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이중 언어'가능자에 대한 우대 정책은 다문화 가정의 이중 언어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한 방울의 법칙 (one drop rule)]

미국 사회에는 "한 방울의 법칙 (one drop rule)"이라는, 아프리카인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노예법령을 가지고 있었다. 1983년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수지 길로이 피프스'라는 백인 여인에게 32분의 1이라는 흑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그녀를 흑인으로 판결한 적이 있다. '수지 길로이 피프스'라는 백인 여성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신청했는데, 신청서에 기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절되었다. 여권 신청 기재 항목 중에 자신의 인종 표시에 피프스 씨는 흑인인데도 백인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발급을 거절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자기는 물론 부모, 모든 친척들이 모두 다 백인인 이 여성은 자신이 백인이므로 출생기록소의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생 기록소는 자신들의 기록이 정확하다면서 정정을 거부했다. 루이지애나 법은 누구나 최소 32분의 1 이상의 흑인 피가 섞여 있는 사람은 흑인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으며, 피프스 씨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오바마가 흑인인가 백인인가? 흑백 혼혈인 오바마 대통령을 흑인으로 부르는 이유는 흑인 피가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인정하는 한 방울 법칙(one drop rule)의 관행 때문이다.

[25차시]

1. 시민권에 대한 문제 제기

1) 논의에 앞서

이주민 시민권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계기가 있었다. 처음 생각한 것은 1999년의 주민으로서의 이주민 문제였다. 외국인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노동자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주민 가운데 하나가 된다. 공장에서는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주민들로부터도 배척받는 모습을 보아왔다. 이때 생각한 것이 “법과 제도가 바뀌어 이주민이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하여도 주민으로부터 배척당한다면 노동자로서의 인정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지금 당장 법과 제도가 바뀌지 못하였어도 지역 주민이 이주민을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두 번째 계기는 2001년 7월 일본 동경에서 이요타니 토시요 교수와의 만남이었다. 이요타니 교수와 일본 대학생들이 안산이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는 돌아가는 길에 이요타니 교수가 자신의 저서인 ‘세계화 시대의 이주’라는 책을 선물하고 돌아갔다. 이 책의 맨 뒷면에는 같은 출판사 책들이 소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책이 ‘외국인 시민의 정치참여’였다. 이 책은 나로 하여금 몇 년 전에 읽었던 브라이언 S. 터너가 쓴 ‘시민권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통하여 ‘시민권’에 대한 고민을 하였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주민과 시민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 논의된바 없는 ‘이주민 시민권’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 2001년 안산이주민센터 7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주제를 ‘이주민과 시민권’으로 정하고 막상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우선은 관련 단체 내에서 조차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 해 줄만한 전공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심포지엄의 주제에 대하여 광고가 된 상태에서 참으로 난감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며 준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주민의 시민권’의 주제가 공론화 되지 못한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 생각보다 자료도 부족하였다. 이주민의 시민권 문제에 대하여 처음 문제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는 사고의 한계와 충분하지 못한 시간이 준비 과정 자체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와 시민권 문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검토 과정이 취약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이주민의 권익을 ‘시민권’이라는 부분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면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이주민 활동가들에게 ‘이주민과 시민권’의 문제가 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원고는 지난 2001년 초고를 지금의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2) 문제의 제기

아직 충분히 논의된 바 없는 ‘이주민 시민권’의 영역을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민권의 문제와 비슷한 취지에서 ‘세계화와 인권: 화교의 법적 지위 향상’이라는 주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성화교협회가 공동 주최한 일은 있다. 그러나 이 모임에서도 단지 영주권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었고 구체적으로 시민권에 대하여는 다루지 못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주민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영주권 제도조차 소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너무 앞서 나감으로 해서 내국인의 감정적 반발을 일으킬 소지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가 싶기도 하다. 시민권의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다음의 문제제기를 해 본다.

- (1) 이주민과 시민권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왜 필요한 논의인가?
- (2) 기존의 시민권의 논의와 이주민 시민권의 논의는 다른 이야기인가 ?
- (3) 시민권의 확장의 내용은 무엇이여야 하는가?
- (4)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 (5) 한국사회는 이주민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개방해야 할 것인가?
- (6) 시민권 획득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3) 이주민 시민권 논의의 의의

이번 논의의 의의는 첫 번째로, 시민권에 대한 기존 논의에 이의를 제기한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 확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를 국제적으로 전개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 각 나라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와 현실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시민권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사례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보는 실천적 출발이 되었으면 한다. 국경이 없는 사회(borderless society)에서는 국경이 없는 사회에 걸 맞는 지구촌 시민권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권의 논의는 반 세계화에 연대하는 논의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소수자에 대한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여론의 환기에 있다. 자유로운 이동이 전제되는 '자유 시장 경제체제'에서 상품, 자본, 서비스영역에 반하여 철저히 통제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신분 불안정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의 유연화를 추동 하는 세계화가 노동권의 박탈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타국에서 이미 시민권까지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번 논의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다운 이웃이며 주민이고, 시민으로서 보는 눈을 제공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한국정부가 국제적으로 한국사회의 경계의 확대를 꾀하면서도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 이주민에 대하여는 철저한 통제와 차별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한국사회 영역의 국제적 확대라는 취지에서 해외동포지위의 강화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이주민들에 대하여는 법적으로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노동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주민의 시민권 보장 활동을 통하여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2. 이주민 시민권 문제에 대한 기본 이해

1) 시민권, 영주권, 국적

(1) 시민권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의 시민권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개념'이다. 즉 시민권은 국적,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시민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및 관행이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시민권의 개념은 형식적인 의미에서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정적인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변해왔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의 시민권과 로마제국 시대의 시민권은 배제와 통합의 이분법적 시민권 개념으로 근대와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시민권은 산업사회에서의 개인, 가족, 사회집단 등에게 집합적 급여를 제공하는 민주주의적인

산업의 구성원 자격을 규정하는 권리의 집합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의 시민권의 개념은 집단이나 계층에 주어지는 집합적 개념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개인과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영주권의 개념(Indefinite Residence Permit)

영주권(Indefinite Residence Permit)이란 입국목적(취업, 유학, 거주, 결혼, 동반 등)에 관계없이 입국 후 일정기간, 조건이 충족된 경우, 국내 체류(기간, 목적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서 통상 정착(Settlement)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영주권은 체류뿐만 아니라 출입국에 제약을 받지 않고 추방,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는 않는 거주권(Right of Abode)과는 구별된다. 대부분 영주권이 운영되는 나라에서 영주권을 소지한 자라도 범죄행위와 강제출국 또는 추방이 결정되면 영주권이 상실된다.

(3) 국적과 시민권의 차이

시민권은 국적이나 주민등록증의 소유 개념 그 이상이다. 시민권은 종종 국적과 밀접히 관련되며 국민적 시민권은 단지 국민국가의 성원권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접근방식 중의 한 실례가 시민권을 '공식적인 신분증명서'로 정의하는 것이다. 즉 시민권은 한 국가의 법적 성원권을 의미한다. 우리가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라는 세 차원에서 시민권을 논의하는 마샬의 접근방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정치적 전통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마샬은 시민권의 시민적 요소는 신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어떤 구체적 제도들을 요구한다고 인식했다. 그는 시민권의 정치적 요소에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시켰고, 정치적 시민권은 의회나 지방정부와 같은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제도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주민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히 주민등록증의 소유 개념이 아니라 시민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 권리의 획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무국적 시민이란 개념도 포괄된다.

2) 근대 시민권 의미변천의 역사적 과정

시민사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산업화는 노동의 이동을 촉발하였고 노동의 이동의 결과는 도시화로 이어지면서 시민권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시민권은 봉건시대의 귀족사회와 대별되며, 구조적으로는 귀족사회의 화신이었던 국가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봉건적 관계는 점차 변화되어, 권력은 시민, 즉 평민들에 의해 장악되고 국가는 이들의 의지에 따라 구성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민이란 어떤 공동체 사회 내에서 신분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곧 시민권이다.

서구사회에서의 시민권은 세 가지 기본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시민(citizen)은 단순히 한 도시의 거주자(inhabitant), 둘째 시민은 단순히 거주자(inhabitant) 혹은 점유자 (occupant)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은 거주민(denizen)과 어느 정도 동일시된다. 세 번째로 시민은 국가의 성원이다. 시민권은 이러한 세속화과정과 함께 교환의 자유, 신앙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의존한다.

(1) 17-18세기 시민권

개방적·보편적 의미에서의 시민권 개념이 사용된 것은 17~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류의 보편적 원리로써 인권사상이 확립된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시민권은 인권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자연권에 대립하는 시민적 권리, 즉 실정법이 정하는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1776년 버지니아주(州)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후 시민권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사적 자유는 물론, 국가에 대한 청구권·참정권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공민권과 동의어가 되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아직도 시민권이 각 주법(州法)이 백인에게는 보장하고 있지만 흑인에게는 보장하고 있지 않은 여러 권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 19세기 시민권

시민권은 19세기 근대정치의 산물로서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의 사회, 정치적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시민권은 봉건제와 노예제 쇠퇴의 산물로서, 직접적으로 근대 산업주의의 출현과 관련된다. 따라서 근대의 시민권은 전통사회에서 뿌리 내려졌던 모든 것들의 변화를 전제로 삼는다. 다시 말해서 도시화, 세속화, 문화의 근대화와 같은 근대성(modernity)의 성분과 근대화(modernization) 과정의 결과인 것이다. 민족주의적 사고와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시민권의 지정학적 단위는 민족국가가 되었고,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한 국가의 회원이어야 했다. 동시에 시민권은 역사적으로 이전보다 확장된 시민적, 정치적, 사회 평등적 개념을 지니게 되었다.

이때의 시민권은 첫째, 투표할 권리, 선출될 권리,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 국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둘째, 정치 영역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능력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정한 사회집단을 의미한다. 셋째, ‘좋은 시민’이라고 불리기 위한 자기희생, 충성과 같은 도덕적 자질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3) 20세기 시민권

20세기에 들어와 마샬(T. H. Marshall)은 시민권의 내용을 시민적(civil), 정치적(political), 사회적인(social) 3가지 범주에서 규정하였다. 마샬(T. H. Marshall)은 시민적 권리와 관련하여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을 18세기의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19세기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20세기의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이라는 각 권리의 발달로 특징지워 설명하였다. 18세기의 시민권은 소수의 귀족지배계층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시민적 권리는 평등보다는 기회의 균등에 중심 가치를 두었다. 19세기의 시민의 권리로서의 정치권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다. 정치권의 발달로 인한 민주주의는 1인 1표를 행사하는 수적 평등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정치, 경제구조상 시민권의 산술적 평등은 보장되나 분배의 불평등의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의 구체적 형태가 계층 간의 합의로 구체화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사회권이 발달을 강조하였다. 마샬의 주장에 의하면 시민권의 핵심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들을 창출하여 완전한 참여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지위를 보장받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권에 관한 마샬(Marshall)의 정의는 이후 시민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시민적 권리는 법 앞에서의 평등,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정치적 권리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참여의 형식적인 권리인 투표할 권리, 선출될 권리 등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적 권리들은 시민의 복지와 관련되며, 국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복지의 최소한을 보장해야 한다.

3. 이주민 시민권 논의의 재구성

1) 새로운 시민권 논의의 필요성

(1) 시장경제에서 이주노동과 함께 출발한 시민권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의 이동 과정에는 노동의 이동이 수반되었고, 이러한 노동의 이동은 시민권을 출현하게 만들었다. 즉 '시장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을 강제로 통제하는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모든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필요에 의한 노동의 이동은 전 통사회적 지배를 해체하게 되었다. 봉건제 사회에서의 시장경제의 출현은 귀족을 대신하여 신흥 주체인 시민권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민권의 형성은 도시화 과정을 형성하면서 노동의 이동과 함께 출발한 것이다. 새로운 시민권의 논의는 국제화된 노동의 이동을 동반을 통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가 요청된다.

(2) 냉혹한 노동의 강제와 뿌리 없는 이주 노동자

"자신의 노동을 팔 자유가 있는" 개방된 시장에서 노동자는 시장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돈이 없는 노동자는 배고픔과 일자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돈을 가진 자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주의 경제관계의 '냉혹한 강제'(dull compulsion)이다. 마찬가지로 자본가도 격심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관계의 논리는 노동자들이 일하도록 강요하고, 자본가의 신념, 동기, 의도에 관계없이 이윤을 증가시키도록 강요한다. 세계화로 인한 국제 사회는 이러한 냉혹한 강제(dull compulsion work)노동의 증가와 국경없는 이주노동을 추동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타국에서 시민권의 뿌리가 없는 노동을 하는 자로 전락하고 있다.

(3) 박탈당하는 이주민의 시민권

이주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이들의 지위가 박탈당한다. 시민권은 개인과 정치공동체 사이의 상호관계로 정의되는데, 정치공동체에서 시민 개인의 완전한 회원자격의 지위를 의미하지만 이미 시민(citizens)의 개념을 신하(subject)의 개념과는 다르다. 신하는 정치공동체에 종속되어 통제되지만, 시민은 정치공동체의 회원으로서 공동체에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고, 또한 공동체도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과 공동체는 계약을 기반으로 한 상호 대등한 종속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타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서 통제의 대상이 된다. 통제되는 신분은 곧 노예이거나 신하의 신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주민들은 신분의 불안정으로 정치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강제되는 시민권의 박탈이다. 이들 이주민은 본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시민권을 타국에서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본국을 떠나 있지만 자기가 소속된 지역에서의 한 시

민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요청된다.

(4) 사회의 발전과 기존 제도와의 충돌

시민권은 사회의 경계와 함께 확대되기 때문에 사회의 성격이 제한적일수록 시민권의 성격 또한 그만큼 제한적이다. 한국사회가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로 팽창되어 나아감에 따라 내부 경계를 제한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가 지난 2001년 11월 22일에 '해외 동포에 대한 참정권의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9년 1월에 결국 국회의 통과로 재외 동포들도 참정권을 행사 하게 된다. 이는 한국사회권 영역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한국사회의 경계는 확대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팽창을 꺾으면서도 국내 법과제도상의 사회경계의 축소 내지는 현상 유지는 불균형과 모순적 충돌을 점차 야기 시키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2007년 2월 정부 행정자치부에서는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이 없는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안을 발표 하였고,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 있다.

(5) 국경없는 세계화 시대의 소수자 인권 보호

소수자는 민주주의의 체제에서도 권리가 박탈된 상태로 방치 될 수 있다. 소수자에게 언론의 자유와 투표의 권리가 주어져 있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수입, 주택, 교육 등의 문제에 관한 투표에서 다수자들에 의해 압도당하거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자들에 의해 착취당할 수 있다. 사회에서 다수를 형성하는 사람들과 정부당국자, 법원은 소수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에 공모 할 수 있다. 다수결 원칙이란 잘못된 다수자의 전체정치를 올바른 소수에게 강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수자로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 될 수 있는 정치적 구조와 사회적 제도 장치의 보완이 시민권적 차원에서 제기 되어져야 한다.

2) 이주민 시민권 재구성의 필요성

(1) 변화되는 시민권의 범주와 역할

세계화에 따른 국제적인 이주의 증대는 사회적 울타리로서의 시민권에 일대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세계화가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국민-국가의 전통적 경계를 뒤흔들고 있다. 따라서 전에는 국내 문제로 간주됐던 시민권이 국제적 이민, 유럽 공동체와 같은 초국적 조직들의 발전, 대규모 난민들의 이동, 국제 인권 규범의 제정 등에 의해 시민권을 국제적 문제로 발전하였고 이중 국적자의 양산과 같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시민권은 시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충돌을 줄이면서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만드는 핵심적 제도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이런 발전은 모순을 안고 있는데, 시민권은 한편으로는 다원주의와 경쟁, 자본주의를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결과 심화되는 불평등을 '평등한 시민'이라는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려는 노력은 특히 '사회권(Social Rights)'의 확대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채택이라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시민권의 발전에 대해 때때로 평등권 침해라는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런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과 모순은 시민권 제도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축적해온 경험이 제도화된 것을 보여

준다.

(2) 지구시민 사회와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사회의 변동과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형성한 문화의 결과이다. 사회적 배제는 미국에서의 하층계급(Underclass)과 유럽사회의 '신 빈곤층'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왔던 개념이다. 사회학적으로 사회적 배제는 '착취(Exploitation)'라는 개념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 이론에서 중심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산업예비군'으로서 빈민이다. 즉, 산업화의 진전과 생산 및 자본투자 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는 후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의 분업을 가져왔고, 산업예비군이라 불리는 장기 실업자 군을 양산하게 되었다. 사회학자 파킨(Parkin)은 "사회에서 배제된 외집단과 포용된 내 집단이 존재하며, 서구사회는 이들 내 집단과 외집단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시민권을 실체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워커(A. Walker)와 워커(C. Walker)는 사회적 배제를 단순한 '빈곤'과 구분을 시도하였다. 빈곤이 소득, 사회에의 참여 등에 있어서 물질적 자원의 결여를 다루는 개념이라면, 사회적 배제는 한 사회 내 개인들의 통합을 결정짓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또는 문화적 체계로부터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한 개인이 폐쇄당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지칭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배제의 극복은 마살에 의해 형성된 전통에 따라 시민권에 기초한 통합과 사회민주주의 전략의 실천이다. 마다니프와 동료연구자들은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인 과정(Multi-Dimensional Process)'으로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제가 포함되는데, 특히 의사결정 및 정치적 과정에의 참여, 일자리와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문화적 과정으로서의 통합 등이 중시된다. 이들이 조합되면, 특정한 공간, 특히 이웃에게서 심각한 유형의 배제를 창출한다.

이주민들에 의한 도시 공간의 분화에 대하여 시카고학파의 사회생태학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노동계급에서 이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사회적 양극화(Polarization) 혹은 게토화(Ghettoization)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주목하여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공간의 분화 현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관찰하였다. 마다니프와 그의 동료들은 공간분화는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재구조화의 결과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도시공간에서 민족성과 종교는 공간의 사회적 구조를 분화시키는 기초를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와 유대 관계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방정부와 복지국가의 특정한 부문이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사회적 배제는 공간의 분화와 주변화 과정에서 관찰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간의 분화는 사회적 배제를 더욱 더 심화시킨다. 둘째, 사회정책은 지역 내의 교육제도와 같은 공공재화의 분배의 측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배제는 곧 사회질서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고, 사회정책은 질서의 유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3) 시민권과 인권

인권과 기본권은 종종 방어권(Amwehrrechte), 협동권(Mitwirkungsrechte), 청구권(Anspruchsrechte)으로 분류되고 여기에는 기본 이념이 존재한다. 방어권은 개인의 자유로

은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협동권은 시민에게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 청구권은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여서 그 보장은 국가와 사회에 의한 주도권으로부터 기대된다. 이러한 인권의 기본 형태를 이념형식으로 보면 인권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는 자유(Freiheit), 평등(Gleichheit) 및 참여(Teilhabe)라는 말로 요약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18세기의 인권목록이라 소유권 혹은 인신 보호권의 주요부분(개인의 불가침성, 자의적 체포, 고문으로부터의 보호,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은 자유에 관계된다. 인종, 피부의 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는 평등의 요소를 기초로 하고 있다. 공적인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청구권은 참여의 요소로부터 발생한다.

개개인의 인권과 시민권은 비록 세 가지의 본질적 요소 즉 자유, 평등, 참여 혹은 시민적 원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중 어느 것에 특히 가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세 가지 요소 모두에 비추어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하나라도 결여한 인권 또는 기본권의 이해는 결함을 갖게 되어 그 보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민의 시민권은 자유, 평등, 참여로 요약되는 인권의 이념과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인권의 측면에서의 이주민의 시민권은 기본권을 유효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인과 국가 또는 사회의 관계를 일정한 방식으로 정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나 사회의 존재 형태는 개인의 자기 결정과 고유 가치를 허용 할 수 있도록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 평등 및 참여는 상호 관계에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개인의 내면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밖으로 나타나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의 관계 영역에서 권리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시민권 논의의 확대를 위한 시민권 개념의 재구성

노동의 국제화시대에 국경을 빌미로 노동의 이동을 통제하는 오늘의 상황은 노동의 이동의 자유문제와 국적이 아닌 국경을 넘어서 또 다른 시민권의 논의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불리는 오늘날 지구의 상황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으로 변화하였으며, 금융자본은 더 많은 실직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즉 산업자본이 노예노동을 강제하였다면, 금융자본은 노동권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로 인한 시민권의 질서가 세계화 이어지면서 기존의 개념과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샬(Marshall T.H.)은 시민권은 계급과 자본주의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 어린이, 노인, 그리고 심지어 동물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논쟁들까지도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아니더라도 이제까지의 시민권논쟁은 소수자인 이주 노동자를 포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권 논의의 지평을 확대 할 필요한 것이다.

(1) 시민권의 주체자로서 국경없는 노동자 (Borderless workers: BW)

이주민과 시민권 획득의 주체 개념으로서 '국경없는 노동자(borderless worker)'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경을 넘어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시민권의 보존 및 획득의 개념을 포괄하는 적극적 의미로 여기에서는 사용하도록 한다. 비회원국 노동자에 대하여 배타적 입장을 취하긴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회원국 간에 자

유로운 노동의 이동을 하면서 시민권과 노동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이들 노동자들 '국경없는 노동자(borderless worker)'로 불리기에 적합하다.

시민권 획득의 주체자로서의 '국경없는 노동자'들의 시민권 획득에 대한 논쟁은 국민, 국가 그리고 국적을 구성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주민의 시민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의 준회원이 아닌 정식 회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회의장의 회원권도 발언권도 없는 방청객으로서의 이주민이 아니라 의무를 다함으로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국경없는 노동자'로서의 시민권의 확대를 위한 획득의 개념으로서의 권리 주장이다.

국경없는 노동자들의 시민권은 마샬의 접근 방식대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라는 세 차원에서 시민권을 의미한다. 마샬은 시민권의 시민적 요소는 신체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어떤 구체적 제도들을 요구한다고 인식했다. 마샬은 시민권의 정치적 요소에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시켰고, 정치적 시민권은 의회나 지방정부와 같은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제도들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민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히 주민등록증의 소유 개념이 아니라 시민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권리의 획득을 의미한다.

(2) 국적 이주민으로서 외국인

이주민들이 장기체류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시민권 부분에서 배타적이거나 제한적인 적용을 받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특히 한국의 경우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본국으로도 돌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난한 아시아 사람의 경우 국제결혼을 통하여 겨우 동거비자(F1)를 받아왔다. 일할 수 있는 F2 비자가 발급 된 것도 2001년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결혼 가정의 배우자가 국적을 받았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이주민 가정들은 차별과 가난으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도 난민 인정을 받을 때까지 G1 비자를 받는다. 그러나 G1 비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비자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와 난민 가정의 자녀는 무국적의 상태가 된다.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대한 도전이 현실화 되고 있어 국적 제도 자체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

(3) 실천적 시민권으로서 국경없는 시민권(Borderless Civil Right: BCR)

시민이 된다는 것은 실제로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사회적 실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봉건제에서 자본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시민권이 획득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세계화 시대의 '국경없는 시민권(Borderless Civil Right)' 역시 획득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한다. 세계화 시대의 '국경없는 시민권'의 획득은 세계화 시대의 걸 맞는 적절한 인권 및 사회권의 적절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권 획득은 사회적 갈등과 협상과정을 수반하는데, 이는 시민권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폐쇄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에 걸 맞는 시민권이 획득의 개념으로서 국경없는 노동자들에 주체화되는 '국경없는 시민권'은 자유, 평등, 참여로 요약되는 인권의 이념과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는 내용이 담지 되도록 획득되어야 한다. 즉, 세계화의 시대에는 개인과 단체의 사회적 획득을 위한 실천적 개념으로서의 '국경없는 시민권'이 주어져야 한다.

시민권은 내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체계로 이주민에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주민의 지위는 갈등과 투쟁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주민들의 시민권 획득을 위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보상을 좀더 많이 분배받기 위해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조직화와 실천의 과정들은 이주민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시민권에 대한 전통적 태도와 관습이 변형되고 반 세계화로 이어지는 사회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제한적 유럽시민권 (Europe Citizenship: EC)

유럽시민권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는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은 물론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가 허용된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시민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비회원국 노동자에 대하여 배타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으로의 편입에 제한적이다. 그러나 유럽 회원구간의 노동자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경없는 노동자(borderless worker)'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시민권은 제한적 개념이다. 2008년 8월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의 여파로 세계적 금융위기에 이르자 유럽의 각국에서는 외국인 추방운동을 노골화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5) 배타적 세계화 시민권(Global Cavity Right: GCR)

봉건제 하에서 가진 소수민이 '시민'이었듯이 점차 세계화 시대의 시민권은 점차 civitas의 개념처럼 폐쇄적이고 특권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시민권이라는 권리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내의 사람들이 완전히 인정된 법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의 성격과 관련된다. 세계화 시대의 '세계화 시민권(Global Cavity Right)' 회원권제도가 보이지 않게 운영 중이다. 부자나라와 그 국민은 '단체 회원'인 동시에 '개인 회원'으로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는 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돈과 능력을 가진 일부 사람만이 개인 회원이 되거나 준회원이 된다. 그나마 가난한 나라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지구촌 사회의 방청객일 뿐이다. 부자나라와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나 쉽게 갈 수 있으며, 이들의 권리가 보호되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은 이동이 제한되며, 이들의 인권 역시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면, G7, WTO, OECD, 등의 기구의 회원권이나 APEC, NAFTA, ASEM, EU, 등과 같은 지역경제 블록은 이들 회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장치이다. 지역경제 블록도 알고 보면 이들 회원국의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는 단지 돈과 권력으로 힘을 가진 소수자를 선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단체에는 회원권이 있듯이 국가에서는 시민권이 일종의 회원권인 셈이다. 그러나 부자나라의 자국 회원들간에 혹은 능력 있는 개인의 선별 과정을 통한 '세계화 시민권(Global Cavity Right)'의 사용은 곧 시민적 권리에 있어서 봉건사회로의 회귀인 것이다.

4. 시민권의 역사와 체류권 제도

1) 유럽의 시민권

(1) 로마조약에서의 시민권

유럽시민권에 대한 노력은 유럽연합 창설 초기부터 진행되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이 황폐해진 경제재건과 향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창설을 추진하였다. 유럽시민의 권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1957년, 로마조약에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 유럽의 다른 회원국(외국)에 정착할 권리, 서비스제공의 권리, 고용에 있어서 성별이나 국적에 의한 차별의 금지, 사회적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이 규정 되어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사람

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생산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부분이다.

(2) 단일유럽 의정서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SEA)의 도입과 함께 유럽시민권의 권리는 확대되었다. 로마조약에서 경제적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했던 이동의 자유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 즉 퇴직한 연금 생활자, 학생들과 같이 생활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1989년 사회헌장(The charter of the social rights of workers)의 제정 등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보다 신장시키는 노력이 계속 되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회원국 가운데 부유한 나라의 경우 저개발국의 국민들이 과도하게 자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3)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2년 마스트리히트(Masstricht)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으로 통합의 결실을 맺었다. 유럽시민권은 1993년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아직은 회원국 국적에 따른 시민권이 유럽연합이 규정한 유럽시민권 보다 우선한다. 그러나 그동안 민족국가를 기본 단위로 했던 시민권 개념이 각 국가의 범위를 넘어선 초국가적인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처음으로 '유럽시민권'을 명문화하였다. 이 조약에서는 유럽회원국 국적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유럽연합의 시민으로 규정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규정된 유럽시민권이 개인과 연합사이의 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 시민들에게 '유럽인'이라는 감정이나 유럽시민으로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정한 유럽시민권 실현을 위해 '유럽정체성헌장(A Charter of European Identity)'과 '유럽시민헌장(European Citizen's Charter)'이 발표되었다.

(4) 유럽시민권 정착을 위한 정책

① '시민 우선(Citizen's First)' 홍보정책: 모든 유럽시민에게 부여된 유럽시민의 권리 알리기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세미나, 토론, 컴퓨터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럽시민과 직접 교류를 통해 알려 낸다.

② 범 유럽 교통망 건설: 유럽 연합 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교통수단의 편리한 연계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시민들이 회원국들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일자리를 찾고 거주 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시민교육 정책: 공동체의 미래가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시민 의식의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 제22총국에서 담당한다.

④ 고용과 사회문제 공동해결-유럽연합은 실업문제, 소외계층의 통합문제, 소비자 보호문제 등과 같이 시민들이 당면한 시급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집행 위원회 제5총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경제 통합의 완성²⁾, 공동외교 안보정책의 실시, 유럽시민권 제도의 도입 등 소위 말하는 3가지 기둥을 토대로 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유럽은 경제통합을 넘어선 정치통합과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5. 이주민 시민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시민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의 정당성

이주민과 시민권에 대하여 검토하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이건 법과 제도에 일정정도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에 인식할 수 없었던 인간적 가치 또는 이미 인식되었지만 정의롭게 실천되지 않았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발견한다. 물론 오늘날 사회 제도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정당성의 기준은 절차적 완결 상태가 아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제도가 마련된 사회에서도, 제도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밖의 직접적인 행동에 마음을 열어 두어야 한다. 각각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좀더 인간적인 사회를 그려 볼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인간적인 사회를 그리는 국가와 국민일수록 현실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사회공동체의 일원인 시민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생존권과 생활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국가를 어떻게 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일단 자금 우리가 사는 지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좀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과 제도의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법과 제도가 절대적이거나 움직일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날 필요도 있다. 각 국가의 입법자들과 많은 권한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계화 속에서의 이주민의 현실을 좀 더 개방적 태도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과 시민권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질문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시민권 보장 내용

시장경제 하에서 일차적 사회정의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과 공정분배의 실현은, 사회의 모든 집단이 시장경쟁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균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본생활과 일정 수준의 교육, 보건, 주거의 제공이 보편적 시민권의 일부로서 요구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장은 효율성을 유일한 잣대로 하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없는 노령자나 연소자, 장애인 등을 배려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있고, 사회적 시민권은 이들에 대한 사회공동체의 연대적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적 시민권은 시혜적 자선구제가 아닌 '권리'로서의 획득되어야 한다. 각각의 나라에서는 시민권의 기본 이념과 권리를 인정하고 각 주요 내용이 보장하는 내용을 법과 제도로써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제연합(UN)에서는 연합기관으로서 자기 기능을 회복하고, 각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시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협력의 요청과 합의 도출을 위한 제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시민권 내용을 포괄하는 분야별 범주 >

기본이념	기본지향점	인권기본권	시민권	주요내용
자유 18세기	기회 균등	방어권	시민적 권리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소유권, 인신보호권) -법 앞에서의 평등, -개인의 불가침성, -자의적 체포, 고문으로부터의 보호, -재판을 받을 권리, -사유재산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평등 19세기	수적평등과 사회구조적 변화	협동권	정치적 권리	유권자로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 - 투표할 권리, - 선출될 권리 - 공공생활에 대한 참여의 보장 등
참여 20세기	분배의 불평등 해소	청구권	사회적 권리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 :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 (인종, 피부의 색, 성, 언어, 종교, 민족 등) -국가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복지의 최소한을 보장

[26차시]

1. 다문화 역량강화의 이해

1) 역량강화의 정의

(1) 역량

역량이란 힘을 의미한다. 구띠에레츠(Gutierrez, 1991)는 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의 생각, 느낌, 행동, 믿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가족, 조직, 지역사회 또는 사회 전체와 같은 사회적 체계 내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개인적 힘은 자신의 체계의 변화, 자원의 재분배, 기회 구조의 확장 그리고 사회적 행동을 통한 사회변화의 창조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역량은 “행동하는 역량, 행동 가능성,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다른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소유욕, 권위, 지배권”을 역량으로 볼 수 있다.

(2) 역량강화

역량강화 패러다임은 솔로몬(Barbara Solomon)이 1976년 「흑인 사회의 역량강화」를 출간하면서 처음 이 용어를 사용한 이래 지금까지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역량강화는 19세기 후반 미국흑인 여성들이 백인의 차별과 불평등한 서비스 등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회개혁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역량강화 측면의 활동들이 시초가 되었다. 역량강화에 대하여 안토니오(Anthony Maluccio, 1981)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로, 안네 웨일(Anne Weick)은 강점관점을 주장하면서 역량강화의 관점에도 변화의 흐름이 있다. 역량강화로서 ‘empowerment’는 권한부여, 권한이동, 능력고취, 역량강화 등으로 번역되어 주로 사회복지나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3) 소수자의 다문화적 주체 역량강화의 필요성

역량강화는 권한을 부여한다, 힘이냐 권위를 준다, 어떤 것을 가능케 하거나 세력화 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에서 역량강화는 무력감을 갖는 개인이나 가족 혹은 지역사회가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역량강화는 네 가지 다른 양상이 있다.

- ① 첫 번째로 역량강화는 강점과 능력의 강조와 관련된다.
- ② 두 번째로 역량강화는 자기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한 커다란 통제권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연관된다.
- ③ 세 번째는 사회복지실천의 맥락에서 역량강화이다. 역량강화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의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통제에 얹혀 있다. 시몬(Simon, 1990)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 과정을 도와줄 수는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④ 네 번째는 취약한 자들의 무력감의 측면에서 역량강화이다. 역량강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량강화가 낙인화의 과정을 통해 불평등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하는 데 있다고 한다. 역량강화가 전제하고 있는 권력, 가치, 관계의 근본적 재조정은 개인적 변화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세계화는 새로운 국제질서로서 정보화와 초국적 자본의 무한질주로서 이를 관찰하는 수단은 국제 표준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국제 표준으로 동질화, 획일화시켜

나간다. 이러한 동질화 및 통합의 추동은 소수자의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가 박탈당하게 된다. 세계화는 이주를 추동하고, 자신의 나라를 떠나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경제적불평등, 복지의 악화, 차별과 배제의 인권침해, 문화적 소외 등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상실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역량강화의 대상으로는 빈민과 억압 받는 자들, 이주민과 소수자들, 낙인 받거나 차별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데 거부당한 사람들이 중심에 서있다. 역량강화는 원래 정치적 아이디어로서 권력의 이슈, 권력의 불평등과 권력의 획득과 재분배가 중심적 주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수자의 다문화적 역량강화란 소수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해 가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적, 대인적, 정치적 측면에서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며, 다수자의 입장에서는 차이와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통하여 소수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창출해 나가는 능력의 향상 이라고 보겠다.

(4) 다수자의 다문화적 시민성 역량강화의 필요성

- ①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민족정체성이 안정된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기보다는 변화되는 조건에 탄력적으로 재 개념화와 적응이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 ② 세계화시대에는 개별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가치로서의 시민적 자질을 추구하는 양태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 ③ 세계화시대 자아정체성의 민족정체성, 국가정체성, 지역정체성이 병립하는 복수성, 중층성, 혼성성이 불가피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 민족정체성이 요청되고 있다.
- ④ 세계화시대의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국가정체성을 넘어 새로운 정치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의 확보와 문화적 정체성의 재생산이 요구된다.
- ⑤ 다중적 정체성의 출현은 경제적,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어 국가 내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적 공존과 통합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건강한 시민성을 요구한다.

2) 소수자의 다문화적 주체 역량강화

(1) 소수자의 다문화적 주체 역량강화 목적

역량강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리스(Rees, 1991)에 따르면, 이것은 긍정적인 차별, 즉 자유와 평등이 증진되며 모든 장소에서 비 착취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역량강화가 힘에 대해 변화를 일으키는 역량으로 정의한다면, 소수자의 다문화적 주체 역량 강화를 통한 영향력은 개인, 조직, 가족, 조직,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와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

소수자의 다문화적 주체 역량 강화는 차이의 정체성 인정으로부터 출발 한다. ‘차이’는 사회주류에서 벗어나 주변화 되어 정치의 주체로 서지 못하고 배제되어온 여성, 동성애자, 소수인종,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이의 정체성은 이런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이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다. 소수자가 차이의 정

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 집단, 민족의 정체성을 고유한 것으로 수용하는 다양성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권리인 것이다. 이것은 분리주의가 아니라 주류로부터의 지배적 동화나 지배적 다문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다. 이는 소수자들의 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차이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 ① 다양한 소수자집단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특수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하나의 기준과 존재만을 인정하는 보편주의에서는 다양성의 정체성이 용납되거나 형성될 수 없다.
- ② 각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구체적 맥락을 중요시한다. 차이의 정체성은 구체적 맥락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구, 경험, 문화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 ③ 기존의 다수자중심의 권력관계에 균열을 가져와 소수자를 권력의 주체로 등장시킨다. 남성중심의 권력관계에 여성이, 이성애자 중심의 권력관계에 동성애자가, 비장애인중심의 권력관계에 장애인이 이의를 제기하며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 ④ 드러냄과 상호인정의 전략을 택한다.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던 각각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2) 다문화 역량강화의 차원

역량강하는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이 있다. 거시적 측면에서 시각은 1970년 이후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 관점에서 삶의 어떤 측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서, 자기 효능감(self efficacy), 자기충족감(self sufficiency), 자존감(self esteem)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역량 강화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다.

- ① 개인적 차원이다. 인간의 역량(competence), 자제력, 감정, 변화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 자기의 요구가 무엇인지 설명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신을 바르게 설명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② 대인 관계적 차원이다. 소수자에 대하여 다수자와 타인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격려하며, 동시에 다수자와 타인들이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격려함으로 상호지지토록 하는 것이다.
- ③ 환경 및 조직적 차원이다.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타인에게 주장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 ④ 사회정치적 차원이다.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사회적 해결을 위한 자기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행동차원이다.

3) 강점관점 역량강화 과정

(1) 다문화적 강점관점(strenths perspective)

강점관점을 체계화한 샐리비(Dennis Saleebey)는 강점의 의미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힘으로써, 능력, 자원, 자산 등으로 보았다. 관점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관찰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보거나 생각하는 각도이다. 강점관점의 특성에 대하여 샐리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① 강점관점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 사회정의와 관련된 가치에 일치한다.
- ② 모든 인간은 성장하고 변화할 능력을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문

제를 해결 할 능력과 힘도 가지고 있다.

- ③ 사람들은 잠재력과 지배력과 자기실현의 개발을 행하여 노력한다.
- ④ 지지자들은 사람들의 타고난 힘을 원조할 때 긍정적인 성장을 한다.
- ⑤ 지지자들은 소수자들에 대하여 지지 과정에서 인본적이고, 윤리적이며, 정치적인 가치에 더욱 상응한다.
- ⑥ 강점관점은 소수자들의 체계의 존중과 지지를 조화의 분위기를 창출한다.

강점관점 모델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주요 비판으로는 첫째, 강점관점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클라이언트 집단이 얼마나 조작적이고,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강점관점은 실제 문제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실무에서 완전히 강점에 기초한 개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설명을 토대로 다문화적 강점관점으로서 역량 강화는 소수자는 주류사회와 차이가 있는 존재로서 그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수자의 결점 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어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2) 강점관점의 중요성

- ① 문제에서 도전으로의 변화이다. 소수자의 문제를 하나의 도전으로서 재 개념화하는 것은 소수자의 주체화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고의 전환이 된다.
- ② 병리관점에서 강점관점으로 변화이다. 강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소수자의 차별적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즉 문화적응, 관습의 차이 등의 문제를 개인적 무능,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서 병리적인 부분으로 초점을 두다 보면 소수자들의 진짜 문제를 제대로 풀어 갈 수가 없다.
- ③ 과거로부터 미래지향으로의 변화이다. 병리관점은 소수자들의 문제가 왜, 언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과거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지만 강점 중심의 개입과정은 현재 시점에서 소수자들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자 한다.

2. 다문화적 시민성 역량강화

1) 다문화적 시민성 역량강화의 필요성

(1) 세계화와 다중적 정체성의 대두

세계화는 획일화와 다양화의 두 측면을 동시에 드러내며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중시하고, 시장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서로 다른 역사와 문명을 지닌 사회와 사람들을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국경 없는 사회를 형성해 내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다양성은 다중적 정체성을 배출 시킨다. 세계화의 영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제적인 이주민의 증가는 각 국가와 시민의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요구는 문화 간, 시민 간 갈등을 불러 온다.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갈등은 사회-경제적인 것에서부터 이념 및 신념의 성격을 지닌 것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주민의 증가로 사회구성원

의 갈등이 내국인 간에서 내국인과 이주민 간으로도 확산 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차이의 문화(different cultures) 또는 상이한 하문화(sub-cultures)에 대한 공적 인정과 관용으로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를 요구한다.

(2) 다문화 사회와 공적 자유

민주시민사회에서 시민은 공적 문제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와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들의 공적 자유의 성취이다. 다문화 사회의 공적인 자유는 한국 사회가 어떠한 다문화적 정치체제를 가질 것인가? 어떤 다문화적 사회구조를 어떠한 형태로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공동의 결정권에 대한 공적 자유가 시민에게 있다. 시민들에게는 다문화적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의 능력과 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문화 시민역량에 대한 시민교육 혹은 공적 개입의 필요성을 등장한다. 다문화 시민역량강화에 대한 공적교육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행해져야 하느냐 하는 실천적 문제가 남아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역량은 공적 이성(public reason), 시민적 교양(civility), 그리고 인권(human rights)이 강조된다. 공적이성은 공적으로 합의되는 내용에 대한 시민적 결정을 포함한다. 공적 이성으로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한 토론과 소통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 형성에 대한 시민전체의 관점 또는 시민 상호간에 수긍할 수 있는 담론 형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담론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공적 합당성(public reasonableness)을 이루어 갈 것이다. 현재 공적이성의 부분은 주로 이주민 정책 입안자, 이주민 관련 단체 활동가, 관련 학자, 교육계, 유관 기관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이슈와 의제가 형성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굿만(Amy Gutmann)은 민주국가의 핵심가치는 '의식적인 사회적 재생산'(conscious social reproduction)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의식적인 사회적 재생산의 필요조건으로 시민들이 개인적 생활 및 정치적 생활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심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교육은 비억압(nonrepression)과 비차별(nondiscrimination)의 한계 내에서 좋은 사회의 선택에 필요한 덕목들을 시민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민주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다문화적 역량을 공적교육을 통하여 답을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2) 다문화적 시민성 역량강화의 이해

(1) 다문화적 시민사회

베넷(Bennett, Christine I, 2003)은 다문화적 시민사회란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공존을 추구하되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 사회적 연대라는 시민사회의 기본틀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라 하였다.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과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특히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하고 이들 간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라 하였다. 즉, 다문화적 시민사회는 시민권 일반에 해당하는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문화권 등을 포함한다.

(2) 다문화적 시민성 역량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다문화적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문화적 시민성이란 문화 다양성과 입헌 및 민주적인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문화를 재구성하고 공통문화를 창출 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을 말한다. 이러한 시민의 자질에는 문화적 능력(cultural competence)과 시민적 능력(civic competence) 그리고 이들에 기반을 둔 민주적인 간 문화 능력(democratic intercultural competence)으로 구성된다.

- ① 문화적 능력은 일상적 삶과 다양한 문화접촉 상황에서 자신의 문화와 공통문화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말한다.
- ② 시민적 능력은 시민들이 사회적 쟁점과 문제들을 입헌 및 담론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말한다.
- ③ 민주적인 간 문화 능력은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교차상황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행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능력을 말한다.

다문화적 시민성은 나와 다른 민족, 인종, 국가의 문화들과의 대면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문화적 시민성은 나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들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대면하는 다양한 하위문화들에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와 다른 민족과 인종, 국가의 문화들은 그것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대면하는 하위문화들은 나 또한 이러한 하위문화에 대하여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당면시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적용상황을 간과하기 쉽다. 팡(Pang)과 베넷(Bennett)은 다문화 시민의 능력을 문화적 능력, 시민적 능력, 간문화 능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따라서 일상적 삶에서 다문화적 시민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일상적 삶의 문화에 유의하고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이 어려운 과제인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언제나 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 다문화적 시민 역량강화 내용

① 국제이해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상호문화의 이해로서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은 1946년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제 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부터이다. 국제이해 교육은 단순한 타문화 이해를 넘어 선다. 국제이해교육의 사업 명칭이 1974년에 국제이해, 협력 및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라는 매우 포괄적 이 되었다. 단순한 국가 간의 이해나 협력이란 차원을 넘어서 인구, 식량, 자원, 환경, 에너지 등 같은 전 지구적 문제들의 상호 의존적 측면과 세계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에서 사용하는 국제이해교육의 사업명칭은 평화의 문제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 Culture of Peace)이란 사업 내에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국제이해와 관용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Democracy,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Tolerance)으로 되어 있다. 유네스코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은 개념상 몇 가지를 포괄 한다. 국제이해 및 협력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평화교육(Peace Education),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민주주의 교육(Education for Democracy), 관용교육(Education for Tolerance) 등 다섯 가지 영역이다.

② 상호 문화적 능력의 내용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일련의 학자들 (특히 Gnutzmann 1994, Knapp/Knapp-Potthoff 1990, Thomas 1989)은 상호문화이해 능력의 일반적 목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설정하고 있다.

가. 문화에 따라 특수하게 각인된 사유와 행동의 의식화

나. 여러 문화가 구분되는 일반적 매개변항 (Parameter) 즉 종교, 성의 역할 등에 대한 지식 획득

다. 민족중심주의 (Ethnozentrismus) 극복

라. 관용의 토대설정

마. 민족적인 것 (Ethnizität)의 수용

바. 문화갈등과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이성적 태도

사. 새로운 이념과 가치개념에 대한 열린 마음

아. 태도전범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용의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상호 문화적 능력(interkulturelle Kompetenz)”으로서 다문화 시민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제우너(Zeuner)는 이 상호 문화적 능력은 다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첫째, 자기 자신의 문화적 개념을 재활성화 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제 조건을 의식화함과 동시에 자기민족의 관점에서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자기 자신의 문화와 외국문화를 중개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실제의 모든 상이 점들에 대한 정보입수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공통성, 유사성 및 차이성에 대한 의식을 전제로 한다. 즉 타 문화의 독자성과 상위 성을 수용하고 존경할 수 있는 능력과 용이성의 전제이다.

셋째, 여러 가지 생활 세계로부터 결과 되는 기대와 태도방식을 다룰 줄 알아야 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른 시점의 수용 또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의 시점 내지 체험방식을 상호작용 과정 속에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③ 다문화적 시민 역량

민주시민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정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찰형 시민이 있다. 이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정치참여는 귀찮게 여긴다. 둘째, 참여형 시민은 인지적 능력에 더하여 정치 참여의 기회와 방법을 알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책임소재, 법적 절차 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정치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성취형 시민은 도덕적 능력까지 갖춘 유형의 시민이다. 이들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연대감, 헌신, 관용, 협조정신 등을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도덕적 성취감을 느끼는 적극적 시민이다. 다문화 사회에 필요로 하는 시민의 유형은 관찰형 시민을 참여형 시민으로, 그리고 성취 형으로의 전환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문화적 시민성 역량 강화는 단지 문화 관련 내용으로 한정 되어서는 안 되며 다문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성취형 다문화 시민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적 시민 역량 중에서 첫째, 문화적 능력을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인종, 지역, 민족문화와 종교, 세대, 직업, 정치, 경제, 예술 등과 같은 하위집단 문화들, 그리고 이러한 문화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회과학 개념들과 이론, 탐구양식, 그리고 이해와 분석 그리고 탐구 과정을 통하여 성취된 문화에 대한 개념들(예를 들어 문화의 의미와 특성, 문화 접변, 상호작용, 변화과정)이 있다. 둘째, 시민적 능력을 위한 교육내용으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 체계(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문화권)와 이들의 자유로운 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로써 입헌 및 담론 민주주의의 개념과 저치과정, 참여능력 그리고 그 기반으로서의 시민사회와 공론장이다. 셋째, 민주적인 간 문화 능력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문화 간 민주적인 상호작용과 변화, 발전,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식의 구성 및 변형과정 및 결과 등이 있다.

3) 다문화적 시민 역량강화 형성 과정

뱅크스(James A. Banks)는 시민성교육을 위한 접근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① 기여적 접근법(contribution approach)

다문화교육이 요구되는 초기 상황에서 자주 나타난다. 한국인은 이주민 문화에 대하여 이주민은 한국인 문화에 대하여 독특한 언어, 음식, 춤, 음악 그리고 문화적 유물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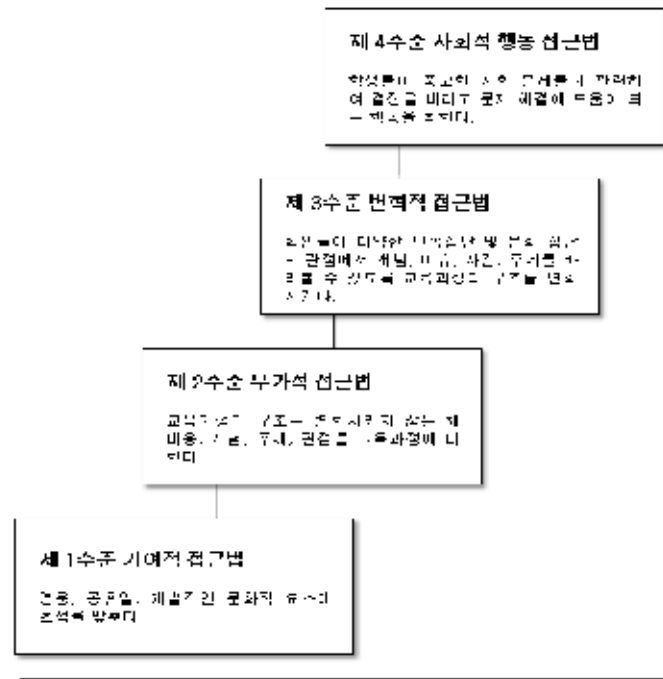
② 부가적 접근법(additive approach)

이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구조나 목적, 특징은 변화시키지 않고 문화와 관련된 내용, 개념 그리고 주제를 교육과정에 덧붙이는 것이다. 기여적 접근법과 다른 것은 교육내용이 일회적이지 않고 체계화 된다. 하나의 단원, 교과서, 과정 등을 구성한다.

③ 변혁적 접근법(transformation approach)

변혁적 접근법의 주요 목표는 문화란 상대적이며 위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이라는 공통의 측면에서 모두 소중하고 자유롭게 평등하며 함께 살아갈 시민이라는 것이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문화와 자신이 현재 학습하고 있는 문화의 + 관점을 우열 없이 동등하게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혁적 접근법의 중요한 목적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 내용의 결론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이를 증명하고 정당화하는 방안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④ 의사 결정 및 사회적 행동 접근법(decision-making and social action approach)
이 접근법은 학생들이 그동안 간과되었던 억압과차별의 대상이었던 다양한 민족 및 지역 소수집단의 삶을 돌아보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불공정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출처: James A.Banks, Intri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모경환 외 공역, 다문화교육입문, 아카데미프레스, p. 70.

한편, 메이어(Meyer)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다문화적 행동 능력’의 개발에 두고 세 단계로 촉진 과정을 설정하였다.

촉진과정	다문화적 행동 능력
개인 가치관형성	1) 다문화적 상황과 관계를 인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는 능력
	2) 자신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신의 행동,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점을 찾는 능력
	3)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을 없애는 능력
	4) 타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기초지식 습득	5) 이주민의 역사, 종교, 문화, 차별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
적용방법의 터득	6) 자신이 습득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
	7) 다문화적 맥락에서 갈등을 이해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출처: 장원순, (2007),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상과 다문화교육의 과제’,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상과 다문화교육의 과제』,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30.

3. 시민사회 단체 역량강화

1)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강화의 이해

시민사회 단체의 전략적 핵심역량 구축은 한 조직 혹은 지역사회가 정치적 영향력과 적절한 법적 권력을 갖도록 원조하는 과정이다. 조직의 전략적 핵심역량 구축은 자원을 공유하고, 개인적, 구조적, 정치적 수준의 '변화를 위한 조직의 강점'을 통해 사회정의에 대한 환경적 방해물을 직면시키고, 집합행동을 취하도록 돕는 것이다. 자원동원 이론에서의 역량강화는 개인적, 구조적, 정치적 수준의 필요한 자원간의 불균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해를 실천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의 전략적 핵심역량 구축은 개인적 장점과 능력, 자연적 상호 원조체계, 그리고 사회행동, 사회정책, 사회변화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서 혁신적인 행동과 관련 된다. 다만,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을 다문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 관련 '시민단체와 다문화 시민성 교육'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다문화 관련 활동을 다루었으며, 본 장의 4장 '소수자 주체 역량강화 실천'에서 시민사회 단체로서의 다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 부분만 다루도록 한다.

(1) 역량강화의 원인과 목적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구축의 이론적 출발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있었다. 역량강화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임상실천, 지역사회운동, 사회변화 등에 적용 할 수 있는 이론으로 자리 잡아 왔다. 유색인종, 마이너리티, 압박받는 집단에 속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과 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지속시키는지 규명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형성의 목적은 비 착취적 관계가 형성 되도록 하는 것, 힘의 지배가 아닌 힘의 공유, 선의의 경쟁, 기회의 평등에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강화는 권력, 자율성, 영향력 같은 요소들이 중요 요소가 된다.

(2) 역량형성의 내용으로서 가치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은 가치와 관계 된다. 역량과 가치와의 관계는 조직의 비전이론과 관계된다. 최근 '사명에 기초한 경영'이 시민사회 단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 단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켜내는 것에 보다 많은 주안점을 두는 사명에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가는 사회정의, 개인의 자유, 인간 본성에 대한 궁극적 시각을 지지 할 수 있는 인간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빌스키와 슈바르츠(Bilsky, Schwartz)는 근대화 수렴이론(Convergence of Modernization)에 기초하여 '가치'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가치는 신념 또는 개념,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목표하는 것, 특정한 상황을 초월하는 것, 행동과 사건을 선택하거나 평가하는 지표, 상대적 중요성에 의해 서열화 되는 것으로 보았다. 슈바르츠는 역량강화의 변인으로서 두 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물질적 가치이다. 물질적 풍요는 사회적 권력의 기초가 된다. 두 번째는 영적 가치이다. 사람은 믿음과 가치를 개인적 관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회에 순응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자기 초월(보편성, 박애), 보존(순응, 전통, 안전), 자기향상

(권력, 성취), 변화에 대한 개방성(패락, 자극, 자기지향성) 등이다.

2)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강화 방안

(1) 역량 구축의 틀

핵심역량 구축에 대한 패러다임은 솔로몬(Barbara Solomon)이 ‘흑인사회의 역량 강화’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발전하였다. 마르치오(Anthony Maluccio)의 ‘클라이언트의 역량고취’를 통해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역량 개념을 모델화하기도 하였으며, 웨익(Anne Weick)은 ‘환경 속 개인관점 재구조화’를 통하여 역량의 개인화를 주장하였다. 소수 계층 등이 역량 강화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라는 관계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서비스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 최근에는 역량강화의 틀을 사용하여 조직실천을 모색한다. 즉, 조직을 역량강화의 과정과 목적을 위해 선택된 도구로 본다. 따라서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강화는 자원의 활성화, 동맹관계구축, 기회의 확장의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어 질 수 있다.

역량강화의 틀

	정치적 힘	경제적 힘	사회적 힘
자원 활성화			
동맹관계구축			
기회의 확장			

출처: Wes Shera, Lilian M. Wells, (1999),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Canadian Schola's Press Inc), 이경아 공역.(2004), 『사회복지에서의 역량강화실천』, 양서원, p. 243의 내용을 재구성.

(2) 전략적 조직 형태 구축

자원동원론적 입장에서는 시민단체의 유형을 거시적 수준에서 본 ‘정치체 성원형’과 ‘정치체 도전형’, 미시적 수준에서 본 ‘시장형’과 ‘공동체형 조직’이 있다.

① 거시적 수준의 조직 유형

거시적 수준에서 정치체는 정부이다. 사회운동조직은 이러한 거시적 요소로서의 체제 혹은 정부와의 관계에 의해 그 성격이 부분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정치적 지배 권력이나 정부와의 관계에서 시민운동조직은 정체에 포함될 수도 있고 도전집단에 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조직들은 거시분석의 수준에서 정체성원적 조직과 도전적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정부 및 체제와의 관계에서 정체에 포함되거나 정부 및 정체와 친화적 결합관계에 있는 조직을 ‘정치체 성원형(Members of The Polity Type)’ 이라고 한다. 반면에 정부 및 정체와 대립적이고 도전적인 관계에 있는 조직들은 ‘정치체 도전형(Challenger Type)’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체 성원형과 정치체 도전형간 사회운동조직의 성격

구 분	정치체 성원형	정치체 도전형
조직목표, 체제이념	친화 혹은 유관	대립 혹은 무관
정부, 정치체의 지원	있음	없음
공직진출	제약 없이 이동	없거나 제약
정부자문	빈번함	없거나 예외적
정책대안의 수용	직 간접적 있음	거의 없음
협약체 참여	정례 비정례적 있음	없음

출처: C. Tilly, (1978),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 Wesley), p.125.

이상과 같은 정치체 성원형 및 정치체 도전형 조건들은 이러한 조건에 의해 각각의 전형성이 충분히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조건들은 정치체 성원형 및 정치체 도전형 운동조직의 유형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미시적 수준의 조직 유형

미시적수준의 요소들은 주로 조직 내의 자원 확보 방식과 결부되어 있다. 클라렌스(Clarence Y. H. Lo)는 사회운동조직의 자원동원방식을 소비시장에 보다 의존적인 '시장관리적 유형(Market Managerial Type)'과 지역공동체에 기반 한 사회운동으로서 '공동체적유형(Communal Type)'으로 구분한다. 전자를 매카시와 잘드에 의해 강조된 소비시장 의존적인 것으로, 후자는 지역공동체에 기반 한 사회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 관리적 유형의 자원은 마치 시장에서 경쟁적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촉발시키는 방식 그대로 자기조직이 가진 운동 상품, 수입, 영향력, 지명도 등의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성원의 확보에 주력하기 때문에 운동의 성원은 소비자적 기능을 담당하고, 운동의 리더는 관리자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시장형 사회운동조직은 전문화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경향이 있고, 자원의 종류도 보편적 가치수단이라 쉽게 교환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자금 즉, 기금 확보에 의존한다. 활동방식에서도 지명도 있는 인사의 영입을 통해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조직 활동을 광고하고, 공직자와의 접촉, 정책대안의 제시, 여론조성 등을 시도하며, 이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거나 다양한 광고기법, 컴퓨터기술 등의 활용과 아울러 공청회, 토론회, 성명서 발표 등의 제도화된 운동방식을 채택한다.

공동체형 사회운동조직은 비교적 한정된 집단 내에서 맺고 있는 공통의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다. 공통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조직이 형성되기 때문에 성원들의 개별적 헌신에 의해 자발적이고 집합적인 의지 요소가 중요하다. 이러한 조직은 성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시위나 집회 등의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형과 공동체형 사회운동조직의 성격

구 분	시 장 형	공 동 체 형
성 원	원자화된 수비자	한정된 집단성원

성원 관계 관리 체계 주요 자원 이슈 참여 방식 행위 양식	시장적 교환관계 전문화된 관리체계 기금, 회비 다양하고 부가적인 이슈 간접 참여 공직자로비, 정책대안제시, 캠페인, 공청회, 토론회 등 제도화된 방식	공동체적 관계 미분화된 관리체계 개별적 헌신(의지) 특수한 이슈 직접 참여 시위, 집회 등 비 제도화된 방식
---	---	---

출처: Clarence, Lo, Y.H. 1992, "Communities of Challeng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Yale Univ. Press), p. 221.

(3) 역량강화를 통한 참여의 확대 모색

역량강화는 지역 사회 참여와 연계된다. 아른스테인(Arnstein)은 '힘'을 참여를 이해하는 중심 개념으로 보았다. 나아가 역량강화와 참여를 "가진 것 없는 시민들이 현재에는 정치적, 경제적 과정에서 배제 되어있지만 미래에는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재분배이다. 그것은 정보공유, 목표나 정책 구성, 세금 자원의 분배, 프로그램 운영, 계약이나 임명권의 분배 등의 결정에 있어서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는 풍족한 사회의 이익분배에 있어 특별한 사회개혁을 유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하였다. 윌콕스(Wilcox)는 참여를 이해하는 것은 힘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달성하기 위한 각기 다른 이익 당사자들의 능력으로 보며 역량강화와 참여의 연관성을 역설하였다.

참여의 위계

구분	Arnstein 1969	TPAS 1989	Pretty 1994	Word Bank 1994	Wilcox 1994
시민 권력 수준	시민의 통제	통제	자기-동원: 주도권쟁 취, 주도권도전	역량강화: 자기 관 리	독립지 지역사회이익: 그들 이 원하는 것 하기
	권한 위임	선택 공동관리	상호교류:지역의사결 정에대한공동분석과 조작	협력: 공동작업과 공동책임	함께 행동하기: 계획 실천에 있어서 결정 과 파트너십 형성
	파트너십			의사결정공유: 계 획수립과 갈등해결 에 참여하기	함께 결정하기: 공동 의사결정전에 아이디어 제공
명목상 수준	회유	대화	기능적: 결정된 후 예상된 대상자를 만 남 물질적 보상: 자원만 제공	사정에 참여함: 참 여적 사정	

	자문	자문 청취	자문: 관점제공(전문 적인, 그러나 프로포 잘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자문: 회의, 현장방 문과 인터뷰	자문: 피드백에 대한 선택권 제공
	정보제공	정보탐색 정보제공	정보제공: 조사정보 를 제공하나 영향은 주지 않음	정보공유: 선전	정보제공: 계획이 무 엇인지 말함
참여 배제	치료		소극적 참여: 일방적 의사결정		배제: 의사결정에 대 해 모름
	조작				

출처: Wes Shera, Lilian M. Wells, (1999),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Canadian Schola's Press Inc), 이경아 공역,(2004), 『사회복지에서의 역량강화실천』, (서울: 양서원), p. 37.

3) 전략 행동 프레임 구축

구성주의에서 집합행동의 프레임은 객관적인 상황, 사건, 경험과 과거와 현재의 행동에 대해 특정 부분을 강조하거나 선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외부세계를 단순화 하고, 응축시키는 해석적 기구로 작용된다. 집합행위 프레임은 사회운동조직의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인 프레임정렬을 통해서 구성되는 의미체계이다. 바로 이러한 집합행동의 의미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전략 구축의 틀을 형성하는 기본 형태가 된다.

집합행동의 프레임 유형

	Snow, Enford, 1988	Gamson 1955	Offe 1985	Donovan 1995
문제 내용 구성	진단프레임	불공정요소	가치와 이슈	
문제 해결 방법	처방프레임	주체자 요소	절차, 전략	합의동원전략
해결 주체 형성	동기프레임	정체성요소	행위자	행위동원전략

출처: 임희섭,(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출판부, 133-142를 참조하여 재구성.

(1) 문제의 내용 구성

문제의 내용은 어떤 사건이나 생활의 일부를 사회문제로 진단하는 과정이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에 불공정 요소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아가 무엇이 사회적 위기와 고통의 원인 제공자 인가 등에 대한 규명이다. 문제의 내용 구성은 사회 문제의 발생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다.

(2) 문제의 해결 방법

문제해결의 '대안'을 마련을 위해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와 '우리'라고 하는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일의 내용'에 대한 정의이다. 아울러 문제 해결의 과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글랜도만스(Klandermans)는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자원동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원동원 과정에서는 운동 잠재력의 형성, 충원네트워크 형성의 활성화, 참여자들의 동기 유발 및 참여 장벽의 제거의 세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각 단계들은 사회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 설득, 여론형성의 차원이 필요하다. 인식의 변화는 하나의 정치적 주체들은 몇 개의 이데올로기적 패키지들로 구성된다. 집합적 행위의 조직자는 특정 이데올로기적 패키지의 후원자들을 조직함이 중요하다. 설득은 사회운동조직과 개별적 시민들 간 상호접촉의 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패키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나아가 사회 운동적으로 의미와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이데올로기적 패키지 전파자인 미디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론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3) 문제 해결 주체 형성

여기에선 우리와 다른 가치와 견해를 가진 저들에 반대하여 ‘우리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주체자로서 행위자와 사회운동조직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집합행위 참여자들의 의식변화가 매우 중요한데, 의식의 변화를 ‘인지적 해방’으로도 본다. 사회행위자들은 의미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협상하며, 결정하는 존재로 이해한다. 구성주의 이론은 사회운동조직을 의미의 생산에 저극 참여하는 의미의 주체로 개념화 하였다. ‘문제 해결의 주체형성’을 위해 ‘잠재적 참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선이나 활동의 유용성 등,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유인이 존재해야 한다. 자원동원이론에서는 이를 비용과 대가에 대한 합리적 선택으로 보았다.

4) 핵심역량 점검과 역량강화

레스리(Leslie), 홀즈할브(Holzhalb), 홀(Holl)은 시민사회 단체 내의 인적역량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조직 내 활동가로서 인적자원의 특성과 조직의 욕구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조직 내 활동가로서 인적 자원의 역량강화 측정 도구는 ‘역량강화와 개인적 지향, 역량강화와 업무환경, 역량 강화와 근무 관계에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프란스(Frans)의 역량강화 측정 도구에서 역량강화는 다섯 개의 중심개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자기 확신을 포함하는 자기인식, 세상 속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 자기 또는 타인의 삶의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행동에 대한 개인적 성향, 의미 있는 사회제도의 목표와 추구하는 바를 공유하는 공동체적 정체감이 바로 그것이다. 프란스는 역량을 사회적 실천에 강조를 두었다.

시민사회 단체의 역량 강화는 역량 강화 자체가 대한 목적이 아니라 역량강화를 통해 무엇을 하려하고 어떤 성과 성과를 얻으려 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엔 역량강화의 비판론도 제기 되고 있다. 힘의 남용(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의 중립적 개입의 부정성의 등장이다. 따라서 역량강화를 통한 조직의 올바른 성과를 형성하려면, 역량강화 내용과 역량강화를 통한 효율성의 재고가 필요하다.

4. 소수자 주체 역량강화 실천

1) 역량 강화 실천의 이해

(1) 역량강화 실천의 개념

‘역량강화 실천’에 대하여 다양한 클라이언트 조직에 혜택을 주는 과정(Gutierrez, 1990) 혹은 개입(Parsons&Schram, 1989; Solomon, 1976), 또는 기술(Mandell&Schram, 1985)로 정의된다. 사회복지 문헌에서는 역량강화가 차별받는 소수인종, 이주민, 난민, 시설 거주자, 흑인 여성, 노숙 여성, 여성 노인 등 다양한 조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역량강화실천은 가족, 조직, 지역사회 등에 적용되어 왔다.

소수자의 역량 강화는 개인적 변화, 대인적 변화 혹은 사회적 변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둔다. 두어야 한다고 본다. 라본테(Labonte, 1990)는 개인적 역량강화, 소조직의 역량강화, 지역사회조직, 연합옹호, 정치적 행동에 이르는 역량강화의 연속체를 정의하였다. 역량강화실천은 임상 실천, 지역사회운동, 사회변화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부각되었으며, 유색 인종, 마이너리티, 압박받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 개인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지속시키는지 규명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실천목표로 삼는다.

(2) 과정으로서 역량 강화

역량강화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의미한다. 역량강화는 “증가하는 개인적·대인 관계적·정치적 힘의 과정이다. 따라서 개인,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Gutierrez, 1994:202). 과정으로서 역량강화는,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개인적 문제에 대한 심리적 통제감이 증가하는 것을 내포한다. 결과물로서 역량강화를 보면, 이는 개인적인 힘이나 정치적 힘을 쟁취한 상태를 의미한다. 역량강화는 마음 상태, 즉 가치 있다는 느낌과 능력감 또는 힘과 통제를 자졌다는 느낌 등을 의미한다.

역량강화 모델의 실천단계와 과정 및 활동 내용

단계	과정	활동
대화	파트너십 형성	클라이언트의 특권을 인식하고 클라이언트의 독특성을 존중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역량강화하기 시작한다.
	파트너십 명료화	클라이언트의 경험을 확인하면서 도전적인 상황을 사정한다. 업무 특성을 추가하고 목표를 정한다.
	방향 설정	클라이언트 동기 부여를 촉진하는 관계에 대한 초기 의도를 결정하고 관련 자원들에 대한 탐색을 안내한다.
발견	강점 정의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탐색한다. 일반적 기능, 도전받는 상황에 대한 대처 기술,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역경에 대한 극복.
	자원 역량 분석	가족, 사회적 조직, 조직이나 지역사회기관들을 포함한 환경과 클라이언트가 교류함에 있어서 자원을 탐색한다.
	해결책 구성	상담, 자원 관리와 교육 등을 통해 가능한 자원들을 동원함

		으로써 가능한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동맹 관계 창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자연적 지지체계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들과 동맹관계를 역량 강화한다.
	기회 확장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조직화 그리고 사회행동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와 자원을 개발한다.
	성공 확인	달성도를 인식하고 계속되는 행동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화 노력의 성공에 대해 평가한다.
	성과 통합	관계를 해결하고, 성공을 축하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변화 과정을 마무리한다.

출처: Dubois, Miley, & O' Melia, (1993)의 내용을 Wes Shera, Lilian M, Wells, (1999),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이경아 외 역, (2002) 사회복지에서의 역량강화 실천, 양서원, p.25에서 재인용.

2) 역량강화 실천 유형

(1) 지역사회 참여로서 역량강화

지역사회참여 개념은 빈곤에 대항하는 것에서 유래한다. 윌콕스(Wilcox, 1994)는 “참여를 이해하는 것은 힘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에 달성하기 위한 각기 다른 이익 당사자들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벨리(Barry, 1996)는 “역량강화는 선구자로서의 참여 없이는 달성될 수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역량강화는 “힘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는 조직이나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 사회적 변화의 경험을 통한 상호 교류 과정”(O'Brien & Whitmore, 1989, Morley, 1995.)으로 본다. 최근 로빈슨(Robinson)은 “역량강화는 개인적, 사회적 과정이며, 자기 자신의 강점, 능력, 창의력과 행동의 자유에 대한 해방감이고, 역량 강화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내부로부터, 특별히 행동하고 성장하는 힘이 자신에게로 소용돌이쳐서 능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2) 사회복지실천에서 역량강화

사회복지에서 권한부여접근은 전통적인 문제해결과정과 달리 문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환경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중심의 접근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에서는 약정보다는 강점을 강조하며, 전문가적 전문성보다는 협력적인 파트너십과 해결 지향적 접근을 하게 된다. 권한부여과정과 전통적인 문제해결과정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역량강화는 다음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한다.

첫째, 불평등과 무력감의 문제와 불평등과 무력감이 낙인과 한 사회의 구조를 통해 유지되는 방식을 교정하고자 시도한다.

둘째, 역량강화는 클라이언트와의 협력 관계를 요구하고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강점에 초점을 두는 기술을 요구하는 상호 작용의 과정과 목적을 반영한다.

셋째, 역량강화는 개인적·대인적·정치적 수준을 포함한 상이한 수준에서 발생하지만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과 연결되어 역량강화의 잠재성을 실현시켜야만 한다.

넷째,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인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는 클라이언트에 의해서만 주도되고 유지 될 수 있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과정을 원조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원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적으로나 고용된 기관을 통해 역량 강화되는 것이다.

(3) 조직의 자체의 역량 강화

조직을 통한 역량강화의 세부적 목표는 조직 형태에 따라 다양하며, 대부분 조직 성격, 즉 서비스 상황, 사람들의 욕구, 기관의 목표와 기능에 따라 결정된다(Hirayama & Hirayama, 1986b).

다문화적 역량은 사회적 다양성과 차별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다문화적 역량 강화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으나 주로 조직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다. 소수민족이나 공동체, 소그룹, 학습조직, 지원 단체, 사회운동기관 등이다. 조직의 다문화적 역량강화는 조직의 다문화적 변화에 명확한 초점을 두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데 둔다.

이들은 다문화적 역량 강화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상황에 대하여 교육, 개인적 사회적 참여, 개입, 실천 등의 방법으로 사회정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 소수자들은 다문화적 조직 개발, 소수민족 정체성, 공동체 역량 강화, 활동가 훈련 등에 관심을 가졌다. 다문화적 조직적인 구조에 관심하고 사회적 부정에 대항하고, 자유를 촉진하는 다문화 조직 개발에 초점을 둔다. 이들에게서 조직의 역량 강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보호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정책 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회적 다양성과 차별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적 역량 강화는 다양한 조직들이 다문화적으로 변화가 되도록 사회정치적인 영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역량강화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조직화되어 조직 구성원과 주요 관련자들이 목적을 이해하고, 공유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역량강화의 목표는 자신과 가족, 이웃에 대한 분노, 죄의식, 좌절 등의 내부, 외부의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방법과 같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또한 역량강화의 목표는 인간관계, 협상, 타협, 주장, 직면, 보호 등의 대인 관계 기술 학습, 지역사회자원 활용, 지식 학습, 협상, 재판, 동맹 등 외부 지지체계를 확장하고 사용하는 학습을 포함해야 한다. 역량강화의 초기 목표는 조직 내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상호 지지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조직이 개인의 참여와 상호 도움의 교류 속에서 힘 있는 자원의 저장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역량강화 조직에서 조직 응집력의 성장은 구띠에레즈(Guitierrez, 1995)에 의해 다음과 같이 기술되었다.

- ① 조직 동일시(Group identification)
- ② 조직의식(Group consciousness)
- ③ 자기효능감(Self-efficacy)과 조직적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4) 사회행동으로서 조직 역량강화

사회행동으로서 역량강화는 양극적 가치 간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능력이다. 이때 사용하는 수단은 의식화, 양육, 촉진, 조정, 동원이며 사회적·조직적 개혁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강화는 지지적, 가능적(enabling) 개념으로 지각된다. 그러나 권력에는 대항, 논쟁이 함축되어 있으며 따라서 권력은 강요, 협박, 갈등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이해된다. 역량강화운동은 다음과 같은 통찰을 생성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 ① 역량강화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서 일어난다.
- ② 역량강화는 그 본성상 문제 중심적이고 갈등 지향적이다.
- ③ 역량강화는 과정, 내용, 결과 중 무엇으로 정의되는지에 상관없이 변화와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결정하는 권력을 가질 수 있으나 여부에 달려 있다 .

조직에서의 사회행동으로서 다문화적 역량강화는 미국에서 출발 한다. 미국에서 소수자들의 다문화적 역량강화는 차별에 도전하고 사회변화에 희망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미국 원주민과 라틴계, 아시아계 특히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통제, 규제, 차별정책으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① 사회행동 다문화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사회정치적인 분야에서 자원을 풍부히 가지고 적극성을 가짐으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들 조직들은 조직적인 연결망, 조직적인 성장과 정치권력에 관여한다. 이들 조직들은 조직적인 연결망, 조직적인 성장과 정치권력에 관여한다. 역량강화 내용은 지지적인 분위기와 사회적 활동을 통한 참여 의사 결정 과정에 책임적으로 참여한다.

캘리포니아 노숙과 주택연합(CHHC: The California Homeless and Housing Coalition)은 1990년 주택권운동과 노숙 연합 등 두 집단이 병합하여 세운 기관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부정으로 인해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고통 받는 소수자들 즉, 노숙자와 공적 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이 조직은 소수자들의 노숙과 주택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복지권, 정치적 옹호와 공공교육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② 다양한 민족적 기관들의 조직이다. 이들 조직은 사회적 다양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목적을 포용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서비스의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조직들의 잠재력을 공식화 하도록 돕는 조직적인 전환 접근법이다.

유색인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18개 사회서비스기관들의 집합체(MHSO)이다. 이 기관 중 15개는 특정민족(베트남, 에디오피아, 멕시코인)이나 인종적 공동체(아시아 계 미국인, 태평양 군도인, 라틴 계 등)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다른 3개 기관은 다양한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주류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온 인종적, 민족적 공동체들과 개인, 가족, 작은 공동체 자신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일원의 상황을 향상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3) 역량강화 실천 평가 지표

(1) 역량강화 실천 원칙 측정 도구

팔슨(Ruth Parson, 1994)은 역량강화와 관련된 여러 문헌을 참조하여 ‘역량강화 실천 원칙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역량강화 실천 원칙의 첫 번째 범주는 환경 주제를 포함한 단결된 공동체 형성으로 보았다. 두 번째 범주는 전문가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그리고 클라이언트 상호 간의 관계이다. 세 번째 범주는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견해와 대처를 강조하는 강점에 기반을 둔 사정이다. 네 번째 범주는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시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각 항목은 5가지로 나누어 평가하였다.(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동의 한다, 전적으로 동의 한다.)

[27차시]

1. 다문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이해

1)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이해

한국 시민들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단일 민족국가, 단일 민족문화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은 우리 사회에 다른 문화와 혈통이 섞이는 것을 불순하게 여기는 정서와 가치관을 형성시켰다.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단일 민족국가, 단일 민족문화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의구심을 따라 한국 사회를 연구하다보면 단일 민족국가, 단일 민족문화는 일종의 신화적인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다문화적 관점에서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문화와 혈통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사회 역역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진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민사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시민사회 운동의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들이 생긴다.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차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1) 시민사회의 이해

시민사회의 개념은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에서 출발한다. 그람시는 자신의 책 ‘옥중수고(Prison Notebooks)’에서 자신의 시민사회관을 피력하면서 부터였다. 그람시는 마르크스로부터 벗어나 시민사회를 단순히 경제적 관계로만 보지 않고 모든 종류의 사회적 상호관계로 파악하였다. 헤겔은 시민사회를 인간들의 본능과 특수한 욕구에 근거하는 갈등의 중심으로서 여러 집단의 물질적, 사적 이해의 영역이라 보았고, 마르크스는 헤겔의 이론에 동의하면서, 부르주아가 중심이 된 집단인 시민 사회는 지배 계급의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다 주장했다. 그와 다르게 그람시는 시민 사회를 사회의 상부 구조 영역으로 보았다. 이 상부구조에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있으며 정치사회는 강제에 의한 기구, 시민사회는 동의에 의한 기구라 정의했으며,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립적인 관계로 상정했다. 하버마스는 초기에 공적 권위영역과 사적 영역을 나누면서 국가를 공적 권위영역으로, 사적 영역을 다시 시민사회 및 공공영역으로 나누었다.

정파에 따른 시민사회의 시각

이념적 시각	행동의 초점	행동의 양식	행동의 단위	행동의 유형
마르크시스트	계급	연대, 투쟁	조직화된 노동	총성, 발언
자유주의자	시장	경쟁	개인	퇴장
공화주의자	대중	참여	유권자, 정당	발언, 총성
보수주의자	국가	복종	신민(subjects)	총성
공동체주의	공동체	시민권리, 의무	이웃	총성 퇴장

출처: N. Deakin, (2001), *In Search of Civil Society*. London: Palgrav, p.8. 주성수, (2006, 3판), 『NGO와 시민사회』, 서울: 한양대출판부, p. 42에서 재구성.

시민사회 운동은 국가의 영역 밖에서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거나 변화시키려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이 ‘국가와 개인’이라는 두 영역을 대중과 함께 ‘사회’라는 영역을 진입시켰다. 사회를 발견한 사회운동은 이상적인 정치 질서의 실현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기존의 정치 질서를 바꾸려는 노력에서 출발 하였다.

(2) 다문화 시민사회의 이해

베넷(Bennett, Christine I, 2003)은 다문화적 시민사회란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을 수용하고 인정하며 공존을 추구하되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 사회적 연대라는 시민사회의 기본틀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라 하였다.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이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과 공존을 추구하는 사회이다. 특히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들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배제하고 이들 간의 공존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라 하였다. 즉, 다문화적 시민사회는 시민권 일반에 해당하는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문화권 등을 포함한다.

① 지구시민사회의 개념

시민사회의 개념이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라는 용어로 발전한 것은 동구 사회주의권이 막을 내리고,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 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그러나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은 매우 애매모호하여 정확하게 그 개념을 확정 지을 수 없다. 현재, 지구시민사회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갈래로 사용된다.

첫째, 자본의 세계화에 대한세력으로 보는 것이다.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시애틀이나 프라하의 시위대 혹은 초국적 기업에 대항하는 그린피스의 행동으로 해석한다.

둘째, 국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혹은 억눌린 사람들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구적 연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아동구호기금(Save the Children) 또는 국경없는 의사회 같은 그룹을 지칭한다.

셋째, 시민의 연결성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서 인터넷 채팅, 평화, 환경, 인권운동가들의 네트워크, 유학생, 지구적 미디어 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넷째, 세계화의 상황 아래서 모든 사람은 국경을 넘어 노동의 자유와 정착자로서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칭하기도 한다.

지구시민사회의 개념의 공통점은 일국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 사회를 초월한 영역, 지구시민사회를 가정한다. 지구시민사회는 가족, 국가, 시장 사이에 존재하고, 일국적 사회와 정치체와 경제 체를 초월하여 가치, 기구, 조직, 네트워크 등에도 존재한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국가의 존재 없이 그러한 사회가 가능 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도 등장한다. 특히 지구시민사회 개념은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 특히 세계화되는 자본주의와 상호 연결되어 발생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구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국가와 공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② 시민사회가 바라보는 세계화의 관점

헬무트 안하이어 등이 저술한 '지구시민사회: 개념과 현실'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관점을 4가지로 분류한다.

세계화의 지지론자 (Supporters)	세계화의 비전과 상호연결성이든, 세계화 의식이든, 지구적 차원의 법치이든 지구화를 찬성하는 개인과 집단이다. 이들은 초국적 자본의 지원세력, 인권을 위한 정의의 전쟁 지지세력, 신기술 발전의 지지자들 모두를 포함한다.
세계화의 거부론자 (Rejectionists)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찬성하지만, 국경의 개방과 지구적 차원의 법치를 반대하는 신보수파가 포함된다. 자본의 세계화는 반대 하지만, 지구적 차원의 법치를 반대하는 좌파도 있을 수 있다. 민족주의자, 종교적 근본주의자, 주권에 대한 외부개입을 반대하는 정통 좌파성향의 반식민주의 세력의 운동세력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포함되어있다.
개혁론자 (Reformists)	지구시민사회 구성원 다수자가 이 진영에 포함된다. 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지구적 연결성이 인류에게 잠재적으로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세계화 과정은 분명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개혁론자들은 국제경제기구들의 개혁을 지지하고, 사회정의의 확대를 원하며 신기술의 사용방향을 결정하는데 철저하고 공정하며 참여적인 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적 차원의 법치와 그것의 집행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개혁론자는 급진개혁과 온건개혁론자를 포함한다.
대안론자 (Alternatives)	지구화 과정을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이들은 지구로부터 이탈을 원하고, 정부, 국제기구,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독립해서 저항의 행동을 취하고자 한다. 이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인 삶의 양식을 개발하고 자체적 공간을 창조하는데 있다.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세계화시대의 도래는 시민성의 조건들을 변화시키고 있어 여러 차원에 걸쳐서 시민적 자질의 모습에 대한 탐색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고(Cogan, J. J. and D. Grossman, 2000), 또한 새로운 국가관,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다. 개념적으로 보면 시민성은 개인의 합리적 행위에 대한 전제와 더불어 소속감을 토대로 하는 것이고, 소속감은 '나는 누구이다'라는 정체성 형성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따라서 시민성은 한 개인의 소속을 정하는 방식, 즉 정체성의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체성과 시민성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정체성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세계화시대에는 개별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가치로서의 시민적 자질을 추구하는 양태가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화시대의 시민성에 대한 논의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전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세계화시대에는 정치적인 동일시를 추구하는 시민성 교육과 다양한 문화적 동일시를 인정하는 정체성 교육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2) 시민단체(NGO/NPO)로서 비영리민간단체

(1) 시민사회 단체란?

시민단체는 비영리조직으로서 NGO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지만, 1990년대에 와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NGO는 1950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결의안 288조가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NGO는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도 UN과 협의적 지위를 인정받은 공식적 조직을 의미했다. NGO가 초기에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정부 간 기구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

지만 오늘날에는 개별국가의 정부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들에 대해서도 NGO/NPO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NGO/NPO에 대한 개념은 학문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는바, 통상적인 용어의 개념으로 파악 한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 민간자원 조직(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 PVO), 제3영역(The Third Sector) 등 유사 개념들이 있다. 국제적인 조직들에 대해 별도로 INGO(International NGOs) 또는 Global NG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를 공식적 사용한다.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그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라고 정의한다.

(2) 시민사회단체의 기능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단체 간의 갈등이나 시민사회와 국가 및 시장 간의 갈등을 조정하며, 시민교육의 기능도 떠맡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개인과 집단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된다. 개인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능력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율정신과 개인권리를 인식하게 되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이러한 NGO의 활동은 바로 시민들이 리더십을 학습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며, 참여민주주의를 배우는 실천현장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의 자율에 근거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기능은 개념과 역할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으나 대략 네 가지다. 첫째, 사회공론의 장이다. 특정문제와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다양한 집단의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둘째는, 국가, 시장의 견제이다. 하버 마스는 국가의 권력과 시장의 재력과 구별되는 시민사회의 파워를 커뮤니케이션 파워로 보았다. 셋째는 사회문제 해결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조직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 시키는 일이다. 넷째는, 사회자본 생산이다. 붕괴되는 공동체의 재건을 가능케 해주는 사회 자본을 창출한다. 다섯째, 사회적 서비스 기능이다. 시민상대의 직접서비스, 소외층의 권익옹호 등을 말한다.

공공영역의 제도적인 질서

	국가제도	시장제도	운동제도
주요 행위 이익	공공재	경제 이익	도덕과 가치
주요행위자	정 당	기 업	운동 조직
행위형태	투 표	소 비	운 동
의사표현수단	표	돈	돈 리
제도적 논리	공평성	합리성	담론성

출처: 이신행 외, (1999), 『시민사회 운동』, 서울: 법문사, p. 158.

(3) 시민사회운동 이론

① 고전적 집합행동 전략 이론

고전적 집합행동이론은 스멜저(N. Smelser) 이전의 집합행동이론들이다. 마르크스, 뒤르켐(E. Durkheim), 베버(M. Weber)는 사회구조와 변동에 대한 일반 이론이 기초하여 집합행동을 제시한다. 마르크스(K. Marks)는 집합행동이 기존의 생산관계에서의 생산력과 생산양식간의 모순이 증대함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였다. 마르크스는 피지배계급의 연대된 이익추구행동이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혁명적 사회운동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고전적 집합행동 전략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체제의 변화에 있다. 고전적 행동이론들은 사회운동이론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집합행동의 주요 변수인 이익, 연대성, 인념, 조직 등의 요인들을 적시함으로써 집합행동의 기초를 닦았다.

② 구조 기능주의적 이론

1950년대를 넘어서자 집합행동에 대한 연구는 혁명보다 사회운동으로 옮겨진다. 서구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이데올로기적 혁명운동보다는 노동운동을 비롯한 이익집단운동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개혁적 사회운동이 사회학자들의 주된 관심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운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들을 활발하게 전개 시켰다. 1953년 스멜저의 '집합행동이론'이 출발이다. 스멜저는 사회운동이 지향하는 변동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 규범 지향적 사회운동과 가치 지향적 사회운동으로 구분하였다. 구조기능론에서 지향하는 집합행동의 사회변동은 규범적 수준의 제도적 변동뿐 아니라, 사회질서의 핵심적 가치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혁명적 변동도 포함된다.

③ 신사회 운동과 자원동원이론

1960년대 이래의 사회운동은 첫째, 경제성장 지향적인 '전후적인 구조'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에의 문제제기로서, 둘째 사회주의 운동이나 노동운동, 마르크스주의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대조 속에서 '참신성'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르러 기존의 산업 사회적 계급갈등이 제도화되면서 노동운동의 급진성은 점차 소멸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갈등에 기반 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선진 서구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적 빈곤과는 이질적인 다양한 사회문제를 쟁점화 시켜, 학생운동이나 여성해방운동, 평화운동, 환경·생태운동, 인종문제와 관련한 소수민족의 운동 등의 사회운동이 분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을 분석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이 유럽에서는 '신 사회운동 이론'이고, 미국에서는 '자원동원 이론'으로 발전 하였다.

집합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적 요소를 확장한 것이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이다. 자원동원이론은 집합행동을 개인이나 사회체제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합행위자를 조직으로 본 것이다. 자원동원 이론은 개인이나 사회적 불만은 어느 사회나 있으므로 불만은 사회운동 발생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집합행동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의 조건이 사회운동발생과 전개의 핵심이라고 본다. 자원동원론은 종래의 집합행동론과의 불연속성, 차이성을 강조하고 그것들에 대한 대항적인 이론으로서 등장해 왔으나, 80년대에 들어서서는 미국 사회운동론의 주요한 흐름이 됨에 따라 기존 접근의 수용, 통합에 의해 이론의 풍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자원동원론과 신 사회 운동이론의 기본 성격과 주요논점

		자원동원론	신사회운동론
1. 분석 시각	방법론	실증주의적(가치중립적) 양적접근	이념주의적(가치 연관적) 질적 접근
	비판적 기준	집합행동론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분석의 초점	동원과 전략적 유효성	정체성과 가치지향
	분석의 단위	사회운동조직	사회운동과 그 성원
	이론의 사정	범용적 운동 모델의 구축	현대사회론
	구조주체성	주체성 모델	주체성 모델
	분쟁모델	분쟁상황에서의 조직화와 동원	분쟁의 표현으로서의 사회운동
운동의 특성	2. 행위주체	행위주체 초점	양심적 구성원·지지자
		계층적 기초	신 중간층
		주체의 위치	자원제공자
	3. 이슈특성	이슈의 다양성 풍요로운 산업사회에 있어서 사회문제	소비문제에 대한 이슈 국가·자본의 개입으로부터 시민사회의 방어 근대화비판·복지국가체제
			자율성, 정체성, 자기결정성, 자기 한정적 급진주의
	5. 행위양식	4. 가치지향성	자유·평등·민주주의 합리성·전략적 유효성
		행위모델	수단적 합리적 행위
		행위특성	제도적 행위와의 연속성
		당국과의관계	작위요구적
		내적구조	조직·네트워크지향

출처: 사회문화연구소편, (1999), 『사회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p. 190.

④ 구성주의 이론

구성주의 이론은 자원동원론 이론과 신 사회운동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다. 멜루치(A. Melucci)는 전통적인 집합행동 이론들이 ‘행위자 없는 행위자들’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면, 근래의 자원동원이론과 신 사회운동이론은 ‘행위자 없는 행동’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뮐러(C. Mueller)는 자원동원이론이 불만, 집합적 정체성, 이데올로기 등 사회운동의 중요한 요소를 제외시켰다고 본다. 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운동연구로서 첫째, 행위자의 재 개념화 둘째, 불만, 자원, 기회 및 의미의 상호작용 셋째, 기존의 사회정치문화 속에서의 대립적인 요소를 발현시키는 의미의 특정화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3) 세계화와 시민사회 운동의 과제

(1) 세계화의 이해

투어라니(Alain Touraine)는 한국사회학회가 주최한 학술토론회 자리에서 ‘세계화와 사회운동(Globalization and Social Movement, 1998)’에서 세계화의 다섯 가지 모습들을 제시하였다.

① 인류는 19세기 초 내연기관의 발명으로 제 1차 산업혁명을 겪었고, 전기의 발명으로 제 2차 산업혁명을 겪었으며, 오늘날 다시 정보화로 제3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국경을 뛰어 넘어 정보와 기술이 교환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 기술이 사회조직을 바꾸지

는 않으며 세계적으로 통일된 문화를 낳는 것도 아니다.

② 오늘날 무역보다 더 빨리 성장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세계 금융시장이다. 무역의 규모는 자본의 이동에 비하여 불과 2-3 %에 불과하다. 최근 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가 부재함을 반영하고 있다. 세계화는 즉 한 국가의 금융위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히 다른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뜻한다. 금융자본의 막강한 위력은 실은 정보산업의 발전과는 별로 무관한 현상이며 통제력이 없는 자본주의 체재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③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대한 책임은 신흥공업국(NIC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과 함께 선진국에도 있다. 이처럼 세계무대에서 신흥공업국의 중요도가 더해지는 것은 세계화의 또 다른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다.

④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회주의 국가의 멸망의 결과이다. 미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할리우드가 세계의 대중문화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다는 점이다.

⑤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는 여전히 강력한 정치적 단위로 남아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실업, 사회보장과 같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국민 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세계적 금융자본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정부이기 때문이다.

힐퍼딩(Hilderding)은 작금의 서구 사회의 모습을 산업자본을 능가하는 금융자본의 지배력, 국가 간 갈등의 격화, 사회갈등의 심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수주의의 등장,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나타내었다.

투어라니(Alain Touraine)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세계화는 현상이고 사실이라기보다는 과장된 이데올로기(ideological construction)라고 주장하였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동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로 일관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은 여전히 국민경제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경우에는 국가가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세금과 복지제도를 통하여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는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보호무역의 담장을 높이기도 한다.

투어라니(Alain Touraine)는 세계화 시대의 사회 정치적 세력의 흐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세계 시장 경제가 국제 경제와 국내 경제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어떻게 국내적으로 사회 정치적 세력이 어떻게 조직되며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아는 일이 매우중요하다.

둘째, 이제는 시장 경제에 반대하는 집단행동과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을 구분해야 한다. 산업화 과정에 있는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소유주에 대항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의 이익을 반영하는 사회 정책을 반대한다.

셋째, 오늘날 환경운동이나 여성운동은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운동이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은 여전히 국민 국가의 내부 수준에서 조직된다. 시민운동의 세계적 차원과 국내적 상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기존의 정당들(좌파권 우파권)이 다 같이 중도로 수렴할 것이 예상되므로 극좌 및 극우 집단은 기존의 정당체제 밖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력도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불란서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집 없는 사람, 실업자, 이민자 등과 같이 지금까지 사회운동에서 소외되었던 층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이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와 같은 지식인, 사회운동가가 아니라 영화감독, 배우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계급적 성향을 띤 것도 아니고 갈등적 이념이 아닌 공동체적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앞으로의 사회운동이 '개량적일까 혁명적일까'는 정부가 경제발전에 국가 정책의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국내적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섯째, 세계화는 결국 세계 경제 문제의 국내로의 전이를 가져와 국내에서의 사회갈등을 증폭시킨다. 그 결과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갈등의 해소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 집단도 과거와 같은 노조가 아니라 의사, 간호원, 교사, 연구자, 언론인, 배우 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며 기존의 노사갈등이나 정당 구조와 무관한 자유로운 형태의 운동이 많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장 경제가 주도하는 세계화가 세계의 사회변화의 주된 요인은 아니다. 세계화는 많은 혜택과 함께 사회문제도 야기한다. 문제는 세계화와 같은 국제적인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흐름들을 국민 국가 내에서 이를 얼마나 해소하느냐이다. 현재의 세계화가 20세기 초 힐퍼딩이 묘사한 것처럼 사회세력간의 무한대의 경쟁과 갈등으로 치 달을 것이라고 믿을 수는 없다. 문제의 관건은 그 사회가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가이다.

(2)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

① 사회운동도 생성, 발전, 변화 쇠퇴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운동도 생성, 발전, 변화 쇠퇴한다. 마이레터(Rosa Mayreder)는 사회운동의 전형적인 네 가지 변화단계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생성으로서 이데올로기 단계이다.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상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발전으로서 조직화 단계이다. 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조직을 갖추게 된다. 세 번째는, 변화로서 독자적인 운동의 확립 단계이다. 근본주의와 현실 정치라는 운동의 양자택일이 첨예화 되고 운동조직은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뉘게 된다. 네 번째는, 쇠퇴로서, 권력획득의 단계이다. 어느 한 분파가 권력을 획득하고 운동이 스스로 권력의 한 요소가 됨으로서 마무리 하게 된다.

② 사회운동의 전략적 대안이 부족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적 외적 변화된 상황에서의 전략적 측면의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었다. 첫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진 조직들이 '조직의 운영(인사, 재정, 정책생산, 조직 구조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시장이 세계화가 되면서 시장의 영역이 좌파적 시장, 우파적 시장 등으로 다양해 졌다. 나아가 일국의 민족적 시민사회 운동에서 유효하던 사회적 이슈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할 정도로 단일의 국제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변화된 상황에서의 새로운 의제의 발굴이 취약하다. 셋째, 불확정적 시대 상황의 환경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적절한 전략적 대응 방식을 찾아 내지 못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방식이 미지수이다. 아울러 여전히 세계화 체제 내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식 또한 근원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③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시민권 이슈

요점은 새로운 운동의 주장이 시민의 권리(Citizenship)에 모아지고 있다. 시민사회운동을 다문화 사회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정의하는 것은 개인, 집단의 자율성의 문제, 전통적이며 협소한 정치적인 이슈의 주장들과는 분명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사회의 인적 구성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조차 시민의 개념을 국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에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한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자시 한계를 갖는다. 이제라도 시민사회 진영은 다문화 사회에서 당면한 새로운 사회적 약자들인 이주민들의 이슈들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안고 시민적 권리 특히 문화적 권리와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다문화 시민성과 한국 시민사회

1) 다문화 시민성의 이해

세계화는 새로운 세계관과 국가관, 시민성을 요구한다. 세계화 자체가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관과 시민성에 도전을 주고 있다. 세계화는 개별사회의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이다. 세계화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다양한 시민성, 정치적인 동일시를 추구하는 시민성, 다양한 문화적 동일시를 인정하는 정체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 시민성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문화적으로 다양성, 국적이 다른지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등의 주제들과 밀접하게 관계

(1) 국민의 정체성으로서 시민성의 개념

국민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혈통적-문화적 측면(ethnic nation), 정치적-법적 측면(civic nation)을 강조 하는 요소가 혼재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법적 측면(civic nation)은 획득하는 것으로의 특징이 있어 국민의 정체성을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국민으로서 시민의 소속과 권리 및 의무는 시민에게 교육의 기회, 복지 혜택, 정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식을 규정하며, 시민의식과 그에 따르는 시민참여

는 역으로 시민의 지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된다.

시민성(citizenship)에 대하여 킴리카와 노만(Kymlica and Norman, 1995)은 법적 지위로서 시민성과 바람직한 시민의 덕성 활동으로서 시민성을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시민성 역시 국민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겠다.

법적 지위로서 시민권	- 국적 또는 특정 구가에 대한 소속 -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 사회적 약자인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
바람직한 시민의 덕목과 활동으로서 시민성	-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덕성 - 시민의 활동

출처: Kymlica, William, Wayne Norman,(2000),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를 재구성.

① 국민성에 대하여 혈통적-문화적 측면(ethnic nation)의 규정도 쉽지 않다. 단지 외적인 면이나 출신만을 보아서 ‘그 사람의 문화는 어떻다.’ 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브로드킨(Brodkin, 1998)은 민족과 인종에 대한 외적 규정(ethnoracial assignment)과 내적 정체성(ethnoracial identity)을 개념 규정하였다. 민족과 인종에 대한 외적규정이란 외부인이 누군가를 특정집단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내적 정체성은 개인이 외적으로 규정 되는 것에 대하여 그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규정하는가이다. 예를 들면, 한국인 손자가 미국에서 왔다. 할머니는 반가워 손자가 한국인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손자는 자신은 미국인이라며 한국인임을 부정하는 경우이다.

② 법적 지위로서 시민(citizen)이란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는, 출생이나 귀화를 통해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된 사람”이다. 같은 사전에서는 시민성(citizenship)을 “시민으로서의 권리, 혜택, 그리고 의무를 부여받은 지위”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도 다문화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을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자녀도 기르고 있다. 비록 필리핀이 고향이지만 한국인으로서 정체감도 있다. 어느 날 가정 형편이 결혼이민자는 공장에 취업하러 갔다. 그러나 공장에서 그를 한국인으로 받아주지 않았다. 여전히 외국인으로 취급받았다.

(2) 다문화 시민성의 정의

① 다문화 시민성의 논의

2002년 6월 17-21일, 이탈리아 벨라지오에서 ‘다문화 국가의 민족적 다양성과 시민교육(Ethnic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Multicultural Nation-States)’ 학술대회가 열렸다. 록펠러재단의 후원을 받은 워싱턴대학의 다문화 교육센터가 주축이 되었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은 다문화적 민주사회에서의 시민과 시민성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참가국: 브라질, 캐나다, 인도, 이스라엘, 일본, 팔레스타인,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미국 등 12개국이 참가하였다. 캐나다 정치학자인 킴리카(Kymlica, 1995)와 뉴욕대학의 인류학자인 로살도(Rosaldo, 1997)가 다양성과 시민성에 대한 이론을 구축하였다.

② 다문화 시민성

‘다문화 국가의 민족적 다양성과 시민교육(Ethnic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in Multicultural Nation-States)’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다문화 시민성 정의에 대하여 ‘민족 집단들과 이민자 집단들이 국가의 시민 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문화적 시민성이란 문화 다양성과 입헌 및 민주적인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속한 문화를 재구성하고 공통문화를 창출 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이다. 킴리카는 이러한 개념을 다문화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으로 로살도는 문화적 시민성(cultural citizenship)이라고 하였다. 1920년 드라쉬슬러(Drachsler)는 이를 문화적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라 불렀다.

다문화 시민사회의 목표 시민들은 정의와 평등과 같은 국가의 보편적 이상을 존중하고, 이 이상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헌신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시민들은 사회적, 인종적, 문화적,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후 여러 학자들은 다문화 시민성과 유사한 개념들을 정의하였다.

구트만 (Gutmann, 2004)	다문화 민주 사회의 특징은 시민적 평등, 관용, 상호인정(recognition)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과 상호인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교육의 핵심 요소로 숙의(deliberation)를 들었다.
실바 (Gonçalves e Silva, 2004)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자신이 속한 특정 인종, 사회, 문화 집단의 권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학생의 시민의식과 주체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멀피 시그메츨 (Murphy-Shigematsu, 2004)	국가의 법적 시민이 된다는 것이 반드시 주류 사회와 제도 속에 구조적으로 편입된다거나 국내 지배 집단의 다수 구성원으로부터 시민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시민의 인종, 문화, 언어, 종교는 종종 그가 소속 사회의 시민으로 간주되는가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3) 다문화 사회와 시민성 배제

한 나라의 다수자가 소수자에 대하여 갖는 태도는 그 나라의 시민성을 결정 한다. 일반적으로 국적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시민성이 혈통적-문화적 측면(ethnic nation)이건 정치적-법적 측면(civic nation)이건 다수자 주류문화가 소수자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서 다수자는 일반 시민을 말하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전통적인 시민사회 진영도 포함한다.

① 민족주의와 차별의식

인류 사회에 인종차별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자본주의의 국제화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한다. 민족 간 갈등과 민족 문제 역시 근본 원인이 제국주의적인 영토 나

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근대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나 국민이 필요했고, 그것을 규정하려면 이민족이나 비국민의 존재가 필요했다고 본다.

다수자들의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는 인종주의(racism),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외국인 혐오(Xenophobia) 등의 개념으로 표현된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 시절 이전에만 해도 느끼기 어려웠던 '민족성'이 한일합방을 계기로 탄생했고, 또 해방 이후에도 성장을 거듭해왔다.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낳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민족은 식민지 시절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냉전 시대에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개인을 자발적으로 희생시키는 데, 유용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성원을 동원하도록 사용된 민족 개념은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쉽게 전화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는 시민사회 단체로부터도 이주민들이 시민성이 외면당하거나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주민들의 시민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현안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도 이미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② 인종차별주의 유형 분류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상징적 인종주의가 존재한다. 중국동포들에 대한 건설현장 개방이 오히려 내국인의 일자리와 임금삭감의 분리 주의라는 생각에 이들의 추방을 외친다. 인종주의의 유형 변화를 다루는 논의로 대표적인 것은 '상징적 인종주의(symbolic racism)' 또는 신인종주의(new racism)에 대한 주장이다. 상징적 인종차별주의는 미국인(백인)들이 평등,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평등, 자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수 인종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신인종주의는 백인들에 비해 흑인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오히려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백인이 역차별 당한 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에도 인종차별주의 적인 면모는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웜머(Wimmer, 1997)는 인종차별 및 배제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비판하는 논리를 포괄하여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웜머의 인종차별 및 배제의 유형은 한국의 시민사회 진영이 갖는 이주민들의 무관심, 혹은 배제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웜머(Wimmer)의 네 가지 유형론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결국 두 가지 대립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종차별주의는 실제 이익의 충돌이나 갈등으로 인해 강화되는지, 아니면 다수자들이 이미 습득하고 있는 차별적인 태도와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놓고 서로 대립하는 견해로 나누었다. 웜머의 인종차별 및 배제의 유형을 참고로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 진영의 인종차별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과 이주민의 경쟁 관계

이주민 집단과 원주민(내국인) 집단 간의 경쟁과 현실적 이익의 충돌 때문에 인종차별주의가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인종차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다. 노동시장분리로 인해 실제 원주민과 이주민이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외국인 혐오는 직접적인 취업경쟁이나 이익 갈등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하락이나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더 많이 확산된

다는 견해가 많다. 시민사회 진영이 내국인과 이주민의 경쟁 관계로 인한 자국민 보호를 이주민에 대한 무관심과 배제의 논리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다.

② 가치와 문화의 혼란

이주민과 소수자는 본질적으로 원주민(내국인)과는 다른 이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민족성과 국민성 이주자의 '이질성'은 이들을 배제하기 위한 구실로 과장되기 쉽다. 혹 이주민에 대하여 이 땅을 떠나라고 배척하지는 않아도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즉 이주민들은 한국인의 언어, 문화, 풍습, 예절 등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이 변해야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문화 갈등의 원인을 이주민에게 돌리고 동화를 강제하는 통합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논리이다.

③ 지배 담론으로서 다문화

한국인 보다 정치, 경제 등에서 열등한 나라 출신의 이주민, 한국인 밑에서 일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한국 사회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문화적으로 낮은 사람들의 등의 편견적 인식이 시민사회에도 녹아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시민사회 진영에도 스며들어 다문화 논의를 주류 문화에 통합 흡수되는 이주민 문화, 노동시장분절로 인한 노동자들의 분리 통제, 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통치 질서의 구축 등의 이론적 인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이주민 정책들을 다문화 지배집단의 담론(discourse) 정도로 취급한다. 이러한 지배담론이 다수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외국인 혐오증을 동반한 인종차별주의가 형성되기도 한다.

④ 다수자 집단의 특성

인종차별주의의 근거를 이주민이나 소수인종의 특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다수자 집단의 특성으로 설명하는 입장이다. 국민교육에 의해 주입된 문화적 민족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민족, 국적과 혈통이 일치된 관념적·고정적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타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의식을 포함한다.

2) 한국 사회의 다문화 시민성 수용 상황

인종차별주의, 인종주의, 인종적 배제주의 등을 설명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종차별주의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인종차별주의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들을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실제 분석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함께 혼재하는 경우가 더 많다.

(1) 이주민 배제 이론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 분석하는 EUMC(EU Monitoring Center for Racism and Xenophobia 유럽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모니터링 센터)의 보고서 『Majorities' Attitude Toward Minorities: Key Findings from the Eurobarometer and the European Social Survey』(2005)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연구다. EUMC가 유럽의 사례이긴 하지만 한국사회의 이주민배제주의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분석의 틀이 도기도 한다.

EUMC 보고서를 집필한 코엔더스(Coenders) 등은 인종적 배제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을 현실갈등이론(Real Conflict Theory)과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뎀머(Wimmer)의 논의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대립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① 현실갈등이론에 따르면, 사회에서는 언제나 희소한 자원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며 인종적 배제주의 역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타 인종-타민족을 경쟁에서 밀어내려 하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분석적 차원에서 외부 위협과 인지된 위협으로 구분한다. 외부위협은 이주민과 내국인이 일자리나 생업에서 상호 경쟁하는 경우이다. 주로 교육수준이 낮거나 슬럼가에서 발생 한다고 본다. 인지된 위협은 외국인을 실제로 위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보도 태도들을 볼 수 있다.

② 사회정체성 이론은 내집단(ingroup)을 옹호하고 반대로 외집단(outgroup)을 부정적으로 보는 태도로부터 출발한다. 이 이론은 자기가 속한 민족-인종집단을 도덕적 문화적으로 열등하게 인식하는 태도로 인해 인종적 배제주의가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코엔더스는 현실 갈등 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을 상호 대립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보완적 관계로 보았다. 즉 자신이 속한 민족-인종 집단을 동일시하고 타자를 배제하는 정체성의 메커니즘이 현실적인 경쟁에서 강화 된다고 본다.

(2) 이주민 배제주의 분류 특성

코엔더스는 종족적 배제주의를 네 가지 가설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코엔더스의 이러한 분류는 배제의 원인으로서는 일면 분석적인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사회적 다수자에 의한 사회적 소수자 지배라는 사회적 현실의 원인을 반영하지 못한 분류로서 한계도 보인다. 그러나 현실 갈등 이론과 사회정체성 이론이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의 배제에 따른 분류로 보고 소개한다.

① 종족적 배제주의는 인종의 소수집단과 비슷한 사회적 지위가 잇는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② 타 인종, 타민족 소수자로 인한 사회적 위협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배제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③ 인종 간 경쟁의 실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배제적인 태도는 더 강하게 나타난다.

④ GDP가 낮은 국가, GDP 중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인종 간 경쟁의 수준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제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3) 한국 사회의 이주민 배제주의 성찰(다문화 시민성 수용)

EUMC는 인종적 배제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두 가지 조사 자료, 즉 유럽의 배제정도 측정(Eurobarometer)과 유럽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European Social Survey)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두 조사에 포함된 내용을 토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황정이, 2007)이 한국의 인종적 배제주의에 대한 10개의 하위 차원을 소개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제주의는 강하지 않은 편에 속한다. 최근 들어 결혼이

민자에 대한 사회적 홍보의 효과로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이주민의 문제를 시민사회의 주요 의제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시민성에 대하여 시민사회 단체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③ 한국과 EU 조사결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황정미, 2007)이 조사한 한국의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점 척도로 2.85 이었다. 중립적 입장에서 약간 반대 입장으로 기울어져 있다. 즉 한국사회는 종족적 배제주의에 대하여 그다지 동조하고 있지 아노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젊을수록, 고학력자 일수록 낮다고 보고한다. 직업별로는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무직자들이 상대적으로 배제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학생층이 인종 민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주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 되면 종족적 배제주의가 한국사회에 급속히 확산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

본 조사에서 이주자의 송환정책(유럽 0.35, 한국 0.63) 말고는 대체적으로 한국이 유럽보다 인종차별지수가 낮게 나오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저항(유럽 0.35, 한국 0.35), 다문화사회 한계(0.7, 한국 .059), 이주자 시민권 반대(유럽 0.4, 한국 0.35)로 대체적으로 한국이 유럽보다 배타성이 더 낮고 더 관용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양성에 대한 저항(유럽 0.55, 한국 0.37)에 대하여도 한국이 유럽에 비하여 관용적이다. 유럽보다 한국이 이주민에게 더 관용적임에도 다문화적인 정책과 의제에 대하여 시민사회진영의 움직임이 정부나 학계 보다 의제 형성이나 활동성이 적극적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3) 시민사회 단체의 다문화 시민성 관련 의제 형성 과제

한국사회는 아직 국민의 2% 정도가 이주민이다. 일본의 경우도 국민의 2%가 이주민이다. 민족주의와 구가주의가 강한 한국과 일본이 다문화 사회로 자기 개방을 해 나가고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5% 이상이 되어야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인구의 양적 구성에서는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로의 준비가 서둘러져야 하는 것인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인 인구 구성이 점차 노령화 된다는 의미이다.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여 미래의 다문화 사회의 비전, 더불어 행복 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략, 다문화 시민성을 가능케 하는 조건,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 교육,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 진영의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초, 중등학교에서는 다문화적으로 교과서 개정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다문화 관련 자기 학습조차 부족한 실정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

(1) 다문화 사회 이행단계에 따른 사회문제 예측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단계	현상	예측할 수 있는 사회문제
1단계:	이주민이	-주류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통용되던 민족국가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	전체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가시적 비중 증가	구성원에 대한 혼란 -이민자에 대한 주류사회의 심리적 저항과 차별적 태도 -행동의 다양성이나 가치관의 상이에 따른 규범의식 의 저하
2단계: 다문화사회로의 전환단계	다문화가족의 형성 -체류기간 연장에 따라 독신 이주자들 서서히 가족 형성, 출신 국별 이주민 공동체 형성 (집단적 거주지 출현)	-다문화 가족 내 가족구성원 간의 무관심과 정서적 유대관계의 악화 -언어장벽으로 인한 가정 내의 의사소통기능의 악화 -다문화가족의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현상 -소수의 인종공동체의 사회적 고립 혹은 사회적 빈 곤계층화 -인종에 따른 소득격차로 인한 새로운 차원의 사회 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일체감의 해체
3단계: 다문화사회의 정착단계	다문화 가족 내에서 2세가 사회진출하면서 이주민 공동체 재생산	-이주민 2세의 인종적 정체성의 혼란 -교육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부담의 증대(조세, 의료비와 교육비, 사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부담) -이주민 2세의 경우 가족 내에서 사회화를 통해 습 득된 주류사회의 문화사회에서 혼란과 갈등, 이들 집단의 범죄와 실업문제 가시화 -인종 간 사회적 마찰의 증대 -사회적 일체감의 해체 -주류문화에 대한 저항표면화(집단소요 등)로 인한 사회적 불안의 가증

3. 다문화 시민성 교육

1) 문화적 민주주의와 다문화 시민성 내용

(1) 문화적 민주주의

1960년대와 70년대 시민권 운동 이전에 미국 및 서구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동화주의 시민 교육은, 다양한 집단 출신 학생들이 지닌 문화와 언어를,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동화주의 시민교육의 결과, 많은 학생들이 소속 집단의 문화, 언어, 인종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결국 소수 인종 집단의 구성원들은 종종 소속 공동체의 문화와 국가 시민 문화 양쪽으로부터 모두 주변화 되곤 한다. 어느 쪽에서도 자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류 지배 문화의 언어와 문화를 획득한 경우에도 그들은 종종 인종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시민 문화 속에 구조적으로 편입되거나 완전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시민사회 진영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다문화 시민성은 이주민들이 다양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며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문화적 민주주의가 있다. 문화적 민주주의는 이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속 집단의 언어를 가정, 학교 등 일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2) 다문화 시민성의 국제학술 대회 내용

① 다양성과 시민교육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 내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인종적·민족적·문화적·종교적 소수 집단들에 의해 문화적 상호인정과 권리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교육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뱅크(Banks, 1997)는 다문화민주사회에서 시민성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보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는 의사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취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 등을 학생들이 습득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본다.

2002년 이탈리아 벨라지오에서 개최된 ‘다양성과 시민 교육’에 대한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구상한 다문화적 민주 사회에서의 시민과 시민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민으로서의 시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개 되었다. 다문화적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위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기 되어 보고서로 기록되었다. ‘다양성과 시민교육: 세계적 관점들(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계적 이주 및 세계화의 정치적, 경제적 측면이 국민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위협하고 있다.

나. 국가 간 경계는 여전히 굳건하다. 그러나 국가의 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 UN 소속 국가는 1950년 80개에서 2002년 191개로 증가하였다.

다. 국제적으로 세계화와 국가주의가 공존하는 한편, 종종 양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라. 세계의 교육자들은 시민교육의 과목과 프로그램을 재편성하고 재개발 해야 한다.

마.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소수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급속한 세계화 및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종교적 소수집단의 상호인정과 수용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도 제구실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태도, 기능을 획득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바. 시민성과 시민교육이 다양한 국가별로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상이하게 정의되고 실행되고 있다.

사. 국제단체가 이러한 공동이슈와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성으로 워싱턴 대학의 다문화교육센터는 시카고 스펜서재단과, 워싱턴 대학의 지원을 받는 국제협의 위원회(Intrenational Consensus Panel)를 구성하였다.

(3) 민주주의와 다양성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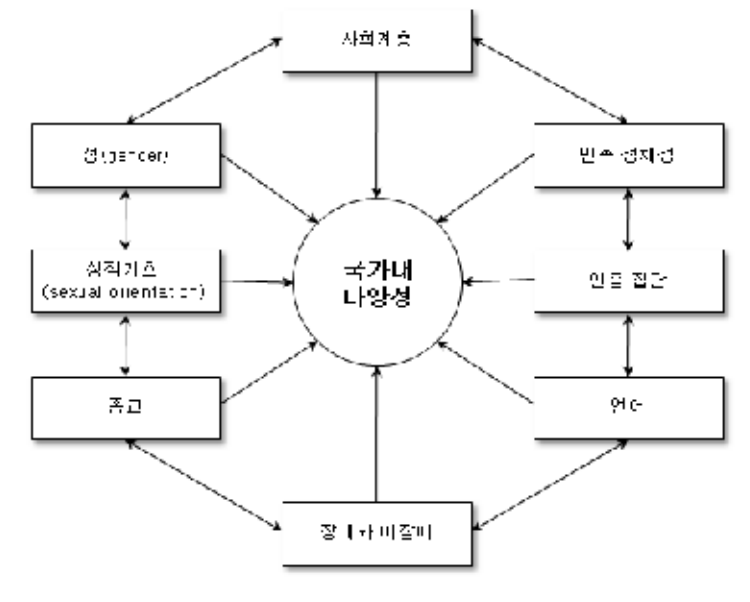
시민성과 시민교육의 개념은 세계 각국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문화적 경계 및 국가적 경계 안에서는 물론이고 그 경계를 넘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과 같은 문제들이나, 개념들, 그리고 이슈들은 공유되고 있다.

① 다문화 시민성 교육을 위한 원칙과 개념

국제협의 위원회(Intrenational Consensus Panel)는 민주주의와 다양성 시민교육 가이드라인(4가지 원칙과 10가지 개념)을 제안하였다. 『민주주의와 다양성: 세계화 시대의 시민교육의 원칙과 개념(Democracy and Diversity: Principles and Concepts for Educationg Citizens in a Global Age』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나. 다문화 시민성의 다양성 변수

민주주의와 다양성 보고서에서 다양성이란 다문화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집단들의 내부 및 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종, 문화, 민족, 언어, 종교의 광범위한 편차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양성에 대한 폭 넓은 관점을 제시하면서, 다양성의 변수들(인종, 성, 사회계층, 종교와 같은)은 복잡한 양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상호작용성과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출처: J.A. Banks(2001),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s, Curriculum, and Teaching*(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p.76를 모경환 외 역, (2008). 다문화교육입문. 아카데미하우스. p.35에서 재인용

2) 다문화 시민성 교육 과정

(1) 기여적 접근법(contribution approach)

다문화교육이 요구되는 초기 상황에서 자주 나타난다. 한국인은 이주민 문화에 대하여 이주민은 한국인 문화에 대하여 독특한 언어, 음식, 춤, 음악 그리고 문화적 유물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다.

(2) 부가적 접근법(additive approach)

이 접근법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구조나 목적, 특징은 변화시키지 않고 문화와 관련된 내

용, 개념 그리고 주제를 교육과정에 덧붙이는 것이다. 기여적 접근법과 다른 것은 교육내용이 일회적이지 않고 체계화 된다. 하나의 단위, 교과서, 과정 등을 구성한다.

(3) 변혁적 접근법(transformation approach)

변혁적 접근법의 주요 목표는 문화란 상대적이며 위계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이라는 공통의 측면에서 모두 소중하고 자유롭게 평등하며 함께 살아갈 시민이라는 것이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문화와 자신이 현재 학습하고 있는 문화의 1 관점을 우열 없이 동등하게 바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변혁적 접근법의 중요한 목적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 내용의 결론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이를 증명하고 정당화하는 방안을 발달시키는 데 있다.

(4) 의사 결정 및 사회적 행동 접근법(decision-making and social action approach)

이 접근법은 학생들이 그동안 간과되었던 억압과차별의 대상이었던 다양한 민족 및 지역 소수집단의 삶을 돌아보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도록 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불공정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3) 다문화 시민성 교육과 국가 정체성

(1)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다문화 시민성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이 심화되고 문화적 인정과 권리에 대한 소수 집단의 주장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동화주의적 시민성 개념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 된다. 킴리카(Kymlicka, 1995)는 동화주의적 시민성이 아니라 다문화적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문화적 시민성은 자신의 문화 공동체 및 국가 시민 문화 모두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필요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뱅크(Banks, 2004b; Kymlicka, 1995)는 다문화적 시민성은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종교 공동체가 국가 시민 문화 속에 반영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 시민 문화가 변혁될 때 그들은 정당한 존재로 인식될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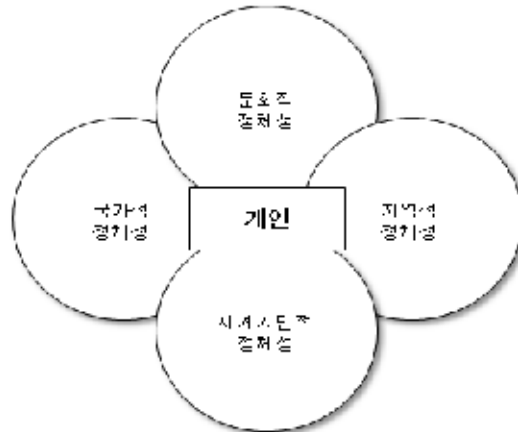
그러나 다문화적 시민성에 기초한 이주민의 정체성은 고정적이고 정체된 것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며, 상호 중첩되고, 흐름이 있다. 뱅크와 킴리카(Banks, 2004b; Kymlicka, 2004)는 다문화적 정체성의 개념에 따르면 문화적 애착심이 부재하는 시민보다는 소속 공동체의 문화, 언어, 가치에 명료하고 사려 깊은 애착심을 지니고 있는 시민이 국가에 대한 반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2) 다문화 시민성과 국가 정체성

뱅크(Banks, 2004b)는 다문화적 시민성 교육은 국가 간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해, 다른 국가에 대한 명료한 태도, 그리고 세계 공동체에 대한 반성적 정체성을 함양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해야 한다고 본다.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무분별한 애착은 명료한 목표와 정책을 지닌 통합된 국가 발달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주민들이 반성적이고 명료한 문화적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도 명백한 정체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분별한 국가주의는 반성적이고 긍정적인 지역적 정체성과 세계

시민적 정체성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 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의 세계시민적 정체성 함양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세계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적 경험과 정체성은 역동적으로 상호 관련을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보았다.

문화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시민적 정체성



출처: J.A. Banks, Ed.(2004),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San Francisco: Jossey-Bass를 모경환 외 역. (2008). 다문화교육입문. 아카데미하우스. p.40에서 재인용

(3) 한국에서의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내용

다음은 한국다문화학회지에 실린 다문화적 시민교육의 내용에 대한 예시를 소개하였다. 채워야 할 내용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제시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교육 영역	다문화적 시민 교육의 내용 (목표: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		
	통일성	다양성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	한국적 특수성
교육 내용	■ 시민으로서 지식 ✓ 사실: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역사적 맥락 ✓ 개인적 역할: 위의 사실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요구되는 역할 ■ 시민의 가치 ✓ 자기이해: 자신의 편견 인식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추구 ✓ 타인의 고려: 타인에	■ 문화교육 ✓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유사점 및 차이점,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수용 ✓ 문화의 상대성 ✓ 문화의 정체성 ✓ 문화에 대한 태도: 민감성, 포용력, 문화인식 ■ 편견극복, 평등 추구 ✓ 평등과 불평등: 성, 사회경제적 지위, 계층, 연령	■ 통일에 대한 이해 ✓ 통일 ✓ 통일의 필요성 ✓ 남북통일과 세계화와 의 관계 ■ 북한에 대한 인식 ✓ 북한 주민, 청소년 ✓ 북한 주민, 청소년에 대한 친근감 ■ 통일에 대한 효능감

	대한 관용 및 이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망 추구 ✓가치존중: 자유, 정의, 공정 등에의 헌신 ■ 시민으로서 기능 ✓판단: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토론, 토의 ✓행동: 참여, 청원	✓고정관념 극복: 민족 및 인종집단, 외국인, 인종주의 ✓긍정적인 태도 ✓개방성 및 평등성: 인권, 평등, 자기와 타자 ■ 공존을 위한 협력 ✓가족 ✓우리 지역 ✓우리나라, 다른 나라 문제 ✓지구촌의 문제 ■ 복수적 정체성 형성 ✓ 문화적 정체성 ✓ 지역적 정체성 ✓ 국가적 정체성 ✓ 세계시민적 정체성	
--	---	--	--

출처: 김홍운.(2008).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교육방안, 「다문화 교육연구」, 창간호, 1권,1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pp. 74-75.

다문화적 시민성은 나와 다른 이질적인 문화들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대면하는 다양한 하위문화들에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와 다른 민족과 인종, 국가의 문화들은 그것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 상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으나,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대면하는 하위문화들은 나 또한 이러한 하위문화에 대하여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당연시 할 수도 있으므로 그 적용상황을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일상적 삶에서 다문화적 시민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일상적 삶의 문화에 유의하고 이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4) 일상에서의 다문화 시민사회 교육

(1) 다문화 의제형성

포스트모던 사회의 일상은 모두 다문화적이다. 전통과 기존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학문, 예술, 종교, 경제활동 등에서 다양하게 일어난다.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소수자 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계층문화 등이 모두 다문화적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공존·공생의 지평을 열어간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교육은 다문화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의 장은 가정, 학교, 일상생활 모두에서 일어난다. 시민사회영역의 일반 활동에서도 다문화 현상은 일어난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사회 상황들을 비판적으로 통찰하여 최선의 문화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다문화 교육은 관주도의 다문화, 공급자 중심의 다문화,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및 동화, 이주민의 한국 사회 통합으로서 다문화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다문화 교육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대안은 일상에서의 다문화 현상을 읽어내고, 다문화적 갈등의 관찰, 문제의 원인과 이

슈개발, 문제 해결 주체의 형성 및 역량강화, 의제형성, 대안 마련 등을 통해 시민사회가 다문화 사회에서 자기 활동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2) 일상적 삶에서의 다문화교육 접근방법

장원순은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연구소에서 ‘우리 안의 차별과 배제, 일상적 삶에서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의 발제를 통하여 일상에서 시민사회 진영이 다문화 의제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일상적 삶에서의 다문화교육 접근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일정한 교수학습과정으로서 이는 하나의 모형을 구성한다. 두 번째는 수업단계에서 일정한 절차와는 무관하게 어디서든 수업자의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아이디어들이다.

일상적 삶에서의 다문화교수학습단계

단계	주요 교수학습활동
문제제기	■ 일상적 삶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에 주목하기 -정상성, 친숙한 것에 대한 반성 -사회적 소수 및 약자 그리고 타자의 관점, 목소리에 주목
현상탐구	■ 차별과 배제의 현상과 분류도식 탐구하기 -사회적 소수, 약자의 어려움 알아보기 -이들을 정당화하는 분류도식 그려 보기 -분류도식에 포함된 문제점 파악하기
인정과 수용	■ 대안적 분류도식 마련하고 타문화 인정 및 수용하기 -대안적 분류도식 마련하기 -대안적 분류도식에 따라 타문화 인정하고 수용하기
실천계획	■ 대안적 분류도식에 따른 실천방식 정하기 -개인이 실천할 사항 정하기 -공동체어로 확산방안 마련하기(홍보, 법제화)
실천 및 반성	■ 실천계획 실천하고 반성하기 -자신이 맡은 부분을 실천하기 -함께 실천경험 공유하고 반성하기

출처: 장원순, (2008), ‘우리 안의 차별과 배제, 일상적 삶에서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다문화시대의 시민교육』, 서울교육대학교 초등사회과교육연구소, p.11.

① 문제제기 단계이다. 교수학습단계에서 가장 특징적이며 가장 어려운 단계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한국사회 내 존재하는 분류도식을 많은 부분 이미 성향으로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포함된 이질적인 문화들을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문화성을 인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 친숙한 것을 의심해보는 방법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관행은 언제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하에서 가장 유리한 이는 누구이며 가장 불리한 이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둘째는 중심으로부터 소외된 사회적 소수나 약자 그리고 우리와는 다른 관점을 가진 타자의 시각에 주목하는 것이다.

② 제기된 문제와 연관된 사회현상을 자세히 탐구하는 현상탐구 단계이다.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소수 및 약자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하여 문제의 현상적 측면들을 탐구해 간다. 이러한 현상적 탐구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들에 주목하지 못한, 외면해온 근본원인인 분류도식을 분석해 내는 것이다. 문제와 연관된 분류도식체계를 표로 작성하고 이들이 형성된 근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도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③ 인정과 수용의 단계이다. 먼저 기존 분류도식에 대한 대안적 체계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남녀차별의 근원을 이루어온 남자-하늘-밖-강함-태양-양지-정치, 여자-땅-안-부드러움-달-음지-가정경제의 분류도식이 갖는 임의성을 비판하고 남녀 동등성이 기반 한 대안적 관점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대안적 관점에 기반 하여 기존에 배제되었던 여성들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피부색이 능력과 성품의 차이의 근원이 아니라는 관점을 수용할 때 우리는 유색인종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천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대안적 분류도식에 따른 개인 및 집단의 행위방식을 마련하고 이들을 공동체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위방식은 개인과 집단으로 구분하고 단기와 장기계획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배제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홍보물을 만들 수 있으며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법제화를 위한 민원 및 청원을 할 수 있다.

⑤ 실천계획에 따라 실천하고 그 활동을 반성해 보는 단계이다. 앞에서 설정된 실천계획을 일상적 삶에서 실천해 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험의 공유는 그들이 실천에서 당면한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며 또 다른 문제해결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교수학습단계는 단지 한 차시 수업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앞의 교수학습단계는 하나의 학습 프로젝트로 구성하여 실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4.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 형성 과제

1) 주류 다문화 시민성의 내용

(1) 문화적 다양성

뱅크(Banks, 1977)는 다문화 사회들은 시민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모든 시민이 헌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 이상, 목표를 보유하는 국민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 오직 정의 및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가가 통합될 때에만 다양한 문화·인종·언어·종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은 문화적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민주 사회에서는 민족 집단들과 이민자 집단들이 국가의 시민 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 내에는 문화, 인종, 언어, 종교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집단을 구조적으로 포용하여 그들이 충성심을 느낄 수 있는 국가를 건

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에 대응함에 있어 통일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국가들은 다양성이라는 말보다는 통합성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통합은 통합의 과정에서 차이가 줄어들다는 가정위에 형성된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는 해당 집단이 고유의 문화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국가적 정체성과 통합성

① 정체성

세계화로 인한 국가 권력적 위상의 급격한 약화는 국가 또는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생존 또는 생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적 수준, 국가적 수준, 지역적 수준 등 여러 단위에 걸친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결집시켜 내기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치기제가 '통합'이다.

② 통합성

국가는 정의,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룰 때만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정의 및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중심하는 국가의 통합 정책이 되어야 다양한 문화·인종·언어·종교 집단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은 문화적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③ 균형성

민주 사회에서는 민족 집단들과 이민자 집단들이 국가의 시민 문화에 참여할 권리뿐만 아니라 자기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다양성이 결여된 통일성은 문화적 억압과 헤게모니로 귀결된다. 통일성이 결여된 다양성은 분파주의와 균열을 야기한다. 다양성과 통일성은 다문화적 국민 국가 내에서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상호 공존해야 한다. 진정한 통합은 차이의 줄임이 아니라 차이가 존재함에도 서로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3) 주류 다문화 시민성의 한계

지금까지의 논의 된 다문화적 시민성은 대개가 한 국가 내에서 국적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성과 직결된다. 다문화적 시민성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문화적 다양성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적 다양성은 이주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돕는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에서 중요한 영역은 이중 언어를 가진 국민교육이다. 그러나 탈 국가적 국제화 시대에는 국가와 국민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민성이 요청된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의 시민성은 국가 권력과 국민의 관계에 중심을 둔다. 그러나 세계 시민성에는 국가내의 다양성에 중심을 둬고 동시에 국경과 국가를 뛰어넘는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 특히 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둔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인종, 민족, 문화, 언어, 종교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문제는 변화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로부터 제시되는 새로운 시민들에 대한 규정과 이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에서 뱅크(Banks) 등이 주장하는 다문화적 시민성도 사실은 국민으로서 문화가 다른 시민성에 강조가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주류 사회의 다문화적 시민성은 국가 시민으로서 통합성에 초점을 둔다. 무게 중심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은 자신의 문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성에 초점을 둔다. 문화적 다양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시민권의 다양성도 요구한다. 이 말은 '국적이 다른 시민'으로서의 다문화 시민성의 논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4) 다문화 시민사회 교육의 방향

김선미는 '세계화, 국가정체성과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시민을 향한 다문화 기본교육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문화들이 '동등하게 가치가 있고 문화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정 문화집단이 우월한 문화집단이나 열등한 문화집단으로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고 선진국 문화나 후진국 문화 등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다만 서로 다른 문화집단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한다.

② 다양한 문화집단, 즉, 국가별 혹은 집단별 특성에서 오는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현상의 '유사성'에 관하여 비교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하여 공존하는 문화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집단의 특성 또한 더욱 뚜렷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③ 다문화교육은 우리가 대하는 문화적 현상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던 사실들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이나 왜곡된 점들을 새롭게 인식하고 시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문화집단 사이의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걸맞게 교육 내용을 재편성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2)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 형성과 시민사회 단체의 과제

(1)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심과제 역시 다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심'과 '주변'의 문제이며, '힘'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교육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보겠다.

시민은 국민과 다를 수도 있다. 즉 국적과 시민권은 다를 수 있다. 국적이 다른 시민권은 국경없는 시민권이다. 국경없는 시민권은 다양성에 기초한 문화적 권리 만 아니라 국적이 다르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참여와 시민적 권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시민적 권리의 다양성은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의 조화로움을 목표로 하는 국적이 다른 시민으로서 시민적 권리이다. 국경없는 시민권을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주류의 다문화 시민성에 대한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이다.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은 국민이 아닌 자들도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시민적 권리와 문화적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법률적으로 시민의 영역에서 제외된 자들도 포함한다. 자신의 출신 국을 떠난 많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은 한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적 권리를 자신의 나라에서 만 아니라 이주한 나라에서

조차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뿌리 없는 이주민 역시 시민으로서 지구 시민사회에서 당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도록 시민사회단체는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차이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형성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차이의 정체성은 첫째, 다양한 소수자집단의 주체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특수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하나의 기준과 존재만을 인정하는 보편주의에서는 다양성의 정체성이 용납되거나 형성될 수 없다. 둘째, 각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구체적 맥락을 중요시한다. 차이의 정체성은 구체적 맥락 속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구, 경험, 문화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셋째, 기존의 다수자중심의 권력관계에 균열을 가져와 소수자를 권력의 주체로 등장시킨다.

(2) 반차별·반억압주의 관점의 사회인식

시민사회 단체가 다문화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차별·반억압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구분인 계층, 인종/민족, 성, 연령, 장애 등과 같은 사회적 구분으로 인한 억압과 차별을 분석하고, 이런 억압과 차별을 축소시키거나 제거하는데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차별과 억압을 밝혀내고 이런 차별과 억압이 개인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민감성과 시각을 제공하여준다. 반차별·반억압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는 톰슨(Thompson, 2001), 푸크(Fook, 1993), 도미넬리(Dominelli, 2002) 등이다. 이 중 톰슨의 PCS(Person, Culture, Social)분석틀을 활용하여 개인, 문화, 구조적 수준에서의 사회문제의 원인과 대안적 실천의 제시이다.

세 학자가 제시한 반차별·반억압 관점의 대안적 실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적 수준에서 정체성 재정의, 역량강화, 의식화, 옹호의 전략이 필요하다. 억압당하는 이주민의 정체성을 재정의 하고 이주민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며 변화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자기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정체성 재 정의는 지배집단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닌 그들 자신의 용어로 사회적 의제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그 자체가 이주민 집단을 역량강화 할 수 있다. 역량강화는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닌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역량강화는 이러한 주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역량강화와 주체의식으로 자율성을 획득한 클라이언트는 권력집단과 사회구조적 자원을 협상하기 위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동료들과 집단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의식화와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적 실천이 필요하다.

② 문화적인 수준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고정관념과 편견에 저항하고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언어사용에 비판적으로 논쟁하며, 차별적인 가치, 태도, 행동에 도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적 수준에서는 차별적인 제도, 법, 규칙에 도전하고 폭로함으로써 문제화시키고 차별받는 집단이나 개인의 시민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지위를 재협상하기 위한 기술과 자원을 획득하여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시민권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의 과제 발굴]

시민사회단체는 자율, 참여, 연대를 주요 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단체들 간의 상호 협력과 연대에 의하여 시민 권리를 옹호하고, 국가권력과 시장권력을 방어한다.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는 공익성, 자원성, 다원성, 수평성, 국제성 등의 이념을 중시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가와 시장이 제공하기에 부족한 분야를 채우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저항하는 저항적 성격이 강하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주요한 이념인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하여 활동하기도 하지만, 평등의 보장과 확장을 지향한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삶의 질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적 성장에도 주목하고 있지만, 환경과 생태의 보존에 더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인간적이며,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그렇다면 과연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사회 단체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시민성은 인간과 시민이라는 두 개의 핵심 개념을 기초로 한다.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인권과 시민성에 관한 교육, 개인·집단적 책임의식 교육, 비판정신과 논증의 실천을 통한 판단력 함양 교육 등이 있다. 다음은 인권과 시민성으로서 시민권을 중심으로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 권리 5영역이 제시해 볼 수 있는 범주영역이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시민단체의 자기 역할은 찾기 위한 예시가 될 것이다.

비판적 다문화 시민성 권리 5영역

범 주	내 용
시민적 권리	생명권, 종교의 자유, 자기 의견을 가질 권리, 언론의 자유,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혼인의 자유, 인종 문화적 배경 장애 또는 믿음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잔인한 차별로 부터의 자유,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 사생활 보호권, 자국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 할 권리, 노예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고문 받지 않을 권리
정치적 권리	투표권,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하거나 정당에 가입할 권리, 독립 국가를 유지할 권리, 공무를 담당할 권리(공무담임권), 정치 지도자들의 견해나 자유롭게 반대 의사를 표명 할 수 있는 권리
경제적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착취당하지 않고 일할 권리,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전한 노동조건을 확보할 권리, 적정한 식량을 확보할 권리, 출산 육아 휴가에 대한 권리, 경제정의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에게 혜택에 분배되는 발전에 대한 권리
사회적 권리	주거권, 교육권,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 여가에 대한 권리,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사회 안정에 대한 권리.
문화적 권리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 자신의 종교에 대한 권리, 음악 미술 춤 문학 등 문화 활동을 발전시킬 권리, 조상의 토지에 대한 권리, 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대한 권리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2004). 함께 배우고 나누는 세계의 교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의 pp. 178-180의 내용을 재구성.

[28차시]

1. 지역사회 이해

1) 지역사회의 정의

지역사회개발 수행의 기본단위가 지역사회인데 지역사회(communitiy)란 용어는 「공동체」, 「공동소유」, 「공동운명체(common 또는 Communal)」과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 개념 정의를 위한 관점 (Warren)

지리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지역성	공동의 이익과 연합	지리적 심리적 측면 결합

학자	개념정의
Hillery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통의 유대감이 기록되어 있는 인간집단
Cook	공동생활(Life-Sharing)의 배경(Setting)이며 과정
Nelson	일반적으로 제한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동의식을 가지고 조직된 관계(Organized Relationship)를 통하여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활동을 분담 수행하는 인간집단

2) 지역사회의 성립 조건

① 지리적 영역의 공유(Geographic Area)

상호교류가 가능한 주민간의 상호교류가 가능한 근접성, 문화권, 공동생활환경 요구된다. 공동생활환경은 비슷한 생활 욕구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권 또는 공동생활권이 지역사회의 지리적 영역이다.

②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지리적인 특성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동질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지역사회는 그 지역주민들의 공동관심 또는 공동유대감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그 교류단위를 지역사회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생활권내에 살고 있으면서 상호교류가 없으면 공동관심사 또는 공동유대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주민들이 공동체적 운명체 또는 지역사회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가 필수적이다.

③ 공동 유대감(Common Tie)

사회적으로 동질성을 띤 지역으로서의 지역사회를 말한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사회생활(상호교류)을 통하여 나타난 획득적 공동의식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식(We-Feeling), 소속감(Identification) 또는 공동체 의식(Common Conscience)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의 주민은 상호교류를 통하여 공통적인 경험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공통적인 경험은 그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가치체계는 그 지역주민

의 기존태도와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결국 새로운 규범과 제도를 창출하도록 요구하게 됨으로써 그 지역변화의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1)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회체계(Social System)로 간주한다. 사회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분은 합의된 가치와 규범에 따라 변화되며, 균형 또는 안정을 강조한다. 기능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체계이다.
- ② 하위체계내의 성원들 간에 상호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하위체계들은 다양한 사회적 또는 결사체적 집단으로 구성된다.
- ③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체계는 균형 상태를 향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 ④ 하위체계가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하위체계들은 역시 하나의 분리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사회체계는 지리적, 기능적, 심리적 경계를 가진다.

지역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주요기능(Major Functions)에 대해서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Specht)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기능	내용
1)생산, 분배 및 소비의 기능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이를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분배하여 주민 각자의 욕구에 따라 소비하도록 하는 기능
2)사회화의 기능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양태를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시키는 과정
3)사회통제의 기능	지역사회가 구성원들에게 그 지역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기능
4)사회통합의 기능	사회통합의 기능은 지역사회가 전체사회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보완적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사회단위 조직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 참여 등.
5)상부상조의 기능	개인 또는 소집단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외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

(2) 갈등주의적 관점

갈등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의 유지와 균형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변화나 지역사회에서의 자원, 권력을 둘러싼 집단 간 갈등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파악하고, 각 하위 체계들 간의 조절, 조정,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지만, 실제로 체계 단위들 간에는 상당한 갈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내의 사회구성원들이 경제적 자원, 권력, 권위 등이 불평등한 배분관계에 의해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동에 관심을 갖는다.

코울먼(Coleman)의 경우 지역사회 갈등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권력이나 권위로 인한 갈등, 문화적 가치 및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에 연유한다고 본다. 지역사회의 갈등에 대

해 코울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지역사회갈등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권력이나 권위로 인한 갈등, 문화적 가치 및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에 연유한다.
- ② 지역사회갈등의 역동성 측면에서 보면, 예컨대 쓰레기 수거문제와 같은 주민과 정부 간의 특정쟁점에서 일반적인 쟁점이 제기되거나, 특정쟁점에 대한 반대에서부터 반대자에 대한 직접적인 적대감으로 비화되는 경향이 있다.
- ③ 지역사회구조에 대한 갈등의 영향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조직 간에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 ④ 영향력 있는 지역사회지도자들 및 지역사회조직들은 갈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를 갈등 주의적 관점에 입각할 경우 지역사회 문제나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갈등의 주요소재인 권력, 경제적 자원, 권위 등의 재분배를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 사회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공동체의 이해

1)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란 구성원의 개별성보다 전체의 공동성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개체적 자율성과 전체적 통합을 공유하는 의미가 내포된다. 공동체는 때로는 가족, 마을, 민족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회생활 양식이다.

공동체 정의	내용
1) 동질성을 가진 소집단	종교공동체, 학문공동체, 지인공동체, 군사공동체 등 (D.W.Minar, S.Greer 등).
2) 심성적, 정신적 현상과의 관계	심성적 공동체는 일체감, 심성적 통일, 자발성, 전체성이 특징, 대중사회에서는 소외, 심성적 단절, 비 참여, 분절화가 특징 (R.A.Nisbet, B.Brownwell 등)
3)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	공간적 단위로서 특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 인간이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됨. (D.E.Poplin, M.B.Sussman 등)

2) 공동체 운동의 등장 배경

공동체 운동은 18, 19세기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반감을 가진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사회적 공동체가 크게 번졌다.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공동소유, 공동노동에 기초한 상부상조로서의 증여의 원리가 지배하는 1차적 집단으로 이야기 한다. 퇴니스는 인간의 상호규정적인 인간관계, 인간의 결합 양식을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와 게젤샤프트(Gesellschaft)의 두 범주로 나누기도 한다. 퇴니스는 원시공산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까지 게마인샤프트, 사회주의 이후를 게젤샤프트로 보았다.

현대에 와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60년대 반문화 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자본주의 문명이 그 한계를 드러내면서 세계적으로 혁명과 폭동이 빈발하는 가운데 공동체 운동도 대안적인 문명과 대안적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분명해 졌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60-70년대에 서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히피 운동이다.

일정한 지리적 영역을 배경으로 나타나는 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지리적 영역에 구애됨이 없이 정신적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개념을 정신적 공동체로 표현된다. 포프린(D.E.Poplin)은 지역공동체를 “the community” 정신적 공동체를 “community”로 구별하고 있다.

니스벳(R. A. Nisbet)은 20세기의 근본적인 주제 중의 하나는 “공동체의 추구”라고 한다. 인류의 진보의 역사는 공동체성의 회복의 역사라 보겠다. 그것은 다만 규모가 국가적이나, 세계적이나 아니면 지역적 단위인가 등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공동체의 추구는 현대 사회의 상황이 개인들에게 안전감과 충족감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니스벳은 공동체 정의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는 단순한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공동체라는 말은 고도의 개인적 친밀성, 감정적 깊이, 도덕적 확신, 사회적 응집 및 시간적 연속성에 의해서 특징 지워지는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하게 된다. 니스벳의 주장은 지역사회의 개념적 요소보다는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체 정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

3) 공동체의 종류

(1) 공동체 발전 현상

공동체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지역적 집단의 단위, 같은 장소에서 협력하여 서로 얽혀 만든 집단의 단위로서 이는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 발전 한다.

- ① ‘자연촌락’과 같이 주민자체의 집단형태로 주민참여로부터 지역사회 일치성을 나타내는 자연발생적 인간관계의 단위를 말한다.
- ② 자연발생적인 인간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되어 그것이 어떤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역사적 전통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 ③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 붕괴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어떤 공간 또는 지역사회단위를 설명하여 나타나는 계획된 공동체 유형이다.

(2) 계획 공동체(Intentional Community)

계획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의도에 의해 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며 그 성격에 따라 기능적 공동체와 지리적 계획공동체로 구분한다. 기능적 계획공동체는 일정한 정주 체계 없이 특정이념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중심으로 기능적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지리적 계획공동체는 일정한 정주 체계를 이루어 공간적 영역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를 나타낸다. 현대사회에서는 자연발생적이며 전통적인 공동체의 유형을 찾아보기는 힘들며, 계획

된 공동체의 유형이 오히려 현대 사회에 잘 적용 할 수 있다.

① 종교공동체: 정통교단의 수도자 공동체가 대표적이지만 전도, 영성 연구,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공동체들이 있다.

② 생활공동체

생활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는 10여명 또는 10여 세대로 조직된 '작은' 공동체로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지속적인 나눔과 섬김이 가능한 적절한 규모로 규정짓는 것이다.

③ 협동체

자립하려고 하는 공동 생활체로서, 낯선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같이 함께 사는 하나의 운동 형태로서의 공동체이다.

④ 마을 공동체

에코 빌리지(Eco-Village)는 구미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계획 공동체 또는 생태공동체와 별 차이가 없다. 한국에서 생태마을은 기존 마을을 생태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비하여 구미의 에코 빌리지는 계획 공동체에 가깝다. 뉴에이지 운동은 일원론, 신성의 내면화, 모든 존재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뉴에이지 영성운동인 뉴에이지 공동체(New Age Community)가 있다. 아나키스트(무정부주의) 전통을 따르는 아나키스트 공동체와 도시의 저소득층 계층 사이에 널리 행해지는 공동주거운동(Co-Housing), 그리고 특정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생태공동체(Eco-Community)들이 있다.

⑤ 지구 공동체(Earth Community)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가이아 이론과 모든 존재의 연결성의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생물 종과 지구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행성 공동체(Planetary Community)는 지구 공동체를 행성차원으로 까지 확대한 것으로 '나'에 대한 '우주적 자각'을 전제로 한다. '나'는 우주 안에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 우주적 공동체를 이룬다고 본다.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판단하는 점성술을 도입한다.

(3) 공동체운동

공동체운동은 공동체를 '집단' 자체의 의미보다 기존 체제에 반발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 '공동체운동'은 적어도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밝혀 두고 있다.

① 직접적인 대면접촉에만 의존하는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공동체와도 충분한 상호교류가 인정되는 개방된 지역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② 구성원 내부의 성과 연령, 문화 등의 차이에 의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지배와 억압이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즉 현재의 가치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강한 이념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③ 미래의 대안적 사회를 생각하는 실험성을 뚜렷이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뚜렷하게 포함하면서도 지역에 기반으로 하여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공동체운동’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공동체의 속성을 분류하는 근거로 지역적 기반성, 대외적 개방성, 의식적 이념성, 대안적 실험성을 들 수 있다.

4) 공동체의 형성 이론

공동체의 형성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의 과정적인 측면과 ‘공동체’가 왜 형성되는가의 인과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형성 과정이든 결과이든 각각의 이론들은 독자적이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공동체 형성 과정설

인간 삶의 터전에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사람들 간에 상호교류가 일어나며 그 정도에 따라 공동유대감 혹은 공동가치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역사회는 동질적 지역성에 근거한 현장에서 공통의 삶의 양식을 나누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공동의 유대와 가치를 지향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킨다. 여기서 같은 생활권 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그 사회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공동의 유대와 가치를 지향하게 될 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2) 공동체 형성 결과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공동체’는 왜 생겨나는가? 일차적인 원인은 공동체 형성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 그리하여 그러한 삶을 희구하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지역사회’ 곧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유대감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한가? 상호작용은 경제, 정치, 종교 등 인간 생활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공동유대감은 전통 및 각종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① 심리적 요구설

첫째는 자연 회귀적 본능이다. 자연의 일부로 태어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여 오히려 보다 편리한 물질문명의 세계를 이루어 왔던 만큼 무의식중에는 자연을 향한 그리움이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문명적인 삶의 대표적인 공간인 도시에서 자연의 모습에 위배된 채 경쟁과 이기심이 만연하고,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도시문제 속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자연의 삶을 기대하던 것이 곧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요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는 친밀함의 욕구이다. 인간은 두 개의 심리적 욕구를 가진다. 심리적 공동체 감각(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과 개인의 자율성과 성취에 관한 욕구이다. 전자는 공동체 사회학자들이 거론해 온 가치들, 즉 협동, 우애, 소속감, 친밀한 상호작용, 코뮌이온 감정 등의 속성들은 심리적 공동체 감각이다.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친밀함의 욕구를 표출

하는 통로로써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치적 목적설

사회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환경문제, 지역 간 격차, 인간소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조직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익 실천하려고 한다. 때로는 무정부주의적 사회개혁의 사상을 지닌다.

권력에 의한 지배 욕구 혹은 반대로 그러한 지배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평등, 민주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공동체’라는 새로운 조직체를 형성하도록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자면 ‘땅’이라는 지리적 공간에서 누구에게든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을 나타낸다.

③ 경제적 목적설

인간의 삶은 곧 경제활동과 연결되어 있다. 현대 사회의 개인과 집단은 경제적 이윤 추구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의해 형성된 하나의 조직체인 ‘공동체’ 역시도 경제적 이윤 추구를 위해 형성되었다. 서구 공동체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협동조합운동은 곧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최근에 실업 등이 증가 하면서 사회적 실업 문제를 해결 하고자 사회적 기연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자운동, 협동조합운동이나 사회적 기업 운동 모두 경제적 목적의 활동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 정치적이면서도 교육적인 목적이 동시에 수반되기도 한다.

④ 교육적 목적설

지역사회 학습 스터디나 학습 동아리 구성을 통한 공동체 형성이다. 교육적 요구 충족을 위한 심화 학습, 전문탐구,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미의 기초공동체는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 교육적 목적에서 발전하였다.

3.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의 이론

1) 다문화 공동체 개념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다문화적으로 디자인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을 위한 문화적 사고와 실천을 한다는 의미이다. 다문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는 단순히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집된 지리적 개념을 넘어선다. 다문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로서의 기능적 입장이거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다양한 역학적 관계와 이해 충돌 등의 갈등적 입장이 아니다. 다문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는 이미 다수자와 소수자가 어울려 살아간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 공동체적 개념이다. 다문화적 지역사회 형성에 있다.

2) 다문화 공동체의 관점

다문화 공동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역사회 이해를 기능구조적인 면만도 갈등구조 면만도 아니다.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전제로 할 때 그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를 하나의 사회

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갈등주의적 관점은 지역사회내의 사회구성원들의 갈등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동에 관심을 갖는다. 사회체계라는 것은 사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이다. 사회체계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구조이기 때문이다. 변동에 관심을 갖는 갈등구조 역시 사람 관계에 중심이 있다. 다문화 공동체 관점에 이해는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다수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다. ① 지리적 지역성 ② 다수자와 소수자 등 다양한 주민들의 상호관계망 ③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공동체이자 삶터 ④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행동양식 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대안 공동체 운동이다. ‘대안적이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 공동체적 관점은 주류문화를 중심으로 소수자 문화에 대하여 폐쇄적, 일방적, 차별적인 사회제도와 주민의식과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 및 행동양식이 허용되고 공존하며, 공동의 관심사와 욕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성을 지향한다.

다문화 지역의 사회적 관점

관점	내용
1) 사회문제로서의 지역사회	편견, 차별과 배제 등 문제, 욕구, 이슈 등을 내재하고 있는 환경
2) 변화의 수단으로서 지역사회	내국인과 이주민들 간의 상호작용과 문화적 상생 권력의 분배 등으로 인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와 수단,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곳
3) 사회봉사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공통적 신념, 규범, 가치들을 갖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일정한 공간을 갖는 장
4) 다문화 창조의 장으로서 지역사회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적인 관심과 가치, 공동노력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새로운 가치와 구조를 창출해 내는 장

3) 다문화 공동체 추구 목적

다문화 공동체는 다수자와 소수자가 새로운 관계방식을 통하여 지역의 갈등 구조를 상호협력구조로 전환하여 지역사회를 열린 구조로서 다양성과 민주적 참여, 다름과 차이의 공존과 평화, 새로운 지역사회 창출과 지역의 미래 비전을 실천적으로 열어나감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 다수자와 소수자가 공동체적으로 상호의 이익과 필요를 채워주는 공존과 상호협력의 전제되기 때문에 다문화 공동체는 다수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실천한다.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는 문화적 사고로부터 출발 한다. 문화적 사고라는 것은 ‘문화는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끊임없이 변화해온 것이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변해 갈 것이다.’는 비판적인 사고이다. 문화적 사고는 영원불변 하는 자연의 원리인 것처럼 강요되는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안 문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사고는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문화도 역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문화적 사고는 역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포함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문화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 주민들이 다문화적 공동체 추구하고 실천을 통하여 얼마든지 창조적인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에서 출발 한다.

4. 지역사회 다문화 학습동아리로서 교육

1) 지역사회 다문화 학습동아리 개념

지역사회 다문화 학습동아리는 지역사회주민과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학습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동아리는 일본의 자주 학습조직(自主學習組織), 스웨덴이나 미국에서의 스터디서클(study circle) 또는 호주의 학습서클(learning circle)로 불린다. 보통 5명~15명 내외의 성인들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관심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다.

지역사회 교육은 지역사회주민간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또는 집단과 집단이 서로 상호 작용하여 상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역사회학습동아리는 주민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바탕 되어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공통된 욕구와 당면과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학습동아리는 주민의 공통된 욕구해결과 다문화 사회 창조에 있다. 그러나 지역 사회 학습 동아리는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에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유아, 학생, 성인 등 모두를 포함한다.

2) 지역사회 다문화 학습동아리의 중요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인 학교교육만으로는 다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오늘날의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주민들 각 개인의 문제, 나아가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각종 지역사회교육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각종 지역사회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문제를 보다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지역사회단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은 사회발전의 민간입장에서 사회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조직활동의 중요한 촉진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사회교육의 일반적인 중요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평생교육: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이란 완성이 없다. 평생을 통해 교육이 진행된다.
- ② 지역사회 교육 보완: 지역사회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역사회교육이 보완해 준다.
- ③ 문제 해결 능력 고양: 변동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지식과 현장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기른다.
- ④ 주변 상황 대처: 지역사회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관계가 주종관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 관계 즉 수평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내국인과 이주민)들로 하여금 주변상황을 주체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의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주민들 각 개인의 문제, 나아가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그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민주주의와 평등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지역사회주민은 그러한 사회적 특성에 적응하기 위하여 평생 동안 배워야 한다는 교육 또는 학습의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4) 지역사회 다문화 학습동아리의 목표

지역사회학습동아리는 여러 가지 목표 하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역사회동아리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다양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②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개인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
- ④ 다인종 다문화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킨다.
- ⑤ 다문화적 다양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이다.
- ⑥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원봉사 역할을 한다.
- ⑦ 다인종 다문화 지역사회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
- ⑧ 지역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 다문화 교육의 장이 된다.
- ⑨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동성을 키운다.
- ⑩ 상상력과 창조성의 발휘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5) 지역사회의 다문화 학습 공동체 형성

지역사회 다문화 학습 공동체로 전환한다는 것은 지역 사회내의 다양한 다문화 동아리들을 상호 연계시켜 다문화 학습연계망을 형성하는 일이다. 학습연계망은 주민과 이주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다문화 학습 필요와 다문화 학습욕구에 따라 지역 사회를 다문화 학습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지역 사회 다문화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과 단체 개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교육시설과 학습자 사이의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 이다.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의 전제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다문화 학습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다문화 지역사회의 다문화 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체제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행정체제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민간역할이 필요하다.

<지역 학습공동체 일반 유형분류 1>

유 형		특징
시민 사회 중심	지역사회 재생형	현대 사회와 같은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역할 또는 정체성 탐색을 목표로 시·군·구 범위에서 종합적이고도 광범위한 재생(regeneration) 전략을 기본 특징으로 함.
	이웃공동체 형성형	이웃을 위하여 형식적 학습, 비형식적 학습, 성찰적 학습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웃 공동체 관리를 통하여 시민정신의 쇄탁

		을 막고 적극적인 시민정신을 주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웃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형
경제 발전 중심	산업 혁신형	지역을 위하여 주로 기업체가 주도하는 학습지역 운동으로 산업 단지 및 산업 복합단지에서 혁신을 증진시키려는 것을 주된 접근으로 함.
	학습 파트너형	교육훈련 제공 및 이용자를 위한 학습 파트너십형은 교육훈련 제공자와 학습자를 위하여 자원, 지역사회 학습 파트너십 체제를 형성하여 협력을 증진하고 학습에의 참여를 심화시킴.

<지역 학습공동체 일반 유형분류 2>

유 형	특징
경제지향형	학습도시 사업의 주된 목적이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평생 고용력 개발과 지역의 산업기술의 혁신을 지향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향함
공동체지향형	지역의 주민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지역문제 해결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촉진을 통한 단위 지역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지향함
행정주도형	학습도시 사업의 추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행정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임
기관위탁형	학습도시 사업 추진 주체를 지방자치 단체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형태임
파트너십형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간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임

5. 차별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교육

차별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교육으로는 파울로 프레이리(P. Freire)의 교육이론이 적합하다. 교육에서 프락시스(Praxis)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된다. 남미의 프레이리의 교육방법은 문맹을 퇴치하여 책을 읽게 하고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하는 수단을 넘어서다. 소수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발전하게끔 도와주는 교육이다. 프레이리는 1960년 초기에 대중문화 운동(Popular Culture Movement)을 펼쳤고, 프레이리의 방법은 브라질에서 성공을 거둔다. 안기코스(Angicos)시에서 300여명의 노동자를 45일 만에 읽고 쓰기를 배우게 되었고, 그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4년, 2천만 명의 문맹자를 위해 2만개의 지역사회 교육을 위한 소그룹이 형성되었다.

1) 지역사회 문화침해와 문화행동

주류 사회의 일방적 힘은 소수자에게 문화 침해 형상을 발생 시킨다. 문화침해는 주류다문화의 일방적 사회통합 '도구'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사회통합의 '결과'이기도 하다. 프레이리는 일방의 힘을 '통제하는 문화'라 했다. 주류사회는 이익이 보장 되어온 사회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근본적인 변화나, 해가 될 수 있는 아무런 변화도 용납하지 않고 가장 적고 피상적인 변화만을 허락하는 모든 힘이 통제 문화가 되는 것이다. 통제문화는 정치, 국제관계, 경제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이때의 통제자를 엘리트라 하였다.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사회는 자립 할 수도 자존 할 수도 없도록 구조화 되며, 소수자는 엘리트와 통제문화에 의존하도록 길들여진다. 다수자의 주류문화에 소수자가 비판적 의식을 갖지 못하고 흡수 통합되는 상황은 파울로의 말을 빌리면, '침묵의 문화'가 된다. 침묵의 문화는 다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수자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그것은 침묵의 문화 속에 있는 인간들의 사고, 표현, 그리고 행동까지도 주류 다수자 문화가 요구하는 의식구조로 변하게 만든다. 문화 침해 속에서 소수자들은 필연적으로 현실을 소수자의 눈으로보다는 주류 다수자의 안목으로 보게 된다.

이때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침묵의 문화를 깨트리고 사람이 사람다운 주체가 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침묵의 문화를 깨트리는 문화 행동은, 사회구조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구조에 작용하는 하나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된다. 이 과정의 참여가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공동체 사회 형성이다.

2) 다문화 사회에서의 창조적 주체자

프레이리(P. Freire)는 억눌린 자가 '새로운 인간'이 되려면 억압이 해방으로, 그리고 모순이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억압 상황을 변혁시키려면 먼저 그 원인을 비판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를 해방함으로써 자기네 억누르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억눌린 자들뿐이다. 그래야만 변혁활동을 통해 보다 완벽한 인간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다수자의 삶에서 주류문화에서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소수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차별의 원인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프레이리는 진정한 사고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그 행동이 진정한 실천이 되려면 반드시 그 결과들이 비판적인 사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실천(Praxis)은 주류문화로부터 늘 소외 되어 온 소수자들이 자신을 새로운 '존재 이유'를 알아내는 과정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사고할 수 있으며, 그들이 스스로 실존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사하며 행동할수록 더욱더 창조적 주체자가 된다.

3)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 방법론

(1) 차별상황에서의 의식개혁

차별극복을 위한 교육으로서 프락시스(Praxis)의 개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프레이리는 기존의 교육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소위 의식개혁을 제안한다. 교사와 학생이 더불어 현실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는 교육 즉, '교사-학생', '학생-교사' 모두가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지식을 새로이 창조한 는 것이다. 즉 지식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써의 인간이 아닌, 의식개혁을 통한 주체로써의 교육이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 문화, 정치적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각을 성취하는 과정, 활동, 결과가 바로 의식개혁이다. 프레이리의 프락시스는 다문화 사회에서 비판적 다문화의 입장을 견지하도록 돕는다.

(2) 문제 제기식 다문화주의 교육 방법론

프레이리에 있어서 교육행위는 '은행 예금식 교육'과 자유를 실천하는 해방교육이 사용하는

방법은 ‘문제 제기식 교육’이란 말로 설명될 수 있다. 은행 예금식 교육이란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과 교사가 각각 수탁자와 예금자로 교사는 대화하는 대신 정보나 지식을 내어놓고 보관하게 하며 학생은 그것을 받아들여 암기, 반복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 은행 예금식 교육은 주류다문화주의를 강제할 뿐이다. 주류다문화에 강제된 소수자는 피동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텅 빈 정신’이 되는 것이다.

문제 제기식 교육은 현실을 끊임없이 벗겨내는 작업을 한다. 즉, 의식의 출현과, 현실에의 비판적 개입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문제 제기식 교육으로 인해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수자로서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면서 차별과 배제의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부모가 이주민이란 이유로 왜 자신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는지, 그리고 여전히 경제적 빈곤을 겪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스스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자신을 세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3) 대화식 방법

플레이리 교육방법은 대화(Dialogue)의 방법을 이야기한다.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대화는 세계와 인간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결합의 모습을 식별하게 하며, 현실을 변화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한다. 현실의 변화는 새로운 창조성을 잉태한다. 대화의 본질은 말이며, 진정한 말을 한다는 것은 실천이 따르는 것으로 곧 “세계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으로 창조해 나가는 일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자간의 대화가 보다 진지해 지려면 이중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주류사회의 언어는 다문화 가정의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고 현실인식에서 문화적 주체성을 상실 하도록 만든다.

(4) 편찬과 해석

플레이리의 교육방법론에는 편찬(Coding)- 해석(Decoding)의 방법이 있다. 편찬 교육이란 실존적인 상황을 문제화하여 묘사한 것으로서 이미지를 편집한 모든 재료들을 말하며, 해석 교육이란 편집된 실존적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며 그 상황으로서의 객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편찬단계에서 인간은 자신을 인식하고 다른 주체들과 함께 자신을 발견하는 상황으로서의 객체를 인식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 현실에 대하여 소수자들은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하고 설명해 나가는 방식을 위해야 한다. 자신의 문화적 표현과 이미지를 통하여 소수자는 주류사회에 문제제기를 자기 방식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지역 사회 다문화 공동체 형성으로서 프락시스]

플레이리(P. Freire)가 말하는 프락시스는 행동(Action)과 성찰(Reflection)의 연결이며 반복으로서 실천이다. 맥도널드(Macdonald)는 ‘행동 없는 성찰’은 지성주의로, ‘성찰 없는 행동’은 행동주의로 왜곡 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프락시스 접근 방식은 교육과정의 개념을 교육 참여자 사이의 실천적인 삶과 관계있는 프락시스로 이해한다. 콘브레드는 프락시스의 개념을 ‘행동과 성찰’ 사이의 상호작용을 넘어서, 프락시스 개념의 제3의 요소로서 ‘사회적 상황(Setting)’이라는 요소를 추가한다. 이러한 시도는 사회문화적 상황 즉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조건, 이데올로기 그리고 교육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콘브레드의 프락시스는 비판적 성찰의 범위를 학습자의 행동에 국한

시키지 않고 우리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다. 프락시스의 교육방법은 교육이 현실 세계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비판적 기능을 넘어 '대안적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

지역사회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 만들기로서 비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전은 다문화 지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지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야기와 비전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공론화 나갈 필요가 있다.

이야기로서 다문화 비전 말하기는 해석학적 프락시스 접근은 '프로네시스(Phronesis)'의 개념을 중시하는 프락시스 접근방법이다. 해석학적 프락시스는 프락시스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현대 해석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해 '프로네시스' 인식 방식에 따른 프락시스를 강조한다. 해석학적 프락시스는 교육적 숙고와 실천의 목적이 정치적 해방보다는 인간존재 지평의 확대에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을 받는 자의 경우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자로서 우리와 관계된 상황적 연결성을 인식하며 타자와 의미 있는 삶을 공유하는 자라고 주장한다. 교사는 계획과 생활 경험으로서 교육과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협상하는 존재인 동시에 긴장을 통해 학생으로 하여금 창조적 활동을 가능케 하도록 돕는 자이다.

전통과 문화를 미래라는 '유토피아'의 빛 아래서 재해석하고 재형성함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한다. 소수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한 뒤에 그대로 살아보고, 또 그것을 다시 성찰하고 그 결과로 다시 행동하는 동안에 의식은 심화되어 진정한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

[29차시]

1.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실천 과정

1)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출발

다문화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사고의 동기는 크게 두 계기가 있었다.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다문화적 사고와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실천으로 이어졌다.

(1) 다문화와 이주노동자

국경없는 마을 운동은 '이주노동자도 주민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1995년에 2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도 사람이다.'라며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의 주장이었다. 일을 시키고도 원급을 주지 않고 오히려 폭행을 가하여 공장에서 쫓아내는 일이 자주 발견되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여도 산재 보상도 되지 않았던 때이다.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주장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이다'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때 또 다른 한편으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일 뿐 아니라 '주민이다'는 생각을 하였다. 주민으로서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고는 생활인으로서의 이주노동자를 의미한다. 이주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이 아닌 '우리과 같은 사람'으로서 생활인이라는 생각이다. 즉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와 종교 등 문화가 다른 사람이지만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다'는 인식이다. 당시의 대세는 이주노동자가 다문화의 담지자로서 주민성은 관심 밖이었다. 다문화의 담지자로서 주민인 이주노동자는 '계급적 선명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노동자성을 주장하면서도 주민으로의 정체성을 가진 노동자로서 주민이라는 '이주민의 사고'를 주장하였다. 이주노동자를 다문화의 담지자인 주민으로의 인식이 지역사회 속에서의 다문화 공동체인 국경없는 마을을 꿈꾸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2) 다문화와 다문화 가족

다문화와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사고의 두 번째는 다문화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이다.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1995년 국제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파키스탄 '샤미'씨 가정과 이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파르'씨 가정을 만나면서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국내 이주노동자 출신 결혼이민자 자생적 모임인 '파랑새'도 만나게 되었다. '파랑새'는 방글라데시 국제결혼 부부 모임으로서 1992년에 결성되었다. 이들 여섯 가정은 안산 시흥지역 거주자들이었다. 당시 이들은 한국인과 결혼 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았지만 당시의 한국인의 문화는 마치 '동물가족' 취급 하듯 하였다. 부부가 길을 함께 걷어가는 것만으로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당시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에 성공한 것만도 대단한 것이었다.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 역시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남편이 한국 국적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주민등록부에 외국인출신 배우자의 등재가 되지 않았다. 3개월 혹은 6개월 마다 남편의 비자연장을 받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소에 갔다 오는 날이면 모멸감 때문에 한국인 부인은 눈이 툭툭 부어야 했다. 자녀 문제도 심각하였다. 국제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자녀를 출생 하여도 아빠 없는 미혼모 출생의 사생아 취급을 받았다. 나아가 남편이 미등록이주노동자 일 경우, 외국인출신 남편과 출산한 아이는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결혼과 자녀의 출생이 된 것이었다. 이때, 다문화 가족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방안이 무엇인가? '따스한 이웃

으로 다문화 가족과 만나기' 라는 사고 역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펼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이해

국경없는 마을은 한국인으로 대표되는 지역사회의 지배문화의 지배력과 이주노동자로 대표되는 하위집단인 이주민의 저항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만나 상호공존의 모색하는 실천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기존의 체제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의미를 지니면서 동시에 기존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도 동시 수행하는 한다. 변화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국경없는 마을은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이다. '국경없는 마을'은 지역 주민과 이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국적, 언어, 피부색, 종교, 경제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지향하는 운동'이다.

문화적 사고로서 국경없는 마을 형성은 지역사회의 차별문화 즉, 배타문화, 소외문화, 경쟁문화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는 가치관의 개혁과 소외된 인간 관계회복을 추구하는 평등 공동체 형성과 경쟁적인 환경과 제도를 개선하여 협동 공동체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다문화 실천운동이다. 존재방식에서 다문화 적이고 관계방식에서 공동체적이고 삶의 방식에서 협동적인 다문화 지역사회 운동의 추구인 것이다.

2.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전개

1) 국경없는 마을 운동 제1기 (1996-2002)

(1) 정기 다문화 만남의 장

초기 다문화 만남의 장은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국문화 행사 혹은 서로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정기적인 만남이 중심이었다.

① 인터내셔널 카페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 1996년 '인터내셔널 카페'가 운영되었다. 현재는 인터내셔널 카페가 다문화북카페로 변경되어 운영되지만 당시는 인터내셔널 카페로 운영되었다. 아시아의 각 나라 사람들이 전통 차와 전통춤과 노래가 있는 문화의 마당으로서의 자리를 생각한 것이다.

② 다문화 거리카페

인터내셔널 카페는 2,000년부터는 '다문화 거리카페'로 변하였다. 한 달에 한 두 차례 원곡공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음악, 예술 활동을 선보이는 활동을 벌여 왔다. 다문화 거리 카페는 나라별로 돌아가면 운영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노래와 춤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③ 공연 행사

1995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명절 때 자국민 중심으로 문화 행사를 진행하였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의 출신들이 자국의 명절을 한국에서 모여 함께 보낸 것이다. 한국의 명절 등에는 여러 나라 이주민들이 각자 나라의 전통노래와 춤

등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행사에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때는 행사는 주로 이주노동자 위로 행사의 성격을 가졌다. 1999년부터는 '우리도 만산을 사랑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의식적으로 공연행사를 시민들과 접촉하려는 시도로 접근하였다.

(2) 다문화 사회 주체형성

다문화 사회의 주민 구성 주체는 지역 사회거주자를 말한다. 지역사회거주자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원주민이다. 원주민은 적어도 당사자 이상의 선조들이 그 지역에 태어나 자리를 잡고 살아 온 사람들이다. 둘째, 선주민이다. 선주민은 당사자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수년간 자리를 잡고 살아온 원주민 국적의 사람들이다. 셋째, 이주민은 본래 다른 국적의 출신자로서 한 지역에서 수년간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주민 가운데 같은 지역에 장기 체류자는 이주 정착민이고, 일시 체류 이동 자는 이주 유랑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코시안(Kosian)

코시안 가족모임이었다. 다문화 가족인 코시안 가족이 모임을 시작하였다. 1997년 6월에 호적법이 남성중심에서 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되면서 국제결혼 가정에도 희망의 싹이 보였다. 호적법이 개정된 1997년 9월 가을 국제결혼 가정 50여 쌍이 모여 축하의 자리를 만들었다. 이때 이들을 위해 붙여진 이름이 코시안(Kosian)이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한국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는 부정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좀 더 중립적인 개념이 필요해서 아시아인과 한국인의 만남이란 뜻에서 코시안(Kosian)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이다.

② 이주노동자 공동체 형성과 NGO 구축

안산이주민센터와 연결된 공동체 조직들이 있다. 방글라데시 공동체는 이미 1992년에 조직되어 본 기관에 사무실을 두었다. 원국동에 이슬람 사원도 이단체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다. 그러나 2004년 공동체 지도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고용허가제에서 방글라데시가 제외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출신들의 입국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동체 활동은 중단되었다. 인도네시아 공동체는 1997년 경기도 지역을 일대로 '이스와라(Iswara)'가 조직되었다. 이 조직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다. 이 조직 역시 2004년 이후 ICC라는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되어 경기도 일원에서 활동 중에 있다. 스리랑카 독립협회는 1999년에 조직되었다. 이 조직은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으며, 자국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한편 이주노동자를 위한 NGO도 형성되었다. 1998년 방글라데시 BMC(Bangladesh Migrant Center), 1999년 인도네시아 IMC(Indonesia Migrant Center)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 활동가들의 비자문제, 생활비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BMC는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활동 중이다.

(3) '국경없는 마을 운동' 시작

본격적인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 1997년 이후 그동안 정기적으로 발행되었던 소식지 '나눔과 일터'를 '국경없는 마을'로 명칭을 바꾸었다.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였다. 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국경없는 마을의 구체화는 1999년 11월 안산이주민센터가 현재의 건물로 이사하고 그 지역이름도 '국경없는 마을'이

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안산이주민센터가 건물을 좀 더 지역 주민과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계획을 하면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본격화 한 것이다. 초기 국경없는 마을 운동은 네 가지 흐름이 있었다.

① 지역 주민과의 접촉점 형성을 통한 문화적 갈등 해소 사업

지역 주민과 이주민 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였다. 이 갈등의 원인은 단순히 문화적인 차이만 아니라,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차이, 주인과 나그네라는 차이에서도 발생하는 배타성에도 있었다. 주민과의 접촉점 형성을 통한 문화적 갈등 해소 사업 전개였다. 낯 설은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이웃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서로의 접촉점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당시 지역주민과 이주민간의 가장 큰 갈등은 ‘쓰레기’ 문제였다. 갈등의 고리인 쓰레기 문제를 중심에 두고 상호 접촉점 만들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을 청소이었다. 주민과 이주민이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마을 청소를 하며 서로의 갈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였다. 마을 청소를 통하여 상호의 접촉점을 넓혀가며 배타적 감정을 조화의 감정으로 바꾸어 나간 것이다. 접촉점 형성을 넓혀 나가기 위해 마을 신문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지역에 배포하였다. 마을 신문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주민들을 간접적으로 접하도록 하였다.

② 마을 다문화 축제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 의식적으로 마을 다문화 축제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안산이주민센터의 행사는 주로 이주민들만의 행사 이었고 공연중심이었다. 주민과의 만남도 없었고, 이주민 스스로도 참여가 부족한 행사들로 가득 하였다. 2000년 이후 부터는 모든 행사를 지역사회에서 의도적으로 전개하였다. 동네 주민들이 다문화를 경험하도록 국경없는 마을 ‘콘비벤츠’를 전개한 것이다. 해마다 전개되는 국경없는 설날 축제, 안산월드컵, 추석 다문화 축제, 콩 꽃 축제 등이 있다.

③ 지역사회 의사 결정에 이주민 참여 활동

이주민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사회 의사 결정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지역사회 의사 결정에 참여를 위해 시도한 것이 명예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었다. 국민은 아니지만 이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주민자체 위원회에서는 이주민들에게 명예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도 하여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④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국경없는 마을

국경없는 마을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일어나도록 강사를 초청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타 지역의 사례 방문도 하였다. 지역주민과 이주민의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여론조사, 국경없는 마을 신문 제작, 국경없는 마을 체육대회, 주민 만남의 밤 등을 개최하였고 안산 시장이 수여하는 모범 주민과 이주민 시상도 있었다.

2)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운동 제2기 (2003-2006)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제2기는 2001년 까지 국제결혼이 1만5천 쌍 이었다가 2003

년부터는 국제결혼이 2만5천~3만 쌍 까지 급증하게 된다. 한국 사회 이주민의 구성이 급격한 변화기 오기 시작 한 것이다. 이시기는 네 가지 축으로 운동이 이루어졌다. ①다문화 정책 제언, ②다문화 프로그램의 시범운영, ③다문화적 제도개선운동, ④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확산 ⑤국경없는 마을 운동에 대한 이론화 작업 등이 중심이었다.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 정책 제언

다문화 정책 제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다문화 사고의 유도이었다. 정책제안은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권리 확대로서 지원조례 및 복지 시설 구축, 이주민 관련 사업의 행정의 체계화 및 전담 공무원제, 이주민 밀집지역의 다문화 마을 만들기 사업제안 등을 하였다.

① 이주민지원 조례 및 복지시설 제언

이주민지원조례 만들기를 제언하였다. 이를 최초로 받아들인 것이 서울의 성동구이었다. 수원시가 이를 수용하였다. 안산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주민복지시설 설치를 제언하였다. 경기도에서는 5개 지역에 이주민 복지시설이 건축되어가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부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지원조례를 만들 것을 시달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 복지체인 '안산시사회복지협의체'에 '이주민분과'를 처음으로 설치되어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운영되고 있다.

② 이주민 관련 사업의 행정의 체계화 및 전담 공무원제의 도입

이주민 관련 사업의 행정의 체계화 및 전담 공무원제의 도입은 안산시와 경기도, 행정자치부에 제언하였다. 안산시에는 전국 최초로 전담 공무원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에서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과 정책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작업을 2004년과 2006년에 실시하여 경기도에서 이주민 관련 사업의 체계를 갖추도록 제언 하였다.

③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제언

2001년 국경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제언을 안산시에 제언 하였다. 2003년에는 중앙 정부에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 정책과 국경없는 마을 사업을 제언 설명하기도 하였다. 정부차원에서는 2004년 안산, 천안, 농촌 인근 지역에서 국경없는 마을 사업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안산시는 현재 국경없는 마을을 살아있는 다문화 지역이 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 다문화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①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은 지역 청소년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다문화 교육은 소수자 보다는 다수자의 문제가 더 크다. 따라서 다수자인 내국인을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성인보다는 청소년들을 향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판단 되었다. 그래서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협력을 통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을 열었다.

② '주말 다문화 대안학교와 계절 다문화 대안학교'이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상대로 한 교육이다. 주말 다문화 대안학교는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

에게 행하여 졌다. 첫째 한국인 청소년인 경우 주말이면, 한국인 청소년들이 ‘안산이주민센터’를 찾아와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에 참여 하였다. 다문화의 이해와 지역사회 탐방 자체가 다문화 교육의 길잡이가 된 것이다. 방학에는 청소년들이 다문화 캠프를 열었다. 둘째, 소수자 청소년들을 향한 교육이었다.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한국어 배우기와 한국 문화 체험 그리고 모국어 배우기와 모국어 문화 익히기가 중심이 되었다. 소수자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과 자신들의 출신 국 문화의 이중문화 구조를 가진 아이들이다. 이들에게는 제3의 정체성이 있는 다문화 청소년 이었다. 이들 청소년들이 제3의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자존감을 갖게 하는 심리적 과정도 매우 중요하였다.

③ ‘다문화 가족 사업’의 시범 운영이었다.

국내 결혼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사회 시민사회 단체들로 결혼 이민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되지 못하였다. 지난 2006년에는 ‘경기도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하여 경기도 지역의 5개 곳을 선정 정하여 결혼 이민자 지원 소외 지역에 대하여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었다. 한편, 안산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다문화가족 셀프영상 다큐제작, 결혼이민자 상담 기법을 개발하여 체계화 하였다. 코시안의 집에서는 다문화 가족 체험 수기를 공모하여 ‘다문화 가족 이야기’를 자체 출판하기도 하였다.

(3) 다문화적 제도개선운동

① 이주노동자

산업기술연수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일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에서 ‘연수생’이 아닌 ‘근로자’로서 그 신분을 인정받고 일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이들은 근로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안적 법이 바로 ‘고용허가제’이다. 이 법안을 위하여 지난 1995년부터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꾸준한 정책 경쟁을 벌여왔고 2004년 9월부터 이 법이 국내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 1년마다의 재계약 문제 등 독소조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자로서의 신분 인정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노동하는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신분인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실천운동이었다.

② 이주가정 코시안 교육권 보장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여 이주가정 코시안 아동이 합법적 신분 한국에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7월 이후 부터이다. 이전은 체류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임시적 교육이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이주아동인권연대를 결성하여 이주아동인권문제를 제기 하였다.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이주아동의 인권문제를 제기 하였다. 2006년 5월 등학교를 지도하던 이주아동의 엄마가 단속되면서 이주아동의 교육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아동과 그 부모에게도 합법적인 체류가 보장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특히 부모가 비자 없는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동들의 국적 권에 대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가 스스로를 ‘나는 한국인이다’라는 고백이 한국의 혈통주의 국적 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③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법

결혼이민자와 그가 족에 대한 법률적 지원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 ‘혼혈인 차별 금지법’, ‘이주민 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고 있다. 동 법률의 자문과 지원을 통하여 다문화 가족들이 국내에서 다문화적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국경없는 마을 운동의 확산과 갈등

① 시민사회 단체로의 제안

2000년 이후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국경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민사회 단체들도 관심을 가져 나가기 시작 하였다. 안산지역에서도 시민사회 단체들과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토론회를 전개 하였다. 안산 이외 지역에서도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교육 시간을 통하여 국경없는 마을 설명회를 벌여 나가고 있다.

② 국경없는 마을의 국제단체 소개

국경없는 마을에 대한 소개는 초기에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다.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아시아 기독교교회협의회 관련 부서들의 국제 토론회에서 국경없는 마을이 소개 되었다. 일반적으로 학교 기관에서 연구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다. 국경없는 마을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관심을 갖는 곳은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 쪽은 미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 이긴 하지만 지역 공동체성이 떨어진다는. 따라서 다문화 지역 공동체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카고, 하와이, 뉴욕 등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차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경우, 시민권,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등에 관심을 보인다. 가나가와 시티의 시민단체 등과 상호 활동 등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③ 이주민 운동과 국경없는 마을의 법인화

국경없는 마을을 법인화 하였다. 2004년부터 2년 정도 준비 기간을 통해 법인화 하여 국경없는 마을 운동을 통한 다문화 운동을 전문화하기 시작하였다. 안산이주민센터의 명칭도 변경하였다. ‘안산이주민센터’의 경우 이전의 명칭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였다. 지난 십여년 간 단체의 이름이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졌었다. 그러던 2006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단체 명칭을 과감하게 변경하였다. 단체의 명칭에 따른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까지 과감한 변경을 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만의 문제로 다문화 문제를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④ 국경없는 마을의 갈등

국경없는 마을 원국동에도 갈등이 있다. 갈등의 양태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태도이다. 아직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국동에서 이주민들의 주거에 따른 문제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지만, 어쩔 수 없는 요소가 사라지면 모두 내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주로 경제적 문제로 연결된다. 주민들과 잘 화합하다가도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을 들어내며 지역의 ‘토호세력’임을 주장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공권력과 관계이다. 국경없는 마을 원국동은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원국동을 수도로 생각할 만큼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든

다. 그렇다 보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당연히 물려들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의 공권력이 단속이 용이하다는 이점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투입 되었다. 한때는 지역 상인들이 가게마다 ‘국경없는 마을 강제 추방단속 중지’라는 작은 배너를 달며 공권력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3)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운동 제3기 (2006년 6월 이후 현재)

다문화 국경없는 마을 제3기는 국경없는 마을의 법인화와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안산이주민센터로의 명칭을 변경을 기준으로 삼았다.

(1) 법인화와 다문화 학술 활동

사단법인 국경없는 마을 법인은 2006년 7월에 문화관광부로 법인설립 허가증을 받았다. 법인은 세 가지 부설 기구를 두고 있다. 다문화 사회교육원, 다문화 콘텐츠 개발원, 국경없는 마을 훈련원이다. 다문화 운동을 펼쳐나갈 지역법인도 설립 진행 중에 있다. 법인 내 다문화 사회교육원에서는 매달 다문화 학습을 진행 중이다. 연구학습은 다문화주의 이해를 시작으로 다문화 관련하여 다양한 학계의 의견을 서로 공부하고 있다. 조사사업은 결혼이민자 조사 사업, 이주아동 조사사업, 경기도 정주실태 조사 등을 하였다. 현재는 이주민 문화지도 연구 작업을 마친 상태이다.

(2) 다문화 프로그램 활동

다문화 활동 프로그램은 그동안의 문화축제의 틀을 넘어 아시아 특성 문화 축제로 이어진다. 인도네시아 음악축제(2006, 9), 아프리카 문화축제(2006, 10), 태국 송끄란 축제(2007, 4), 스리랑카 설날 축제(2007, 4)가 열렸으며, 2007년 9월 한 달간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함께 모이는 다문화 축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축제 및 학술 행사가 열린다.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는 2007년에는 이주민 다문화지도 제작, 이주민 문화테마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체험 교실 운영 지원, 이주민 문화 멘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다문화 교육 사업은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실무자 교육, 유치원 다문화 교육, 초·중·고등학교의 찾아가는 다문화 교실, 다문화 캠프 등이 있다.

(3) 다문화 주체 형성 및 타 지역의 국경없는 마을 운동 확산

2007년 7월 안산시가 국경없는 마을 원곡동을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이주민 공동체와 연대하여 제동을 걸었다. 특구 문제는 아직 안산시와 협의 진행 중이다. 국경없는 마을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안산시가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졸속 행적과 독단성, 다문화를 이용한 지역사회의 부동산 투기의 장, 다문화를 활용한 지나친 상업화 계획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는 국경없는 마을 원곡동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이 모여 주민 토론회를 벌여 나가고 있다. 지역 다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이주민과 내국인,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이주민 단체, 전무가 등이 모여 더욱 활발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 할 것이다.

(4) 국경없는 마을 동아리 운동의 전개

현재, 다문화 지역사회 운동으로서 국경없는 마을 운동은 미시적 공동체 운동을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이주민 위원회, 다문화가족협회, 중국동포노인회, 각국 이주민 공동

체, 다문화 청소년 위원회, 다문화 자원봉사자 모임, 다문화 시민단체 연석회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들 작은 공동체 운동을 통하여 다문화 지역 공동체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되고 있다. 특히 이주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공동체 운동을 확산 시키고 있다. 다문화 운동이 지방에서 특성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경없는 마을 멘토 사업이다. 국경없는 마을 사업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알려지면서 다문화 공동체 운동을 연구를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경없는 마을 동아리는 나라별 공동체 동아리에서 출발하여 문화동아리(댄스, 그룹사운드 등), 스포츠 동아리(축구협회, 농구, 크리켓 등), 봉사동아리(버팀목, 까르티엠, 한우리, 종교봉사단체 등), 다문화 학습 동아리(양지고 카페 모임, 교사모임, 연구자 모임 등), 경제동아리(귀환 준비 모임, 다문화 공방 등), 친교동아리(중국동포 노인회, 귀환 동포 노인회 등), 의식동아리(종교 동아리 등)가 있다. 이들의 동아리들이 네트워크 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문화 공동체의 모세 혈관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 동아리가 구성되고 있다. 경제 동아리를 통하여 이주민들과 내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생계 활동을 열어가기 위함이다. 아직 초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형식으로 출발하지만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의 실제

안산의 국경없는 마을에서 지역사회 다문화 교육으로서 ‘다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였다. ‘다문화체험교실’은 지역, 청소년, 이주민, 미디어, 전문기관 연계, 문화예술(다원예술 포함) 등 다양한 영역과 범주에서 교차되는 지점에서의 다양한 다문화교육의 기초모델개발을 위한 다문화콘텐츠를 연구하고 실험하였다.

1) 국경없는 마을 RPG

RPG란 Role-Playing Game의 약자로써 컴퓨터 게임의 장르 중 주어진 캐릭터의 특성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방식의 게임을 부르는 말이다. “국경없는마을 RPG”는 RPG 온라인 게임(리니지)의 특성인 미션수행, 아이템 줍기, 맵(map)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수행과정,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 들(누군가와 만나는 것, 대화, 상황을 헤쳐 나가는 기지, 방법) 등을 활용한 공간 혹은 지역 기반 형 체험 프로그램이며, 실제의 공간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게임으로 진행되는 방송(미디어) 프로그램 진행 형식을 도입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국경없는 마을RPG’ 프로그램의 진행형식은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방송미디어 방식을 채택하여 미디어와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지역별 축제와 더불어 수많은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일회성에 그쳐 체험학습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경없는 마을RPG’는 매 회 동일한 학생들이 체험 학습에 참여하고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9차에 걸쳐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문화를 몸소 배워나갔다. 진행 방식 또한 청소년 대상에 맞게 그들 세대에 인기가 많은 온라인 게임의 방식을 오프라인화 하여 현장에 적용가능하게 변형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미디어 친화력이나 미디어적 상상력을 비추

어 볼 때 방송미디어 운영방식을 프로그램의 진행에 적극 활용하였다.

지역기반의 다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위해 지역적 기반을 살펴보면,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은 지역적으로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 인접해 있어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주민의 구성분포를 보면 중국인, 중국동포, 베트남,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매우 많은 국적의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듯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은 다국적, 다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공존을 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닌 다문화지역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지역에 이주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종종 과잉 과장된 보도로 인하여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은 범죄의 온상과 같은 인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한편 그러한 과장된 언론 보도는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을 잘 알지 못하는 내국인 혹은 시민들에게 기피하게 되는 지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내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에서 직접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동일한 대상 20명이 9회에 걸쳐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매 회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이주민과 지역을 리서치 하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참여한 청소년들이 지역과 지역민과 만나고 알아가는 접점을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였다. 특기할 만 한 점은 진행 회 차가 중반부로 접어들 즈음에 참여 학생들 스스로가 지역의 이주민들과 함께하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자신들이 뭔가를 할 일이 있지 않을까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함의가 담긴 기획의도를 말 해주었던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는 고민들을 하는 모습이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에게 미친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후 원곡동 지역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상당부분 해소되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경없는 마을RPG’ 프로그램은 안산의 단원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이 되었다. 마침 단원고등학교가 다문화에 점차 많은 비중을 두려고 하려던 시기에 본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진행된 것이어서 의의가 크다. 학교 측에서도 매우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및 참여 학생 모집은 물론 참여를 독려하는데 많은 부분 협조를 하였고 주관단체인 사단법인 국경없는 마을에서도 프로그램이 야외에서 진행되느니 만큼 만일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참여 학생 모두에게 여행자 보험을 들어 주고,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수료증을 수여, 프로그램을 비롯한 학교의 대외 홍보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기획부분, 연구조사부분, 현장진행 부분으로 나뉘어 운영인력이 구성되었으며, 기획부분에는 안산 원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안산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오랜 활동을 하셨던 현장 활동가를 자문으로 하여 원곡동 체험 프로그램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연구조사부분은 ‘국경없는 마을RPG’ 프로그램 특성상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문화적 요소들을 조사하여 미션으로 활용하여야 하기에,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을 주축으로 조사 작업을 시행하였다.

현장진행 부분은 크게 진행파트와 미디어파트로 나뉜다. 프로그램 진행에는 ‘이주민 문화멘토&다문화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여 수료를 한 필리핀 이주민이 참여해 진행에 적극 하

였다. 이주민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멘토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 내국인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미션 제시 및 진행을 이주민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다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국경없는 마을RPG’ 프로그램 특성상 방송미디어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미디어 팀은 참여 학생들의 현장체험 일거수일투족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감각적인 영상편집을 통해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bvrpg.cafe>)를 활용하여 영상물 및 기타 정보 공유를 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그 외에도 매 회 차별로 제작된 프로그램 영상제작물은 인터넷 온라인에 올려 많은 수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고, 여러 언론매체(한겨레, CBS, 경인방송, 일본 경제신문 등)에 보도가 되어 프로그램의 내용과 더불어 다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총 9회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했던 학생들은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이 가졌던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와 이주민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선입견과 오해를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부분 해소 할 수 있었고, 오히려 지역과 더불어 이주민과 함께 무언가를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 볼 수 있겠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고 학생들은 참여 소감을 말한다. 이렇듯 내국인 대상의 다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일순간 큰 변화를 만들어 낸 다기 보다는 조금씩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한 자기 동기부여와이를 통한 인식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국경없는 마을RPG’ 프로그램은 미디어(영상, 방송, 온라인 기반), 청소년 지역운동, 다문화 체험, 네트워크, 인력활용 등 여러 방면에서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모델로서의 다각적인 실험이 진행 되었다.

2)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여성)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결혼이민자(여성)가 참여하였다. 이는 이주민 대상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에 있어 한국문화로의 일방적인 동화주의 입장을 넘어서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문화다양성의 존중, 문화향유권의 확대에 주안점이 있다. 이주민 스스로 개개인의 문화주체성의 확립과 표현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이에 결혼이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자존감을 향상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토대로 한국사회에 적응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여성 등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진행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 측면 즉,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선 매 수업마다 출석률의 변동 폭이 매우 크고, 일정치 않은 수의 수강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과 국적, 이해도, 정서, 등 여러 상이한 요인을 가진 수강생의 개인적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어느 일정 난이도 혹은 수준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또한 수강을 하고 있는 수강자 본인 스스로도 프로그램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늠을 못하고 있기도 한다. 또한 교육자와 피교육자 공통적으로 언어적 소통이 되질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빈번히

목격할 수 있다.

이주민이 피교육자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많은 부분 기인한다. 좀 더 원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현실에서의 경제적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다문화교육 혹은 문화예술교육을 배울 기회가 주어져 참여를 한다고 해도 많은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공장을 다니며 야근과 잔업 때로는 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많은 수가 공장이나 상점 등에서 일을 하고 있고 더불어 가정 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냉정히 말하자면 문화적 권리와 다양성의 문제는 아직 이주민 현장에서는 묘연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이한 현실적 입장이 교육 현장에서 미묘한 갈등을 보인다.

‘판도라의 상자’는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위에 언급하였던 현실적 문제들의 간극을 좁혀 나감과 동시에 상호 필요한 장점의 요소들을 살려 나가는 방식의 실질적으로 이주민이 적극적이고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의 실험이 필요했다. 프로그램 기획 초기, 내부적으로는 이주민 대상의 다문화체험교실 프로그램에서 유통의 단계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이주민 손수 제작한 결과물과 판매를 통한 유통 그리고 수익금 배분에 이르는 과정이 참여 이주민들과 공유되고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판도라의 상자’는 이주민들의 ‘희망(부자가 되고픈 희망, 잘 살고픈 희망 등)’을 함의하고 있는 프로그램 명칭이기도 하거니와 ‘목판화’라는 매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기에 ‘판’이라는 낱소리가 담긴 구절로 프로그램 명칭을 정하였다. ‘판도라의 상자’는 저녁시간 때에 진행 되었다. 이는 참여자가 대부분 공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므로 퇴근이후의 시간에 수업을 시작하여야만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주민 대상의 프로그램들은 주말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그래서 이주민들은 오히려 주말이 가장 바쁘다.

위에 언급하였듯 이 프로그램은 ‘목판화’ 매체로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각자의 드로잉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본인, 가족, 고향, 풍습, 풍경 등)를 꺼내어 놓았다. 몽고에서 온 세기 씨는 나지막한 야산과 말이 있는 풍경을, 필리핀에서 온 마미린 씨는 행운을 빌어주는 의미가 있는 필리핀 전통 문양을, 또 다른 필리핀 여성은 코코넛 나무가 있는 고향집 풍경을 그렸다. 필리핀에는 집집마다 꼭 코코넛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 그 외에 다른 참여자들도 자신의 이야기들을 드로잉과 함께 설명을 하였다. 각자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목판화용 나무판에 그림을 옮기고 조각도로 판을 제작하였다. 필리핀에서는 목판화를 학교수업에서 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중국에서 장옥파 씨는 처음 목판화를 해 본다고 신기해하였고, 중국인 함덕미 씨는 임신 중인지라 태교차원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의를 두었으나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에밀라 씨는 한국으로 오기 전, 본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교사를 했었다고 한다. ‘판도라의 상자’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수강생이기도 한 에밀라 씨는 다른 참여자들보다도 훌륭한 솜씨를 뽐내었다. 스스로 숙제를 해 오겠다며 목판과 조각도를 빌려가 여러 개

의 목판을 만들어 오는 열의를 보였다.

참여자 개인별로 여러 가지의 참여 동기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본적인 동기부여는 자신들이 제작한 판화가 판매가 되어 자신의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지점일 것이다. ‘판도라 상자’의 목판화 수업은 프로그램 진행시기가 시기인 만큼 크리스마스카드를 목판화로 제작해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참여자들이 제작한 다량의 결과물들은 인근 이주민 관련 단체에서 구입을 해 주었다. 또한 다문화 공방 및 연말의 나눔 행사장에 전시하여 판매를 시도하였다.

이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주민들의 현실적인 동기를 추동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감안하여야 한다. 매 회마다 몇 명이 참여 했는지, 어떤 성과물들이 나왔는지는 두 번째 문제이다. 수업시간에 전원출석이 아닌 한 두 명이 나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하여도 참여한 분의 개개인의 열의를 보아야 하는 지점이 있다. 출석을 못하신 분들은 열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출석키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곤란한 입장인긴 하지만 이것이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특수성이다. ‘판도라의 상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려면 참여자들의 디자인 감각 개발은 물론 좀 더 다양한 부분의 질 높은 아트워크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체계적인 유통구조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이주민 대상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범주인지, 이주민들의 문화 예술적 방법을 통한 자생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의 수위 조절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과제로 남는다.

3)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은 수학능력평가와 연합고사를 마친 고3과 중3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학기 중에 학교와 연계하여 외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학사 일정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며, 아무리 양질의 프로그램이 있다하여도 공교육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는 것은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문화교육은 이제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고취하고 함양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처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글로벌 러닝을 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의 강사 구성은 이주민으로 구성되어있다. 총4개국(몽고,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출신의 이주민 문화멘토가 자신의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음식과 의상, 놀이 등의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한다. 또한 내국인 코디네이터들은 프로그램의 기획을 비롯해 이주민 문화멘토들이 각장의 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내국인 코디네이터와 이주민 문화멘토의 협력관계는 다문화교육을 시행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된다. 프로그램이 진행된 교육현장에서도 약간 서툴고 어눌한 한국어지만 자신의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이주민 강사에 대한 신기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진지한 태도로 프로그램에 임하였고, 음식체험, 의상체험, 각국의 놀이와 춤을 배울 때는 즐겁고 적극적으로 체험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당한 만족도를 나타냈다.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내국인 코디네이터와 이주민 문화멘토의 결합으로 구성되었다. 어지간해서는 맘을 쉽게 열지 않는 이주민의 특성상 이러한 멤버십을 구성하기까지는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하므로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화멘토로 활동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이주민이라 하여도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기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들의 활동을 돕고 전반적인 서포터 혹은 코디네이션을 해줄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국인 코디네이터와 이주민 문화멘토는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관계의 많은 형성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해 가는데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여전히 개선하고 노력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내국인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이주민들과의 인간적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이주민과 이주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문화적 자존감을 독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한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한 기획과 코디네이션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또한 이주민 문화멘토들은 멘토로서의 자기 동기부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한 번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대상에 맞는 연구와 자신의 문화예술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통해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과 교수법 개발 등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이주민 자국의 일반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단계에 있지만 자국의 문화를 넘어서 한국문화와의 비교 혹은 제3국 문화와의 비교 등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다문화 프로그램으로의 진화에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다문화체험교실’은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 물론 일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지라 1회 진행에 드는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심도 있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에 언급한 문화멘토들의 다양하고 단계적인 교육내용 구성과 커리큘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1) 이주민들의 노동조건이나 인권침해 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문제와는 달리, 결혼이민자, 여성, 아동, 난민, 새터민 등 새로운 다문화 이주 주체들의 등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칫 다문화 교육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를 간과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지역경제체의 형성, FTA, WTO 등을 둘러싼 이주민의 노동소외와 인권침해 문제를 좀 더 심층 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 공동체 형성과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다문화 교육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체험을 넘어서야 한다.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 교육실태의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다양한 다문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론 연구, 지역사회 조사, 다문화 교재 개발과 미디어 교재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과서의 편집과정에 다문화적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며,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방송물기획과 제작은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데에서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다.

3) 지역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창조적인 지역축제를 개발이다.

국경없는 마을축제나 이주노동자 인권영화제나 다양한 지역단위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공공기반 문화시설과 함께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문화 공간, 시민단체 시설, 문화예술의 전당, 주민자치센터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문화 이해와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다문화 교육 전문 역량의 양성이다.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단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다문화 관심자, 전공자, 예술가, 실무자, 현장 그리고 교육 전문가가 만나는 유기적 네트워크의 구성 또한 다문화 공동체 사회 형성에 서로 힘이 될 것이다.

5) 창조적인 다문화 공동체 형성이다.

지역주민과 이주민, 정부기관, 공동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창조적인 지역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창조적인 다문화 공동체 형성은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 지역사회 비전을 제시 할 수 있게 된다. 이주민과 내국인의 소통과 함께 어우러지는 대안적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6) 지역사회 다문화 동아리 운동의 활성화이다.

다문화 동아리는 다양하다. 경제동아리, 친교 동아리, 학습 동아리, 문화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종교 동아리 등이다. 지역 사회가 공동체로 살아 숨쉬기 위하여 다양한 동아리들이 다문화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다문화 동아리 운동의 활성화되기 위하여 이주민과 내국인과 함께 토론과 공감형성,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30차시]

1.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이해

1) 가치의 본질과 의미

가치는 인간에게 어떤 것이 값어치 있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 평가될 때 쓰이는 개념이다. 선하고 바람직한 어떤 것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에게 유익함을 준다. 가치는 주관 및 자기의 욕구, 감정이나 의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치이다.

경제에서 가치는 경제 활동의 근본적인 원인과 활동의 결과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어떠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은 그 재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그 재화의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

가치는 일반적으로 '실존'이나 '사랑', '정의'와 같은 최고의 개념이므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비교할 수 없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말이다. 그래서 가치는 단지 그 말이 담고 있는 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하여 진다. 그래서 가치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체험'하는 측면과, '관념적인 측면' 그리고 그 '성질'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다.

2) 가치의 타당성

모든 가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함에 있다고 한 사람은 W.빈델란트이다. R.H.로체는 플라톤의 이데아로서 가치는 실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가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인식된다. 하지만 어떤 가치는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이들에게 한정된 주관적인 가치가 있고, 또 어떤 가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객관적인 가치가 있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치는 그것을 추구해야 할 명분을 준다.

① 현상학적인 가치체험의 타당성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자신의 주관적 견해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어떤 것에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어떤 예술작품이나 풍경을 보고 자신은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타인 대다수에 의해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넘어서 객관적 가치가 있음을 말해준다.

② 존재론적 차원의 가치들의 타당성

인간이 자기완성을 위해 추구되어야 하는 어떤 정신적 가치들을 말한다. 이 정신적 가치들은 인간의 자아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계명, 규범, 법의 형태를 띤다.

③ 문화적 차원의 객관적 가치들

인간이 문화적 존재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이 창출하는 객관적 가치가 표현된 어떤 것으로 전제하는 경우이다. 인간은 문화를 접하면서 그 안에 표명된 객관적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4) 가치철학

(1) 가치철학

가치학이라는 말이 학문으로 독자적 체계를 잡게 된 것은 19세기 초 뢰체(H. Lotze)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가치문제를 철학적인 대상으로 삼아 연구한 이는 소크라테스(Socrates)이다. 그는 당시 소피스트들이 내세우는 상대주의에 대항하여 윤리적 가치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 그 후 철학자들은 가치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가치가 독자적으로 절대적인 것으로서 존재하느냐, 아니면 가치는 사람의 관심여하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냐가 주 문제였다. 가치 상대주의의 입장에 의하면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영원불변한 가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있는데 인격가치는 그러한 예가 된다.

(2) 가치철학의 형성과정과 흐름

가치문제를 최초로 철학적으로 다룬 이는 소크라테스였다. 그는 윤리가치의 보편성을 주장했으나, 그의 제자인 플라톤(Platon)에 이르러서는 가치문제를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다룬 나머지 철학의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지 못했다. 한편 칸트에 이르러서는 플라톤의 존재론적 우주론적 경향을 벗어나 가치의 인격적 측면이 강조되긴 했으나 여전히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가치철학의 분류	내 용
일반가치 철학	가치의 본질, 가치의 다양성, 실제와 당위, 가치의 분류와 서열, 가치 인식, 가치실현의 문제를 다룬다.
특수가치 철학	윤리적 가치철학 (윤리학), 미적 가치철학(미학), 종교적 가치철학(종교철학, 신학)의 문제를 다룬다.

가치철학은 2,000년 가까이 유럽 정신을 지배해 온 그리스도교적인 인생관·세계관과 정면 대결함으로써 이른바 ‘모든 가치의 가치전환’을 시도, 유럽의 새로운 미래를 타개하려고 하였다. 이는 유럽에서 가치의 문제가 19세기 후반에 와서 자각되기 시작한 것도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뒤를 이어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을 맞게 된 역사적·사회적 변동 속에서 새로운 인생관과 세계관적 이념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3) 가치철학의 유형

가치문제는 비로소 뢰체에 의해 철학의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다. H.리케르트는 가치의 철학은 보편 타당성을 가진 가치의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브렌타노(F. Brentano)는 가치문제를 철학적으로 다루면서 그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치철학의 접근 유형	학 자
심리학적 경향의 가치철학	에렌펠스(C. Ehrenfels), 마이농(A. Meinong)
신칸트학과	빈델반트(W. Windelband), 리케르트(H. Rickert)
피히테 학파	피히테(Johann Fichte)
현상학적 경향의 가치철학	막스 쉐러(M. Scheler)
존재론적 경향의 가치철학	하르트만(N. Hartmann)
신스콜라 학파의 가치철학	얀쉬(Jaensch), 린텔렌, 뢰츠, 힐데브란트, 데 브리스(J. de Vries)

가치론의 종합	힐데бран트(D. von Hildebrand), 린텔렌(J. Von Rintelen), 헷센(J. Hessen)
---------	---

5) 문화적 가치 탐구

(1) 문화적 가치갈등과 사회적 탐구

가치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위'를 말한다. 개인의 철학이나 인생관의 차이에 따라 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갈등을 빚게 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선호하는데 반해서, 다른 사람은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갈등은 주관적인 판단과정이 개입되어 해결이 어려우므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판단기준을 세워 우선순위를 탐색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문화적 가치탐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효율성)와 '평등'(형평성)의 대등한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으므로 '가치탐구'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적 탐구(사회현상의 분석과 증거제시 등)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적 가치탐구

다문화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 간 우열은 가릴 수 없다 하더라도, 가치간의 갈등이 포함된 경우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이므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선택을 용이하도록 기분을 제시하는 것이 가치탐구이다.

선택의 기준	내용
기본적 가치 > 파생적 가치	기본적 가치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근본이 되는 가치이고, 파생적 가치란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를 말한다. 양자가 충돌할 때는 기본적 가치를 우선한다. '인간의 존엄성'이 기본적 가치라면 '자유'와 '평등'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파생적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보편적 가치 > 특수한 가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유' '정직'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는 육체적 쾌락이나 금전적 욕구 등 특수하고 한시적인 가치보다 우선한다.
사회적 가치 > 개인적 가치	사회공공의 건강은 사회적 가치로써 개인적 가치인 출연의 즐거움보다 우선한다.

2. 다문화 사회의 가치와 철학

1) 가치 있는 다문화 사회의 꿈과 비전

다문화 사회의 비전 형성에는 신념이 필요하다. 다문화를 통한 자신의 꿈을 그려 낼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주의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으면, 다문화주의를 실천적으로 이끌어 낼 수가 없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사고를 기초로 한다. 문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

고 서로 다른 문화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가치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에 대한 꿈이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개인으로 끝난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의 행복한 꿈을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다. 행복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열정이 있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문화 사회의 꿈인 국경 없는 마을은 다문화 이론이나 정책, 프로그램이 아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한 새로운 꿈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에 대한 꿈으로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은 이주민이나 세상에 대한 변화 보다는 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 한다. 나를 변화 시킨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꿈과 목표와 가치로 나의 삶을 서로 일치시키는 일이다.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행동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실천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실천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에 대한 꿈을 현실화 시키는 열쇠이다.

2) 차이의 재발견으로서 다문화 가치 창출

다문화의 가치는 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창출'에 있다. 가치가 가치로서 결정되는 요인은 자부심, 삶의 풍족, 가치 의미의 재발견, 비전동의 등 이다. 다문화시대의 새로운 가치는 외형주의나 성과위주 극복, 무한 경쟁과 무한 소외를 공동체의 방식으로의 전환으로서 창조적 가치 중심의 다문화 주의이다. 창조적 가치 중심의 다문화 주의는 다문화 환경적응이 아니라 환경 창조로서 사회적 가치 블루오션이다. 차이가 있어서 행복한 다문화 사회의 형성이 다문화 가치이다. 이주민 집단 거주지역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시끄러움이 변하여 화음이 되고(축제), 어지러움이 변하여 마을의 풍물이 되고(잘사는 마을), 쓰레기가 변하여 따스한 마음이 되는 마을(마을 행동)이다. 다문화의 사회적 가치는 경쟁원리가 변하여 상생의 원리로, 자기비전을 타인비전으로, 자기만족을 이웃만족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다문화 수용	다문화 가치
단일문화 민족주의($1+1=1$)	가치 배제
다문화 동화주의 ($1+1=1'$)	가치 활용
다문화 공생주의 ($1+1=2$)	가치 분배
다문화 창조주의($1+1=3,4,5\dots$)	가치 창출

3) 가치 창출로서 다문화 운동

다문화 사회의 가치는 관계 개념이며, 이 가치는 만들어 진다. 다문화 사회의 가치는 문화적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며, 가치는 행동을 유발 하고 방향을 결정 한다. 그러나 선입관과 고정 관념은 가치판단과 객관적 사실에 왜곡을 가져다준다. 다문화주의의 신념 중 최악의 경우는 문화적 사고를 한계 짓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상력과 창조는 다문화 창조주의의 핵심가치이다.

① 다문화 운동은 사회혁신(새로운 가치창출) 운동이다.

- ② 혁신의 목표는 ‘더불어 행복한 다문화 세상 만들기’로서 사회적 가치 불루오션이다.
- ③ 다문화 사회 혁신의 가치는 자유(다양성), 평등(정의성), 평화(공동체성), 상상력(창조성)에 둔다.
- ④ ‘더불어 행복한 다문화 세상 만들기’는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중심 사상에 놓고 자원을 지역 사회에 집중하는 일에서 출발 한다.

분류	구성요소			
다문화 특성	자유	평등	평화	창조
단일문화 특성	편견	배타성	흑백논리	고정관념
다문화 과제	다양성	정의성	공동체	상상력

4) 고정관념 회귀 본능과 교육

다문화 사회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고정관념이 잘 바뀌지 않는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도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간다. 마치 늘어진 고무줄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과 같이 ‘고정관념 회귀 본능’이 있다. 고정관념 회귀 본능은 ‘학습된 무능력’ 상태를 유지하도록 강제한다. 꼬끼리를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어 두면 어른이 되어서도 꼬끼리는 말뚝을 뽑지 않는다.

다문화 사회로의 나아감은 끊임없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동반 된다. 다문화사회의 목표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행복한 공동체 형성에 있다. 다문화교육의 최종목적이 단순히 편견의 극복의 인식에만 둘 경우 고정관념 회귀 본능에 의하여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다문화주의의 신념은 사람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지 관계를 훼손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문화는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준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신념은 가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신념을 갖을 수 있다. 고정관념이 문제이다. 고정 관념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굳게 만든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신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문화 읽기, 문화 쓰기, 문화 말하기, 문화 실천하기 등을 통하여 주체들의 문화선택의 역량을 배양하는 일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혁은 후기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해체와 재구성의 순환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다문화 사회의 가치 달성 전략

1) 다문화 사회의 가치(Multicultural Value)

(1) 다문화 사회의 가치의 기초

다문화 사회의 가치는 다문화 지역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인 내국인과 이주민이 본 가치이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가치는 지역주민으로부터 나온다.

(2) 다문화 사회의 핵심가치

다문화 사회의 핵심가치(Multicultural Core Value): 내국인과 이주민이 다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다.

(3)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핵심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핵심은 지역사회가 다문화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주민들의 필요성 인식에 있다. 즉, 주민 구성원의 변화, 상권의 변화, 지역사회 가치의 변화, 이주민에 대한 노동인권의 보호, 차별문화 개선 등이 있다.

2) 다문화 가치 달성 전략

(1) 비전과 미션

전략이란 선택이다.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여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일이다. 부정적 갈등과 긍정적 갈등을 구별하여 차별과 배제 등의 부정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상생과 새로운 사회 형성 등 긍정적 갈등 에너지를 다문화 공동체 형성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전략은 버리는 일(해소)이며 새로운 가치에 집중하는 일이다.

비전과 미션은 다문화 전략의 기본 축이 된다. 비전과 미션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의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비전과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곧 다문화 이념화이다. 다문화 사회의 비전(목표, Vision)이란 미션에 근거하여 실현한 일을 가리킨다. 비전은 장래 미션을 이루었을 때의 모습, 사명이 달성 된 뒤의 모습이다. 다문화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이 곧 다문화 사회의 비전이 된다. 다문화 사회의 미션(목적, Mission)이란 지역사회 조직이나 공동체의 존재이유를 밝히는 것이다. 다문화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으로서 '무엇을 위해 이 사업을 하는가?'를 말한다. 미션(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과 가치관의 공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2) 다문화 가치 달성의 전략적 사고

다문화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개인과 집단의 요구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 자체는 고정화 된 것이 아니라 불확정적이다. 문화적 사고가 문화는 변한다는 것에서 출발 한다면, 다문화의 전략적 사고는 문화 창조를 위한 적절한 개입을 의미한다. 전략적 사고는 곧 창조적 사고이다. 다문화의 전략적 사고는 불확실한 다문화 사회 환경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눈앞의 과제를 설정하고 장래의 상상력을 동원하고, 미래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고이다. 다만, 문화 창조가 다수자의 문화지배로 이어지는 문화조작이나 문화통제가 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치 달성을 위한 전략적 사고는 ① 현재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②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③ 전체의 모습을 분명히 한다. ④ 목적과 가설을 생각한다. ⑤ 새로운 니즈를 탐색한다.

(3) 다문화 가치 달성 전략

① 차별화전략(다양성 강화)

동질화로서 동화주의와 통합성의 전략은 다문화 사회의 역행이다. 이와 다양성을 긍정적 시너지 요소로 삼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을 실행한다. 문제는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무엇을 통하여 차별화 할 것인가이다.

② 상생전략(연대성 강화)

다문화 주체들이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발전 시켜 나감으로 다수자와 소수자가 상호성을 받아들이고 협력성을 발현 시켜 나가는 것이다. 상생전략은 창조전략으로 나가기 위한 기존

질서의 터다지기이다.

③ 창조전략(상상력 강화)

피해를 안주고 피해를 안 받는 것은 갈등 없는 상황은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무관심 혹은 정체성의 상황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갈등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것이다. 창조전략은 창조사회의 가치를 실천으로 집중하는 일이다.

④ 리더십전략(정책성 강화)

정책 형성의 주도적 참여 및 영향력 형성의 리더십이다. 다문화 사회 문제의 사회적 이슈화, 여론 형성, 정책 반영과 제도의 도입 등에서 소수자의 의견과 다양성이 반영 되는 다양한 의사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3) 다문화 가치 사슬(Value Chain)과 사업

(1) 다문화 가치 사슬

다문화 공동체 운동의 존재이유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다문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있다. 다문화 가치 사슬(Value Chain)은 '이주민과 내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다문화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라는 다문화 공동체 운동의 존재이유에 대한 다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는 연계 고리가 다문화 가치사슬이다.

즉, 다문화 가치 창조의 가치사슬은 다문화 지역 사회의 갈등요인 분석하고, 다문화 지역 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문화 기본 전략(목표: 부정갈등 최소화, 긍정갈등 최대화)을 설정하고, 지역 사회 다문화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동의 목적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다문화 가치들의 연계를 통하여 적절한 지역사회 다문화 동아리들과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을 통하여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 된다.

(2) 다문화 사업의 다양화 전략

지역 사회의 다문화 사업은 문화적 차이와 다문화적 창조활동을 통하여 내국인과 이주민에게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며, 핵심 가치를 최대화 하는 것이다. 다문화의 사업의 핵심은 다양성을 기본으로 다양성에 대한 창조적 접근을 통한 다양화이다. 즉, 다양화의 포인트는 즉흥적으로 다양화 하지 않는 것이다. 다문화 사업의 다양화 전략은 프로그램 영역과 대상영역을 기초로 한다. 이주민과 주민 등 대중의 욕구는 변한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의 영역도 고정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뒤따른다. 상식을 타파하는 것도 전략이다. 세상의 구조가 달라지면 전략도 달라진다. 그러나 전략은 실천을 토대로 이론화하고, 이론을 실천으로 검증한다.

		프로그램 영역	
		기존	신규
대상 영역	기존	현재 분야의 전문화 - 사업의 특성화 - 지역사회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사업개발 -프로그램 개발
	신규	대상의 다양화 - 대상의 다양화(소수자에서 다수자로, 아동에서 성인 등) - 대상 영역 개척(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심리, 행정 등)	미지영역으로의 다양화 - 상상력과 창조로서의 다문화 창조 - 물리적, 비 물리적 영역 - 개인과 집단의 영역

4) 다문화 사업의 특성화 실천 전략

(1) 다문화 사업의 기초로서 소통

다문화 지역 사회 특성 파악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묻고 대답하는 과정의 즉 소통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누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가?
- ② 어떤 다문화 사회를 추동하는가?
- ③ 다문화 사회를 허용과 통제는 무엇인가?
- ④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다문화 사회 추동에 관여하는가?
- 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다문화 사회 추동을 방해 하는가?
- ⑥ 어떻게 다문화 사회를 달성하려 하는가?
- ⑦ 언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는가?
- ⑧ 어디에서 다문화가 형성되고 있는가?
- ⑨ 다른 지역에 없는 이 지역만의 특성과 장점은 무엇인가?
- ⑩ 이 지역만의 약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⑪ 지역 사회의 다문화 자원은 무엇인가?
- ⑫ 지역 사회 파트너 형성은 어디로부터 시작 할 것인가?

4. 다문화 사회와 리더십

1)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은 목표(또는 비전) 지행성, 사람들 간의 영향력, 상호 교류, 힘, 자발성, 영향력 행사과정 등과 관련된다. 리더십은 과정이면서 개인이 갖는 특성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조직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리더십의 정의에 대하여 베니스(Bennis)와 나누스(Nanus)는 관리자들은 주어진 일을 옳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이고, 리더는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코터(Kotter)는 리더는 조직의 본질적인 목표를 창출, 목표수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에 근

본적인 역할이 있고, 관리자는 비전과 전략의 수행에 역할이 있다고 보았다.

리더십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리더십은 강제, 강압, 지배 등의 영향력 행사 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② 리더와 추종자들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모종의 공유된 목적을 중심으로 느슨하게나마 조직화 되어 있어야 한다. ③ 리더와 관리자는 구분된다.

관리자 특성	리더의 특성
책임수행	혁신주도
모방	창조
유지	개발
시스템과 구조에 초점	인간에 초점
통제위주	실패에 기초
단기적	장기적
언제 어디에 관심	무엇을, 왜에 관심
수직적 관점	수평적 관점
현 상태 수용	현 상태에 도전
전통적인 충족	독자적 인간
일을 옳게 함(How)	옳은 일을 함(What)

출처 W. Bennis, & J. Goldsmith, 1994. Learning to Lead, N.Y.: Addison-Wesley Publishing Co.

2) 리더십의 종류

(1) 리더십 이론의 흐름

특질 이론	리더가 가진 지능이나 성격 측면에 주목 한다.
행동 및 기능 이론	리더십의 결정 요인을 성격 특질이 아니라 행동, 민주적 스타일, 배려와 주도적 구조의 균형 유지 등 후천적 특성에 주목한다.
상황이론	리더십의 효과가 개인적 특성 외에 조직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을 주목한다.
전환적 리더이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이도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의 큰 목표를 추구하도록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

(2) 하우스(House)의 상황 적합성 리더십 스타일

지시적 리더십	도구적 리더십이라 하며, 하급자 통제, 조직화, 감독 등과 관련되는 리더의 행위이다. 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토록하고 부과된 작업 일정을 수립하든가 직무를 명확히 해주는 등의 리더 행위를 포함한다.
후원적 리더십	추종자들의 욕구와 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언제든지 자기 친구처럼 대해주며, 동지적 관계를 중시 여기는 리더의 행위를 말한다.
참여적 리더십	의사결정을 할 때 하급자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고려해 주는 리더십 행위를 뜻한다.
성취 지향적 리더십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최우수를 지향하며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추종자들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스타일이다.

(3) 전략적 리더십 4유형(Nahavani)

과정 관리형	조직 운영과정에서 구성원들을 많이 참여시키기는 하지만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이어서 위험이 따르는 전략을 멀리하는 스타일이다.
현상 수호형	안정을 추구하여 위험도가 높은 전략은 회피하려는 성향은 있으나 내부관리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통찰력을 발휘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참여적 혁신형	외적으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을 추구하나 조직 내적으로는 참여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통제 혁신형	내적으로는 강한 문화와 통제를 위한 제도를 중시하나 외적으로는 도전적 전략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통제 욕구	
		낮음	높음
도전 추구	낮음	참여적 혁신형	통제적 혁신형
	높음	과정 관리형	현상 수호형

(4) 리더가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Vroom & Tetton)

순수 독단형	리더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리더 스스로가 문제를 풀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경우
참고적 독단형	리더가 하급자들로부터 단순 정보를 얻되, 더 이상의 하급자 참여 없이 리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별 참여형	리더는 관련된 하급자들과 각각 개별적으로 문제를 공유하며 그들로부터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얻되, 하급자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그룹으로 접촉하지 않으며, 최종의사 결정은 리더가 내린다.
집단 참여형	리더는 직면한 문제를 하급자들과 그룹미팅을 통하여 공유한다. 하급자들의 아이디어나 제안은 받지만 최종의사 결정은 리더가 내린다.
위임형 (자유방임형)	하급자 그룹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 하는 경우. 리더는 직면한 문제를 하급자들과 그룹미팅을 통하여 공유하며 그들 스스로 대안을 생각하고, 평가하여 모종의 해결책에 의견 일치력을 보도록 한다.

3) 다문화 사회의 리더십

루더만과 오트, 로젠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양대 여성연구소가 제시한 글로벌 리더십 연구를 추가 및 보완하여 다문화 사회 리더십을 다음 6가지 구성 요소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구성요소	구성요소에 따른 내용
------	-------------

비전제시 능력	거시적인 정세 흐름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 능력, 내적인 가치 및 신념과 외적인 행동 간의 일관성으로서 진실성
상상력과 창조적 능력	기존의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개념과 사고 능력, 통찰력을 가지고, 부분과 전체를 융합하고 분리하며 넘나드는 능력,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능력
문화 이해 능력	문화적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열린 마음, 국제 경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 능력, 외국어 소통능력
사회적 관계능력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사람을 좋아하는 열린 마음, 네트워킹능력, 사람을 키워내는 능력,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재원을 조직해 내는 능력
의제 형성 능력	사회적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이슈 개발 능력, 의제 형성 및 목표를 만들어 내는 능력,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모색하는 능력,
자아 성찰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 주체성을 의식하는 능력, 세상과 조화를 이루어 내는 능력,

[다문화 사업의 특성화 실천 전략]

다문화 지역 사회 특성 파악하는 방법은 끊임없는 묻고 대답하는 과정의 즉 소통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① 누가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가?
- ② 어떤 다문화 사회를 추동하는가?
- ③ 다문화 사회를 허용과 통제는 무엇인가?
- ④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다문화 사회 추동에 관여하는가?
- 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다문화 사회 추동을 방해 하는가?
- ⑥ 어떻게 다문화 사회를 달성하려 하는가?
- ⑦ 언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는가?
- ⑧ 어디에서 다문화가 형성되고 있는가?
- ⑨ 다른 지역에 없는 이 지역만의 특성과 장점은 무엇인가?
- ⑩ 이 지역만의 약점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⑪ 지역 사회의 다문화 자원은 무엇인가?
- ⑫ 지역 사회 파트너 형성은 어디로부터 시작 할 것인가?